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계획

2014. 10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0월



원 장 강 현 수

3농혁신 2030년 미래상



● 농어업



10%
≧
80%

충남도 광역 브랜드 농산물 유통비중 확대

I 생산

-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고령화 사회대비
- 친환경·유기농업의 확대로 순환형 자연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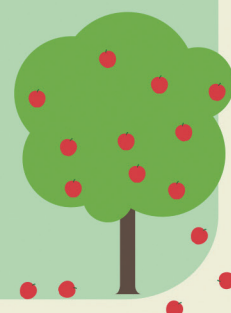


전문농업경영체의 농업생산 점유율

70%
수준으로
확대

4.9%
≧
15%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확대



I 유통

- 전업농 중심의 수직계열화 유통체계
- 광역브랜드 구축 및 수출시장 주도
- 농어업6차산업화로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육성
- 농식품산업, 외식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농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규모 확대

5조2천억원
≧
7조원



외식산업에서
지역농식품 사용 비율 확대

1%미만(추정)
≧
10%



I 소비

- 소비자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 농어업·농어촌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제고



로컬푸드 농산물 유통비율 확대

3%(추정)
≧
20%

9.6%
≧
15%



친환경농산물 출하 비중(전국대비)



2.6%
≧
30%



GAP 인증 확대



1%미만(추정)
≧
10%



HACCP 인증 확대



● 농어촌

농어촌

- 내발적 발전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기반 마련
- 귀농귀촌 및 전원주거문화의 확산을 통한 도농상생공간 창출



10%(추정)
≧
20%

도농교류 및 도농상생 마을 비율 확대

20%(추정)
≧
50%



마을만들기 추진 마을 비율 확대

농어업인

- 농어업인과 함께 비농어업인(소비자, 도시민)의 농정참여 확대
- 다양한 미래인력의 육성 및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조성



50%
수준으로
확대
(농어업인대비)

비농어업인 농정참여 비율 확대



56.7%
≧
70%

생산가능 농가인구 비율 증가

● 농어업인



10%
증대



농어촌복지 수혜자 및 참여자 비율 증대

10%
증대



농어촌주민 만족도(행복도) 증대



[목 차]

제1장 계획의 개요	1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1. 계획의 배경	1
2. 계획의 목적	2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범위	3
1. 계획의 성격	3
2. 계획의 범위	4
제3절 계획의 수립체계와 추진과정	5
1. 계획의 수립체계	5
2. 계획의 수립과정	6
제2장 미래전망 및 현황분석	7
제1절 메가트랜드 및 미래전망	7
1. 농어업·농어촌의 메가트랜드	7
2. 농어업·농어촌의 2030년 미래전망	9
제2절 충남 현황 분석	24
1. 일반현황	24
2. 농어업 부문	26
3. 농어촌 부문	54
4. 농어업인 부문	60
제3장 계획수요 및 계획과제	79
제1절 주민의식 조사 및 분석	79
1. 조사개요	79
2. 농어업인	80
3. 도시민	88

제2절 관련계획 검토	95
1. 중앙정부 관련 계획	95
2. 충청남도 관련 계획	107
제3절 SWOT 분석	117
1. 농어업 부문	117
2. 농어촌 부문	120
3. 농어업인 부문	122
제4절 계획과제	124
1. 농어업 부문	124
2. 농어촌 부문	125
3. 농어업인 부문	126
제4장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127
제1절 3농혁신 미래비전 및 목표	127
1. 미래비전 관련 키워드	127
2. 비전 및 목표	130
제2절 부문별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133
1. 부문별 추진전략	133
2. 전략별 핵심과제	137
제5장 핵심정책과제	139
제1절 생산혁신	139
1. 자연과 순환하는 친환경농업 조성	139
2. 자연친화형 선진 축산업 육성	147
3.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및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157
4. 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162
5. 지역맞춤형 미래농업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167
제2절 유통혁신	173
1. 산지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173
2. 지역농식품의 프리미엄 시장 개척	177

3. 농어촌자원 융복합 산업화로 부가가치 창출	182
4. 지역 먹거리의 산업화 추진	189
제3절 소비혁신	193
1. 지역순환형 로컬푸드 소비체계 강화	193
2.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업체) 간 연계시스템 구축	198
3.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운동 확산	202
4. 지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206
제4절 지역혁신	210
1. 내발적 발전기반 확립 및 마을과 지역 혁신 도모	210
2. 미래형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촌어메니티 창출	217
3.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기반의 확충	222
제5절 역량혁신	228
1. 농어촌인력의 체계적인 발굴과 육성	228
2.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확대	232
3. 농어촌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확충	235
4. 참여주체 확대를 통한 협치농정의 실현	255
제6장 3농혁신 2030년 미래상	261
1. 부문별 미래지표	261
2. 미래모습	264

[표 목 차]

[표 2-1] 농업·농촌 메가트렌드와 파급 영향	8
[표 2-2] 산업사회의 발전 단계와 농업의 특징	9
[표 2-3] 품목별 산업구조의 미래 모습	12
[표 2-4] 은퇴자 거주지 및 영농목적별 실버농업 유형 분류	14
[표 2-5]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 전망	14
[표 2-6] 영농규모별 생산비중 전망	20
[표 2-7] 귀농인구 현황	21
[표 2-8] 다문화 농어가 현황	21
[표 2-9] 충청남도의 인구수	24
[표 2-10] 충청남도의 가구수	24
[표 2-11] 충청남도의 산업분류별 사업체수	25
[표 2-12] 충청남도의 산업분류별 종사자수	25
[표 2-13] 충청남도의 연령대별 농가인구(2013년)	26
[표 2-14] 충청남도의 전·겸업별 농가수(2013년)	27
[표 2-15] 충청남도의 경지규모별 농가수(2013년)	27
[표 2-16] 충청남도의 품목부류별 생산량	28
[표 2-17] 충청남도의 평균 농업소득	29
[표 2-18] 충청남도의 주요 농산물의 소득현황(2012년)	29
[표 2-19] 충청남도의 농림어업 GRDP	30
[표 2-20] 충청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	31
[표 2-21] 충청남도의 품목부류별 친환경재배 농가 수 및 면적(2010년)	32
[표 2-22] 채소종자 국내생산현황	33
[표 2-23] 채소종자 수출입현황	33
[표 2-24] 충청남도의 축종별 가축사육 농가	34
[표 2-25] 충청남도의 가축사육농가 축종별 사육두수	35
[표 2-26] 충청남도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현황	36
[표 2-27] 충청남도의 가축분뇨 처리방법별 가축사육농가(2010년)	36
[표 2-28] 충청남도의 연령대별 어가인구(2013년)	37
[표 2-29] 충청남도의 전·겸업별 어가수(2013년)	38
[표 2-30] 충청남도의 어업형태별 어가수	38
[표 2-31] 충청남도의 어업별 형태별 생산량	39
[표 2-32] 충청남도의 임가 및 임가인구	40
[표 2-33] 충청남도의 주요 임산물 생산량	41
[표 2-34] 충청남도의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41
[표 2-35] 충청남도의 수종별 산림면적	42
[표 2-36] 충청남도의 농산물 판매처별 농가수(2013년)	47
[표 2-37] 충청남도의 수산물 판매처별 어가수(2010년)	48
[표 2-38] 충청남도의 농·축·임·수산물 수출액	49

[표 2-39] 충청남도의 농·축·임·수산물 수입액	50
[표 2-40] 2013년도 6차산업화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추진 내용(총사업비 : 104억 원)	51
[표 2-41] 충청남도의 학교급식 현황	52
[표 2-42] 충청남도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소비현황(2009)	53
[표 2-43] 충청남도의 농림어업가구 규모별 마을 현황	55
[표 2-44] 충청남도의 도농교류활동 현황	56
[표 2-45] 충청남도의 행정리 내 의료시설 현황	56
[표 2-46] 충청남도의 대중교통 수단별 마을 현황	57
[표 2-47] 충청남도의 상하수도 보급률	57
[표 2-48] 충청남도의 신 주택보급률	57
[표 2-49] 충청남도의 귀농귀촌 현황	58
[표 2-50] 충청남도의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현황	59
[표 2-51] 3농혁신 추진경위	60
[표 2-52] 3농혁신 30대 중점사업	64
[표 2-53] 3농대학 교과구성	66
[표 2-54] 4-H대학 문제점 및 개선방안	67
[표 2-55] 주요농업인단체 현황	73
[표 3-1] 시군별 조사부수	80
[표 3-2] 시군별 조사부수	88
[표 5-1] 2013년도 6차산업화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추진 성과	185
[표 5-2]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담당부서	237
[표 5-3] 충청남도 농정국 농촌복지인력 사업	240
[표 5-4] 시군별 만족도와 정책시급성 정도	243
[표 5-5] 농어촌공동체회사 유형 현황	248
[표 5-6]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운영 현황	252
[표 5-7] 유럽의 농업회의소 비교	260
[표 6-1] 3농혁신 2030년 미래상	263

[그림 목 차]

[그림 1-1] 계획 수립의 주체	5
[그림 1-2] 계획의 수립체계	5
[그림 2-1] 농어업의 미래 전망	10
[그림 2-2] 2030/2050년 농생명과학기술 예측	10
[그림 2-3]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개념도	11
[그림 2-4]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시장전망	13
[그림 2-5] 도시민의 농식품 구매 고려사항 변화	13
[그림 2-6] 농어촌의 미래전망	15
[그림 2-7] 농어촌 정주체계의 변화 전망	16
[그림 2-8] 농촌의 일터·삶터·쉼터 기능의 변화	17
[그림 2-9] 다기능 농업의 효과	17
[그림 2-10] 농어촌 재편의 유형	18
[그림 2-11] 농어업인의 미래 전망	19
[그림 2-12] 농정 참여 및 추진 주체의 변화	20
[그림 2-13] 기존 농업인과 신농업인의 비교	22
[그림 2-14] 국민 행복 수준 및 분야별 중요도·만족도	23
[그림 2-15] 충청남도의 돼지고기 유통경로별 유통량(2009년)	43
[그림 2-16] 돼지고기 유통경로별 유통량(전국, 2012년)	44
[그림 2-17] 닭기 유통경로별 유통량(전국, 2012년)	44
[그림 2-18] 수박 유통경로별 유통량(전국, 2012년)	45
[그림 2-19] 새송이버섯 유통경로별 유통량(전국, 2012년)	45
[그림 2-20] 쌀 유통경로별 유통량(전국, 2012년)	46
[그림 2-21] 전복 유통경로별 유통량(2011년)	46
[그림 2-22] 충청남도 행정리별 인구증감 현황(2005-2010)	54
[그림 2-23] 충청남도 행정리별 고령인구 현황(2005-2010)	55
[그림 2-24] 3농혁신 추진 체계도	61
[그림 2-25] 농촌지도자회 지표	71
[그림 2-26] 농촌지도기관과의 연계관계도	72
[그림 2-27] 중앙연합회 및 충청남도연합회 기구표	72
[그림 2-28] 재능나눔 풀	76
[그림 3-1] 조사대상의 연령 및 거주기간	80
[그림 3-2] 조사대상의 세부직업 및 마을의 주요 소득원	81
[그림 3-3] 농어업의 여건 만족도	82
[그림 3-4] 지역의 농어업 발전을 위한 항목별 중요도	82
[그림 3-5]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83
[그림 3-6]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	83

[그림 3-7] 지역활성화를 위한 항목별 중요도	84
[그림 3-8]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	85
[그림 3-9] 작목·어종·축종 등의 선택기준	85
[그림 3-10]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항목별 중요도	86
[그림 3-11] 3농혁신 분야별 중요도	86
[그림 3-12] 향후 농정정책의 방향	87
[그림 3-13] 조사대상의 연령 및 거주기간	88
[그림 3-14] 조사대상의 세부직업 및 최종학력	89
[그림 3-15] 조사대상의 연평균 소득수준	89
[그림 3-16]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도	90
[그림 3-17] 농수산물·농식품 구입경로 및 구입기준	91
[그림 3-18] 타 지역 대비 충남 농수산물 항목별 구매 선호	92
[그림 3-19] 농어촌 이주의향 및 선호 이주지역	93
[그림 3-20] 체험관광,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93
[그림 3-21] 충남 농수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중요도	94
[그림 3-22] 충남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	94
[그림 3-23] 농어업 부문 SWOT 분석	119
[그림 3-24] 농어촌 부문 SWOT 분석	121
[그림 3-25] 농어업인 부문 SWOT 분석	123
[그림 4-1] 3농혁신 미래비전 키워드	129
[그림 4-2] 생산혁신 부문 추진전략	133
[그림 4-3] 유통혁신 부문 추진전략	134
[그림 4-4] 소비혁신 부문 추진전략	135
[그림 4-5] 지역혁신 부문 추진전략	135
[그림 4-6] 역량혁신 부문 추진전략	136
[그림 5-1] 친환경농업 분야 기본 추진방향	141
[그림 5-2] 축산업 분야 기본 추진방향	150
[그림 5-3] 임업 분야 기본 추진방향	158
[그림 5-4] 수산업 분야 기본 추진방향	164
[그림 5-5] R&D분야 기본 추진방향	169
[그림 5-6] 유통분야① 기본 추진방향	174
[그림 5-7] 유통분야② 기본 추진방향	178
[그림 5-8] 충남 농어업6차산업화 경영 모델	184
[그림 5-9] 6차산업분야 기본 추진방향	186
[그림 5-10] 농식품산업분야 기본 추진방향	190
[그림 5-11] 로컬푸드① 분야 기본 추진방향	194
[그림 5-12] 로컬푸드② 분야 기본 추진방향	200
[그림 5-13] 소비운동① 분야 기본 추진방향	203
[그림 5-14] 소비운동② 분야 기본 추진방향	207

[그림 5-15] 마을만들기 분야 기본 추진방향	211
[그림 5-16] 농산어촌 마을재구조화 개념도	214
[그림 5-17] 과소·고령마을의 마을만들기 추진방안	216
[그림 5-18] 생산·생활기반 분야 기본 추진방향	218
[그림 5-19] 도농교류 분야 기본 추진방향	223
[그림 5-20] 인력 분야 기본 추진방향	229
[그림 5-2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	231
[그림 5-22] 귀농·귀촌 분야 기본 추진방향	233
[그림 5-23] 삶의 질 향상계획의 구성과 농어촌서비스기준 간 관계	237
[그림 5-24] 농어촌복지 모델 설정을 위한 기본전제	243
[그림 5-25] 농어촌 복지 전달 주체의 범위 및 농어촌 Helper의 역할	245
[그림 5-26] 거버넌스 분야 기본 추진방향	257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농어업·농어촌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한 대책 마련 필요

- 수입개방 및 FTA의 진전으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국내 농수산물 가격경쟁력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해 마을의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초생활환경 및 서비스 여건이 열악해지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즉, 악화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충청남도 3농혁신의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마련 필요

- 충청남도는 농어촌 주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잘 사는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더불어 잘 사는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의 3농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민선5기 3농혁신의 결과 농어업인이 농정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하고 친환경·로컬푸드, 마을만들기, 농어업 6차산업 등 전국적으로 농정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둠
- 향후, 충남도 및 시·군이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3농혁신의 추진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 지방농정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없이 단편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과 분야별 중·단기 계획에 입각하여 추진된 경우가 많으며, 향후 농정 전반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 및 로드맵 마련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정기획 및 정책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삶의 질 향상계획, 농어업 6차산업화 계획, 지역행복생활권 계획 등 계획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계획수립을 전제로 한 예산지원 방식 확대

■ 협력적 계획수립의 모델 제시

- 민선5기 3농혁신의 추진으로 충청남도 농정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업인이 농정 의사결정에 주체가 되고 이외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음
- 특히,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6기를 시작하는 상황에 새로운 계획수립과 함께 민선5기 3농혁신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계획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 즉, 3농혁신의 다양한 추진주체(농어업인, 도 및 시군, 전문가, 민간 등)의 참여에 의한 협력적 계획수립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계획의 목적

■ 충남 농어업 · 농어촌 · 농어업인의 미래비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 제시

- 충남의 농어업 · 농어촌 · 농어업인의 3농에 관한 중 ·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함
- 특히, 충청도 및 시군 농정의 기본방향과 핵심테마를 제시하여 관련정책과 사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침을 제공

■ 민선5기 충청남도 3농혁신을 이어 지속적인 3농혁신 기반 확충

- 민선5기 동안 추진된 충청남도 3농혁신의 경험과 성과를 이어받아 향후에도 충청남도 및 시군이 지속적으로 3농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즉, 민선5기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특히 농어업 · 농어촌 · 농어업인을 둘러싼 다양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충남 3농혁신의 중 · 장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함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범위

1. 계획의 성격

■ 관련주체의 능동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충청남도 3농혁신 특화발전계획

- 민선5기 3농혁신을 바탕으로 향후 3농혁신의 핵심테마와 과제를 수정 제시하거나 새롭게 발굴하고, 제시·발굴된 과제별로 특화 발전계획을 수립
- 특히, 국비 보조사업 등에 의해 정해진 매뉴얼대로 추진하는 피동적인 발전계획이 아닌 농어업인과 관련 주체들이 스스로의 발전역량강화 및 다양한 노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능동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함

■ 농어업·농어촌 종합발전계획의 지침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 하되, 종합발전계획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또한, 충남도 및 시군단위에서 수립하게 되는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의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충남 및 시군 농정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함

■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충남 농정의 중장기 발전계획

-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3농혁신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 및 장기 추진계획을 제시함
- 중기계획(2015~2018)은 2030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선6기에 추진되어야 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핵심 사업을 발굴·제시함
- 장기계획(2015~2030)은 역시 2030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큰 흐름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 계획수립과 정책추진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협력적 계획

- 계획수립 과정상에 3농혁신위원회 및 추진단·TF팀원, 충남도 및 시군 공무원, 농어업인 및 도민, 현장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
- 또한, 수립된 계획을 참여주체가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수립을 전제로 하는 협력적 계획 수립

2.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행정구역 전역

■ 시간적 범위

- 중기계획 : 2015년 ~ 2018년
- 장기계획 : 2015년 ~ 2030년

■ 내용적 범위

- 미래전망 및 현황분석
 - 농어업·농어촌의 메가트랜드 및 2030년 전망
 - 충남 현황(3농혁신 포함) 및 문제점 분석
- 계획 수요 파악 및 계획 과제 도출
 - 다양한 주체의 의식 조사 및 분석, 분야별 계획 수요 파악
 - SWOT 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3농혁신 미래비전 설정
 - 3농혁신 비전, 목표(발전지표), 추진전략 제시
- 핵심정책과제 발굴 및 계획 수립
 -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등 부문별 핵심정책과제 제시 및 계획 수립
- 부문별 발전계획
 - 전략별 또는 분야별 발전계획 수립 :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농식품산업 및 유통, 농어촌개발 및 도농교류, 인력육성 및 농정거버넌스 등
- 민선6기 세부실행계획
 - 민선6기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 투자 및 관리계획
 - 연차별·부문별·자원별 투융자 계획

제3절 계획의 수립체계와 추진과정

1. 계획의 수립체계

- 기존 계획과 차별화 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계획 수립

[그림 1-1] 계획 수립의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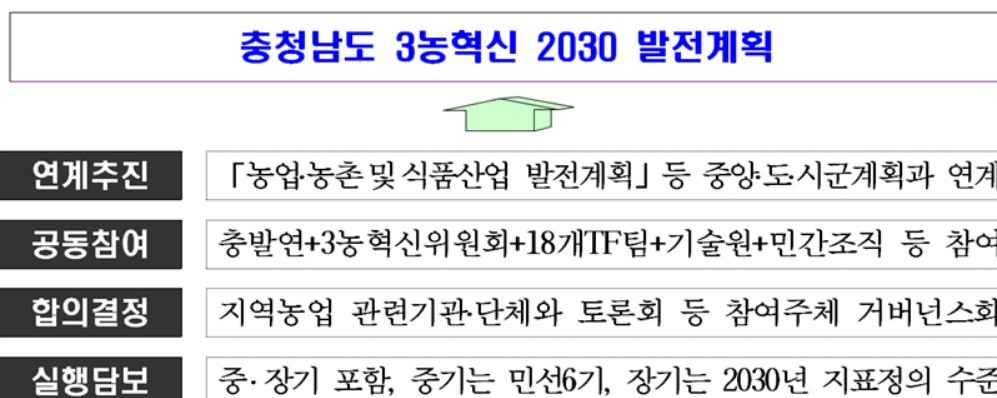
- 다양한 의견수렴 및 합의과정을 통한 합리적 계획 수립

- 3농혁신위원회, 추진단 및 TF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및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계획 수립

- 현장연구를 통한 실현 가능한 실천적 계획 수립

- 현장전문가 참여 및 다양한 현장조사를 통한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
- 현장 인터뷰,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그림 1-2] 계획의 수립체계



2. 계획의 수립과정

- 2014. 2. 17 : 3농혁신 2030 계획 수립방향 논의
- 3. 14 : 도 및 시·군 관계자 간담회
- 3. 17 : 계획 수립 착수
- 3. 20 : 행정지원단 구성
- 4. 2 : 착수보고회(3농혁신 1/4분기 추진상황 보고회)
- 4. 18 : 추진상황 보고
- 4. 18 : 도농교류분야 워크숍
- 4. 22 : 산림녹지분야 워크숍
- 4. 28 : 두레기업분야 워크숍
- 4. 29 : 충남농업포럼 농어업인 간담회
- 4. 30 : 축산분야 워크숍
- 5. 9 : 친환경기술분야 워크숍
- 5. 9 : 농어촌복지분야 워크숍
- 5. 9 : 행복마을분야(마을만들기, 리모델링 등) 워크숍
- 5. 13 : 역량강화분야 워크숍
- 5. 13 : 귀농·귀촌분야 워크숍
- 5. 21 : 청정수산분야 워크숍
- 5. 21 : 친환경농업분야 워크숍
- 5. 22 : 산지유통분야 워크숍
- 5. 22 : 로컬푸드분야 워크숍
- 5. 20 ~ 6.5 : 농어업인 및 도시민 설문조사
- 6. 12 : 추진상황 보고
- 6. 18 : 농촌개발분야 워크숍
- 6. 25 : 관련부서 협의
- 7. 4 : 전문가 자문회의
- 7. 28 / 8. 11 : 정무부지사 주재 토론회
- 9. 23 : 중간보고회
- 10. 14 : 최종보고회

제2장

미래전망 및 현황분석

제2장 미래전망 및 현황분석

제1절 메가트랜드 및 미래전망

1. 농어업 · 농어촌의 메가트랜드¹⁾

■ 저출산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농어촌경제 위축

-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65세 이상 7.2%),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 이상),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이상),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0%에 육박
- 건강, 장수, 안전과 편의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 농업 생산력 증가세의 둔화와 함께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반면 고령 친화적 실버농업이 부상하고 청장년 전업농이 주력을 형성

■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함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재편

- 세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화가 큰 폭으로 진행되고, FTA 진전, 동북아경제 블록화, 아시아연합경제권 형성 등 미국 중심의 세계화에서 탈피하여 전 지구적 시장경제 출현
-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고품질 농식품 진출가능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경제에 적응하여 수출시장이 확대
- 무한경쟁 시대의 시장 대응력 격차로 국가, 지역, 기업, 소득 등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품목, 경영체, 조직)으로 구조조정이 진전

■ 기후변화와 함께 대체에너지 및 환경농업의 중요성 증대

- 지구온난화로 1970~2000년 대비 평균기온은 2030년 1.0~1.5℃, 2050년 2.0~2.5℃ 상승이 전망되고, 이로 인해 곡물 생산량 감소 및 채소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농산물 주산지 재편될 것으로 전망
- 화석연료 중 석유는 향후 40년, 천연가스는 58년, 석탄은 130~200년 정도에 고갈이 예상되고, 향후 신재생에너지 혹은 대체에너지 등이 부상할 것임
- 지구 환경 악화에 따라 미래농업은 자연 순환 기능, 환경보전, 지역자원관리 역할 등이 중요시될 것임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 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의 2050년 미래전망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기술농업 확대 보급

- IT(정보통신), BT(바이오), ET(환경 또는 에너지), NT(나노), CT(문화), ST(우주) 등의 신기술이 융복합되어 산업화되는 경향이 확산될 것이며, 2050년경에는 유비쿼터스 시대, 로봇 상용화 시대 우주시대 등의 첨단과학기술시대가 도래
- 정밀농업, 우주농업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유통체계 혁신과 함께 U헬스 시스템 등 농촌 의료복지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나,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에 따른 고령농업인의 소외와 사회갈등이 대두될 것임

■ 새로운 가치지향 사회 도래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중시 확대

- 경제성장과 소득이라는 양적 풍요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고, 미래 사회는 개성이 중시되는 동시에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사회이고, 이미 현대는 지식창조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나 농촌 어메니티,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등이 중시되고 이와 함께 귀농·귀촌인구의 증가, 휴양공간이나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임

[표 2-1] 농업·농촌 메가트렌드와 파급 영향

메가트렌드	전망과 특징	농업·농촌의 파급 영향
고령화 사회 (장수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인구증가율 둔화, 평균 수명 연장 ◦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 건강, 장수에 대한 니즈 확대 ◦ 노인복지 수요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력 증가세 둔화 ◦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 ◦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 청장년 전업농이 주력 형성
글로벌 경제 (무한경쟁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진전, 동북아경제 블록화, 아시아연합경제권 등으로 발전 ◦ 미국 중심의 세계화 탈피, 전 지구적 시장경제 출현 ◦ 2030년경부터 경제국경 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질서의 국제규범 재편 ◦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구조 조정 ◦ 농업·농촌의 양극화 확대 ◦ 농산물 수입증가, 수출시장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 중시 (녹색산업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로 2050년 기온 2℃ 상승, 강수량 8% 가량 증가 ◦ 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한 식생변화, 열대과일 재배 ◦ 농산물 생산 감소와 품질 저하 ◦ 대체에너지용 유지작물, 미세조류(해수농업) 등 확산 ◦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발전
과학기술 발전 (융복합기술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BEC기술의 보편화, 융합화 ◦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 ◦ 로봇 상용화로 2025년 노동시장의 50% 대체 ◦ 우주시대 본격화, 원격탐사기술의 농업분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 ◦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 우주농업, 원격탐사 기술 등 ◦ 농산물 상품화, 유통체계 발전 ◦ U헬스 시스템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
새로운 가치 지향 (문화 창조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에서 탈피, 삶의 질 중시 ◦ 개성, 집단지성 ◦ 지식창조사회 ◦ 여가 및 문화 가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 ◦ 농촌어메니티 활성화, 농촌관광 산업화 ◦ 귀농·귀촌 인구 증가 ◦ 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 증가

자료 : 김정호 외, 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농어업 · 농어촌의 2030년 미래전망

1) 농어업의 미래전망

■ 산업사회가 후기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 진행

- 2030년은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산업사회와 후기산업 사회의 모습이 공존하고 양극화 형태로 진행될 것임

[표 2-2] 산업사회의 발전 단계와 농업의 특징

	농경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시장 여건	○ 자급자족(먹을거리) - 생계형 생산=소비 - 단순교환	○ 시장화(값싼 식품) - 상업적 이윤추구 - 시장경쟁, 판매우선	○ 탈 시장화(좋은 식품) - 신수요 · 신상품 지향 - 세계화, 틈새시장
농업 생산 방식	○ 자연의 지배 - 자연이용 - 자연재해의 최소화	○ 자연의 정복, 약탈 - 토지 약탈 - 생태계 파괴	○ 자연과의 조화 - 자연재해의 관리 - 친환경, 생태계 복원
농업 기술 성격	○ 증산을 위한 생물학적 · 화학적 기술 - 생계형 다품목 소량생산 - 분산화, 다양화	○ 이윤추구를 위한 비용 절감 기술 - 대량생산의 단작화 - 규모화, 전문화	○ 안전한 식품을 위한 융복합 기술 - 고품질 다품목 소량생산 - 탈 규모화, 시스템화

자료 : 김정호 외, 2010, 농업 · 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경영 및 소비패턴의 양극화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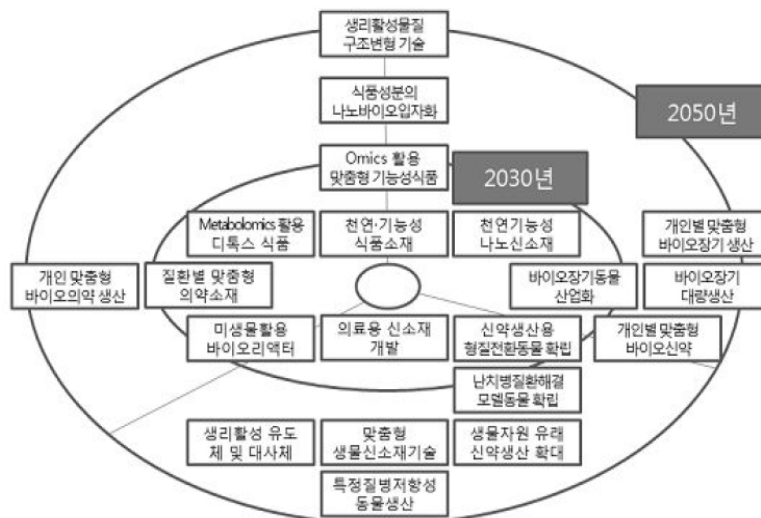
- 규모화 된 대량생산 체계를 갖춘 대농 위주의 농업과 고령농, 중 · 소규모 농가 위주의 농업의 양극화와 함께 소비패턴의 양극화도 진행될 것임
- 대농(대규모 농가) 위주의 농업은 첨단농업기술 발전과 함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재편 되고 대량생산-대량유통 구조를 바탕으로 광역 소비와 수출시장을 주도하고, 전문농어업 경영체, 대규모 기업농이 등장하기 시작
- 중 · 소농(소규모 고령농) 위주의 농업은 친환경농업과 농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생산-틈새시장 유통 구조를 형성하고, 소비자 친화형 로컬푸드 시장을 주도할 것임
- 소비패턴은 상류층을 포함한 중산층 이상의 대부분의 소비자는 영양과 건강, 안전과 신뢰, 가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패턴으로 고착화되고, 빈곤층 및 저소득층은 여전히 가격과 양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패턴을 보일 것임

[그림 2-1] 농어업의 미래 전망



- OECD는 2030년경에 글로벌 경제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오는 바이오경제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래 농업은 식량공급과 함께 동식물자원 등 생명자원을 IT·BT·NT와 융복합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2] 2030/2050년 농생명과학기술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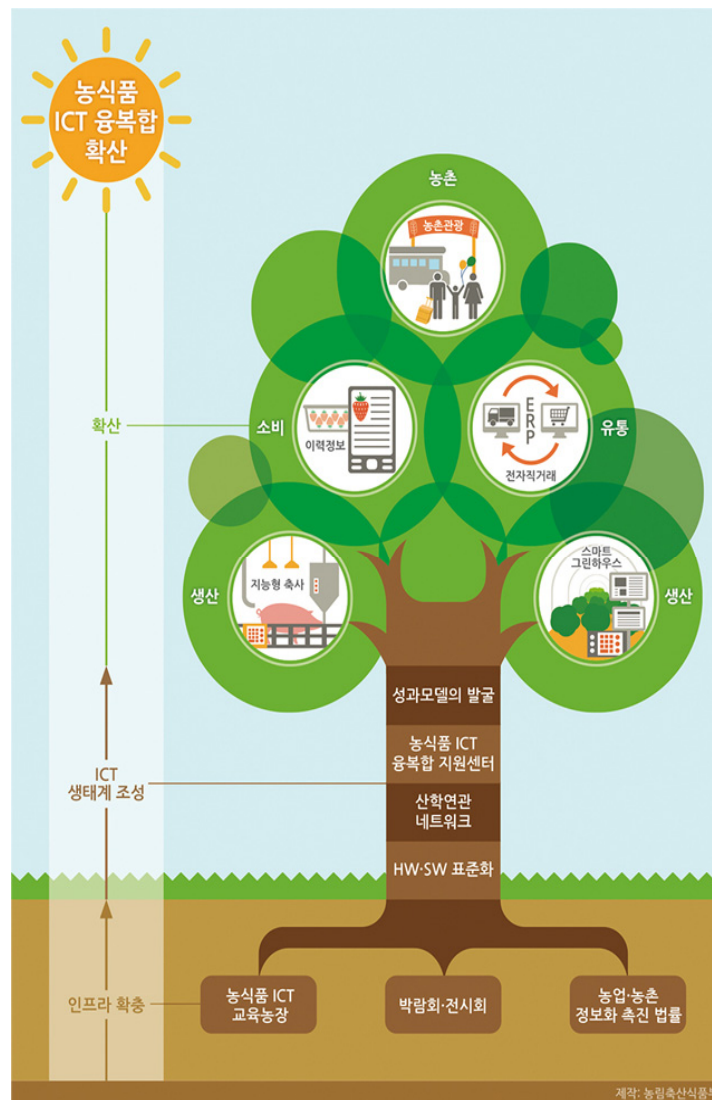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첨단기술농업 및 농생명 바이오산업의 발전

-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에 도시지역 대부분이, 2050년에는 보령, 태안 등 해안 지역들이 아열대화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생태계의 변화 및 수확량 감소, 병해충 발생 등 농작물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평균기온 2℃ 상승할 경우 벼 수확량은 4.5% 감소 추정)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기초로 한 과학적 스마트농업(smart agriculture) 기반이 확충될 것이며, 특히 ICT, IT, NT, ET 등의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완전제어형 식물공장(또는 수직농장) 등이 이슈화 될 것임

[그림 2-3]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개념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 전문 농업경영체 중심의 전업농 재편

- 농업구조가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재편되어 전업농 생산비중의 대부분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청장년 전업농 및 농업법인이 지역농업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여 건실한 중소기업 수준의 경영자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될 것임
- 또한, 대규모 농산물 유통회사(조합)가 계열화 형태로 조직화 되어 전업농들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이들 조직체가 국내유통을 지배하고 수출시장에 진출할 것임

[표 2-3] 품목별 산업구조의 미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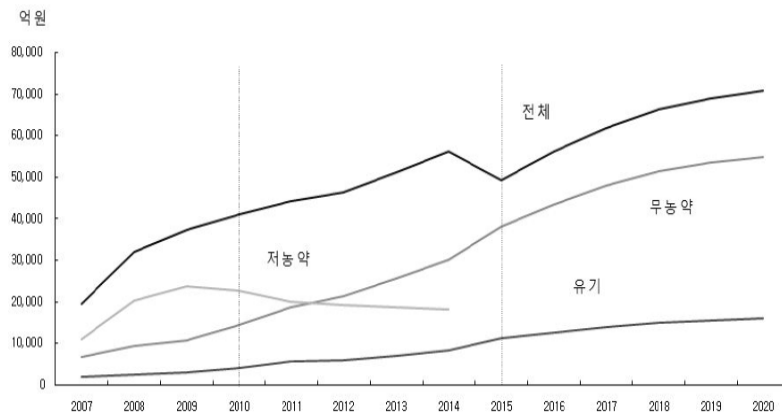
구분	산업구조	주요 특징
쌀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쌀 전업농과 들녘별 조직경영체 병존 ○ 미국중합처리장(RPC)이 생산유통 중심체 역할
원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과일은 고품질친환경기술체계 실현 ○ 산지유통센터(APC) 중심의 공동계산제 정착 ○ 수출형 농업법인 출현
축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화 생산체계, 계열 주체 브랜드화 ○ 친환경축산 정착 ○ 냉장유통 체계

자료 : 김정호 외, 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대 및 농식품 안전에 대한 수요 증가**

-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어 2030년에는 전체 농산물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2050년에는 5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미래 건강·장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더욱 더 웰빙,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이와 함께 식품소비 패턴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호하는 농식품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GAP, HACCP 등이 확대 정착될 것임

[그림 2-4]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시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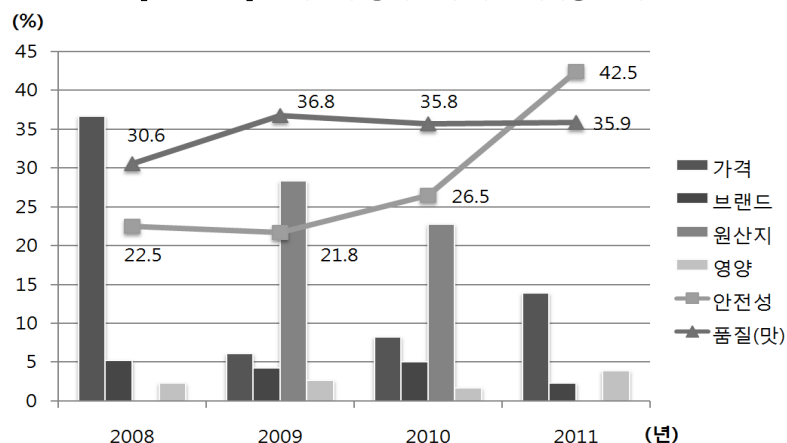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농가 고령화의 진전 및 고령친화농업(실버농업)의 부상

-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전체 농가인구 대비 2005년 29.1%(999,306명)에서 2010년 31.1%(921,729명)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농어촌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실버농업이 부상하게 될 것임
- 실버농업으로 토지의존도가 낮고 작업의 강도가 적정 수준인 노동집약적 소득작목(약초, 복분자, 블루베리 등) 및 경량채소(대파, 고추, 마늘 등) 재배가 증가할 것이며, 이 외에 전원형 실버농업 테마타운, 은퇴농장 및 은퇴자 마을, 농어촌 노인 복지단지 등과 농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농업, 주말농장 등이 활성화 될 것임

[그림 2-5] 도시민의 농식품 구매 고려사항 변화



주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년 국민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채소, 육류, 곡물, 과일에 관한 도시민 조사결과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작성

[표 2-4] 은퇴자 거주지 및 영농목적별 실버농업 유형 분류

구 분		← 소득추구농업	취미·여가농업 →
↑ 도시 거주		③ 출퇴근농업 - 임노동, 전문영농 도우미 - 농정경영	① 베란다농업 - 원예, 애완동물/곤충 ② 주말농장
	단독 가구형	④ 농장경영 ⑤ 관광농업	⑧ 전원생활 ⑨ 건강·요양생활
농촌 이주 ↓	단지· 마을형	⑥ 주산단지 이주 ⑦ 관광마을 이주	⑩ 전원형 실버농업 테마타운 ⑪ 은퇴농장 ⑫ 도시근교 은퇴마을 ⑬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⑭ 농촌 양로시설 농업

자료 : 강경하 외, 2007, 실버농업의 유형분류 및 적합작목 탐색, 농촌지도와 개발 제14권 2호, 301-328

■ 유통체계 및 소비패턴의 변화

- 인터넷과 IT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더욱 빠르게 진화할 것이며, 물류체계와 관련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 공동출하 비율이 빠르게 진전되어 유닛로드시스템(ULS), 저온유통체계(cold-chain system) 등의 선진유통체계가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전자태그(RFID)가 바코드시스템을 완전 대체하고, 사이버마켓(virtual market)이 본격 화됨에 따라 생산자-소비자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 식품판매장 등이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에서 소비자 중심 및 수요·시장 지향의 유통체계로 변화될 것이며,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가격 및 품질 중심에서 가치와 신뢰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도농교류, 도시농업, 소비자협동조합 등이 활성화 될 것임
- 특히,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건강한 지역먹거리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로컬푸드 운동이 확대·정착될 것이며, 주로 중·소농, 가족농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의 유통이 로컬푸드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

[표 2-5]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 전망

구분	현재	미래
산지	◦ 선별, 저온저장, 예냉, 소포장 등으로 상품화·브랜드화 ◦ 도매시장, 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	◦ 전처리, 가공 등 유통업체·식품가공업체·식자재업체 등의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생산·맞춤유통 구현
물류	◦ 표준규격 파레트, 하역기계화 등 현대식 물류 표준화 구현 ◦ 부분적인 ULS, 저온유통 추진	◦ ULS, 콜드체인시스템 완비 ◦ RFID 기반의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생산·유통 이력추적 관리
소비지	◦ 도매시장의 물류기능 중시 ◦ 대형유통업체의 비중 증가 ◦ 다양한 소매 신업태 등장	◦ 도매시장은 가격형성기능 담당 ◦ 대형유통업체, 통신판매 비중 증가 ◦ 웹 기반의 전자상거래(직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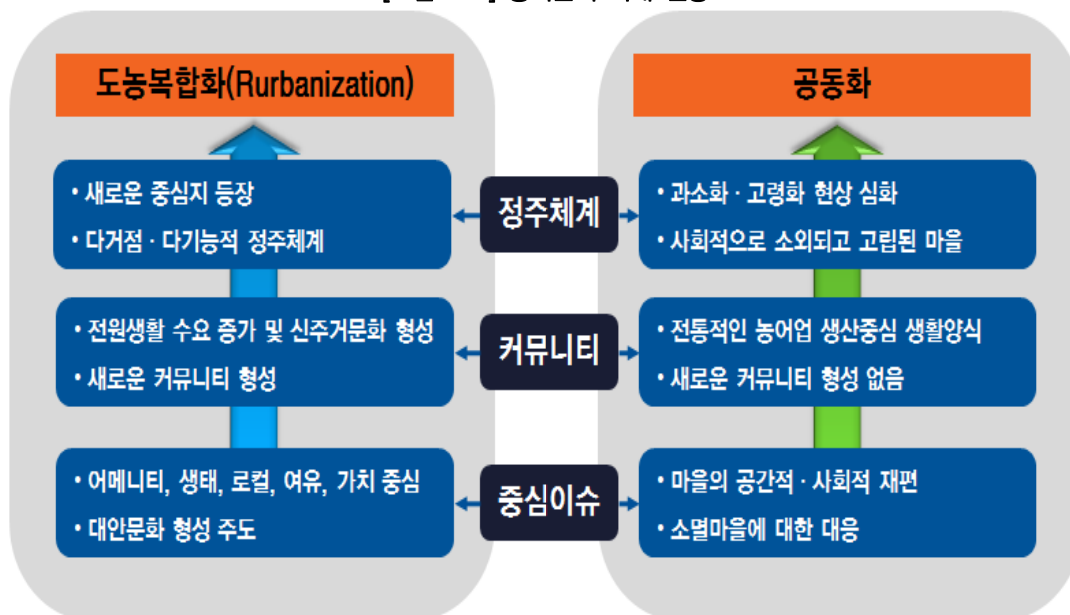
자료 : 김정호 외, 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농어촌의 미래전망

■ 농어촌의 도농복합화(Rurbanization) 현상과 공동화가 동시 진행

- 대도시 주변지역을 시작으로 농어촌의 도시화, 혼재(混在)·혼주(混住)화 등이 일어나는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국토연구원(2009)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는 국토의 95%가 도시화가 진행되고 2050년에 이르면 농촌과 도시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러바니제이션 현상은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 증가, 신주거문화 형성, 귀농·귀촌의 증가, 생태·로컬·여유·가치를 중시하는 대안문화 형성에 기인할 것임
- 반면, 중산간 지역이나 산간 벽·오지 지역 등 소외된 마을을 중심으로는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심지어 소멸하는 마을들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한 공간적·사회적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임

[그림 2-6] 농어촌의 미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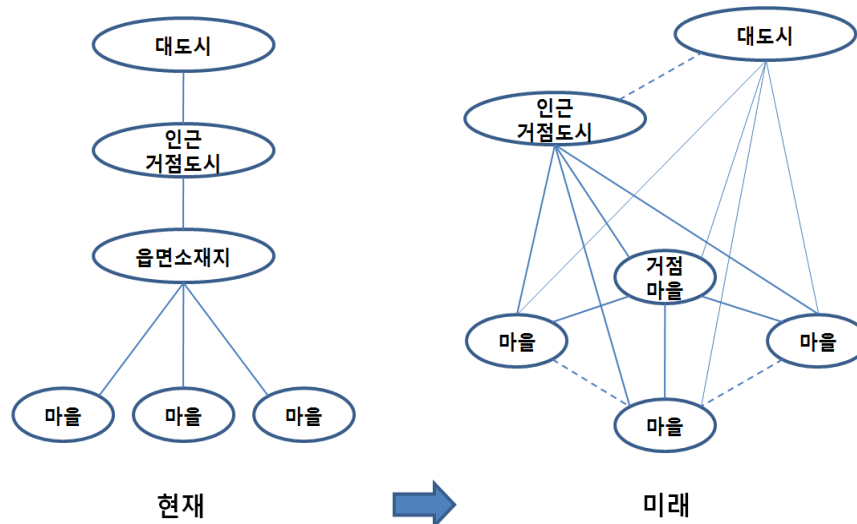


■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한 농어촌 정주체계의 변화

- 교통의 발달, 농촌과 도시의 구분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현재 ‘마을 – 읍·면소재지 – 인근 거점도시 – 대도시’등으로 구성된 정주체계가 무너질 것이고, 특히 전통적으로 읍·면소재지가 갖고 있었던 거점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이러한 기능의 대부분이 인근 거점도시나 대도시로 흡수될 것임

- 한편, 인근 거점도시나 대도시에서 충족하기 힘든 복지 및 여가 등 현장밀착형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크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중심거점마을 또는 커뮤니티가 등장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기존의 수직적 정주체계에서 다거점·직결형 정주체계로 전환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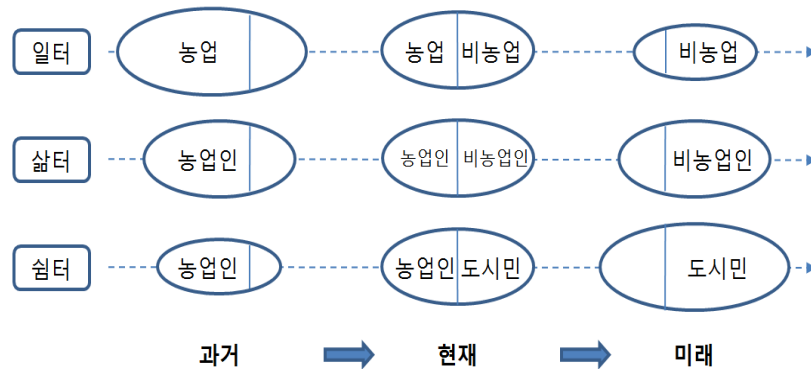
[그림 2-7] 농어촌 정주체계의 변화 전망



■ 새로운 커뮤니티 및 전원주거문화 형성

- 귀농·귀촌 및 혼재(混在)·혼주(混住)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농어촌의 구성원이 기존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을 포함하여 귀농·귀촌인, 비농어업인, 도시인 등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임
- 즉, 기존의 전통적인 농어업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형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생활양식과 가치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재편될 것이며, 지역을 이끌어가는 주체와 이슈, 관심사도 훨씬 다양해 질 것임
- 또한, 기존에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완화됨과 동시에 농어촌의 경관 및 어메니티를 중시하고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도시 주변지역이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부터 도시화가 진행되고 새로운 전원주거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임
- 특히, 산업과 정주, 문화, 휴식공간 등이 공존하는 동호인마을, 은퇴자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생활공간의 조성사례가 늘어날 것임

[그림 2-8] 농촌의 일터·삶터·쉼터 기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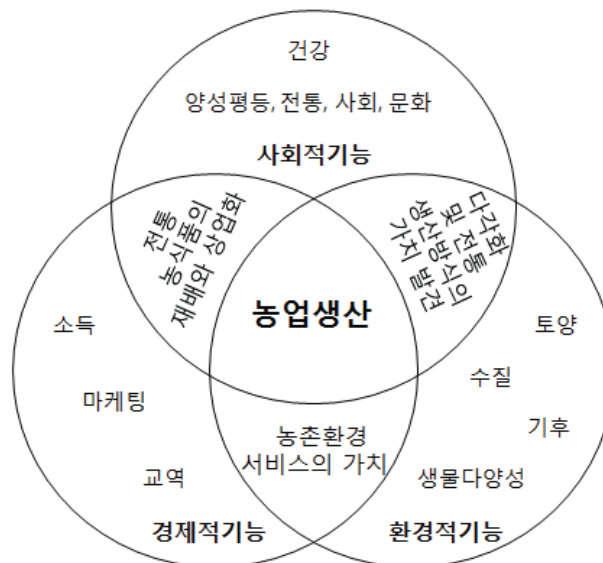


자료 : 김정호 외, 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어촌 어메니티 및 다기능성(가치) 중시

- 이제까지 농어촌은 식량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평가되었지만 미래 농어촌은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재평가될 것임
- 농어업·농어촌이 지닌 '식량생산기능' 뿐만 아니라 '국토보전의 기능', '자연환경보전의 기능', '전통문화계승의 기능', '건강·휴양·여가의 기능', '정신적·심미적 기능' 등 사회·경제·환경적인 다면적 기능과 농어촌 어메니티의 가치가 중시되고, 이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한 도농교류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임
- 이러한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재발견이 곧 농수산물 및 농식품의 유통·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기능 농업의 정착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그림 2-9] 다기능 농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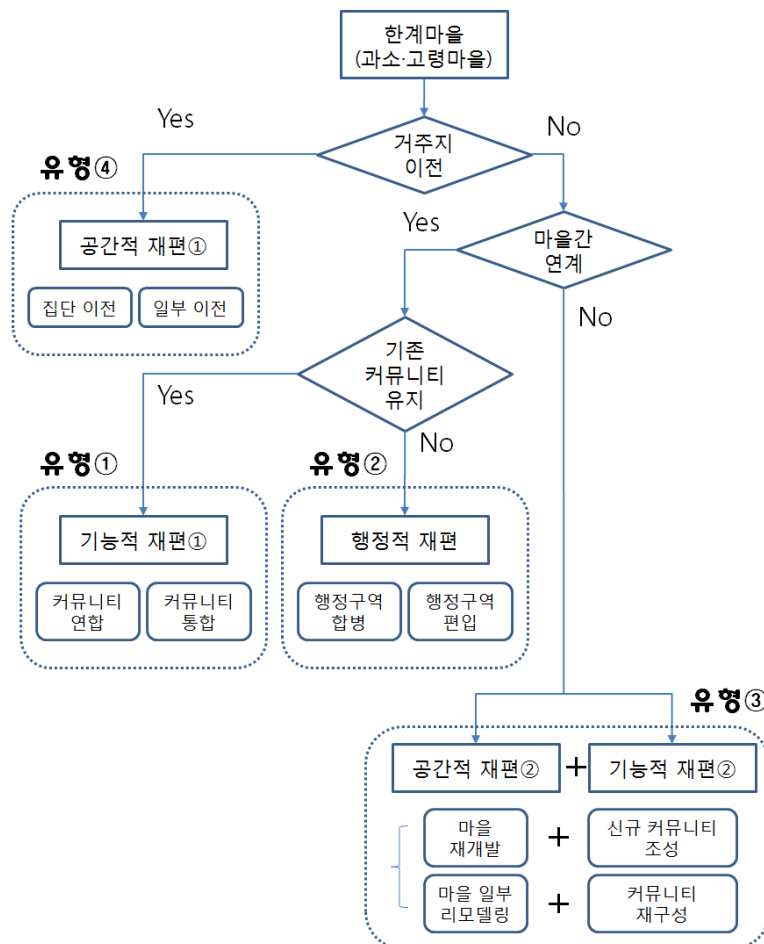


자료: 정현희 외, 농업의 다기능성과 다기능 농업 활성화 정책, 충남발전연구원, 2013

■ 공간적·사회적 농어촌 재편의 필요성 증대

- 도시화, 혼재(混在)·혼주(混住)화 등이 일어나는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 현상과 함께 한편으로는 과소·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것임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농정정책이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 및 마을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과소·고령마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갈수록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심지어 소멸하는 마을이 등장하게 될 것임
- 머지않은 미래에 이러한 과소·고령마을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공간적·사회적 재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임

[그림 2-10] 농어촌 재편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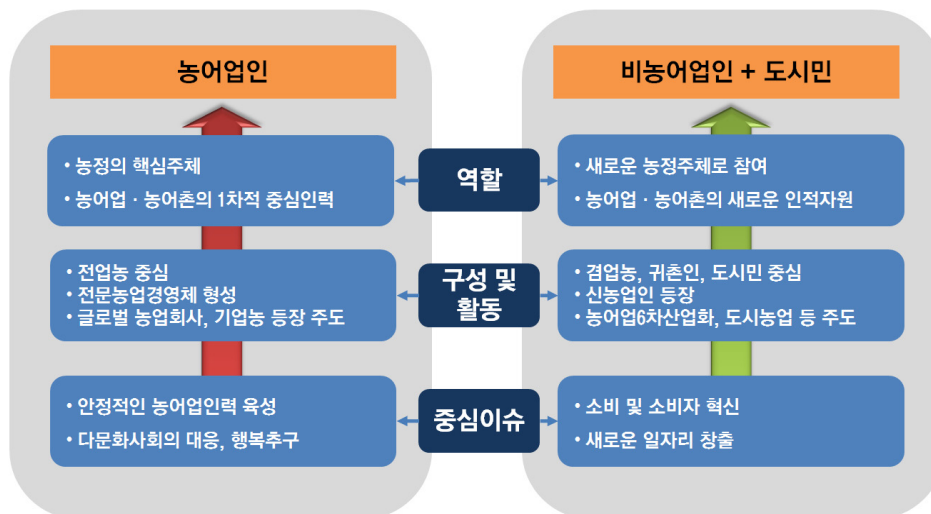
자료: 조영재 외, 농촌마을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14년 전략연구

3) 농어업인의 미래전망

■ 농어업인과 함께 비농어업인·도시민이 농어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확대

- 기존의 농어업인은 지속적으로 농정의 핵심주체로 농어업·농어촌의 1차적 중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전업농 중심의 전문농업경영체 형성을 주도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인력의 확보 및 육성, 다문화사회에 대응한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의 농업인 지위 향상, 사회복지 및 행복추구 등이 중심이슈로 부각될 것임
- 농어업인과 함께 비농어업인(겸업농, 귀촌인 등), 도시민 등이 새로운 농정주체로 등장할 것이며, 이들은 농어업·농어촌 활성화의 중요한 인적자원의 역할을 할 것임
- 또한, 비농어업인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신 농업인의 등장과 농어업6차산업화,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주도할 것이며, 소비 및 소비자 혁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 중심이슈가 될 것임

[그림 2-11] 농어업인의 미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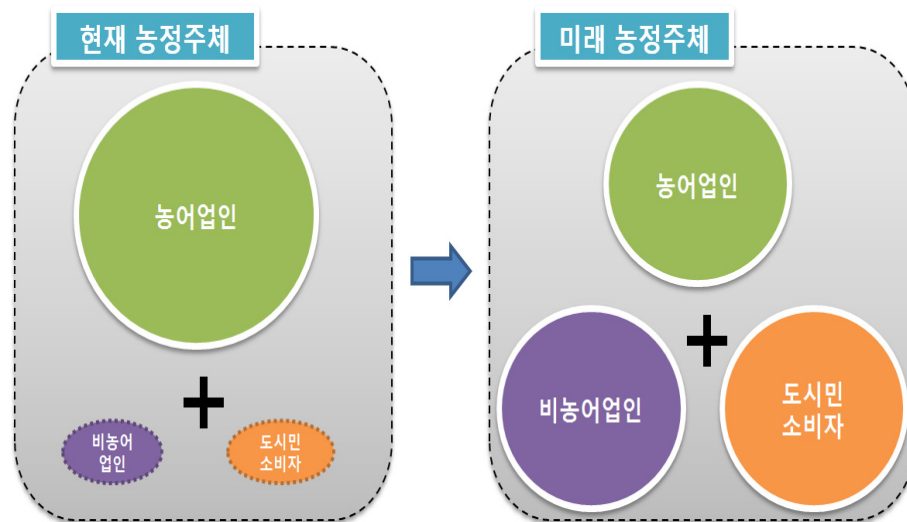


■ 농정 주체의 확대와 소비자 참여 중시

- 농어촌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가 기존의 농어업인 중심에서 비농어업인과 소비자를 포함한 도시민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와 함께 농정의 주체가 확대되고 더욱 다양화 될 것임
- 농어업·농어촌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이 농어업인만의 단순한 경쟁력 강화에 의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에는 농어업인 외에 비농어업인, 소비자 및 도시민의 참여에 의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창출하고 이러한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임

- 특히,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착한먹거리 및 바른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그동안의 소비패턴과는 다르게 소비자가 먹을거리에 대한 직접적·능동적 대응(소비자협동조합 등)이 확대될 것이며 소비자의 농정 참여도 크게 확대될 것임

[그림 2-12] 농정 참여 및 추진 주체의 변화



■ 영농 규모화·전문화의 진행 및 기업농의 등장

- 우리 농업은 1990년대 이후 계층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업농 중심으로 규모화·전문화가 진행되는 추세로 앞으로도 가속될 것이며, 쌀 생산은 자급적 농가가 위탁영농 형태로 존재할 것이지만 시설원예와 축산경영은 대규모 전업농이 시장을 주도할 것임

[표 2-6] 영농규모별 생산비중 전망

	논		시설원예		한우		양돈	
	3ha 이상		2천 평 이상		30두 이상		1천두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2010	6.7	31.6	9.1	54.3	9.5	54.4	34.8	82.5
2030	20.1	49.4	4.0	61.7	24.3	62.6	58.0	96.2
2050	60.4	77.3	1.8	70.0	62.3	72.1	96.6	99.0

자료 : 김정호 외, 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현재 6천여 개의 농업법인이 2030년에는 8천여 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함께 영농조직이 작게는 지역 단위의 조직 형태로부터 크게는 전국 단위의 계열화 농기업체 까지 등장하게 될 것임

■ 귀농·귀촌인, 결혼이주여성 등의 인적자원 및 문화적 다양성 확대

- 귀농·귀촌인구는 현재의 추세보다 더욱 증가할 것이며, 농어촌 지역에 우수한 인력과 인재들이 유입됨으로써 농어업인력의 확보 및 농어촌 활성화와 함께 아울러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인구의 비중이 늘어 생태, 로컬, 여유, 가치 등을 중시하는 대안문화가 형성 될 것임

[표 2-7] 귀농인구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명)	9,597	17,464	19,657	18,825
읍부(명)	2,097	3,991	4,261	4,173
면부(명)	7,500	13,473	15,396	14,652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각년도

- 농어촌 지역은 다문화가정이라 불리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구의 비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2030년경부터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이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문화적 다양성을 창출하게 될 것임

[표 2-8] 다문화 농어가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농가	다문화 농가(가구 수)/비중(%)	14,384 (1.2)	14,794 (1.3)	14,952 (1.3)
	다문화 농가 인구(명)/비중(%)	63,356 (2.1)	66,081 (2.3)	67,040 (2.4)
어가	다문화 어가(가구 수)/비중(%)	1,013 (1.6)	988 (1.6)	1,011 (1.7)
	다문화 어가 인구(명)/비중(%)	4,261 (2.7)	4,121 (2.7)	4,236 (2.9)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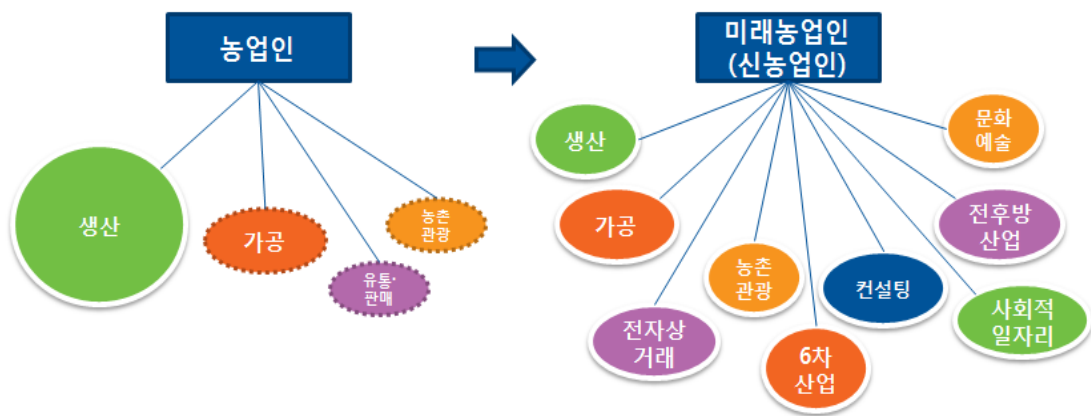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농업인(신농업인)’ 등장

- 2020년 이후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도 농어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을 활용하는 창의 계층(creative

class)이 거주하게 되면서 지식기반산업, 실버산업, 고령자, 여성 등에게 적합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 지역의 서비스 시장을 겨냥한 의료·복지·환경 분야에서의 사회적 일자리와 문화·예술·디자인 관련 직업, 그리고 지역 주민보다는 계절형 방문객이나 주말 내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 숙박, 유흥업이 발달할 것임
- 아울러, 귀농·귀촌 컨설턴트, 도시농업 컨설턴트, 농촌유학 프로그램 매니저, 지역문화 해설사 등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는 ‘미래농업인(신농업인)’이 등장할 것임
- 이러한 ‘신농업인’은 농식품의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농어업6차산업화, 농어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성장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13] 기존 농업인과 신농업인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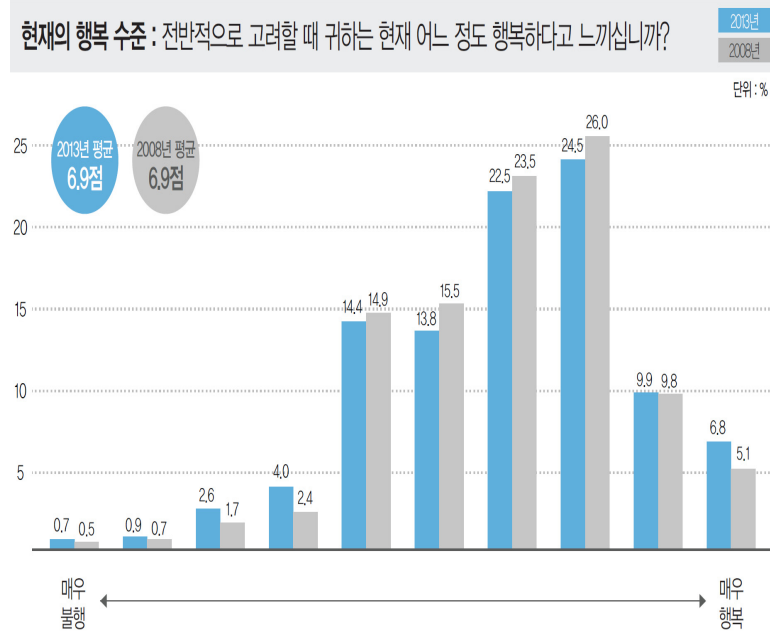


■ 비물질적 측면의 ‘행복’ 중시 가치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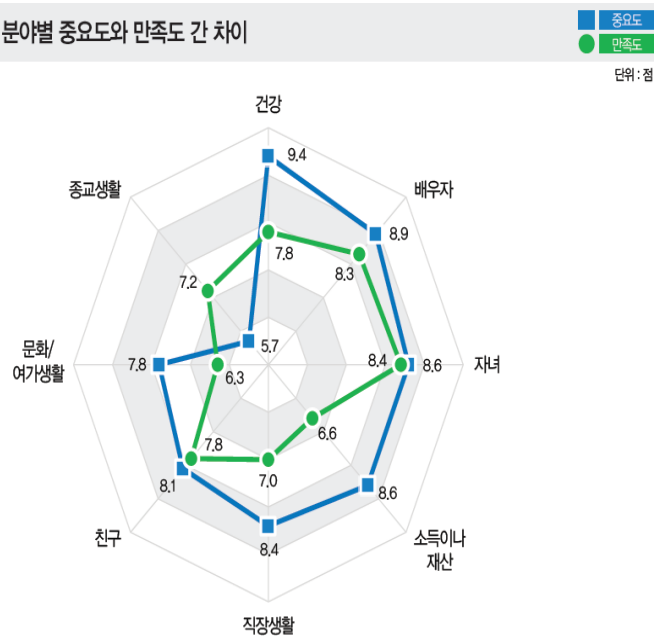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 행복 수준은 10점 만점에 6.9점으로 2008년 조사결과와 같은 수준을 보였으며,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건강(9.4점), 배우자(8.9점), 자녀(8.6점), 소득이나 재산(8.6점)의 순서로 나타나 물질적·경제적 여유 보다는 신체적·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선호하고 있음

[그림 2-14] 국민 행복 수준 및 분야별 중요도·만족도

현재의 행복 수준: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한 삶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



- 또한 도시와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려 했던 경향에서 상대적 격차해소 보다는 개개인의 현재 모습에서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복지 분야에서도 종합적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와 체감형 복지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갈 것임

제2절 충남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1) 인구 및 가구 현황

■ e-통계지표 기준 충청남도의 인구 및 가구수는 전국 약 4%대를 차지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2012년 충청남도의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2000년 대비 약 11%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인구 중 약 4%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충청남도의 가구는 약 76만 6천 가구로 2000년 대비 약 30%가량 증가한 수치임. 전국대비 충청남도의 비중은 4%대를 보임

[표 2-9] 충청남도의 인구수

(단위 :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3
전국(A)	45,985,289	47,041,434	47,990,761	51,141,463
충청남도(B)	1,840,410	1,879,417	2,000,473	2,047,631
충청남도비중(A/B)	4.0	4.0	4.2	4.0

자료 :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e-통계지표)

[표 2-10] 충청남도의 가구수

(단위 : 가구)

구분	2000	2005	2010	2013
전국(A)	14,391,374	15,988,274	17,574,067	17,333,831
충청남도(B)	591,971	663,445	758,552	766,510
충청남도비중(A/B)	4.1	4.1	4.3	4.3

자료 :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 산업 현황

■ 산업분류별 사업체와 종사자 수를 비교한 결과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제조업 등 2차 산업, 농업 등 1차 산업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의 산업분류별 비중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중이 전국과 비교하여 다소 높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충청남도의 산업분류별 종사자 수의 경우 전국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농업의 경우 비슷하지만 2차 산업 종사자 수가 전국보다 약 11.9%p 많고, 3차 산업은 약 12.0%p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1] 충청남도의 산업분류별 사업체수

(단위 : 개소,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1차	3,977 (0.1)	4,041 (0.1)	3,869 (0.1)	4,142 (0.1)	4,124 (0.1)	4,238 (0.1)	4,293 (0.1)
	2차	428,284 (13.3)	432,991 (13.3)	421,035 (12.9)	421,602 (12.8)	430,547 (12.8)	452,363 (13.0)	477,726 (13.3)
	3차	2,794,308 (86.6)	2,825,893 (86.6)	2,839,878 (87.0)	2,867,814 (87.1)	2,920,799 (87.0)	3,013,433 (86.8)	3,120,457 (86.6)
충청남도	1차	360 (0.3)	372 (0.3)	346 (0.3)	360 (0.3)	351 (0.3)	358 (0.3)	356 (0.3)
	2차	15,928 (12.5)	16,285 (12.5)	16,118 (12.3)	16,294 (12.4)	16,556 (12.3)	17,833 (12.7)	18,087 (12.8)
	3차	111,259 (87.2)	113,447 (87.2)	115,085 (87.5)	114,901 (87.3)	117,410 (87.4)	122,316 (87.1)	122,76 (86.9)

주 : 1차 산업은 농업 등 4개, 2차 산업은 제조업 등 10개, 3차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등 26가지 분야임
 자료 : KOSIS(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표 2-12] 충청남도의 산업분류별 종사자수

(단위 : 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1차	49,083 (0.3)	51,414 (0.3)	47,587 (0.3)	46,509 (0.3)	46,795 (0.3)	48,115 (0.3)	47,028 (0.3)
	2차	4,311,161 (27.9)	4,319,884 (27.1)	4,281,016 (26.3)	4,297,080 (25.6)	4,733,756 (26.8)	4,841,180 (26.8)	4,902,498 (26.4)
	3차	11,075,522 (71.8)	11,572,376 (72.6)	11,959,677 (73.4)	12,474,426 (74.2)	12,866,477 (72.9)	13,203,895 (73.0)	13,619,829 (73.3)
충청남도	1차	4,426 (0.7)	4,718 (0.8)	4,234 (0.7)	3,770 (0.6)	3,705 (0.5)	3,760 (0.5)	3,539 (0.5)
	2차	226,505 (37.5)	229,869 (36.9)	239,417 (37.3)	243,604 (36.6)	262,975 (37.4)	294,571 (39.4)	283,865 (38.3)
	3차	373,806 (61.8)	388,283 (62.3)	398,080 (62.0)	418,059 (62.8)	435,880 (62.0)	450,046 (60.1)	454,642 (61.3)

주 : 1차 산업은 농업 등 4개, 2차 산업은 제조업 등 10개, 3차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등 26가지 분야임
 자료 : KOSIS(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 농어업 부문

1) 생산영역

농업분야

① 농가인구 및 농가수

■ 2013년 충청남도의 농가인구는 약 36만 명으로 전국 285만 명의 약 12.5%를 차지함

- 2013년 충청남도의 60세 이상 농가인구는 전체 농가인구 대비 51.3%로 전국의 4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충청남도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농업노동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인 30~40대 인구의 비중은 매우 낮고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은 것으로 보아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은 전반적인 사회적 현상이라고 판단됨

[표 2-13] 충청남도의 연령대별 농가인구(2013년)

(단위 : 명, %)

구분	전국		충청남도	
	농가인구	비중	농가인구	비중
10세 미만	104,886	3.7	12,800	3.6
10~19세	209,308	7.4	24,286	6.8
20~29	167,548	5.9	18,712	5.3
30~39	161,142	5.7	17,945	5.0
40~49	273,402	9.6	30,520	8.6
50~59	569,707	20.0	69,037	19.4
60세 이상	1,361,441	47.8	182,857	51.3
계	2,847,435	100.0	356,158	100.0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2013년 충청남도의 농가 수는 약 14만 가구로 전국 114만 가구의 약 13%를 차지

- 2013년 충청남도의 전업농가수는 겸업농가수보다 약 1만 가구 많은 수치이며 비중은 52.9%를 차지함. 이는 전국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음

[표 2-14] 충청남도의 전·겸업별 농가수(2013년)

(단위 : 가구, %)

구분	농가수	전업농가	겸업농가	전업농가 비중
전국	1,142,029	607,385	534,645	53.2
충청남도	144,033	76,168	67,865	52.9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경지규모별 농가수를 살펴보면 1ha 미만, 1~3ha 미만의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경지규모별 농가수는 1ha 미만농가가 5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1~3ha 미만의 농가가 약 29.8%를 차지하고 있음
- 1ha 미만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농의 경우 전국이 65.2% 인 반면 충청남도는 58.3%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
- 그러나 1ha 미만의 경지 소유를 포함한 3ha 미만의 경지를 소유한 농가는 전국 및 충청남도 모두 약 90%로 대부분을 차지함. 대부분의 농가는 소규모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경지가 없는 농가 또한 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5] 충청남도의 경지규모별 농가수(2013년)

(단위 : 가구, %)

구분	전국		충청남도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경지 없음	9,984	0.9	1,277	0.9
1ha 미만	744,062	65.2	83,896	58.3
1~3ha 미만	289,084	25.3	42,895	29.8
3~5ha 미만	55,387	4.8	8,213	5.7
5~7ha 미만	20,693	1.8	3,455	2.4
7~10ha 미만	12,115	1.1	2,365	1.6
10ha 이상	10,704	0.9	1,932	1.3
계	1,142,029	100.0	144,033	100.0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업조사)

② 품목부류별 생산량

■ 2013년 기준 품목부류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과채류가 전국대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2013년 딸기, 참외, 오이 등 과채류의 생산량 비중은 전국의 약 21.6%로 전국대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채류에 이어 맥류, 잡곡, 두류 등의 식량작물(18.0%), 무, 당근 등의 근채류(11.6%), 배추, 시금치 등의 엽채류(9.1%), 고추, 마늘 등의 조미채류(5.2%), 사과, 포도 등의 과실류(4.6%)로 나타남

[표 2-16] 충청남도의 품목부류별 생산량

(단위 : 천 톤, %)

구분	식량작물(정곡)		과채류		근채류		엽채류		조미채류		과실류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2009	5,553	958 (17.3)	2,355	460 (19.5)	1,355	129 (9.5)	3,099	300 (9.7)	2,543	124 (4.9)	2,880	173 (6.0)
2010	4,836	829 (17.1)	2,052	417 (20.3)	1,141	91 (8.0)	2,265	240 (10.6)	2,436	114 (4.7)	2,489	128 (5.1)
2011	4,775	839 (17.6)	1,933	372 (19.2)	1,330	200 (15.0)	3,271	340 (10.4)	2,586	129 (5.0)	2,458	112 (4.6)
2012	4,565	824 (18.1)	2,068	457 (22.1)	909	131 (14.4)	2,327	250 (10.7)	2,215	126 (5.7)	2,374	85 (3.6)
2013	4,833	871 (18.0)	2,033	440 (21.6)	1,081	125 (11.6)	2,622	238 (9.1)	2,460	127 (5.2)	2,523	115 (4.6)

주 : ()안은 전국대비 충청남도 비중임

자료 : KOSIS(통계청, 농작물 생산조사)

③ 농업소득 및 농림어업 GRDP

■ 2012년 충청남도의 평균 농업소득은 약 12백만 원으로 전년 6백만 원 대비 약 88% 증가하였으나 전국은 약 4% 증가 추이를 보임

- 2012년 충청남도의 농업소득은 전국에 비해 약 30%가량 높은 12백만 원으로 나타남
-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10년간 농업소득 평균 증감 액의 경우 전국은 약 -1% 줄어든 반면 충청남도는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 품목부류별 소득률을 살펴본 결과 화훼를 제외한 모든 부류의 소득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경우 노지과수(63.9), 노지채소(62.0), 식량작물(59.8), 특용작물(59.2), 시설과수(55.5), 시설채소(53.7), 화훼(35) 순으로 나타남
- 화훼의 경우 50%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국(31.6)에 비하여 소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7] 충청남도의 평균 농업소득

(단위 : 천 원)

구분	전국	충청남도
2003	10,572	11,943
2004	12,050	14,314
2005	11,815	13,239
2006	12,092	13,951
2007	10,406	10,982
2008	9,654	13,141
2009	9,698	10,038
2010	10,098	9,672
2011	8,753	6,315
2012	9,127	11,902
2013	10,035	8,486

자료 : KOSIS(통계청 농가경제조사, e-지방지표)

[표 2-18] 충청남도의 주요 농산물의 소득현황(2012년)

(단위 : 원, %)

구분		식량작물	노지채소	시설채소	노지과수	시설과수	화훼	특용작물
전국	조수입	1,709,428	3,135,471	16,240,673	5,211,873	17,846,234	25,293,966	2,653,141
	경영비	743,400	1,097,517	8,152,583	1,777,426	9,082,520	17,311,979	1,000,013
	소득	966,029	2,037,954	8,088,090	3,434,447	8,763,714	7,981,988	1,653,128
	소득률	56.5	65.0	49.8	65.8	49.1	31.6	62.3
충남	조수입	1,554,652	2,652,819	12,646,017	5,238,431	14,606,172	24,247,364	6,802,707
	경영비	625,175	1,024,914	5,837,323	1,904,113	6,500,825	15,522,995	2,671,844
	소득	929,478	1,627,905	6,808,694	3,334,319	8,105,347	8,724,369	4,130,863
	소득률	59.8	62.0	53.7	63.9	55.5	35.0	59.2

주 : 년 1기작/10a 기준임

자료 :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2012 농축산물소득자료집, 농촌진흥청 2013

■ 2012년 충청남도의 농림어업 GRDP는 3조 9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1% 증가함

- 2012년 충청남도의 농림어업 GRDP는 3조 9천억 원으로 2003년부터 10년간 약 2.4%의 더딘 성장률을 보임. 그에 반하여 전국은 약 28조 2천억 원으로 10년간 약 1.8%의 성장률을 보임
- 농림어업 GRDP는 증가하였으나 2012년 전체 산업 GRDP 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의 경우 2.5%, 충청남도는 4.9%로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농림어업의 전국 GRDP 비중은 2003년 3.0%에서 2012년 2.5%로 줄어든 반면 충남은 8.4%에서 4.9%로 급격히 비중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음

[표 2-19] 충청남도의 농림어업 GRDP

(단위 : 백만 원, %)

구분	전국		충청남도	
	GRDP	농림어업GRDP	GRDP	농림어업GRDP
2003	806,524,079	24,112,989(3.0)	38,783,631	3,260,607(8.4)
2004	834,771,320	25,308,930(3.0)	43,327,332	3,410,406(7.9)
2005	869,304,595	25,648,810(3.0)	47,497,309	3,396,876(7.2)
2006	914,018,451	25,774,727(2.8)	53,505,262	3,527,418(6.6)
2007	965,297,715	26,404,052(2.7)	57,563,405	3,473,312(6.0)
2008	991,677,406	27,878,597(2.8)	61,568,588	3,887,845(6.3)
2009	999,311,446	29,655,686(3.0)	67,054,755	3,979,896(5.9)
2010	1,067,217,790	28,417,151(2.7)	75,606,540	3,917,624(5.2)
2011	1,105,864,941	26,945,360(2.4)	79,456,262	3,592,565(4.5)
2012	1,126,743,542	28,234,487(2.5)	81,460,260	3,984,958(4.9)

주 : 1. 2005년 기준가격임. 2. ()안은 전체 GRDP 대비 농림어업 비중임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④ 친환경 농업

■ 2013년 전국대비 충청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건수, 농가수, 면적, 출하량은 각각 7.4%, 6.4%, 7.9%, 9.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충청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건수는 총 1,877 건으로 2012년 1,814 건보다 약 3.5% 증가하였음
- 그러나 친환경 인증 농가 및 면적은 전년대비 각각 12.8%, 23.3% 감소하였으나 출하량은 2012년보다 약 17% 증가한 113,852 톤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은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인증건수의 상승세에 따라 출하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20] 충청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

(단위 : 건, 호, ha, 톤, %)

구분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인증건수	8,717	24,128	24,288	23,654	23,895	25,310
	농가수	53,478	198,891	183,918	160,628	143,083	126,752
	면적	49,806	201,688	194,006	172,672	164,289	141,652
	출하량	797,747	2,357,774	2,215,521	1,852,241	1,498,235	1,181,426
충청남도	인증건수	779(8.9)	1,678(7.0)	1,662(6.8)	1,677(7.1)	1,814(7.6)	1,877(7.4)
	농가수	5,003(9.4)	9,663(4.9)	9,517(5.2)	9,603(6.0)	9,377(6.6)	8,173(6.4)
	면적	4,841(9.7)	15,521(7.7)	15,513(8.0)	15,950(9.2)	14,554(8.9)	11,164(7.9)
	출하량	86,859(10.9)	106,420(4.5)	117,736(5.3)	116,636(6.3)	97,220(6.5)	113,852(9.6)

주 : ()안은 충청남도의 비중임, 유기·무농약·저농약 농산물을 합한 수치임.

자료 : 농산물 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 정보서비스 친환경인증통계(<https://www.enviagro.go.kr>)

■ 2010년 충청남도의 친환경재배 논벼의 농가수는 1,894 가구로 전국의 32,963 농가중 약 5.7%의 비중을 차지함

- 충청남도의 친환경재배 논벼의 수확면적은 1,849ha로 전국 35,065ha중 약 5.3%의 비중을 차지함
- 전국대비 무농약 재배 논벼의 농가수 및 수확면적은 각각 3.8%, 6.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대비 유기농 재배 논벼의 농가수 및 수확면적은 각각 11.6%, 10.2%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친환경재배 논벼의 농가당 수확면적은 0.98ha로 전국의 1.06ha 와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2010년 충청남도의 친환경재배 채소의 농가수는 1,088 가구로 전국의 14,421 농가중 약 7.5%의 비중을 차지함

- 충청남도의 친환경재배 채소의 수확면적은 507ha로 전국 7,389ha중 약 6.9%의 비중을 차지함
- 전국대비 무농약 재배 채소의 농가수 및 수확면적은 각각 5.6%, 5.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대비 유기농 재배 채소의 농가수 및 수확면적은 각각 12.2%, 9.5%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친환경재배 논벼의 농가당 수확면적은 0.47ha로 전국의 0.51ha 와 비교하여 다소 적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2010년 충청남도의 논벼 및 채소를 제외한 친환경재배 기타작물의 농가수는 1,056가구로 전국의 16,414 농가중 약 6.4%의 비중을 차지함

- 충청남도의 친환경재배 기타작물의 수확면적은 1,052ha로 전국 11,748ha중 약 9.0%의 비중을 차지함
- 전국대비 무농약 재배 기타작물의 농가수 및 수확면적은 각각 5.6%, 7.9%로 나타남
- 전국대비 유기농 재배 기타작물의 농가수 및 수확면적은 각각 9.3%, 11.5%로 나타남
- 충청남도 친환경재배 기타작물의 농가당 수확면적은 1.00ha로 전국의 0.72ha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논벼 및 채소와는 달리 농가당 면적이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1] 충청남도의 품목부류별 친환경재배 농가수 및 면적(2010년)

(단위 : 가구, ha, %)

구분		농가수	수확면적	농가당 면적
논벼	유기농	956(11.6)	1,000(10.2)	1.05
	무농약	938(3.8)	849(6.9)	0.98
	소계	1,894(5.7)	1,849(5.3)	0.98
채소류	유기농	509(12.2)	242(9.5)	0.48
	무농약	579(5.6)	265(5.5)	0.46
	소계	1,088(7.5)	507(6.9)	0.47
기타작물	유기농	337(9.3)	397(11.5)	1.18
	무농약	719(5.6)	655(7.9)	0.91
	소계	1,056(6.4)	1,052(9.0)	1.00

주 : ()안은 충청남도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⑤ 기타 현황

■ 2013년 채소종자 국내 생산은 326,840kg 으로 2012대비 약 2.7% 감소함

- 2013년에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채소종자 국내 생산량은 종자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채소종자의 경우 채종지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량의 편차가 큰 편임.
또한 2010년 국내 채종전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표 2-22] 채소종자 국내생산현황

(단위 : kg)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량	265,731	215,714	224,982	336,045	326,840
증감율	-	-18.8	4.3	49.4	-2.7

주 : 1. 해외채종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2. 한국종자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임
자료 : 한국종자협회 홈페이지(<http://kosaseed.or.kr>)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채소종자 수입은 수출보다 항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채소종자의 수출액은 40,504천 달러 임.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하여 큰 변화는 없지만 2005년에 비하면 약 165%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2013년 채소종자의 수출량은 638,275kg 으로 전년대비 약 17.2%가 증가함. 수출량 역시 수출액과 마찬가지로 2005년 대비 85.8%의 큰 폭으로 성장세를 보임
-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입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2013년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는 31,569천 달러, 수출량과 수입량의 차이는 1,669,864kg 으로 매년 그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3] 채소종자 수출입현황

(단위 : kg, 천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A)	금액	15,277	18,763	20,741	19,055	19,563	23,042	32,507	40,080	40,504
	중량	343,494	322,253	314,316	312,988	455,796	348,575	690,498	544,606	638,275
수입 (B)	금액	30,271	31,709	38,004	32,833	37,213	38,775	50,926	61,137	72,073
	중량	-	-	-	-	-	-	1,795,351	2,010,527	2,308,139
차이 (A-B)	금액	-14,994	-12,946	-17,263	-13,778	-17,650	-15,733	-18,419	-21,057	-31,569
	중량	-	-	-	-	-	-	-1,104,853	-1,465,921	-1,669,864

주 : 1. 수입은 해외채종과 해외순수입을 합한 수치임
2. 고추, 단고추, 당근, 무, 배추
자료 : 한국종자협회 홈페이지(<http://kosaseed.or.kr>)

축산업 분야

① 가축사육 농가

■ 2013년 충청남도 가축사육 농가는 2만 6천여 농가로 이는 전국대비 약 14.6%의 비중을 차지함

- 한우와 오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전국대비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돼지 및 육우 사육농가의 경우 각각 1,082농가, 590농가로 전국대비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4] 충청남도의 축종별 가축사육 농가

(단위 : 농가, %)

구분	2010	2011	2012	2013
한우	20,275(12.9)	20,765(13.9)	18,337(13.5)	16,005(13.6)
육우	1,172(19.2)	423(12.2)	434(12.8)	590(18.5)
젖소(암컷)	1,137(17.6)	887(15.3)	914(15.9)	908(16.2)
돼지	1,322(16.7)	1,242(19.6)	1,049(18.5)	1,082(19.8)
육계	2,568(11.8)	2,366(11.5)	2,070(10.3)	3,432(15.7)
산란계	2,925(11.9)	3,000(13.8)	2,919(12.9)	3,836(16.3)
오리	615(13.4)	318(9.7)	256(9.2)	339(12.7)
계	30,014(13.1)	29,001(13.8)	25,979(13.3)	26,192(14.6)

주 : ()안은 전국대비 충청남도의 비중임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조사)

② 축종별 사육두수

■ 충청남도 가축사육 농가의 축종별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총 3천 3백만 마리로 전국대비 약 1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비중 순으로 돼지(19.8), 닭(19.6), 젖소(18.9), 육우(14.2), 한우(13.4), 한육우(13.4), 오리(5.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오리의 경우 전국대비 10%가 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5] 충청남도의 가축사육농가 축종별 사육두수

(단위 : 마리, %)

	2009	2010	2011	2012	2013
한육우	343,916 (13.1)	388,778 (13.3)	406,938 (13.8)	415,797 (13.6)	391,604 (13.4)
한우	322,477 (13.0)	364,838 (13.2)	383,345 (13.6)	395,051 (13.5)	376,287 (13.4)
육우	21,439 (13.6)	23,940 (14.9)	23,593 (18.1)	20,746 (16.5)	15,317 (14.2)
젖소	83,738 (18.8)	79,064 (18.4)	73,202 (18.1)	77,728 (18.5)	80,220 (18.9)
돼지	1,786,094 (18.6)	1,897,285 (19.2)	1,842,342 (22.5)	1,999,424 (20.2)	1,963,512 (19.8)
닭	26,438,696 (19.1)	28,316,245 (19.0)	29,757,392 (19.9)	28,376,285 (19.3)	29,709,525 (19.6)
오리	—	—	544,391 (4.3)	611,744 (5.5)	580,929 (5.3)
계	28,996,360 (18.8)	31,070,150 (18.8)	33,031,203 (18.7)	31,896,775 (18.3)	33,117,394 (18.6)

주 : 1. ()안은 전국대비 충청남도의 비중임

2. 해당년도 4/4분기 기준임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조사)

③ 친환경 축산

■ 2013년 전국대비 충청남도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건수, 농가수, 출하량은 각각 7.1%, 7.6%, 1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충청남도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건수는 총 500건으로 2012년 407건보다 약 22.9% 증가하였음
- 2013년 친환경 축산물의 농가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 6.4% 증가 하였으나 전국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여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충청남도의 친환경 축산물 출하량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은 전년도 대비 약 138% 증가한 142,452 톤을 출하함. 이는 전국 출하량의 약 15.5%를 차지하는 수치임

[표 2-26] 충청남도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현황

(단위 : 건, 호, ha, 톤, %)

구분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인증건 수	18	2,056	3,445	3,694	5,721	7,089
	농가수	18	4,441	6,264	6,697	9,351	10,845
	출하량	256	309,546	404,197	501,611	569,635	916,510
충청남도	인증건 수	1(5.6)	188(9.1)	263(7.6)	372(10.1)	407(7.1)	500(7.1)
	농가수	1(5.6)	393(8.8)	565(9.0)	718(10.7)	777(8.3)	827(7.6)
	출하량	0(0.0)	31,181(10.1)	52,621(13.0)	46,121(9.2)	59,864(10.5)	142,452(15.5)

주 : ()안은 충청남도의 비중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합한 수치임.

자료 : 농산물 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 정보서비스 친환경인증통계(<https://www.enviagro.go.kr>)

④분뇨 처리방법별 가축사육농가

■ 2010년 충청남도 가축사육 농가의 분뇨 처리방법 중 자체처리는 97.5%, 위탁처리는 2.5%로 나타나 대부분의 농가는 자체처리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경우 역시 충청남도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
- 자체처리의 경우 퇴비화처리, 기타처리, 정화처리, 액비화 처리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7] 충청남도의 가축분뇨 처리방법별 가축사육 농가(2010년)

(단위 : 가구, %)

		전국		충청남도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가축사육농가		266,372	100.0	37,169	100.0
자체처리		259,540	97.4	36,258	97.5
처리 방법	퇴비화	149,428	56.1	20,378	54.8
	액비화	1,049	0.4	140	0.4
	정 화	1,958	0.7	459	1.2
	기 타	107,105	40.2	15,281	41.1
위탁처리		6,832	2.6	911	2.5

주 : 가축분뇨 처리방법별 현황에 대한 최근 통계는 구체적으로 집계된 것이 없으므로 2010년 통계 사용함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수산업 분야

① 어가인구 및 어가 수

■ 2013년 충청남도의 어가인구는 약 2만 1천 명으로 전국 14만 7천 명의 약 14.5%를 차지함

- 2013년 충청남도의 60세 이상 어가인구 비중은 전체 어가인구 대비 47.1%로 전국의 4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충청남도 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60대, 50대, 40대 순이어서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은 매우 낮고 고령의 인구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8] 충청남도의 연령대별 어가인구(2013년)

(단위 : 명, %)

구분	전국		충청남도	
	어가인구	비중	어가인구	비중
15세 미만	11,292	7.7	1,531	7.2
15~19세	5,114	3.5	630	2.9
20~29	6,565	4.5	642	3.0
30~39	8,587	5.8	1,183	5.5
40~49	15,449	10.5	2,027	9.5
50~59	38,900	26.4	5,292	24.8
60세 이상	61,424	41.7	10,070	47.1
계	147,330	100.0	21,375	100.0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2013년 충청남도의 어가 수는 약 9천 가구로 전국 6만 가구의 약 16%를 차지함

- 2013년 전국의 어가 중 전업어가 비중은 약 29%로 낮은 수치임. 그러나 충남의 경우 대부분의 어가가 겸업을 하고 있고 전업어의 경우 18.9%로 전국보다 비중이 매우 낮은 수치임

[표 2-29] 충청남도의 전·겸업별 어가 수(2013년)

(단위 : 가구, %)

	어가 수	전업어가	겸업어가	전업어가 비중
전국	60,325	17,185	43,140	28.5
충청남도	9,385	1,773	7,612	18.9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조사)

■ 어업형태별 어가 수는 전국 및 충청남도 모두 해수면 어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 충청남도의 해수면 어가 수는 약 1만 1천 가구이고 내수면 가구는 284가구로 매우 소수임.
전국 또한 해수면 어가가 대부분으로 약 95%의 비중을 차지함

[표 2-30] 충청남도의 어업형태별 어가 수

(단위 : 가구, %)

	내수면	해수면	계
전국	3,659(5.3)	65,775(94.7)	69,434
충청남도	284(2.5)	11,021(97.5)	11,305

주 : ()안은 전체 어가 수 대비 비중임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충남통계연보(2013)

② 어업생산량

■ 최근 5년간 충청남도의 어업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 중 3%후반에서 4%초반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는 일반해면, 천해양식, 내수면어업의 순으로 생산량이 많게 나타나고 있음
- 다른 어업방식과는 달리 내수면어업의 경우 전국대비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31] 충청남도의 어업별 형태별 생산량

(단위 : M/T,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일반해면	1,226,966	1,132,536	1,235,489	1,091,031	1,044,697
	천해양식	1,313,355	1,355,000	1,477,546	1,488,949	1,515,209
	원양어업	611,950	592,116	510,624	575,308	549,928
	내수면어업	30,071	30,982	32,270	28,132	25,415
	소계	3,182,342	3,110,634	3,255,929	3,183,424	3,135,250
충청남도	일반해면	80,612(6.6)	92,253(8.1)	82,377(6.7)	70,000(6.4)	71,623(6.9)
	천해양식	33,865(2.6)	35,799(2.6)	32,000(2.2)	38,415(2.6)	47,548(3.1)
	원양어업	—	—	—	—	—
	내수면어업	2,798(9.3)	3,427(11.1)	3,905(12.1)	3,281(11.7)	2,588(10.2)
	소계	117,275(3.7)	131,479(4.2)	118,282(3.6)	111,698(3.5)	121,765(3.9)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임업 분야

① 임가 및 임가인구

■ 2013년 충청남도의 임가는 총 7,846가구로 전국대비 약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임가의 경우 2010년 8,712가구에서 2013년 7,846가구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음

■ 2013년 충청남도의 임가인구는 19,424명으로 전국대비 약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임가인구 역시 임가 수와 마찬가지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표 2-32] 충청남도의 임가 및 임가인구

(단위 : 가구, 명)

	임가		임가인구	
	전국	충청남도	전국	충청남도
2010	96,108	8,712(9.10)	253,656	23,622(9.3)
2011	94,563	8,518(9.0)	240,108	23,195(9.7)
2012	97,941	8,363(8.5)	248,188	22,530(9.1)
2013	95,373	7,846(8.2)	235,919	19,424(8.2)

자료 : 통계청(농림어업조사)

② 주요 임산물 생산량

■ 2012년 전국대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은행(70.0%)으로 약 1백만 5천 톤의 생산량을 기록함

- 다음으로 밤(47.5%), 호두(13.0%), 도라지(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은행의 경우 2011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하여 결실량이 부족하여 생산량이 17.7%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다시 예전 수준인 70.0%가 됨

[표 2-33] 충청남도의 주요 임산물 생산량

(단위 : kg, 본, 천 원)

구 분	충청남도		전국	
	2011	2012	2011	2012
밤	27,654,737(42.8)	29,588,937(47.5)	64,585,941	62,344,508
은 행	422,743(17.7)	1,458,113(70.0)	2,384,875	2,081,822
호 두	202,837(19.0)	149,307(13.0)	1,069,639	1,150,553
떫은감	564,838(0.6)	800,210(0.8)	93,037,938	98,977,837
대 추	70,622(0.8)	70,471(0.7)	8,491,609	9,509,495
약초류	196,054(1.9)	—	10,287,704	—
고사리	1,061,790(19.2)	263,866(5.2)	5,517,916	5,090,218
더 덕	143,991(1.7)	189,479(2.4)	8,549,522	7,793,582
도라지	687,783(10.2)	718,737(11.8)	6,758,964	6,111,540

주 : ()안은 전국대비 충청남도 비중임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농림수산물통계연보, KOSIS(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

③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 2012년 충청남도의 산림면적은 약 41만ha임

■ 임목축적의 경우 약 3천9백만m³임

- 임목축적 면적은 2010년까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2011년부터 점차 감소 추세이고, 전국의 임목축적 면적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해 비중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2-34] 충청남도의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단위 : ha, m³, %)

	산림면적		임목축적	
	전국	충청남도	전국	충청남도
2006	6,389,393	440,423(6.9)	525,832,466	31,187,386(5.9)
2007	6,382,449	439,810(6.9)	624,398,315	39,069,313(6.3)
2008	6,374,875	439,052(6.9)	659,120,238	41,497,022(6.3)
2009	6,370,304	438,673(6.9)	696,828,205	43,927,547(6.3)
2010	6,368,843	437,851(6.9)	800,025,299	48,043,211(6.0)
2011	—	435,066()	—	46,136,186()
2012	—	407,877()	—	39,162,164()

주 : ()안은 전국대비 충청남도 비중임

자료 : 산림청(연도별 산림 기본통계), 충남통계연보(2013)

■ 수종별 산림면적을 살펴보면 침엽수(41.5), 활엽수(28.7), 혼효림(25.2), 무림목지(4.5), 죽림(0.1) 순으로 나타남

- 2010년의 경우 전국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지만 충남의 활엽수 면적(28.5%)이 전국대비 약 1.5%p 높고 혼효림 면적이 4.0%p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충남은 전반적으로 수종별 면적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산림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표 2-35] 충청남도의 수종별 산림면적

(단위 : ha, %)

구분	전국					충남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무림목지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무림목지
2010년	2,580,629 (40.5)	1,718,916 (27.0)	1,864,925 (29.3)	7,039 (0.1)	197,334 (3.1)	183,594 (42.0)	124,568 (28.5)	110,516 (25.3)	252 (0.1)	18,016 (4.1)
2011년	—	—	—	—	—	179,042 (41.2)	127,942 (29.4)	109,980 (25.3)	239 (0.1)	17,563 (4.0)
2012년	—	—	—	—	—	163,991 (41.5)	113,458 (28.7)	99,392 (25.2)	254 (0.1)	17,801 (4.5)

주 : ()전체대비 수종별 면적비중임
자료 : 산림청, 충남통계연보(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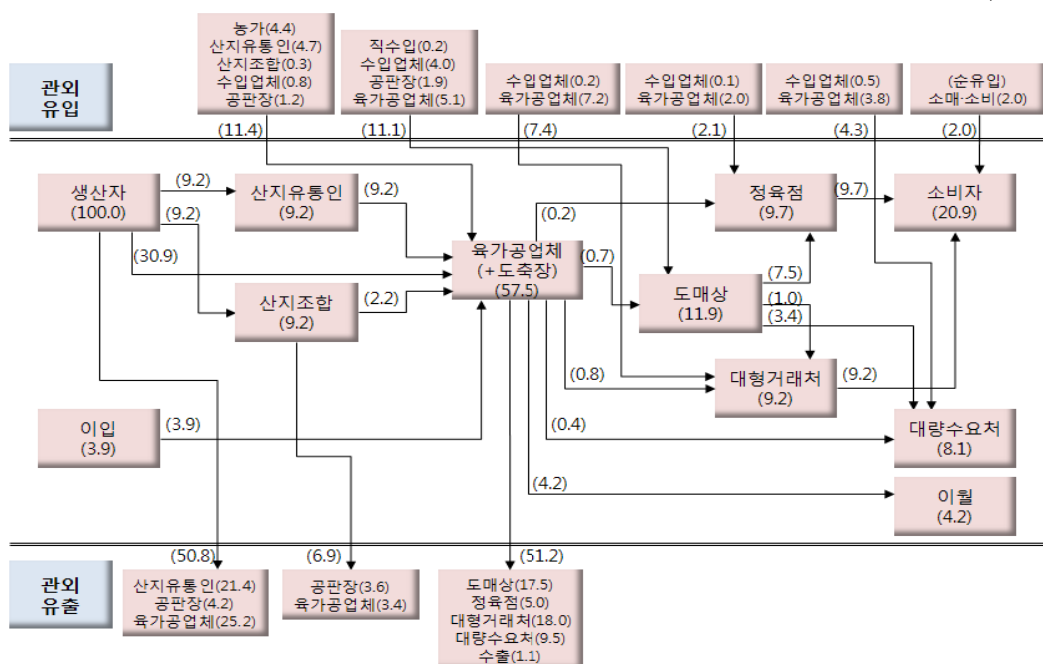
2) 유통영역

■ 충청남도의 돼지고기의 관외유입 비율은 38.3%로 나타났고 관외유출 비율은 108.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충청남도는 돼지고기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 많기 때문에 도 외로의 순유출 비율이 약 71%로 높게 나타남

[그림 2-15] 충청남도의 돼지고기 유통경로별 유통량(2009년)

(단위 : %)



주 : 1. 생산량에서 생산감모량(2.5%)을 차감한 유통량을 기준으로 전체 비율을 산정함

2. 선행 연구에서 2009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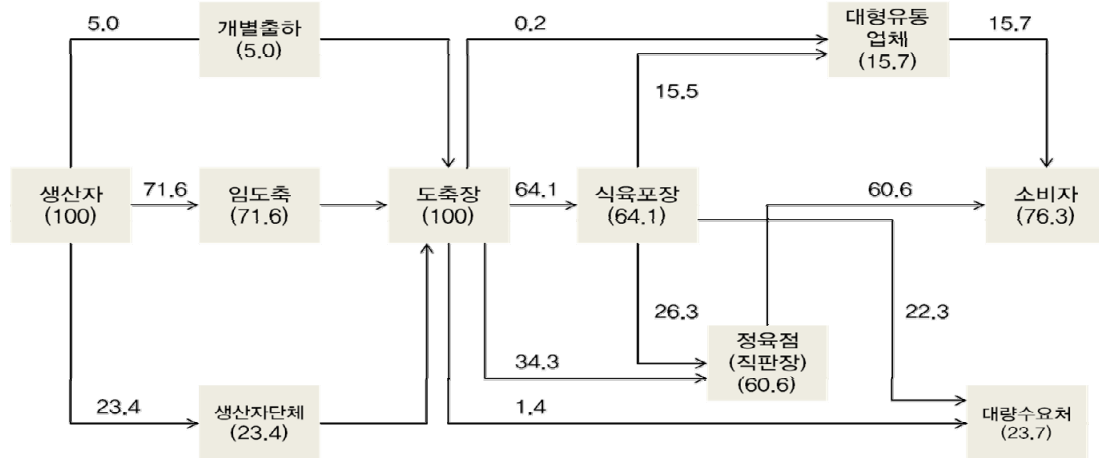
자료 :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충남 농식품체계 현황조사 추진계획,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2

■ 돼지고기의 유통경로는 생산자에서 임도축, 생산자단체, 개별출하로 도축장을 거친 후 소비자 및 대량수요처에 최종 소비됨

- 개별 도축출하는 많지 않으며 임도축(71.6%), 생산자단체(23.4%)의 비중으로 나타남

[그림 2-16] 돼지고기 유통경로별 유통량(전국, 2012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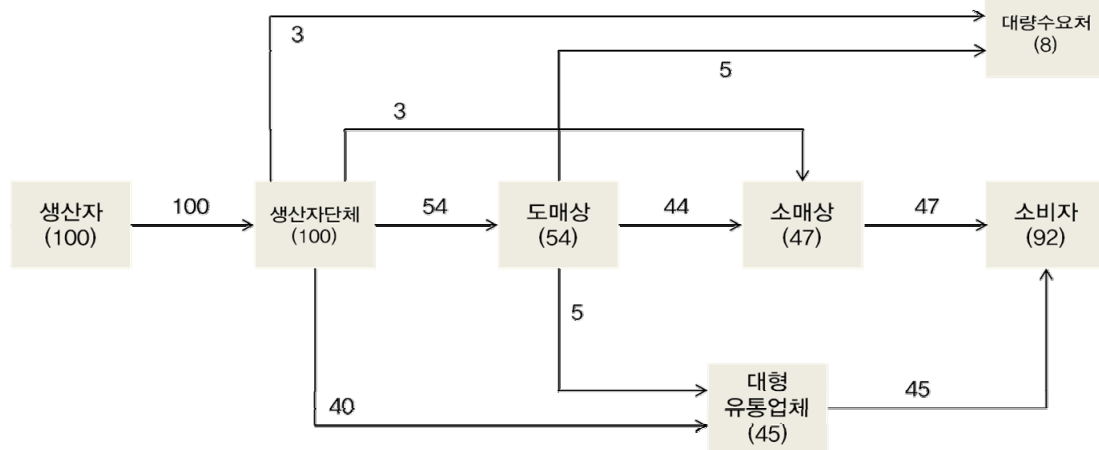
주 : 전국평균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KAMIS

■ 딸기의 경우 과채류의 특성상 유통경로가 짧으며 대형유통업체로의 유통비중 (45%)이 높음

- 딸기는 생산자단체 단일 경로를 통하여 소비자 및 대량수요처에서 최종 소비되고 있음

[그림 2-17] 딸기 유통경로별 유통량(전국,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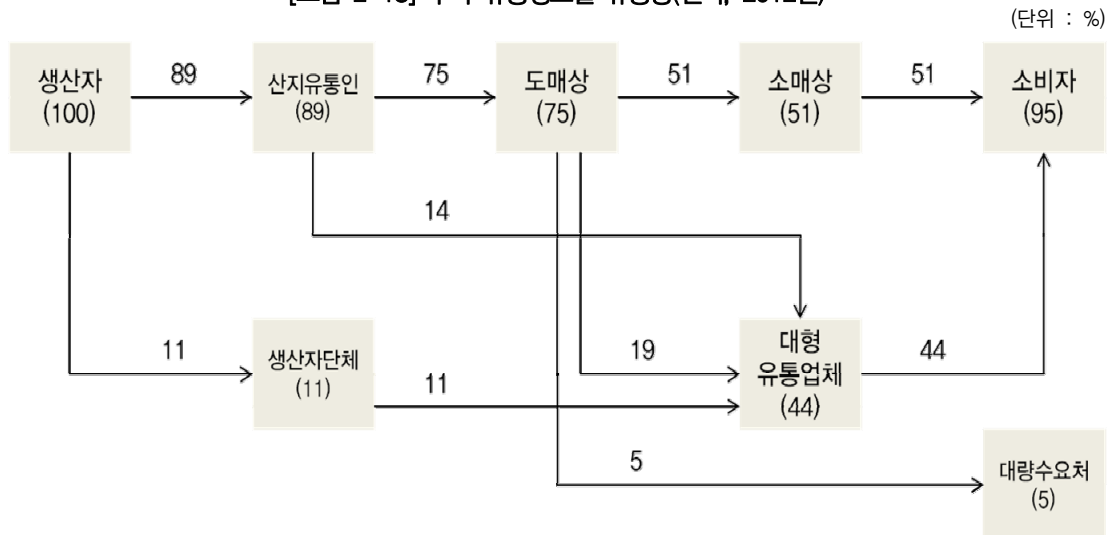
(단위 : %)



주 : 조사지역(충청남도 논산, 전남 담양, 경북 고령)평균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KAMIS

- 수박은 최종 소비까지 산지유통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89%) 소비자는 대형 유통업체(44%) 및 소매상(51%)에게 최종 소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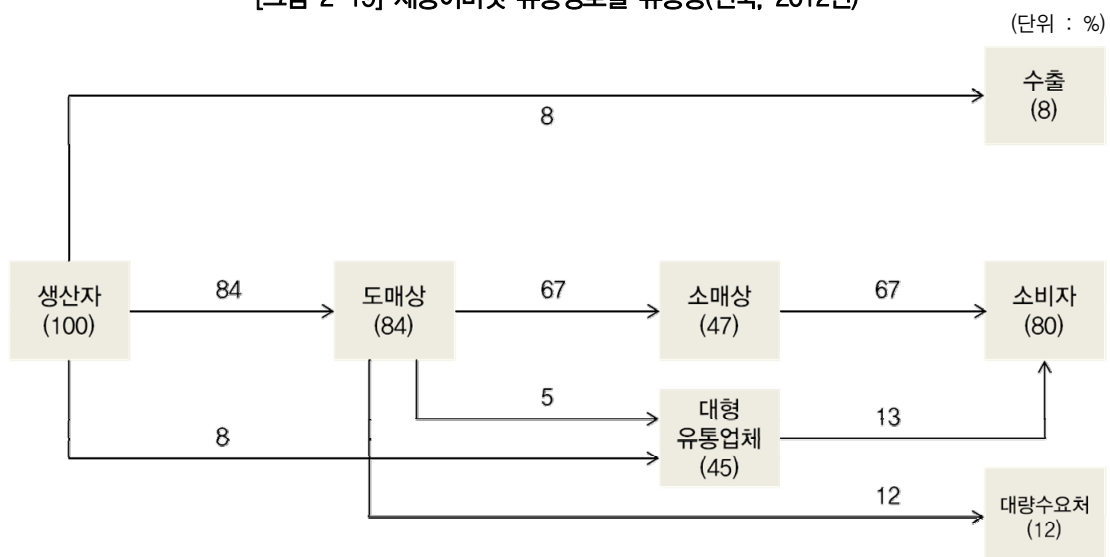
[그림 2-18] 수박 유통경로별 유통량(전국, 2012년)



주 : 조사지역(경남 함안, 경북 고령, 충청남도 부여)평균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KAMIS

- 새송이버섯은 생산자에서 도매상으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84%) 생산자가 직접 수출 또한 하고 있음(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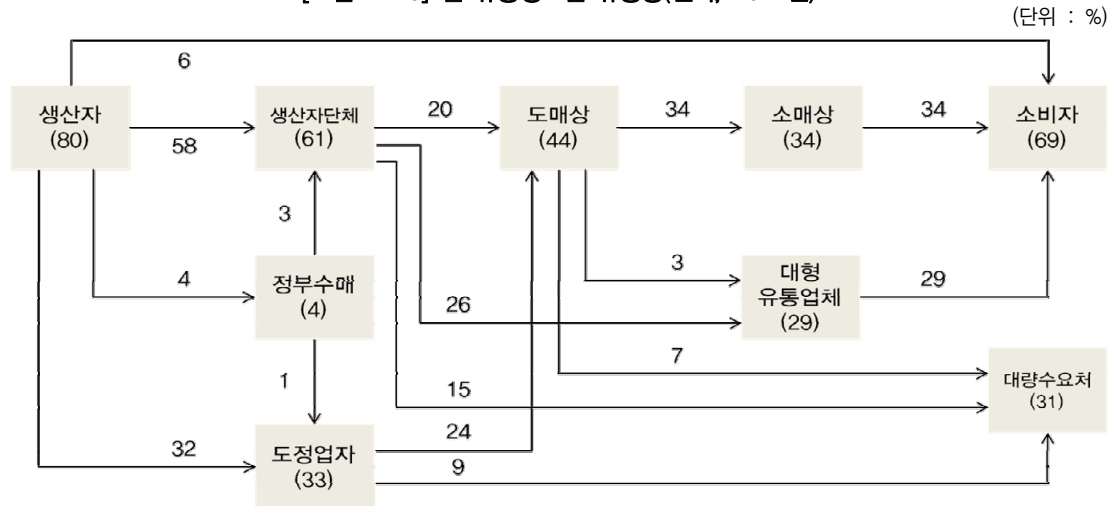
[그림 2-19] 새송이버섯 유통경로별 유통량(전국, 2012년)



주 : 조사지역(경북 청도, 전남 무안, 충청남도 천안)평균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KAMIS

- 쌀의 최종 소비는 소비자 및 대량수요처이며, 소비자는 소매상(34%), 대형유통업체(29%), 생산자(6%)로부터 공급받음

[그림 2-20] 쌀 유통경로별 유통량(전국,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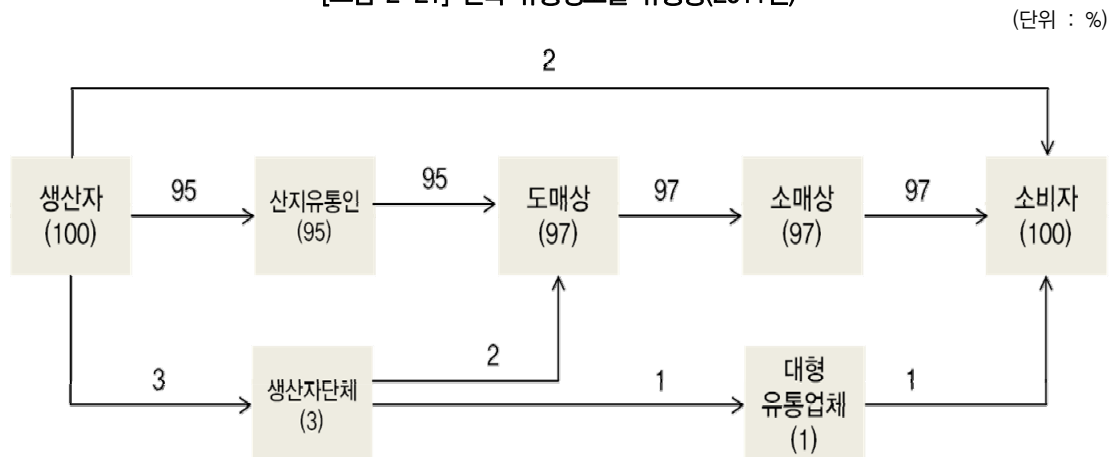


주 : 조사지역(전북 김제, 충청남도 당진, 경기 평택)평균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KAMIS

- 전북은 다른 농수산물과는 달리 최종소비에서 대량수요처가 없으며 100% 소비자에 의해 소비됨

- 소비자는 생산자 직거래, 대형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소매상에 의해 소비함

[그림 2-21] 전북 유통경로별 유통량(2011년)



주 : 조사지역(전남)평균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KAMIS

■ 충청남도 농가의 주된 농산물 판매처는 농협·농업법인, 소비자 직판, 기타(판매없음 포함)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협·농업법인에 대한 판매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처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전국의 32.4%보다는 다소 높은 33.8%의 수치를 보임
- 소비자 직판의 경우 전국은 약 22%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충청남도는 약 17% 정도로 다소 낮게 나타남

■ 2010년 충청남도 어가의 주된 수산물 판매처는 수집상, 소비자 직접판매, 수협(위·공판장)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전국 어가의 주된 수산물 판매처는 수협(위·공판장), 수집상, 소비자 직접판매의 순으로 나타남
- 수협으로의 판매비중은 전국이 약 37%로 가장 많은 반면 충청남도는 약 19%로 수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또한 수집상에 대한 판매비중도 충청남도가 약 38%인 반면 전국은 약 24%로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임

[표 2-36] 충청남도의 농산물 판매처별 농가수(2013년)

(단위 : 가구, %)

구분	전국		충청남도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도매시장	50,454	4.4	7,419	5.2
산지공판장	56,244	4.9	3,385	2.4
농협·농업법인	369,778	32.4	48,678	33.8
정부기관	50,072	4.4	6,864	4.8
수집상	137,539	12.0	12,264	8.5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6,151	0.5	981	0.7
소비자 직판	256,287	22.4	24,962	17.3
농축산물 가공업체	54,708	4.8	17,547	12.2
농축산물 소매상	16,736	1.5	2,891	2.0
기타(판매없음 포함)	144,061	12.6	19,042	13.2
계	1,142,029	100.0	144,033	100.0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조사)

[표 2-37] 충청남도의 수산물 판매처별 어가 수(2010년)

(단위 : 가구, %)

구분	전국		충청남도	
	어가 수	비중	어가 수	비중
수협(위·공판장)	25,914	37.3	2,169	19.2
도매시장	3,397	4.9	402	3.6
수집상	16,744	24.1	4,261	37.7
음식점	2,798	4.0	490	4.3
수산물 가공업체	1,636	2.4	217	1.9
양식장	462	0.7	102	0.9
소비자 직접판매	13,042	18.8	2,798	24.8
수산물 소매상	3,830	5.5	621	5.5
기타(판매없음 포함)	1,611	2.3	245	2.2
계	69,434	100.0	11,305	100.0

주 : 내수면 및 해수면 어가를 합한 수치임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2013년 충청남도의 축산물을 제외한 농·임·수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증가추세에 있음

- 2013년 농산물 수출액은 215,251천 달러로 전년대비 약 2.07% 증가하였고 전국대비 충청남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로 나타남
- 축산물 수출액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특히 2013년 축산물 수출액은 28,305천 달러로 전국대비 6.5%의 비중을 차지함
- 충청남도의 수산물 수출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2008년 전국대비 0.6%의 비중엔 불과하던 수출액은 2013년 1.9%까지 늘어남
- 임산물 수출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축·수산물 보다 높은 비중인 12.4%를 차지함

[표 2-38] 충청남도의 농·축·임·수산물 수출액

(단위 : 천 달러,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전국	충청남도	전국	충청남도	전국	충청남도	전국	충청남도
2008년	2,714,652	150,962 (5.6)	215,070	23,129 (10.8)	1,448,305	8,929 (0.6)	118,466	18,864 (15.9)
2009년	2,990,803	172,641 (5.8)	139,552	17,752 (12.7)	1,511,230	10,718 (0.7)	167,701	19,515 (11.6)
2010년	3,721,680	202,696 (5.4)	146,052	22,896 (15.7)	1,798,162	19,021 (1.1)	214,122	32,463 (15.2)
2011년	4,940,837	252,086 (5.1)	176,276	24,870 (14.1)	2,307,798	33,676 (1.5)	266,408	31,270 (11.7)
2012년	4,784,954	210,887 (4.4)	395,079	30,185 (7.6)	2,361,250	36,282 (1.5)	464,777	35,852 (7.7)
2013년	4,741,045	215,251 (4.5)	435,673	28,405 (6.5)	2,151,322	40,776 (1.9)	547,850	68,050 (12.4)

주 : ()안은 전국대비 충청남도의 비중임
 자료 : aTkati(수출입 통계)

■ 2013년 충청남도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고, 축·임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2013년 농산물 수입액은 1,025,725천 달러로 전년도에 비하여 2.7% 증가하였으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4%임
- 축산물 수입액은 117,742천 달러로 전년대비 약 22.2%가량 감소함
- 충청남도의 수산물 수입액은 전국 총 수입액 중 1.6%의 비중을 차지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임산물 수입액은 371,354천 달러로 전년도 대비 약 7.5% 감소함

[표 2-39] 충청남도의 농·축·임·수산물 수입액

(단위 : 천 달러, %)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전국	충청남도	전국	충청남도	전국	충청남도	전국	충청남도
2009년	11,753,631	552,661 (4.7)	2,485,059	55,085 (2.2)	2,894,401	33,020 (1.1)	4,107,778	338,576 (8.2)
2010년	13,987,712	637,142 (4.6)	3,123,000	99,693 (3.2)	3,457,341	34,689 (1.0)	5,219,128	531,859 (10.2)
2011년	18,362,009	899,087 (4.9)	5,071,394	153,328 (3.0)	4,189,853	38,838 (0.9)	5,560,746	457,066 (8.2)
2012년	18,717,091	999,053 (5.3)	4,720,489	151,325 (3.2)	3,975,272	45,730 (1.2)	6,009,534	401,336 (6.7)
2013년	19,105,126	1,025,725 (5.4)	4,687,658	117,742 (2.5)	3,893,300	60,485 (1.6)	6,505,473	371,354 (5.7)

주 : ()안은 전국대비 충청남도의 비중임
자료 : aTkati(수출입 통계)

■ 농촌 두레기업 육성 등 6차산업화 지원 추진 현황

- ‘두레기업 육성사업’은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계획적인 육성관리를 통한 6차산업화 촉진과 농어촌 산업기반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 마을기업 창업 및 육성, 6차산업화 전략자문단 및 포럼운영, 농식품·향토자원문화디자인사업, 전통주 및 발효식품 육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도비와 시·군비로만 추진하던 2012년 농어업 6차산업화 마을기업 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2012년에 ‘충청남도 농어업 6차산업화 확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道가 주도하는 농어촌복합산업화사업 계획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받아 광특 501억 원을 포함 총 1,00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5년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12개소 구축에 300억원, 농어업 6차산업화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에 701억 원 투자 할 예정

[표 2-40] 2013년도 6차산업화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추진 내용 (총사업비 : 104억 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대상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	소규모 마을기업 창업	18억 원 (마을당 10억 원 이하)	마을단위에서 농어업을 기반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6차산업화를 이루려는 사업단 또는 마을간 연계를 통해 법인화 계획이 있는 사업단
	자립화 마을기업 육성	36억 원 (마을당 10억 원~ 25억 원 이하)	소규모마을 기준요건을 갖춘 농어업법인으로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사업단
지역 우량기업 육성	기업조합 육성	30억 원 (1개 사업단에 10억 원 이하)	읍면단위 3개 이상기업이 새로운 영리법인을 구성하고 신상품개발 및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
	농식품 우량기업 육성	20억 원 (업체당 5억 원 이하)	전년도 결산서 기준 매출 3억원이상~30억원이하, HACCP 등 기업시설고도화를 희망하는 농식품 가공기업
농식품 향토산업 문화디자인 사업		13.5억 원 (개소당 2천만 원 이내)	도내 농식품 관련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시군, 법인 단체 등 대상 웹툰, C, B를 이용한 광고 리플렛, 포장 디자인, 용기 및 박스 디자인 등 지원
전통주 및 발효식품 육성		개소당 1~2억 원 이내	도내 전통장류, 전통주류, 농식품 기업 대상 공장 증개축, 생산설비 등 지원
6차산업화 전략자문단 및 포럼 운영	전략자문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위촉 모니터링 및 컨설팅, 도정 자문 등
	6차산업화 포럼		6차산업화 리더역량강화 및 정보 교류 선진 사례 견학

3) 소비영역

■ 2013년 충청남도의 학교는 총 713개소로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2012년도에 처음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100%에 달성하였으나, 충청남도는 이미 2009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급식을 하는 학생 또한 매년 100%에 육박하고 있음

[표 2-41] 충청남도의 학교급식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학교수	학교수	11,312	11,396	11,483	11,520	11,575
		급식학교수	11,303(99.9)	11,389(99.9)	11,476(99.9)	11,520(100.0)	11,575(100.0)
	학생수	학생수	7,452,681	7,262,591	7,017,593	6,743,341	6,519,355
		급식학생수	7,339,220(98.5)	7,179,211(98.9)	6,967,407(99.3)	6,710,378(99.5)	6,491,536(99.6)
충청남도	학교수	학교수	746	743	745	714	713
		급식학교수	746(100.0)	743(100.0)	745(100.0)	714(100.0)	713(100.0)
	학생수	학생수	298,591	293,876	288,161	272,130	264,775
		급식학생수	296,113(99.2)	293,823(100.0)	288,113(99.9)	272,130(100.0)	264,775(100.0)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충청남도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소비현황을 살펴보면 딸기, 들깨, 수박, 배 순으로 자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는 농산물의 소비지이기 보단 생산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품목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1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딸기의 경우 878.1%로 조사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들깨, 수박, 배, 토마토 등은 자급률이 5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품목 중 감, 두류, 양파, 당근, 참외 등은 자급률이 10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2] 충청남도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소비현황(2009)²⁾

(단위: 천 톤, 천 리터, %)

분류	품목	생산량	소비량	과부족	자급률
식량작물	미곡류	914.9	165.4	749.6	553.3
	두류	13.6	18.5	-4.9	73.7
	서류	109.3	29.8	79.5	366.5
	식량작물 평균	345.9	71.2	274.7	331.2
과채류	수박	229.8	30.0	199.8	765.5
	참외	1.0	7.6	-6.6	12.8
	딸기	58.7	6.7	52.0	878.1
	오이	53.1	13.6	39.5	391.1
	호박	29.9	13.1	16.8	227.9
	토마토	87.5	14.3	73.2	612.0
	과채류 평균	76.7	14.2	62.5	481.2
엽근채류	배추	268.6	74.6	194.0	359.9
	상추	9.3	4.9	4.4	190.6
	시금치	4.1	3.5	0.5	115.1
	양배추	18.5	11.1	7.4	166.3
	무	127.4	36.0	91.5	354.1
	당근	1.2	6.2	-5.0	18.7
	엽근채류 평균	71.5	22.7	48.8	200.8
조미채소류	고추	29.9	13.7	16.2	217.9
	마늘	29.7	13.2	16.5	225.5
	양파	22.9	49.0	-26.1	46.7
	파	36.5	16.2	20.3	225.6
	조미채소류 평균	29.8	23.0	6.7	178.9
과실류	사과	29.7	18.3	11.5	162.7
	배	90.5	14.6	75.9	618.4
	복숭아	11.9	7.5	4.4	159.3
	포도	24.3	13.6	10.8	179.3
	감	11.0	14.8	-3.8	74.6
	과실류 평균	33.5	13.8	19.8	238.9
특용작물	참깨	1.1	0.8	0.4	146.6
	들깨	6.9	0.9	6.0	786.4
	땅콩	1.8	1.6	0.2	111.1
	특용작물 평균	3.3	1.1	2.2	348.0
축산물	소고기	24.7	19.2	5.5	128.8
	돼지고기	132.5	37.5	95.1	353.8
	닭고기	75.5	19.2	56.3	393.6
	우유	397.4	106.4	291.0	373.4
	축산물 평균	157.5	45.6	112.0	312.4

주 1. 품목별 소비량은 품목별 전체 식품공급량(비가식부 폐기량 포함)에 인구 비중을 곱하여 산출. 단, 인구 통계는 편의상 2010년 수치 적용.

2. 소고기 생산량은 한우 및 육우 수치이고, 소고기 소비량은 젓소 도축분도 포함

자료 : 통계청 품목별 생산면적 및 생산량(2009), 축종별 가구 수 및 마리 수(2009), 인구총조사(2010), 농림 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20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09)

2) 본 자료는 2011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충남 농식품 체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재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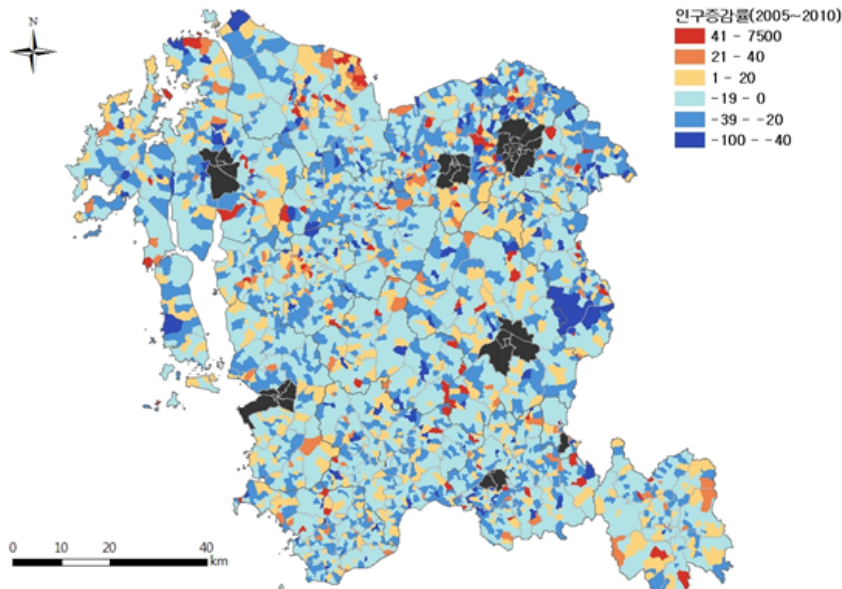
3. 농어촌 부문

1) 농어촌마을 인구 현황

■ 농어촌마을(행정리) 평균인구는 '05년 206.0명에서 '10년 186.6명으로 감소

- 2005년 행정리 전체인구는 93만 명이고 행정리 평균인구는 206.0명, 100명 미만 행정리 1,207개(전체 4,286개)임
- 그러나 2010년에는 크게 감소하여 행정리 전체 인구는 84만명, 행정리 평균인구는 186.6명, 100명 미만의 행정리가 1,592개로 나타남

[그림 2-22] 충청남도 행정리별 인구증감 현황(200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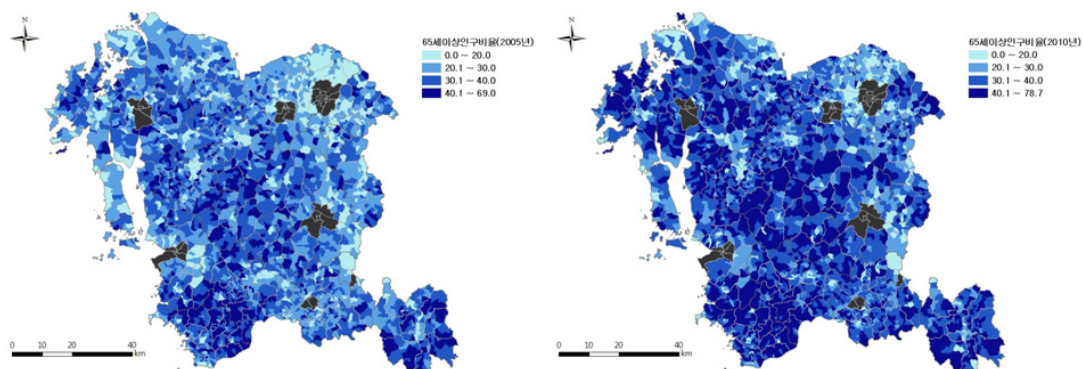


자료: 최은영 외, GIS에 기반한 충남 농어촌마을의 변화 분석(2005~2010), 충남발전연구원 2014년 전략과제

■ 농어촌마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34.1%로 초고령 사회를 넘어섬

- 2010년 현재 농어촌마을(행정리)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34.1%로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어서고 있으며, 75세 이상 인구비율도 15.2%에 달하고 있음
- 특히, 65세 이상 인구비율 50% 이상의 행정리가 2005년 100개에서 2010년 437개로 크게 증가함

[그림 2-23] 충청남도 행정리별 고령인구 현황(2005-2010)



자료: 최은영 외, GIS에 기반한 충남 농어촌마을의 변화 분석(2005~2010), 충남발전연구원 2014년 전략과제

■ 2010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충청남도의 농어업가구 규모별 가구 수를 살펴보면 19가구 미만인 마을이 158개 마을이며 300가구 이상 마을은 267개 마을로 나타남

- 19가구 이하인 마을이 158개 마을로 충청남도 전체 행정리의 3.5%를 차지하며, 300가구 이상인 마을이 267개 마을로 5.9%를 차지함
- 20가구 이상 80가구 미만인 마을이 전체의 68.7%를 차지
- 40~59가구 이하 마을이 27.4%로 가장 많이 나타남

[표 2-43] 충청남도의 농림어업가구 규모별 마을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소계	19가구 이하	20~ 39	40~ 59	60~ 79	80~ 99	100~ 149	150~ 199	200~ 299	300가 구 이상
전국	36,498	3,091	10,642	8,641	4,824	2,467	2,525	1,083	1,186	2,039
충남	4,517	158	1,082	1,236	784	376	318	134	162	267
	100.0(%)	3.5	24.0	27.4	17.4	8.3	7.0	3.0	3.6	5.9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

2) 도농교류활동 현황

■ 2010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충청남도의 도농교류 활동 행정리 수는 826개로 전국 대비 약 11.3%를 차지함

- 2010년 충청남도의 도농교류활동 행정리는 약 826개 마을로 전국대비 약 11.3%

[표 2-44] 충청남도의 도농교류활동 현황

(단위 : 개, %)

구분	총 행정리수	도농교류							
		합계	자매결연	농어촌체험	직거래	직판장	음식/숙박	주말농원/임대	기타
전국(A)	36,498	7,333	4,584	1,366	2,537	671	1,239	332	320
충청남도(B)	4,517	826	533	188	269	83	136	38	42
충청남도비중(A/B)	12.4	11.3	11.6	13.8	10.6	12.4	11.0	11.4	13.1

주 : 도농교류 사업활동별 행정리수는 복수응답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

3) 의료시설 현황

■ 충청남도 4,517개 행정리 중 의료시설이 행정리 안에 위치한 행정리는 약 35.4%인 1,597개 행정리로 나타남

- 2010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충청남도 4,517개 행정리 중 의료시설이 행정리 안에 위치한 행정리는 1,597개로 약 35.4%로 나타남

[표 2-45] 충청남도의 행정리 내 의료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행정리수	약국	보건진료소	보건소 (지소포함)	병·의원 · 한의원	종합병원
전국	36,498	4,069	3,314	3,504	3,023	347
충청남도	4,517	453	393	411	317	23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4) 이용 가능 대중교통 수단별 마을 현황

■ 충청남도 4,517개 마을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마을 수 178개 마을

- 충청남도 전체 4,517개 마을 중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은 4,339개 마을로 178개 마을이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이용이 많은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이며 여객선은 21개 마을로 가장 적게 나타남
- 전국적으로 5.1%정도가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는 마을인 반면 충청남도는 3.9%로 나타남

[표 2-46] 충청남도의 대중교통 수단별 마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이용가능한 마을 수	대중교통 수단			
			시내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기차
전국	36,498	34,639	33,128	7,595	456	1,104
충청남도	4,517	4,339	4,297	601	21	120

자료 : KOSIS(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

5) 상하수도 보급률

■ 충청남도 상하수도보급률 약 74.6%,

- 충청남도의 상하수도보급률은 약 74.6%로 전국 평균 약 90.0%에 비해 보급률이 낮음

[표 2-47] 충청남도의 상하수도 보급률

(단위 : %)

구분	보급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75.12	77.05	78.97	80.23	81.59	82.71	83.56	84.46	85.30	89.98
충청남도	51.35	55.39	58.58	60.53	63.18	65.61	67.48	69.37	72.23	74.64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2013)

6) 주택보급률

■ 충청남도 주택보급률 109.9%로 나타남

- 충청남도의 가구 수는 794천 가구이며, 주택 수는 873천 호로 주택보급률은 102.7%로 나타났음

[표 2-48] 충청남도의 신 주택보급률

(단위 : 천 호, 천 가구, %)

구분		보급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가구수	15,887	16,105	16,364	16,619	16,862	17,339	17,719	18,057
	주택수	15,663	15,978	16,295	16,733	17,071	17,672	18,131	18,551
	주택보급률	98.3	99.2	99.6	100.7	101.2	101.9	102.3	102.7
충청남도	가구수	660	669	679	689	698	749	773	794
	주택수	685	716	738	761	789	807	838	873
	주택보급률	103.8	107.1	108.7	110.5	113	107.8	108.5	109.9

자료 : 국토해양부, 신 주택보급률, 2013

7) 귀농귀촌 현황

■ 충청남도 귀촌가구 수 2012년도에 비해 213% 증가

- 충청남도의 귀촌가구 수가 2012년도 319가구에서 2013년도에는 679가구로 약 213% 증가하였고, 귀촌가구원 수도 같은 기간 672명에서 1,224명으로 약 182% 늘어남

[표 2-49] 충청남도의 귀농귀촌 현황

(단위 : 가구, 명)

구분		2012		2013	
지역	연령별	귀촌가구수	가구원수	귀촌가구수	가구원수
전국	계	15,788	27,665	21,501	37,442
	30대 이하	3,369	—	3,807	—
	40대	3,302	—	4,748	—
	50대	4,001	—	6,131	—
	60대	3,007	—	4,447	—
	70대 이상	2,109	—	2,368	—
충청남도	계	319	672	679	1,224
	30대 이하	17	—	94	—
	40대	43	—	112	—
	50대	111	—	244	—
	60대	103	—	155	—
	70대 이상	45	—	74	—

자료 : KOSIS(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2014)

8)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현황

■ 충청남도 경지정리 70.9%, 배수개선 70.6%, 간척 96.2% 개발

- 충청남도 경지정리율은 총 답면적 171,122ha 중 151,705ha를 개발해 현재 70.9%이며 배수개선사업은 37,565ha 중 26,520ha를 개발해 70.6%의 개선율을 보이고 있음
- 간척 대상면적 29,501ha 중 28,376ha를 개발해 개발율은 96.2% 임
- 전국대비해도 전반적으로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50] 충청남도의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현황

(단위 : ha, %)

구분			1995	2000	2005	2010
지역	사업종류					
전국	경지정리	총답면적	1,205,867	1,149,041	1,104,811	984,140
		개발면적	689,682	699,087	721,096	721,054
		경지정리율	57.2	60.8	65.3	73.2
	배수개선	대상면적	207,000	234,560	226,350	232,476
		개발면적	1,771	8,699	1,128	4,287
		개선율	32.4	43.0	58.4	64.1
	개간	대상면적	—	—	—	—
		개발면적	197,113	199,062	200,631	202,011
		개발율	—	—	—	—
	간척	대상면적	208,321	156,666	135,642	135,642
		개발면적	73,699	75,738	81,644	86,701
		개발율	35.4	48.3	60.2	63.9
충청남도	경지정리	총답면적	197,135	191,174	185,849	171,122
		개발면적	102,968	147,897	151,705	151,705
		경지정리율	52.3	66.5	70.9	70.9
	배수개선	대상면적	38,900	40,230	37,507	37,565
		개발면적	15,580	19,014	24,335	26,520
		개선율	40.1	17.3	64.9	70.6
	개간	대상면적	—	—	—	—
		개발면적	25,509	25,591	25,712	25,903
		개발율	—	—	—	—
	간척	대상면적	38,257	34,153	29,501	29,501
		개발면적	25,351	26,068	27,887	28,376
		개발율	66.3	76.3	94.5	96.2

자료 : KOSIS(통계청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조사, 2012)

4. 농어업인 부문

1) 3농혁신 추진체계 및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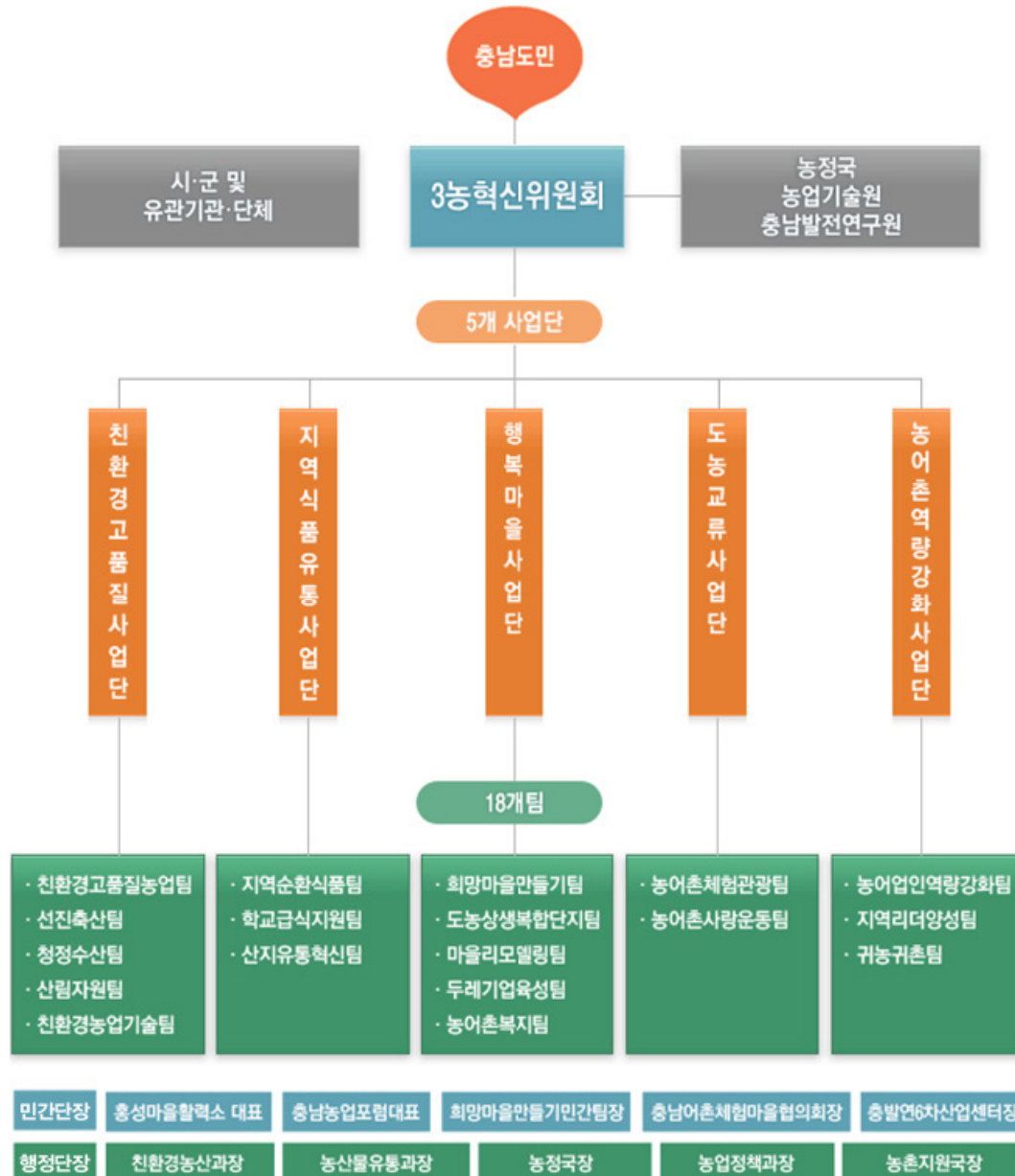
① 3농혁신 추진경위

[표 2-51] 3농혁신 추진경위

연도별	주요내용
2011	1월 - 농정혁신 시행계획 수립 지시(도지사) 1월 - 충남농정혁신위원회 구성(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 2~4월 -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워크숍(6회) 4월 -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4.26, 300명, 4개분과) 5월 - 농어업·농어촌 혁신 TF 구성, 운영 5~7월 - T/F팀 구성 및 과제도출 회의(8회, 584명) 8월 - 농어업·농어촌 추진계획 보고회 9~12월 - 시군 순회설명회(5개 권역, 1,250명) 12월 - 3농혁신위원회, 3사업단/8TF 등 조직 구성
2012	1월 - 3농혁신위원회 출범, 합동 워크숍 개최(1.9~10) 1월 - 총괄지원조직 설치 : 농정혁신담당(1.16) 1월 - 3농혁신 세부실천계획 수립(1.17) 2~12월 - 3농혁신 추진상황 점검(2.15, 4.19, 7.18, 10.17, 12.28) 2~12월 - 3농혁신대학 운영(11과정, 1,256명) 3~12월 - 3단/8TF팀별 회의 개최, 추진상황 수시 점검 및 보완, 2013년 3농혁신 시책구상 보고회, 각종 간담 토론회, 소위원회 개최
2013	1월 - 2013년도 3농혁신 합동워크숍(1.25~26) 2월 - 3농혁신 전진대회(2.15, 1,000명) 5월 - 3농혁신 5개 사업단 및 18개 팀별 협의회 개최 6월 - 3농혁신위원 간담회 개최 7월 - 3농혁신 추진상황 점검(기획관리실) 8월 - 3농혁신 5개 사업단 및 18개 팀별 협의회 개최 9월 - 3농혁신위원 워크숍(9.5~6) 9월 - 전국농업기자포럼 도지사 초청 3농혁신 토론(농식품부) 2~12월 - 3농혁신위원회(2.4, 3.8, 4.8, 8.14, 9.5, 12.19) 2~12월 - 3농혁신대학 운영(11과정, 1,625명)
2014	2월 - 3농혁신 소위원회 4~12월 - 3농혁신 추진상황보고회(4월, 7월, 9월, 12월) 3~12월 - 3농혁신대학 운영(9과정, 500명)

② 3농혁신 추진체계도

[그림 2-24] 3농혁신 추진 체계도



③ 3농혁신위원회

■ 구성

- 근거: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 구성방향
 - 현실성 있는 자문기능 역할강화 및 분야별 전문성 확보(친환경농업, 급식센터 등)
- 구성인원: 32명
 - 농어업관련 유관기관·단체 19명, 교수 4명, 전문가 4명, 교육계 2명, 도의회 1명, 언론인 1명, 총발언 1명

■ 운영

- 운영방침: 타위원회와 차별성 있도록 상시 활동 운영
 - 3농혁신 단·T/F팀과의 유기적 연계활동 강화
- 회의운영: 추진상황 점검 및 농정현안 발생시 탄력적 운영
 - 3농혁신 실행과제 수행을 위한 수시자문 및 의견수렴
 - 자문사항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 및 접근 채널 다양화

■ 주요역할

- 추진과제 실행방안 자문, 농정전반에 대한 연구·검토 및 대안제시
- 3농혁신 역량결집 및 농정현안 대응방안 마련 창구역할

④ 5개사업단 18개팀

■ 구성방향

- 농어업인 단체, 농업관련 기관·단체, 품목별 연합회 시군 과장 등을 참여시켜 실행력 담보
- 5개사업단 18개팀
 - 친환경고품질사업단 : 친환경고품질농업팀, 선진축산팀, 청정수산팀, 산림자원팀, 친환경농업기술팀
 - 지역식품유통사업단 : 지역순환식품팀, 학교급식지원팀, 산지유통혁신팀
 - 행복마을사업단 : 희망마을만들기팀, 도농상생복합단지팀, 마을리모델링팀, 두레기업육성팀, 농어촌복지팀
 - 도농교류사업단 : 농어촌체험관광팀, 농어촌사랑운동팀
 - 농어촌역량강화사업단 : 농어업인역량강화팀, 지역리더양성팀, 귀농귀촌팀

■ 운영 및 주요기능

- 단·팀장: 공무원과 민간인 공동팀장제 도입
 - 공무원: 소관부서 과장 또는 주무담당
 - 민간인: 전공 또는 현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
- 회의개최: 각 단·팀별로 문제점 발생시 수시개최

■ 주요기능과 역할

- 단·팀별 농정혁신 과제발굴(국정과제 연계 및 자체과제)
- 과제별 추진상황 파악대응(문제점 보완 및 발전방안 강구)

■ 역할분담

- 농수산국장: 3농혁신 업무총괄 및 정책 주도적 추진
- 3농혁신위원회: 실행방안 제시 및 자문, 대안제시
- 농정혁신담당: 추진상황 정기·수시점검, 성과평가, 위원회·T/F팀운영
- 3농혁신 단·T/F팀: 소관과제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⑤ 3농혁신 추진상황

■ 3농혁신 30대 중점사업

[표 2-52] 3농혁신 30대 중점사업

5개 사업단	18개 팀	30대 중점사업
친환경 고품질 사업단	친환경고품질농업팀	1. 충남 농산물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2. 도심 속의 학교 논 만들기 3. 대한민국 최고 쌀 청풍명월 골드 육성 4. 직접지불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5. 친환경고품질 생산지원을 위한 삽교호 수질개선
	선진축산팀	6. 동물복지 실천농가 보조금지원제도 도입 추진 7. 악취 없는 클린 축산농장 만들기 8. 충남 조사료 완전 자급기반 구축
	청정수산팀	9. 충남 수산 4대 명품화 10. “지천 100리” 금강 목장화 사업 11. 비생산적인 간척지 바다 복원
	산림자원팀	12. 산채재배를 통한 산촌 소득 높이기 13. 삶에 도움을 주는 풍요로운 숲 조성
	친환경농업기술팀	14.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15. FTA 대응 신품종 개발 및 우량종자·종묘 공급 16. 화학농약대체 친환경 농자재 및 토양관리 기술개발
지역식품 유통 사업단	산지유통혁신팀	17. 생산자조직 중심의 광역유통시스템 구축
	학교급식지원팀	18. 시군을 연계하는 충남 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
	지역순환식품팀	19. 지역생산, 지역소비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행복마을 사업단	희망마을만들기팀	20.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도농상생복합단지팀	21. 일터·삶터·쉼터가 융합된 상생복합단지 만들기
	마을리모델링팀	22. 농어촌 마을리모델링 사업
	두레기업육성팀	23. 농어업 6차산업화를 촉진하는 두레기업 육성
	농어촌복지팀	24. 충남형 농어촌서비스기준 설정 및 향상
도농교류 사업단	농어촌체험관광팀	25. 즐겁고 안전한 농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
	농어촌사랑운동팀	26. 범사회적 농어촌사랑운동 추진
농어촌 역량강화 사업단	농업인역량강화팀	27. 농어촌리더 육성의 산실 3농혁신대학 운영 28. 미래 농업의 주역 4-H대학 운영
	지역리더양성팀	29. 지역리더 아카데미 운영
	귀농귀촌팀	30. 귀농선배와 함께하는 귀농지원센터 운영

2) 지역역량강화

① 지역리더 양성

■ 지역리더 양성 추진

- 농어촌 지역민들에게 3농혁신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 거양
- 3농혁신 사업에 대한 인지도 상승
- 교육생의 인적네트워크 및 개인역량 강화
- 2013년부터 초급(15개 시군), 중급(3기), 고급(1기) 신설
 - 초급반 : 437명/ 2박3일(20시간)/시군농업기술센터 추진
 - 중급반 : 122명/2박3일(20시간)/농업기술원 추진
 - 고급반 : 43명/2박3일(20시간)/농업기술원 추진

■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로서 갖춰야할 역량과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기본 소양을 축적

■ 교육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

- 수료생 대상 연차적으로 심화교육 실시 및 지역 적용사례 발굴 교육용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
-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향후 보완발전방안

- 수료생 전국단위의 농업리더들과도 소통하는 계기 마련
- 전국단위 지역리더 포럼, 연찬회 등 참석 유도(지역리더 역량 강화)

② 3농대학 운영현황

■ 목표 : 3년간 3,300명 육성

- 2012년 운영실적 : 11개 과정 1,256명
 - 2013년 운영실적 : 11개 과정 1,625명
 - 2014년 운영계획 : 9개 과정 500명
- ※ 실천 과제별 핵심리더.협력자.지원그룹 선별참여 정예화

■ 운영 : 매월 마지막주 금·토요일(시군 순회)

■ 구성 : 3농혁신 주체자 중심 리더양성

■ 주요내용

- 주제별 정책방향,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교육 및 토론
- 품질혁신, 소비운동, 수범사례, 명사특강 등 프로그램 운영

■ 교과구성

[표 2-53] 3농대학 교과구성

교과구성	교과 운영 방식
분야별 발전방향 특강	분야별 전문가, 명사
사례발표	분야의 성공한 농업인(단체)
분임토론	분임별 발전방안 토론
종합토론	분임토론 발표 및 종합토론

③ 4-H대학 운영현황

■ 목표: 2년간 4-H회원 560명(2013~2014)

■ 운영: 짝수월 둘째주 목·금요일(시군 순회)

■ 주요내용

- 4-H회원 대상으로 충남도정 이해와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및 소통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4-H회원의 지적갈증 해소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으로 지역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 추진성과

- 추진실적: 6회 420명(2013년 목표 6회 280명)/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89%
- 3농혁신 3농혁신의 이해와 실천의식 고취
 - 인문사회: 인성함양을 위한 철학, 경제학, 사회학, 리더십 등 사례교류, 성공한 선배농업인 및 농업CEO, 회원 간 사례 공유
 - 소통화합: 지사님과의 대화 및 마음열기 체육활동 등

■ 주요성과

- 인문사회 등 다양한 특강으로 충남 미래를 이끌 기본소양 습득
- 회원 사례발표로 성공 및 실패 요인 벤치마킹 기회 제공
- 충남도정 이해도 향상으로 3농혁신 실천 계기 마련
- 애로사항 등 파악 해결: 8건(부여 토마토재배 4-H회원 컨설팅 등)
-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에서 평가까지 자체적으로 운영

■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 2-54] 4-H대학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 일부 교육과정 농번기로 4-H대학 회원참석 어려움	• 농번기를 피해 운영일정 조정 • 1회당 참석인원 확대 및 운영 횟수 축소
• 4-H대학만의 특화된 교육 부족	• 4-H 회원 맞춤형 교육 실시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보다는 회원 농장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참여형 교육으로 재편
• 제한된 시간 내에 다양한 교육 수요 수용의 어려움	•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형 학습을 가미하여 공감대형성을 통한 교육효과 배가 • 선배농업인 및 회원간 사례발표를 통한 우수사례확보

④ 농업인대학 운영현황

■ 목 적

-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강한 농업 실현을 위한 전문 경영인 양성

■ 추진방향

- 장기교육(100시간 이상)을 통한 심화학습 실천
- 시군단위 농업인대학(품목교육)과 차별화를 위한 지도자 양성에 중점
- 도 농정시책 성공추진을 위한 핵심요원 교육 강화
- 수료자에 대한 포럼구성 등 사후관리로 교육효과 제고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및 동법 제7조

■ 교육과정

- 교육기관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학 장 : 충청남도지사
- 운영학과 : 2개학과(친환경농업학과, 6차산업화학학과)
- 인 원 : 66명(친환경농업학과28명, 6차산업화학학과38명)

■ 교육내용

- 귀농 일반 과정: 친환경 농업 이론 + 현장학습, 자재활용 등
 -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위한 의식 교육
 - 친환경 선도 농가 방문 + 혁신사례교육
 - 친환경 및 순환농업 실천 현장 교육
- 가공 과정: 6차산업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등
 - 6차산업화 이해
 - 농작물 가공 및 유통 이론 및 실습
 - 선진지 및 우리지역 6차산업 농산물 가공지 견학 등
- 교육장소: 농업기술원, 주산단지 현장 등
- 교육생 선발 : 2013년 3월
- 입학자격 : 도내 주소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인조직 현황

①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 연합회

■ 새천년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와 농정개혁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의 사회, 경제, 정치적 권익향상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 수행

■ 또한 통일대비 식량안보 및 남북농업교류 활성화에 적극적 참여

■ 주요사업

- 조직사업 :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지방의원협의회, 농축협조합장협의회, 한농연 조직 혁신위원회, 농업경영인의 사회활동
- 정책사업 :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연구·조사·대안제시, 한국농어민신문 발간, 한국농림 수산방송 방송, 월간 한농연 및 농업동향 발행

- 특별사업 : 농업경영인대회, 으뜸농산물 한마당

■ 총 121,232명의 회원 중 충청남도 연합회 회원 15,212명

②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 연합회

■ 전국 쌀 전업농가의 자주적 협동체로 우리나라 쌀 농업의 보호 및 발전을 목표로 함

- 나아가 국가 식량주권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쌀 전업농의 육성과 생산기술의 과학화, 표준화, 고품질화, 경영의 합리화, 유통의 선진화,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여 선진 농어촌 건설 및 농촌환경 보존 등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향목표

-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연합회
- 지역안보를 선도하는 연합회
- 식량안보를 담당하는 연합회
- 통일농업을 담당하는 연합회
- 자조 자생력을 갖춘 연합회

■ 총 69,842명의 회원 중 충청남도 연합회 회원 13,239명

③ 전국농민회 충청남도 연맹

■ WTO 신자유주의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에 맞서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막고, 식량 자급과 환경 보전, 농가부채, 농업정책, 농민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복지실현,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우리 민족의 자주적 경제건설을 위하여 시군 농민회가 모여 활동하는 연맹

■ 전국 9개의 도연맹과 100개 시군지역의 농민회 중 충청남도는 논산시 농민회, 당진군 농민회 등 12개 시군 농민회가 참여중 임

④ 농촌지도자 충청남도연합회

■ 우애·봉사·창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 후계자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 농업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선진농업, 농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 주요사업

- 조직역량 강화사업 : 지문위원회, 농촌지도자 리더십 증진사업, 신규회원 영입 확대 사업, 해외농업 연수, 농촌환경 정화 운동
- 협력지원사업 : 회원복지 증진사업, 시·도 사무처장 기능 활성화 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교육, 농·소·정 협력사업
- 대외정책사업 : 농업인단체 연대활동, 정책과정 참여, 유관기관·단체 행사
- 정책연구사업 : 경성과제연구, 정책과제연구, 수시과제연구, 연구조성사업
- 신문발간사업 : 농업인신문 발간, 여성농업인신문 발간, 도서출판사업, 대내외 행사 및 교류사업, 운영위원회
- 농촌지도자대회

■ 충청남도는 읍면동 연합회 211개와 시군구연합회 15개로 총 11,282명의 회원이 활동 중임

⑤ 4-H회(충청남도 농업기술원)

■ 「4-H운동」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 덕, 노, 체의 「4-H이념」을 생활화함으로써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케 하려는 일종의 사회교육운동임

- 「4-H회」가 다른 청소년단체와의 차이점은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애착을 갖게 하며 영농인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데 있음
- 일반적으로 청소년 교육이 지육, 덕육, 체육에 역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4-H운동」이 노육(勞育)을 추가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바로 이런 이유임
- 따라서 4-H활동은 현장교육과 과제실천 등을 중요한 대상으로 꼽음

■ 4-H회 이념

- 머리를 명석하게 계발하여 올바른 판단력과 합리적인 계획능력을 배양(지육)
- 진실된 심성, 겸손한 자세로 인격을 도야하고, 강인한 의지를 함양(덕육)
- 근면, 성실, 인내로써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실천하고 확산(노육)
- 건강을 증진하여 능률을 향상시키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즐거운 삶을 도모(체육)

■ 추진방향

- 4-H회원 중시의 후계리더 양성 및 영농성공 자신감 고취

■ 교육내용

- 4-H회원 중심의 후계리더 양성 교육
- 회당 중점 교육주제 선택 집중 심화교육: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사업계획수립, IT, 경영 기록장 활용 등
- 회원 및 선배농업인 우수·실패담 등의 공유를 통한 영농성공 자신감 고취
- 우수회원 농장 및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 충청남도 4-H연합회

- 교육과정에 대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 수요조사, 강사섭외 등 다양한 의견제시

⑥ 농촌지도자회

■ 농촌지도자회 지표

[그림 2-25] 농촌지도자회 지표



■ 역할

- 과학영농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시범활동
- 농업기술연찬회 및 농민교육행사
- 농촌청소년 육성지도
- 신품종 종자 보급 및 시범단지 조성
- 농사정보 교환 및 친목도모
- 농민권익보호에 관한 연구조사

■ 주요성과

- 새 기술과제 훈련 및 과학영농시범 실천 시도
- 농촌지도자대회개최 및 농산물품평회 참여

- 농업발전 연찬회 및 각종 세미나 운영
- 환경농업육성 및 국토청결운동 적극전개
- 도농연대 농심살리기 운동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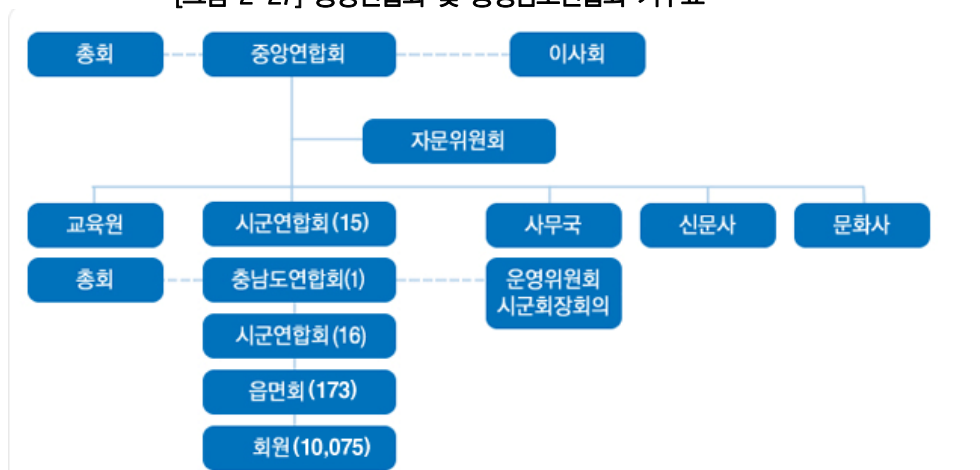
■ 농촌지도기관과의 연계관계

[그림 2-26] 농촌지도기관과의 연계관계도



■ 중앙연합회 및 충청남도연합회 기구표

[그림 2-27] 중앙연합회 및 충청남도연합회 기구표



⑦ 생활개선회

■ 건전한 농촌가정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자발적인 참여,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농촌을 지켜나갈 여성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

■ 주요활동

- 전통향토음식 발굴 및 보급, 녹색식생활 실천운동
- 장류, 한과류 등 농산물 가공 상품화 판매활동

- 농촌관광 농촌문화체험 등 소득자원화 활동
- 도시소비자초청 직거래장터 농심나누기 도농교류 활동
- 복지시설방문 청소세탁 목욕 등 불우이웃돕기 활동
- 폐비닐, 재활용품 수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보전 활동
- 각종 지역축제 참가, 지역활성화 활동

⑧ 주요농업인단체 현황

[표 2-55] 주요농업인단체 현황

구분	인원(조직수)	비고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12,230명(191개회)	http://www.kaff.or.kr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	4,609명(14개회)	http://www.waff.or.kr
한국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1,643명(8개회)	http://www.hsy.or.kr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남도지회		http://sansan.puruemi.com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연합회		http://korearice.net
전국낙농육우협회 충남도지회	663명(16개회)	http://www.naknong.or.kr
전국여성농민회 충청남도지회		http://www.kwpa.org
전국농민회 충청남도 연맹		http://www.ijunnong.net
전국새농민회 충청남도회		http://www.saenongmin.or.kr
전국한우협회 충남도지회	2,168명(14개회)	http://www.ihanwoo.org
대한양계협회 충남도지회	781명(13개회)	http://www.poultry.or.kr/
대한한돈협회충남도협의회	678명(13개회)	http://www.koreapork.or.kr
한국유기농업협회 충남지회		http://www.organic.or.kr
농가주부모임 도연합회		http://www.nonggajubu.com
한국농촌지도자 충청남도연합회	11,282명(227개회)	http://www.korlca.or.kr/chungnam/
전국귀농운동본부		http://www.refarm.org/
충남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충청남도 작목별 연구협의회		
충남농업발전연구회(한농대졸업생모임)	231명(16개회)	
식생활교육충남네트워크		
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충남농업포럼		
충남친환경농업유통사업지원단		3농혁신사업단

4) 중간지원조직 현황

① 충남발전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 설립목적

- 충남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농업의 경제력 제고 및 농어가의 소득 향상 등에 이바지

■ 목표

- 충청남도 농어업 6차산업화의 중간지원조직
- 농어업 6차 산업화 발전 네트워킹
- 충남 농어가 및 농기업체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강화

■ 주요기능

- 충남 농어업 6차산업화의 계몽 및 확산·보급 활동
- 충남 농어업 6차산업화 경영체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활동
- 충남 지역순환농식품체계(로컬푸드) 구축 및 지원 활동
- 농어업 6차산업화의 모델 개발 연구 활동
- 충남 농어촌응원운동 사업 발굴·보급 활동

②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설립목적

-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반확충을 위한 조사연구로 순환과 공생에 기초한 커뮤니티활성화 지원
- 충남형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발굴, 교육, 컨설팅 등 중간지원기능 수행

■ 주요기능

-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 －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연구
 - －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활동 선도 지원
 -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을 위한 자원조사 및 DB구축
 - － 충남형사회적기업의 교류촉진, 경영·교육지원, 상담·인증·컨설팅 지원

-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의 통합 및 연대지원
-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③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설립목적

- 충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통합지원에 대한 지역적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단계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기관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출범

■ 주요기능

- 지역네트워크 구축
- 경영컨설팅
- 심사지원 및 모니터링
- 인증지원
- 교육 및 홍보
- 전략사업 및 신규모델 발굴
- 프로보노 및 자원봉사 연계

■ 부설기관

- 충남사회적기업 지원센터
- 충남마을기업 지원센터
- 충남협동조합 지원센터
- 충남SE창업 지원센터(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④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 설립목적

- 충남지역의 노동부 인증 및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구성된 당사자 조직으로 사회서비스의 확대, 대안 경제 모델 구축, 사회 자본의 형성 등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를 만들기 위하여 설립

■ 주요기능

- 충남지역의 사회적기업간의 소통과 교류 증진

- 충남지역의 경제안정과 공동체적 가치 실현
- 다양한 주체들의 활발한 교류와 공신력 있는 협의체계로서의 역할
- 사회적경제 주체들간 긴밀한 협조와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노력

■ 재능나눔 풀

- 복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재정적 지원’에서 ‘근로연계 복지’로 전환되고 ‘사회적일자리’가 부각되는 가운데 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이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자립하여 사회경제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식·노하우·경험 등이 풍부한 기관·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말함

[그림 2-28] 재능나눔 풀



⑤ 귀농지원센터

■ 귀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16개소(도1, 시군 15)

- 위치 및 규모 : 시군농업기술센터, 상담 추진 가능한 규모
- 운영인력 : 귀농선배(귀농후 1년 이상 경과자)
- 협력체계구축 :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어촌공사

■ 주요내용

- 초기 귀농자 대상으로 농지·주택, 교육정보 등 종합상담 실시
 -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인과 마을주민의 연결자 역할 포함
- 귀농 희망자 대상으로 충남 귀농여건 홍보 및 작목 안내
 - 귀농 박람회, 설명회, 귀농투어 등 귀농 유치 활동도 병행
- 전국 최초 전 시군에 귀농지원센터 설치 운영

■ 추진주체 및 융복합 민관 협력

- 도: 도 귀농지원센터 운영, 시군 귀농지원센터 총괄

- 시군 : 시군 실정에 맞는 귀농지원
- 시군귀농지원센터 : 정보제공, 상담 등 안정적 귀농 정착 지원
- 시군귀농인협의회 : 귀농지원센터 운영 협력, 귀농 멘토링 등
- 유관기관 : 귀농교육 협력(서울, 대전), 금융(농협), 토지(농어촌공사) 정보 제공 등

■ 기대효과

- 귀농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 추진성과

- 귀농지원센터 운영·상담 : 16개소 10,250명
 - 귀농선배가 참여하여 눈높이에 맞춘 귀농 상담 실시
- 귀농 현장교육, 귀농설명회, 귀농박람회 등 참여
 - 귀농희망자와 마을 주민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진행
- 귀농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우수 사례 발굴
 - 귀농정착 우수사례 27명, 귀농하기 좋은 마을 29마을 발굴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귀농지원센터 상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상담 분야가 포괄적이라서 정기적인 교육 필요
- 일부 시지역은 귀농 선배의 귀농상담인력 구인 어려움
 - 귀농상담자의 다양화 : 귀농선배에 국한되었던 것을 기존 주민까지 확대 필요

■ 중점사업 계속성 검토

- 추진 첫해지만 귀농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
 - 타시도에서도 귀농지원에 필요한 지원체제로 인식 ▶ 검토결과, 지속 추진 필요

⑥ 충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 농촌현장포럼 등 마을역량강화, 지역인적자원 육성 및 관리를 지원하는 중간조직

■ 지자체, 현장활동가, 주민을 현장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도별로 지역대학·전문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연계하여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충청남도는 공주대학교 선정

■ 주요업무

-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와 주민주도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 수행
- 정책지원: 마을·권역·지역단위 신규 사업이나 정책·제도 건의
- 지역인적자원 육성 및 관리: 현장 활동가, 마을리더 교육 및 민간전문가 육성
- 현장포럼 지원: 마을자원분석·주민역량평가 지원, 관련 전문가 및 퍼실리테이터 지원
- 조사 및 연구: 마을 활력화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조사 등 수행
-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관, 관계 전문가, 마을리더 및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5) 농어업인 복지현황

■ 도내 16개 시군(연기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 문화, 복지 등 8개 항목 39개 기준에 대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평가되었음

- 2011년 대비 2012년 성과를 보면 상향된 항목 22개, 변동없는 항목 6개, 하향된 항목 11개로 나타나 농어촌서비스 기준제고에 일익을 담당

■ 농림축산부 기준 평가자료가 전국적 지표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기준안 마련”에 착수

- 농어촌서비스 기준제고와 관련 대부분 지자체에서 가시적이고 조기 성과창출 사업을 선호하고 고비용 장기 소요 사업에 대한 기피로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투자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리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제3장

계획수요 및 계획과제

제3장 계획수요 및 계획과제

제1절 주민의식 조사 및 분석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농어업인 및 도시민의 의견수렴 및 정책 방향 조사

■ 조사대상 및 방법

- 농어업인 : 읍·면의 행정리(里) 이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 시군별로 1개 법정리 당 1부 이상 조사
- 도시민 : 도심의 비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조사, 1개 행정통 당 1부 이상 조사
-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읍면동 및 행정리통 지역의 균등 조사

■ 조사내용

- 농어업인 : 농어업에 대한 인식, 농어촌에 대한 인식, 농어업인에 대한 인식, 농정정책에 대한 인식, 정책수요 등
- 도시민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농어업의 수요, 농어촌의 수요,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인식, 정책수요 등

■ 조사기간

- 2014년 5월 20일 ~ 6월 5일(17일간)

■ 유효응답

- 농어업인 : 15개 시군 2,195부
- 도시민 : 14개 시군 992부

2. 농어업인

1) 기본현황

■ 조사대상 농어업인 중 여성은 22.0%, 남성은 78.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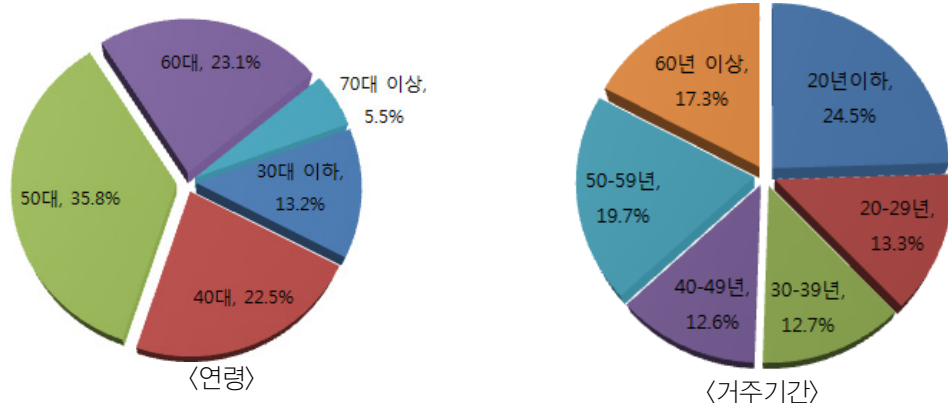
■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은 약 52.6세로 나타남

- 연령대 별로 50대가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60대 (23.1%), 40대(22.5%), 30대 이하(13.2%), 70대 이상(5.5%)의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36.3년으로 나타남

- 20년 이하 거주(24.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50-59년(19.7%), 60년 이상 (17.3%), 20-29년(13.3%), 30-39년(12.7%), 40-49년(12.6%)의 순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대체로 고른 분포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1] 조사대상의 연령 및 거주기간



■ 충청남도 내 각 시군별 법정리 개수에 따라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면단위의 조사부수(81.5%)가 가장 많았으며, 읍(18.0%), 동(0.5%)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 시군별 조사부수

(단위 : 부,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167 (7.6)	152 (6.9)	160 (7.3)	153 (7.0)	97 (4.4)	198 (9.0)	29 (1.3)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금산
180 (8.2)	316 (14.4)	116 (5.3)	146 (6.7)	145 (6.6)	179 (8.2)	64 (2.9)	93 (4.2)

주 : ()안은 각 시군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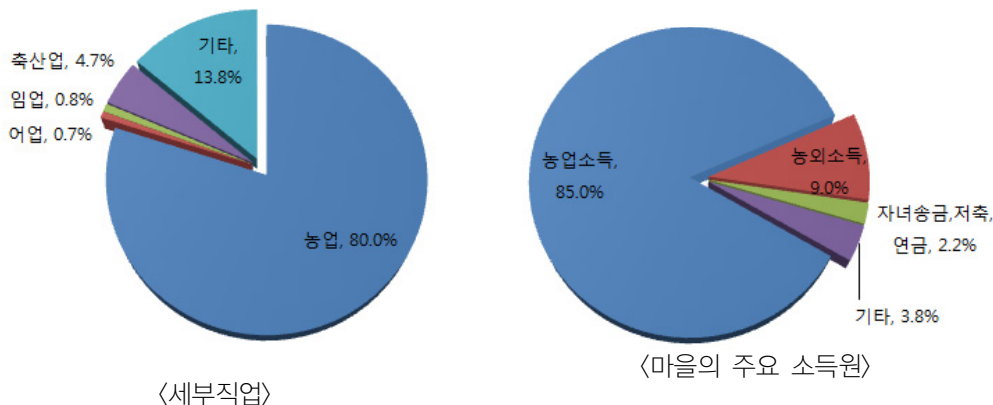
■ 조사대상의 세부직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대상자(80.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밖에 기타(13.8%), 축산업(4.7%), 임업(0.8%), 어업(0.7%)의 순으로 나타남

■ 마을 주민의 주요 소득원은 임업, 어업, 축산업 등 1차산업을 모두 포함한 농업으로부터의 소득 비중(85.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밖에 농외소득(9.0%), 기타(3.8%), 자녀송금·저축·연금(2.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 조사대상의 세부직업 및 마을의 주요 소득원



2) 농어업에 대한 인식

■ 국가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대부분 현재도 중요하며(81.3%) 미래 또한 중요해질 것(77.6%)이라고 응답함

-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이라는 의견은 62.4%,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것 이란 의견은 18.9%,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해질 것 이란 의견은 15.1%,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 이라는 의견은 3.5%로 나타남
- 대부분의 응답자는 농업이 국가산업, 경제, 식량안보 등의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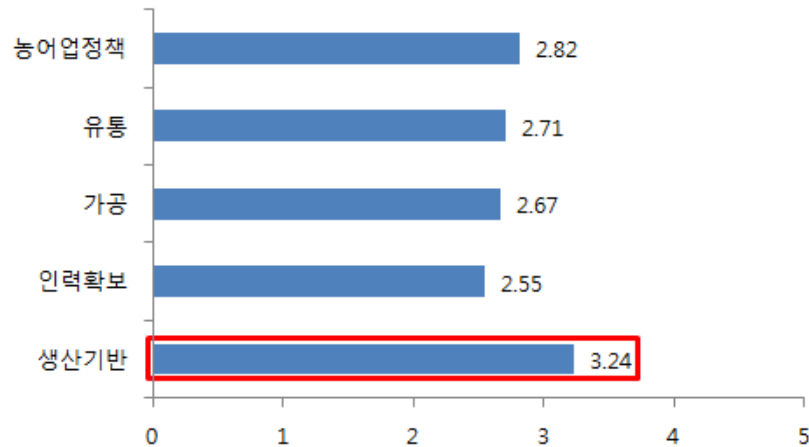
■ 충청남도 농어업의 미래에 대해서 5점 척도 조사 결과 3.05점으로 희망적이거나 비관적이 아닌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농어업 여건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생산기술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 농어업 여건에 대하여 5점척도 조사결과 생산기반(토지, 시설, 장비) 및 생산기술은

3.24, 농어업 인력의 확보는 2.55, 가공기반시설 및 가공상품개발 2.67, 유통기반시설 및 유통체계 2.71, 농어업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2.82로 대부분의 농어업 여건 항목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농어업의 여건 만족도



■ 지역의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함

- 지역의 농어업 발전을 위한 중요도에서는 유통망 확충(4.16)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수입개방 대응(4.07), 생산기반정비(4.04), 기술개발(4.03), 6차산업 지원, 유통기반 시설정비, 보조금의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 지역의 농어업 발전을 위한 항목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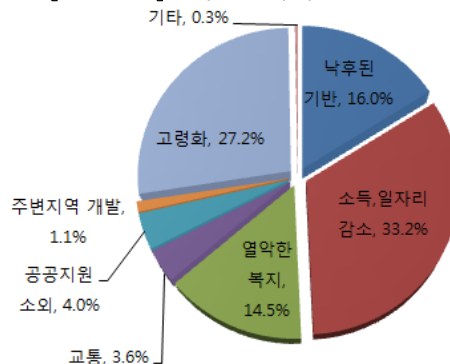
3) 농어촌에 대한 인식

■ 농어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3.08로 보통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 대상자의 거주지의 인구규모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는 소득 및 일자리의 감소(33.2%),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27.2%), 기반시설의 낙후(16.0%), 열악한 복지(14.5%), 공공지원 소외(4.0%), 교통 및 접근성 문제(3.6%), 주변지역 개발(1.1%), 기타(0.3%)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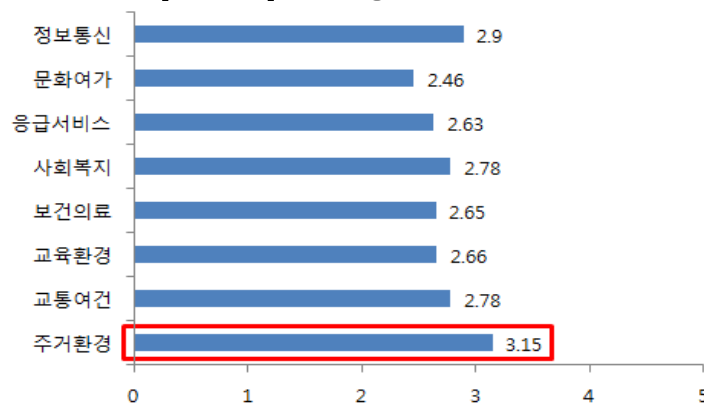
[그림 3-5]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 서비스 항목 만족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 주거환경은 3.15로 보통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정보통신(2.9), 문화여가(2.46), 응급서비스(2.63), 사회복지(2.78), 보건의료(2.65), 교육환경(2.66), 교통여건(2.7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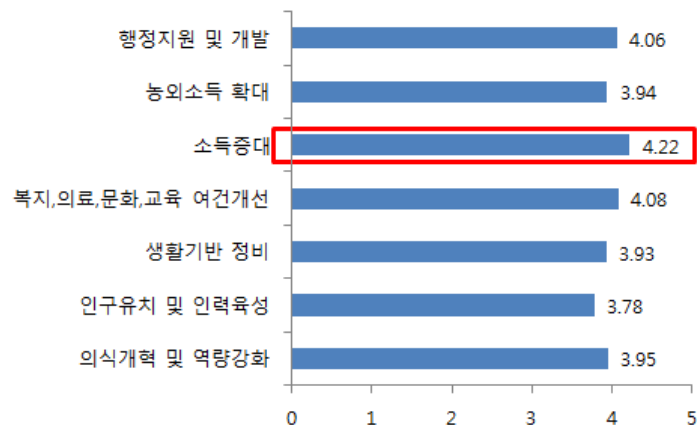
[그림 3-6] 서비스 항목에 대한 만족도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에 대한 항목은 소득증대(4.22)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복지·의료·문화·교육 등의 여건개선(4.08), 행정지원 및 개발(4.06), 의식개혁 및 역량강화(3.95), 농외소득 확대(3.94), 생활기반 정비(3.93), 인구유치 및 인력육성(3.78)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7] 지역활성화를 위한 항목별 중요도



4) 농어업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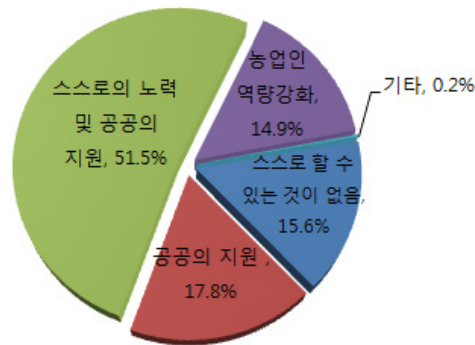
■ 농어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3.07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지역 농수축산물에 타 지역 및 외국의 농수축산물과 비교한 경쟁력 조사결과 2.77로 약간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업인 스스로의 노력과 공공의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농어업인의 노력보다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17.8%), 농어업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견(15.6%), 지원보다는 농어업인 스스로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14.9%), 기타(0.2%)가 있었음
- 기타의견으로는 판로확보의 우선지원, 농·축협이 이익창출 사업 보다는 농민을 위한 사업 시행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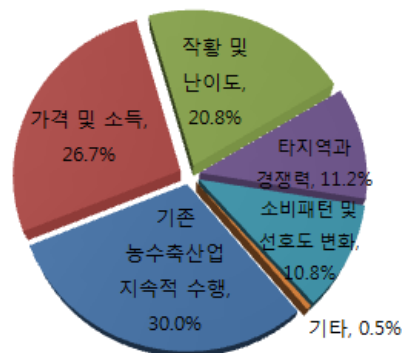
[그림 3-8]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



■ 경영에 있어 작목·어종·축종 등의 선택의 판단기준(복수응답)은 많은 농어가에서 특별한 판단기준이 없이 기존에 수행해 오던 농수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30.0%)

- 다음으로 예년의 판매가격 및 소득정도를 고려하여 판단(26.7%), 예년의 작황 및 생산난이도에 따라 판단(20.8%),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판단(11.2%), 소비자의 소비패턴 및 선호도 변화를 고려하여 판단(10.8%), 기타(0.5%)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타인이 많이 하는 작목을 선택함, 본인이 좋아하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함 등의 의견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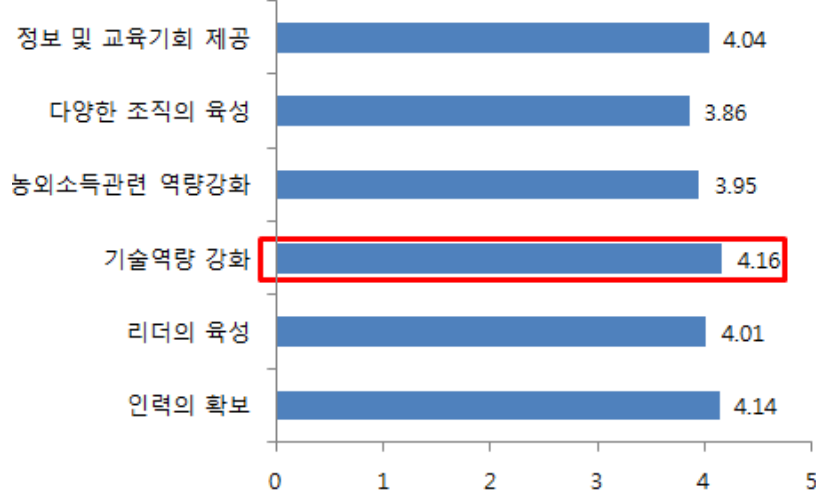
[그림 3-9] 작목·어종·축종 등의 선택기준



■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항목별 중요도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양한 농어업 기술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4.16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

- 다음으로 농어업 인력 및 후계자 확보(4.14), 다양한 정보 및 교육기회의 제공(4.04), 역량 있는 리더의 육성(4.01), 농외소득 관련 역량강화(3.95), 다양한 조직의 육성(3.86)순으로 나타남

[그림 3-10]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항목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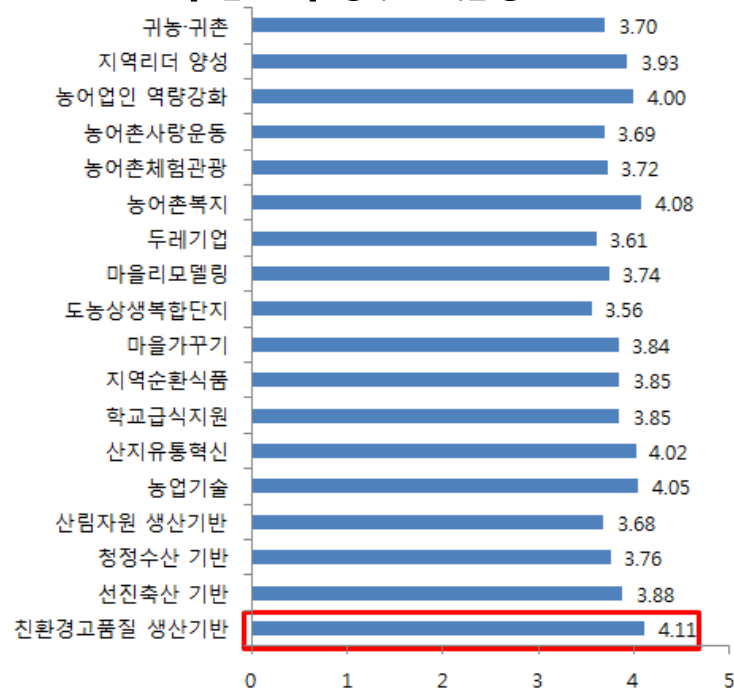


5) 기타 농정정책에 대한 인식

■ 3농혁신 분야별 중요도에 따라선 친환경고품질 생산기반(4.1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은 농어촌복지(4.08), 농업기술(4.05), 산지유통혁신(4.02), 농어업인 역량강화(4.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외의 항목은 3점대로 보통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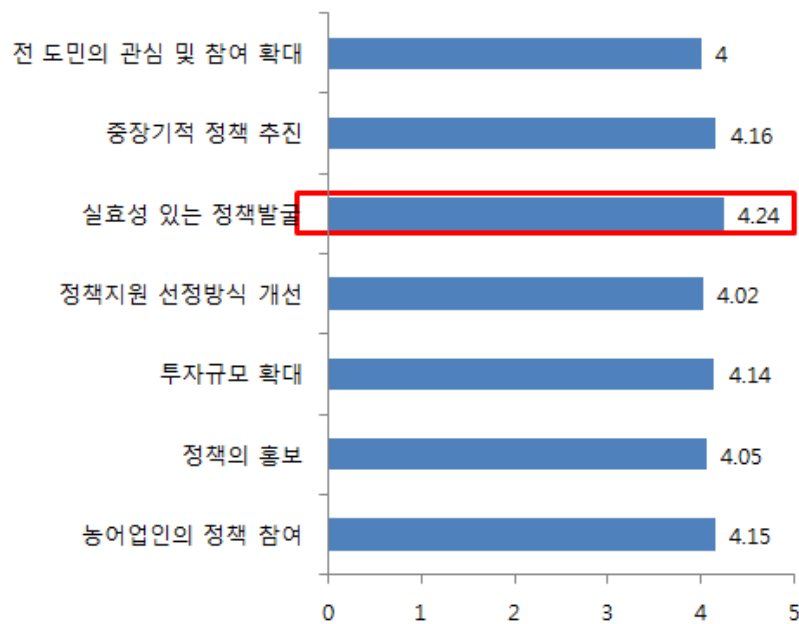
[그림 3-11] 3농혁신 분야별 중요도



■ 충청남도의 향후 농정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는 대부분 항목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특히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어업정책 발굴(4.24)에 대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남
- 다음으로 중장기적 정책 추진(4.16), 농어업인의 정책참여(4.15), 투자규모 확대(4.14), 정책의 홍보(4.05), 정책지원 선정방식의 개선(4.02), 전 도민의 관심 및 참여 확대(4.0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2] 향후 농정정책의 방향



3. 도시민

1) 기본현황

■ 조사대상 도시민 중 여성은 45.1%, 남성은 54.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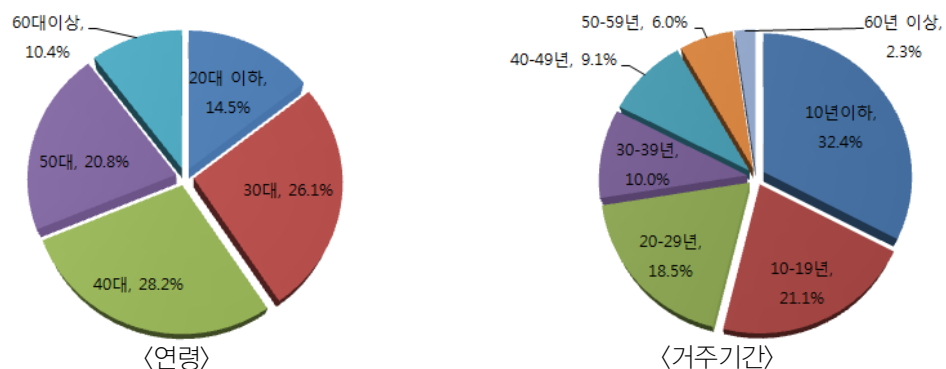
■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은 약 43세로 나타남

- 연령대 별로 40대가 2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30대 (26.1%), 50대(20.8%), 20대이하(14.5%), 60대 이상(10.4%)의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20년으로 나타남

- 10년 이하 거주(32.4%)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0-19년(21.1%), 20-29년 (18.5%), 30-39년(10.0%), 40-49년(9.1%), 50-59년(6.0%), 60년 이상(2.3%)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3] 조사대상의 연령 및 거주기간



■ 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천안(31.9%), 공주(12.0%), 아산(11.3%) 지역의 조사부수가 많았음

- 동 단위(76.0%)의 조사부수가 가장 많았으며, 읍(18.4%), 면(5.6%)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 시군별 조사부수

(단위 : 부,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316 (31.9)	119 (12.0)	95 (9.6)	112 (11.3)	64 (6.5)	40 (4.0)	20 (2.0)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55 (5.5)	30 (3.0)	25 (2.5)	27 (2.7)	35 (3.5)	29 (2.9)	24 (2.4)

주 : ()안은 각 시군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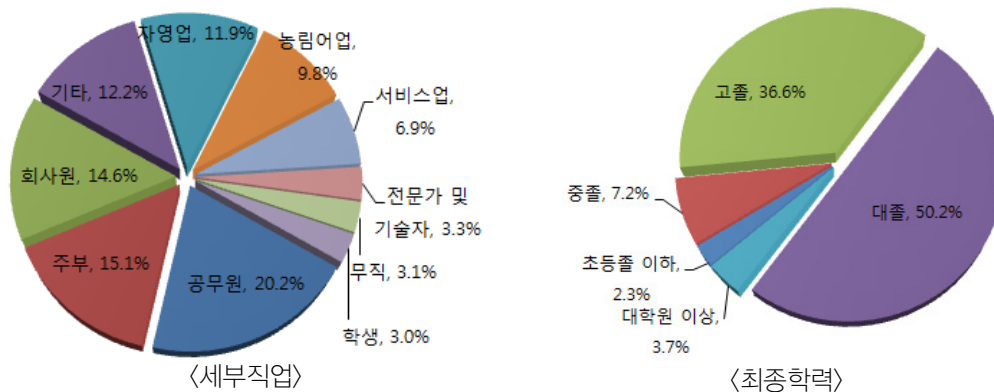
■ 조사대상의 직업은 공무원(20.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주부(15.1%), 회사원(14.6%), 기타(12.2%), 자영업(11.9%), 농림어업(9.8%), 서비스업(6.9%), 전문가 및 기술자(3.3%) 등 이었으며 기타 직업으로는 군인 등이 있었음

■ 조사대상의 최종학력은 대졸(50.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고졸(36.6%), 중졸(7.2%), 대학원 이상(3.7%), 초등졸 이하(2.3%)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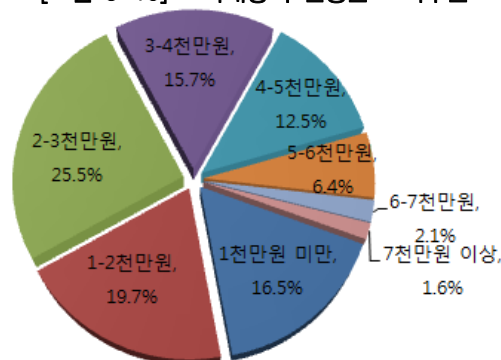
[그림 3-14] 조사대상의 세부직업 및 최종학력



■ 조사대상의 연평균 소득수준은 2~3천만 원(25.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1~2천만 원(19.7%), 1천만 원 미만(16.5%), 3~4천만 원(15.7%), 4~5천만 원(12.5%), 5~6천만 원(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5] 조사대상의 연평균 소득수준



■ 조사대상 중 63.5%가 농어촌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6.7%가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농어업 · 농어촌의 가치

■ 농어업 · 농어촌 문제에 대한 관심에 관한 항목에 있어서는 3.40으로 관심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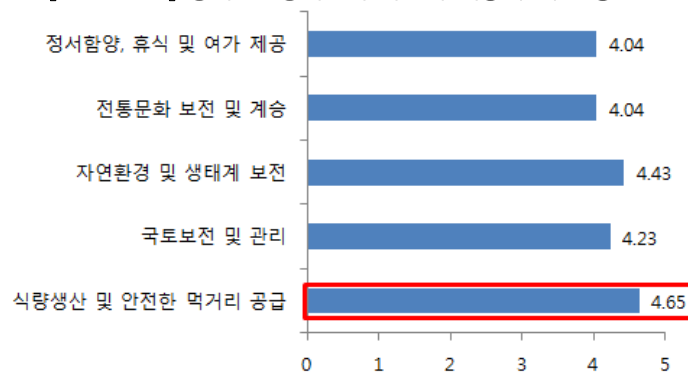
■ 국가경제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대부분 현재도 중요하며(82.3%) 미래 또한 중요해질 것(83.1%)이라고 응답함

-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은 68.7%,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은 13.6%,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란 의견은 14.5%,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3.3%로 나타남

■ 농어업 · 농어촌이 지닌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도 조사결과 모든 항목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식량생산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4.6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4.43), 국토보전 및 관리(4.23),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4.04), 정서함양 및 휴식, 여가제공(4.04)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6] 농어업 ·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도



■ 이와 같이 농어업 ·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시키기 위하여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찬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3.16으로 보통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 혹은 조사대상자의 자녀가 농어업 관련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응답은 2.84으로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농어업 · 농어촌의 미래에 대해서는 2.94으로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3) 농어업의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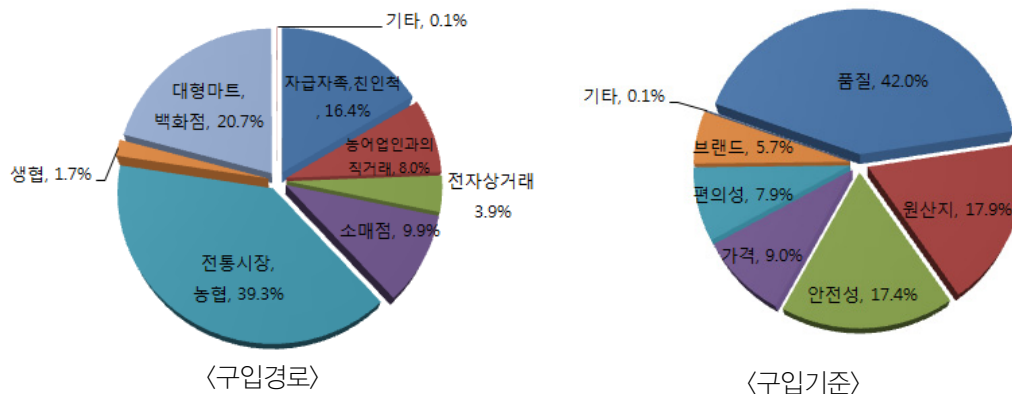
■ 농수산물이나 농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경로는 전통시장 및 농협(39.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대형마트 및 백화점(20.7%), 자급자족 및 친인척(16.4%), 소매점(9.9%), 농어업 인과의 직거래(8.0%), 전자상거래(3.9%), 생협(1.7%)의 순으로 나타남

■ 농수산물이나 농식품 구입의 주된 기준은 품질(42.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복수응답)

- 그 밖에 원산지(17.9%), 안전성(17.4%), 가격(9.0%), 편의성(7.0%), 브랜드(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7] 농수산물·농식품 구입경로 및 구입기준



■ 농어업 투입(노동력, 비용)에 비하여 국산 농수산물의 가격수준에 대한 조사는 3.21로 보통인 것으로 조사됨

■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잘 알거나 잘 모르는 것이 아닌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3.26)

-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비싸더라도 구입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한 조사 역시 3.4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해외시장 개방에 따라 증가하는 수입농산물 구매에 관하여 가격, 품질 등을 고려한 후 더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한다는 의견이 52.9%로 가장 많았음

- 가격, 품질 등에 관계없이 국산 농수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24.5%로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가격 및 품질 등을 고려한 후 가격이 저렴한 수입농산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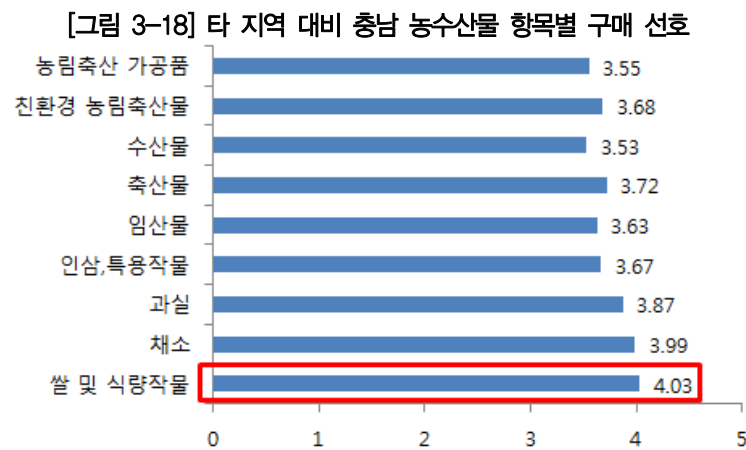
구입할 것이다 라는 의견은 20.2% 였음

- 가격 및 품질에 관계없이 수입산을 구매한다는 의견은 2.5%로 조사됨

■ 조사대상자 중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타 지역 농수산물 보다 우선 구입할 의사는 3.72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타 지역대비 충남의 농수산물 항목별 농수산물 구입 선호도 조사에서는 대부분 보통정도의 선호도를 보이는 가운데 쌀이 4.0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채소(3.99), 과실(3.87), 축산물(3.72), 친환경 농림축산물(3.68), 인삼 및 특용작물 (3.67), 임산물(3.63), 농림축산 가공품(3.55), 수산물(3.53)의 순으로 나타남



4) 농어촌의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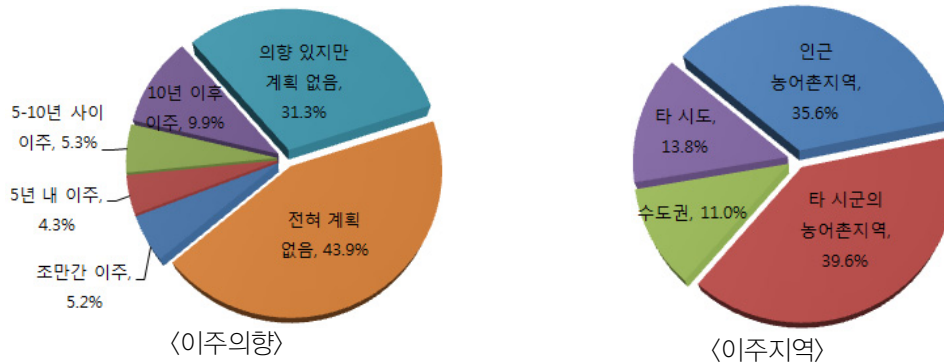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느냐는 항목에는 3.45로 향상되거나 나빠진 것이 아닌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귀농 · 귀촌 의향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24.8%가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31.3%는 이주 의향은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3.9%는 이주의향 및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주 의향이 있는 대상자의 선호하는 이주지역은 충남의 농어촌지역(39.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농어촌지역(35.6%), 해외를 포함한 타 시도(13.8%), 서울 · 경기의 수도권지역(11.0%)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귀농 · 귀촌지역 선정의 기준에 대하여 복수 응답결과 생활환경의 편의성 및 안전성

(25.3%)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으며 자연환경 및 주거시설(24.1%), 접근성(16.7%), 주택 및 토지의 확보가능성(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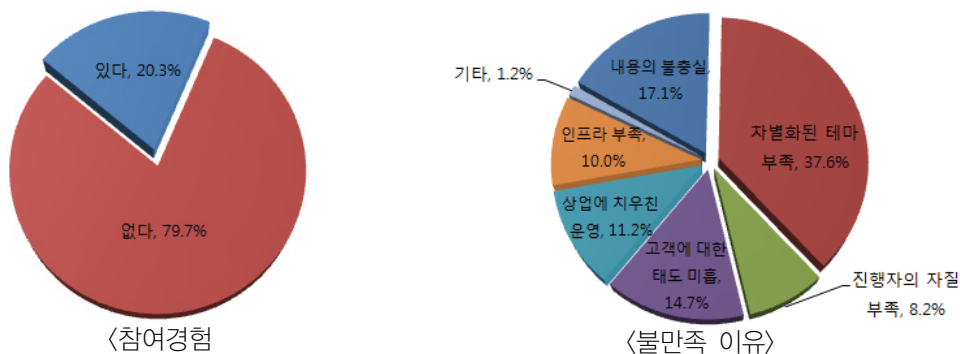
[그림 3-19] 농어촌 이주의향 및 선호 이주지역



■ 충청남도의 농어촌 지역의 체험관광,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0.3%로 나타남

- 체험관광,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3.41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 불만족의 이유로는 차별화된 테마의 부족(37.6%)이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성 미흡(17.1%), 서비스 및 고객에 대한 태도 미흡(14.7%), 상업성에 치우친 운영 마인드(11.2%), 관련시설 및 인프라 부족(10.0%), 프로그램 진행자의 자질 부족(8.2%), 기타(1.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0] 체험관광,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5) 기타 농어업 · 농어촌 정책에 대한 인식

■ 농어업 · 농어촌 문제 해결에 협조할 의향은 3.47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업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농어촌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한 의향은 3.55로 역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농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중요도 조사에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 (4.39)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음

- 다음으로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4.36), 소비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판매기반의 확충(4.28), 우수한 브랜드의 개발 및 적극 홍보(4.18), 로컬푸드의 확대(4.1),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척(3.74)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1] 충남 농수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중요도



■ 충청남도의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 조사에서는 복지·의료·문화·교육 여건의 개선이 4.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주민의 의식 및 역량강화와 소득증대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27, 기초생활기반 정비(4.2), 적극적인 행정지원(4.05), 도민의 관심 및 참여 확대(4.03), 인구 유치 및 인력육성(4.02), 농외소득원 확대(4.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2] 충남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



제2절 관련계획 검토

1. 중앙정부 관련 계획

1)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13)

■ 농정 패러다임 변화

구 분	과거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농정목적	효율성	효율성·농업인 행복 중시
농정대상	개별 경영체 중심	지역 공동체 강조
정책내용	농업·식품의 개별 분산적 접근	생산과 융합한 6차산업
접근방법	중앙정부 주도 획일성	지역특성, 지역·주민참여 및 책임

■ 새로운 농정의 방향

구 분	과거 농정	새로운 농정 방향
농정	농업정책	생산성·편의성 향상
	소득정책	규모화·전업농
	복지정책	일률적 지원
	농산물 소비·유통	직접적 개입
스마트 농정구축	소통방식	계층별 획일적 정책
	농정수준	중앙정부 중심
내부관리시스템		행복농정

■ 5대 정책분야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5대 분야	주요 내용
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농산물/친환경농산물(12년: 46.4/3조원 → 17년: 50/5.7) 공급 및 곡물자급률(12년: 23.6% → 17년: 30%) ○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활용도 및 이용가치 제고 : 유휴농지·간척지 활용 및 밭 기반 정비 확대 - 친환경농업 차별성 강화 : 친환경지구/단지 확대, 친환경 전용 물류센터 및 농식품표준제도 도입, 수익형 산지생태 축산 및 동물복지 인증제도 도입 - 생산자·소비자 참여와 합의에 의한 농축산물 수급 자율 관리로 전환 : 수급조절위원회·수급매뉴얼, 도매시장 규제 완화 등 추진

5대 분야	주요 내용
② 기술농업과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연평균 3% 이상 성장 ○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ICT·BT 융복합화를 통한 핵심산업으로의 육성 : 융복합 모델 개발 및 보급 - 지역농업 허브 구축 : 주산지별 규모화·조직화, 지역전략사업단 및 로컬푸드 등을 통해 차별성 강화 - 전후방 연관산업의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 6차산업 육성 : 6차산업지구제 도입,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 등 추진 - 식품·외식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농식품·농자재 수출 확대 : 수출전문단지제도 도입, 한국형 뉴실크로드 구축 등 추진
③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농외소득 연평균 7.5% 증대 ○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여건 개선 : 원예·축사시설 현대화, 첨단온실 신축,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등 추진 - 사전예방적 경영위험 관리 강화 : 재해보험 확충,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 등 추진 - 영농환경의 개선 및 일자리 확대 : 들녘경영체 및 농촌공동체회사 확대, 가공·유통·관광분야 일자리 제공 -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 강화 : 경관보전직불제 지급조건 확대, 공익형 직불제를 EU 농업환경프로그램 형태 개편검토
④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현재 17.7%에서 19%로 농촌인구 증가 ○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인접도시 연계·협력 촉진 : 지역행복생활권 조성, 농촌마을 리모델링·지자체간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추진 -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 집배원·권역센터 설치, 농협 행복나눔센터 등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자율적 복지 공동체 활성화 :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 귀농·귀촌 지원 강화 : 귀농·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도시민유치지원사업 등 추진

2)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10~2014 (농림수산식품부 등, 2009)

■ 패러다임의 전환

구 분	과 거	미 래
농어촌 기능 및 정책 목표	식량공급기지	생명·문화·행복 향유의 다원적 공간
	평준화(equalization), 농가소득 및 경쟁력 증대	농촌지역 경쟁력(competitiveness), 지역자원 가치실현(valORIZATION), 미개척 자원 발굴
정책 주제 및 대상	중앙정부	중앙·지방정부, 다양한 이해당사자
	농어업인	도시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
	농업	다양한 부문(농촌관광, 제조, 정보통신 등), 삶의 질 향상, 경관, 전통문화, 도농교류 등
추진 전략	농어촌 쇠퇴 방지(방어적)	농어촌 기회 활용 극대화(공세적)
	보조 개념의 지원	투자 개념의 지원
	농업, 복지 등 분야별 접근	통합적·지역단위별 접근
발전 방식	환경부담·자원 소모형	흙·물·바다가 살아있는 지속 가능형

■ 비전

-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
 - 기초생활인프라가 복지기반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며,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

■ 부문별 목표

부 문 별 목 표	1. 보건·복지 증진	농어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2.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을 확충하여 교육력을 강화한다.
	3.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쾌적하고 편리한 농어촌 생활공간을 창조한다.
	4. 경제활동 다각화	경쟁력 있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5. 문화·여가 여건향상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즐거운 농어촌을 만든다.
	6. 환경·경관 개선	흙·물·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7. 지역발전 역량강화	농어촌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육성하고 협력적 개발을 강화한다.

■ 추진전략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대 선진제도 도입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발전체계 구축 : 지역의 자율과 창의, 민간 참여 확대
-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사무국 기능강화 및 지방계획 내실화

3)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지역발전위원회, 2013)

■ 비전 및 추진전략



■ 6대 중점 추진방향

-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 지역 주도, 지역간 협업에 의한 특화발전 촉진
 - 주민 불편 해소 및 행복증진 필수 인프라 확충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산업·기업 지원체계 개편
 -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
 - 농어촌 일자리 여건 개선
-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학 특성화
 -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기업이 원하는 우수인재 양성
-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 문화를 통한 지역브랜드 육성 및 문화자치 기반 조성
 - 생태·자연자산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
-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 지역 맞춤형 복지, 자율형 보건·사회서비스 확대
 - 취약지역 공공의료의 질 제고 및 응급의료체계 정비
-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 광역화, 혁신도시·세종시 등 기존 시책의 보완·발전

4) 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폴리스) 종합계획 (농림수산식품부, 2012)

■ 기본방향

-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식품산업단지 조성 (엔터프라이즈 푸드폴리스)
- 식품혁신(이노베이션) 창출형 연구산업단지 조성 (이노베이션 푸드폴리스)
- 글로벌 식품 수출거점기지 구축 (게이트웨이 푸드폴리스)
- 식품-농어업 동반성장 체계 구축 (투게더 푸드폴리스)

■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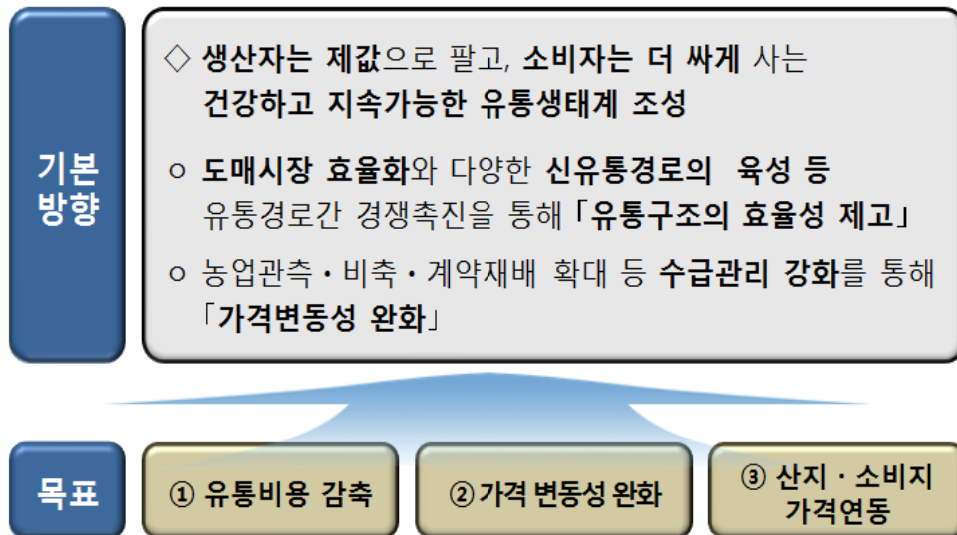


■ 핵심전략



5)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농림축산식품부 등, 2013)

■ 기본방향



■ 중점추진과제

과제	주요 내용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가·수익매매 활성화 ○ 규제완화를 통한 유통주체간 경쟁촉진 ○ '대금정산조직(법인)' 설립을 통한 거래 안정성 제고 ○ 공영도매시장 기능 재정비 및 시설 현대화 ○ 도매시장의 파렛트 유통 활성화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거래 유형별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도매-소매 단계별 생산자단체 역할 확대 ○ 축산물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 확립
수급관리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한 수급상황 예측력 강화 ○ 국내비축 확대를 통한 단기수급불안 대응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 유도 ○ 주요 품목별 수급조절 매뉴얼 운영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정보제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의 공정성 확보 ○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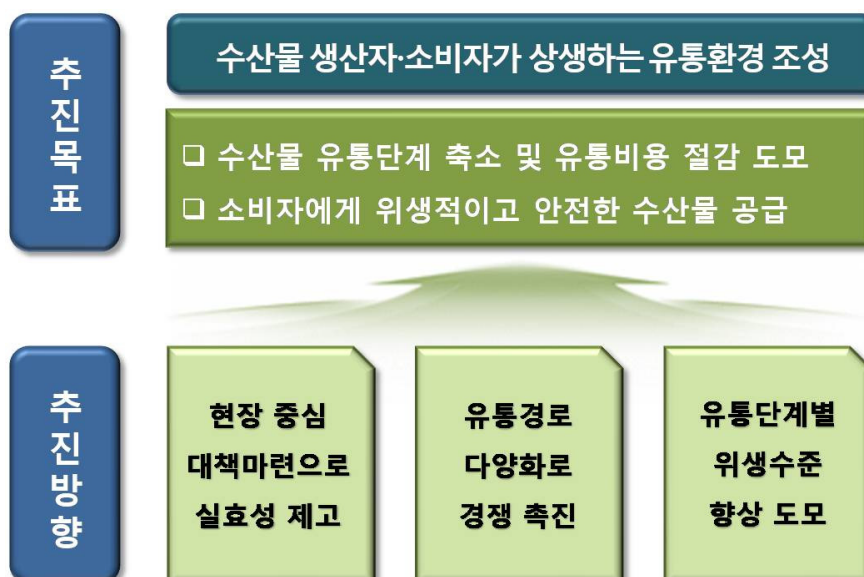
6)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11~2020 (농림수산식품부 등, 2010)

■ 비전 및 목표

- 비전 :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 실현
- 목표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관리 및 보전
 -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영역 확대
- 5대 추진 전략
 -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관리 실현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항만 산업의 선진화
 -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7)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해양수산부 등, 2013)

■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 중점추진과제

5대 분야	주요 내용
품목별 특성화 대책으로 유통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근해산 : 생산자 단체 중심의 신유통 경로 창설 (산지 거점유통 강화, 소비자 물류분산기능 강화) 양식산 : 새로운 거래 환경 조성 추진(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활어 전문물류센터 조성, 공동판매조직 육성 등) 원양산 : 다양한 가격결정 시스템 구축(도매시장 등 소비자 유통체제에 직접 유입, 공동마케팅 강화 등)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개선 및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매시장 수산물 거래제도 개선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수산물 도매시장 기능 재정비
수산물 직거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거래 운영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수산물 사이버 직매장 개설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직거래 단체 운영 자금 지원,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수산물유통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수산물 위생·물류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판장·도매시장 위생수준 제고 저온 유통시스템 구축 수산물 규격화 추진 불법어업 및 환경저해 수산물 유통근절 추진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촉진 등을 위한 법률 제정
수산물 수급관리 및 관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비축 및 수산업 관측 확대 수급안정 및 정보제공 강화

8)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농림수산식품부 등, 2013)

■ 목표 및 추진전략

목 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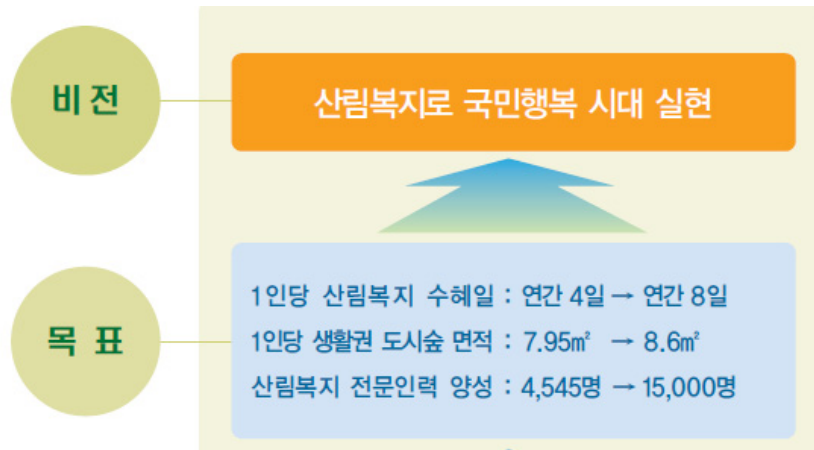
- 축산 현실에 맞게 기술수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도 적용시기 등에 대해 단계별 접근 또는 차등적용
- 민간중심의 자율관리 체계로 전환하되, 정부는 계획수립·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관의 역할분담 체계 확립

■ 주요 대책

주요 대책	세부 내용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자원화 시설 150개소 설치 ○ 에너지화시설 21개소 설치 ○ 정화처리시설 400개소 보완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 개별농가 시비처방 단계적 도입 ○ 작목별 액비 살포기준 마련
사후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중심의 관리조직 설립 ○ 컨설팅 전문인력 300명 육성 ○ 지역단위 종합관리체계 구축
제도개선 및 R&D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법 등 관련제도 개선 ○ 수요자 중심의 R&D 과제 확대 ○ 지자체 평가·포상, 홍보 강화

9) 산림복지 종합계획 (산림청, 2013)

■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공간 확대 및 서비스 수준 제고 ◦ 생활권 산림복지공간을 활용한 도시민의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 산림과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 새로운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환경과 문화를 조성
산림복지 전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건강상태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산림복지 제공 ◦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전 생애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 공공, 민간 산림복지 전달체계 역할분담 및 상호보완 ◦ 산림복지지원 D/B 구축으로 정부 3.0 실현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복지 서비스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 ◦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료 합리화 및 투자자원 마련 ◦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 및 산림복지 서비스 산업화
R&D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복지 연구의 체계적 추진 ◦ 맞춤형 산림복지 공급 및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 산림복지 정책 시행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 확대

10) 제3차('11~'15)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 2011)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창업 지원 확대
- 귀농(귀촌)여성, 결혼이민여성 등 신규 유입인력의 정착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지자체별 특성에 맞도록 전문 농어업경영인력 및 지역발전 리더 육성 등 여성농어업인 정책 마련 및 확대 추진

■ 비 전

- 창조적·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경영인으로서 직업적 지위와 권리 인정 ◦ 여성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추진 ◦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
전문 농어업경영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 ◦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대
농어촌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의 지역개발 참여 확대 ◦ 농어촌 복지서비스 인력 양성 ◦ 후계 여성농어업인력 육성 ◦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모성보호 및 건강지원 확대 ◦ 농어촌 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여건 개선 ◦ 농어촌지역 공동취사 활성화 ◦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 지원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교육 강화 ◦ 지자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강화 ◦ 여성농어업인 단체와의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축

2. 충청남도 관련 계획

1) 충청남도 농어업 · 농어촌 혁신 기본계획 (충청남도, 2011)

■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 농어업인 · 소비자 · 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 · 농어촌사회
- 목표
 -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 도시와 순환 · 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 추진전략
 - 친환경 · 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 농어촌 주민의 역량강화

■ 분야별 추진시책

분야	추진시책
친환경 고품질 농업	① 친환경농업 유통 · 가공 기반 구축 ②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확충 ③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 · 유통 시스템 구축 ④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사업 ⑤ 안전한 인삼생산과 소비자로부터의 신뢰 시스템 구축
선진 축산업	⑥ 축산농장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자원화 ⑦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부분육 유통시스템 구축 ⑧ 가축방역시스템 보완 및 주요질병 사전예방
산림자원 육성 및 활용	⑨ 수요자 중심의 임산업 육성과 다각화 ⑩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과 귀농 지원 ⑪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청정수산	⑫ 지역 명품 수산물 특화 육성 ⑬ 해양수산분야 R&D 역량 강화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⑭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⑮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⑯ 살기좋은 행복 마을 만들기 ⑰ 살기좋은 도농상생 마을 만들기
농어업 6차 산업화	⑱ 농어촌 마을기업 창업 · 육성 ⑲ 포털, 충남 향토자원 콘텐츠 개발 ⑳ 향토자원 전략자문단 운영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㉑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설정 · 운영 ㉒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도입
도농교류와 농어촌지원운동	㉓ 귀농 · 귀촌 수요 예측 및 통계정비 ㉔ 농어촌 응원 운동
지역리더 양성	㉕ 농어촌 지역리더 양성 ㉖ 미래 농업을 선도할 농업 CEO 양성
민관협력체계 구축	㉗ 농수산 혁신 위원회 조직 구성 · 운영

2) 2013 3농혁신 추진계획 (충청남도, 2013)

■ 3농혁신 30대 중점사업

5개 사업단	18개 팀	30대 중점사업
친환경농업사업단	친환경고품질농업팀	충남 농산물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도심 속의 학교 논 만들기 대한민국 최고 쌀 청풍명월 골드 육성 직접지불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친환경고품질 생산지원을 위한 삽교호 수질개선
	선진축산팀	동물복지 실천농가 보조금지원제도 도입 추진 악취 없는 클린 축산농장 만들기 충남 조사로 완전 자급기반 구축
	청정수산팀	충남 수산 4대 명품화 “지천 100리” 금강 목장화 사업 비생산적인 간척지 바다 복원
	산림자원팀	산채재배를 통한 산촌 소득 높이기 삶에 도움을 주는 풍요로운 숲 조성
	친환경농업기술팀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FTA 대응 신품종 개발 및 우량종자·종묘 공급 화학농약대체 친환경 농자재 및 토양관리 기술개발
지역식품유통사업단	산지유통혁신팀	생산자조직 중심의 광역유통시스템 구축
	학교급식지원팀	시군을 연계하는 충남 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
	지역순환식품팀	지역생산, 지역소비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행복마을사업단	희망마을만들기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도농상생복합단지팀	일터·삶터·쉼터가 융합된 상생복합단지 만들기
	마을리모델링팀	농어촌 마을리모델링 사업
	두레기업육성팀	농어업 6차산업화를 촉진하는 두레기업 육성
	농어촌복지팀	충남형 농어촌서비스기준 설정 및 향상
도농교류사업단	농어촌체험관광팀	즐겁고 안전한 농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
	농어촌사랑운동팀	범사회적 농어촌사랑운동 추진
농어촌역량강화사업단	농어업인역량강화팀	농어촌리더 육성의 산실 3농혁신대학 운영 미래 농업의 주역 4-H대학 운영
	지역리더양성팀	지역리더 아카데미 운영
	귀농귀촌팀	귀농선배와 함께하는 귀농지원센터 운영

3) 2020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 (충청남도, 2009)

■ 비전 및 목표

- 비전 : 세계시장과 경쟁하는 강한 농수산업,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풍요로운 농어촌
 - 농어업 : 작지만 강한 '21C형 고부가가치 농어업' 실현
 - 농어민 : '복지+정주+휴양'을 아우르는 삶의 질 향상
- 목표
 - 농수산업 :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 농식품 : 가치중심의 고품질 농식품산업 및 유통
 - 농어민 : 산업화 역군으로 안정적인 삶의 질 보장
 - 농정체제 : 앞서가는 스마트 농정구현

■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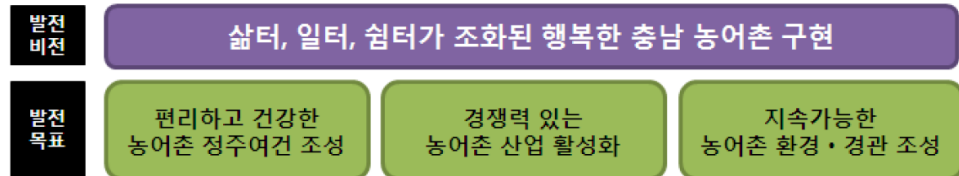
- 정책방향 : 전통사업방식 → 새로운 가치 창조
- 지원방식 : 업무지침 → 사업프로그램
- 예산배분 : 평균·분산 → 선택·집중
- 기타 : 마을(지역)공동체 회복, 연구기능 강화

■ 핵심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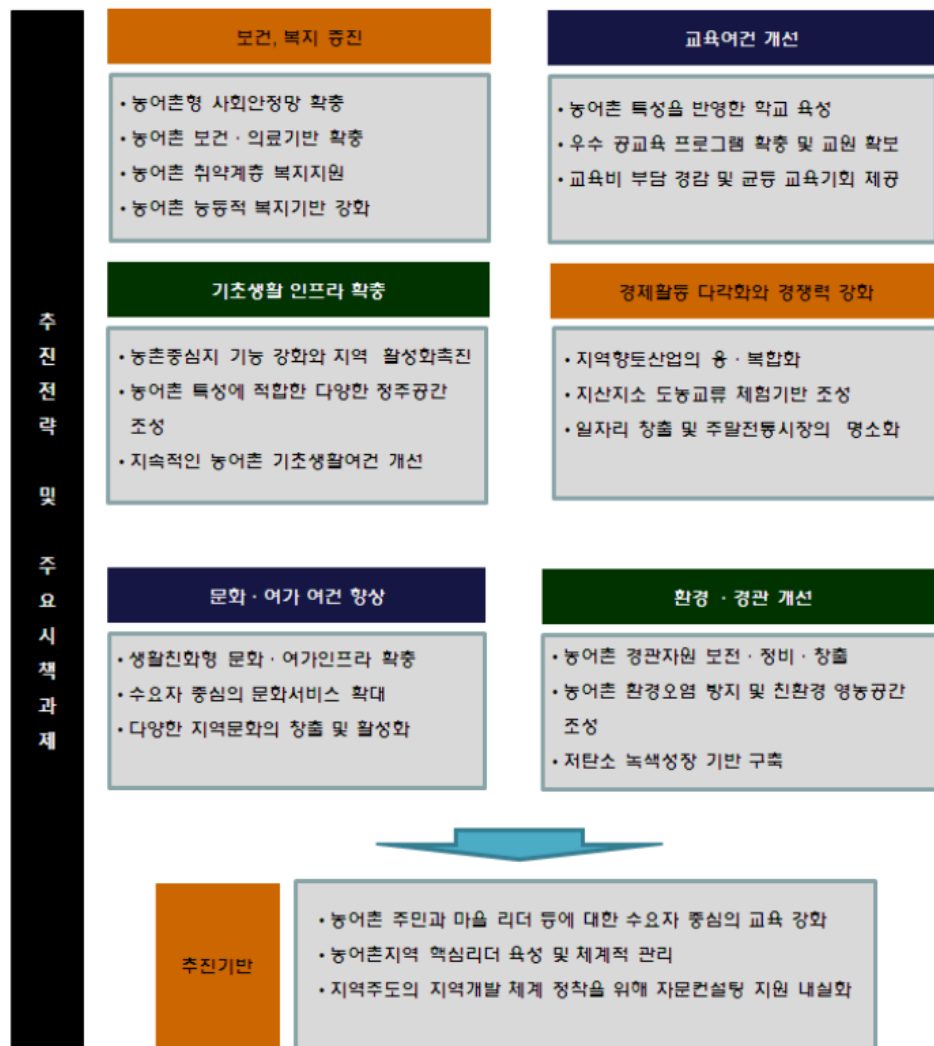
- 농어업 미래를 짊어질 후계인력의 체계적 육성
- 인력 절감형 영농기반 해결
- 지식·정보화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농수산업 육성
- 가치중심의 고품질 농식품 산업
- 농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소비자 중심 품질관리
- 산업화 역군으로 안정적인 삶의 질 보장
- 농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
- 품목별 육성대책
- 앞서가는 스마트 농정 구현

4) 제2차('10~'14)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충청남도, 2010)

■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및 주요 시책



5)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충청남도, 2012)

■ 계획의 기초 및 농정분야 목표

- 기초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 농정분야 목표
 - 지역경제의 순환, 생산과 소비의 순환, 도시와 농촌의 공생 등 ‘순환과 공생’의 원리에 기초하여 농어업을 활성화
 - ‘사람’의 실질적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어촌지역」을 실현

■ 농정분야 추진전략 및 주요 추진시책

추진전략	추진시책
활력 있는 농산어촌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보장 ○ 농어촌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 확충 ○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경제활동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 ○ 문화·여가 여건 향상 ○ 아름다운 환경과 녹색성장 기반 조성 ○ 지역발전 역량강화 ○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추진
경쟁력 있는 농림축수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식품체계 구축 ○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6) 제3차('11~'15)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실천계획 (충청남도, 2011)

■ 비전 및 목표

- 비전 : 친환경적 가치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
- 목표
 - 무농약 이상 재배면적 : ('10) 1.7% → ('15) 8.5%
 - 화학비료/농약 사용량 : '15년까지 12~15% 감축

■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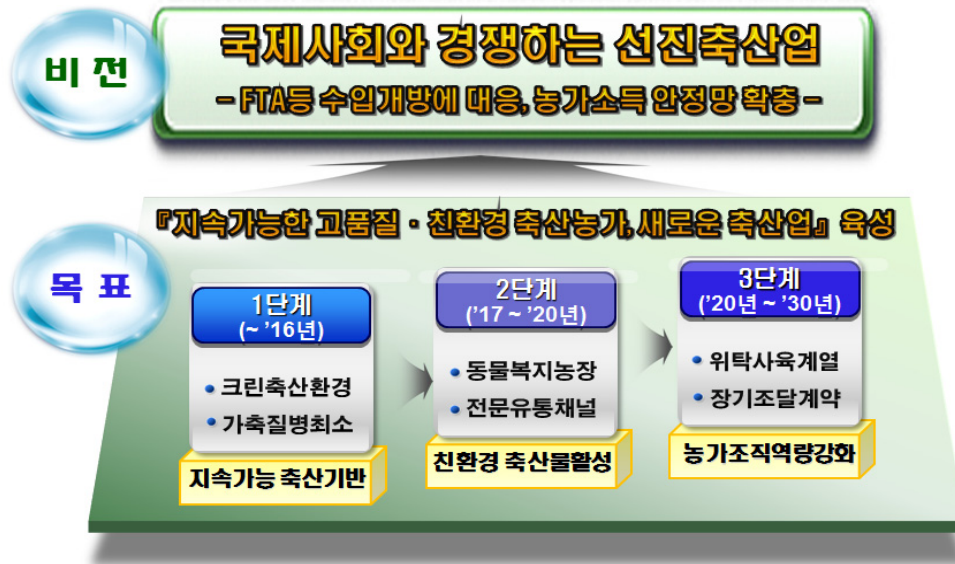
- 혁신전략 : 친환경농업 마케팅 역량강화
- 실천수단 : 3대 분야, 10개 과제, 86개 단위사업
 - 친환경농업 6차산업화
 - 친환경농업 인프라 확충
 - 친환경리더 및 R&D 육성

■ 10대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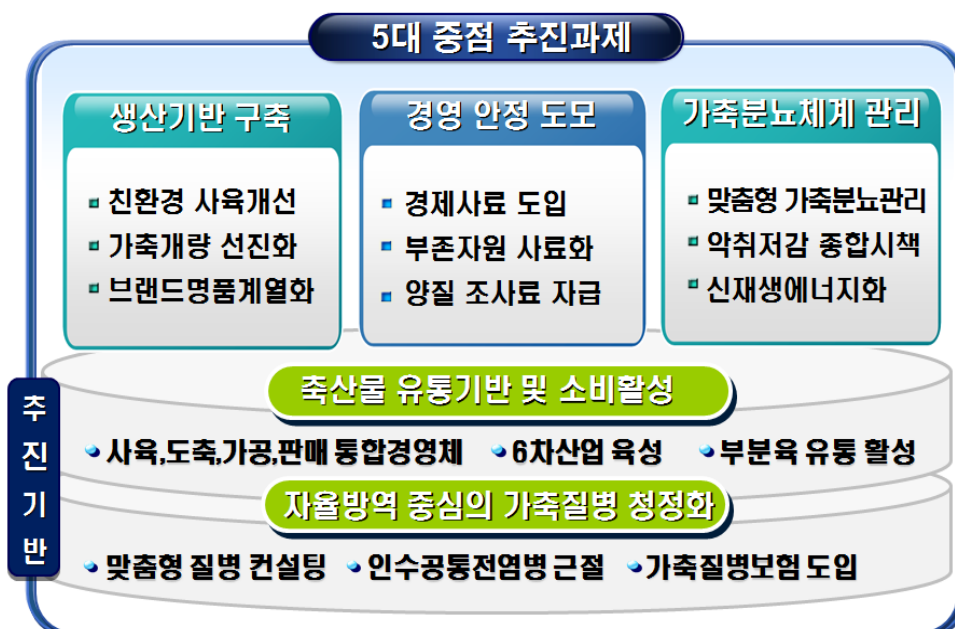
분야	핵심 과제
친환경농업 6차 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기반 구축 ○ 학교·도시 친환경농업 실천 ○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육성 ○ 친환경 농산물 검사시스템 구축
친환경 농업생산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기반조성 ○ 농업환경부하 경감 ○ 친환경 농업실천 ○ 친환경 축산/임업/수산 육성
친환경 농업리더 및 R&D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리더 육성 ○ 표준농법 개발 및 보급

7) 충남 축산정책 추진전략과 장기비전 (충청남도, 2014)

■ 비전 및 목표



■ 5대 중점 추진과제



7) 충남 과수산업 발전계획(2012~2017) (충청남도, 2012)

■ 비전 및 목표

- 비전 : 개방화 대응, 경쟁력 있는 과수산업 육성
 - 생산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확충
 - 수출 : 충남 과수산업의 전략적 수출 기지화
- 목표 :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등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적정재배면적 확보, 과실 수급안정 및 수출 8천만불 달성

■ 추진전략

- 지속적인 시설현대화로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확충 및 비용절감형 재배기술 보급
- 과수재배 주산지 중심 품목별 과수생산단지 육성
- 과실 주산지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및 공동 마케팅 촉진
- 수출과실의 품질관리 강화와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 추진과제

-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 과실 전문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및 통합 마케팅
-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8) 충남 산지유통체계화 중장기 발전계획(2013~2017) (충청남도, 2012)

■ 비전 및 전략

- 비전 : 2017년까지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
 - 생산액 대비 산지유통조직 공동계산실적 4천억 원
- 전략
 -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 광역브랜드사업 추진
 - 도 정책 기능 강화

■ 세부추진 방향

전략	세부추진 방향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이상의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광역, 품목 등) ○ 통합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공선출하조직 육성 강화
광역브랜드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브랜드 런칭 및 사업 체계화 ○ 시군연합조직 활성화가 어려운 지역 품목 지원 ○ 품질관리체계 구축
도 정책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 단위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 시군브랜드/제도간 경합 문제의 해소 ○ 산지유통조례 제정

9) 충청남도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 (충청남도, 2007)

■ 비전 및 목표

- 비전 : 서해안 경제시대에 동반 성장하는 충남 해양수산
 -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유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제철소 설치 등 충남도의 신 성장 발전계획과 연계
 - 수도권 인접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 최근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에 적극 대응하여 극복
- 목표
 -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 산업간 균형발전으로 양극화 극복
 - 수산업 경쟁력 강화 : 경쟁력 강화체제 구축으로 시장개발 대응
 - 어촌·해양관광 활성화 : 지역경제 활력과 소득증대 기여
 - 청정해역으로 복원을 위한 해양환경개선 노력 :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룬 연안 및 해양환경

■ 추진전략

구분	세부추진 전략
수산업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 ○ 소비자 Needs에 부응하는 웰빙 수산물 공급 ○ 수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자의 협력화
어촌·해양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관광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개발 ○ 고객중심의 관광서비스 제공
해양환경 복원 및 효율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연안·해양 및 어장환경 보존 ○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협력적 대응 ○ 기름유출 피해해역의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10) 제5차 지역산림계획(2013~2017) (충청남도, 2013)

■ 비전 및 목표

- 비전 :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충남 구현
- 목표 :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
 - 다양한 산림 혜택의 선순환 구조 확립
- 7대 전략
 - 산림자원 :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
 - 산림탄소 :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
 - 산림산업 : 임업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산림생태계 : 산림생태계 및 산림 생물자원의 보전·이용체계 구축
 - 산지 및 재해 : 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지 및 산림재해 관리
 - 산림복지 :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재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
 - 지역특성화 : 충남의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육성

■ 23개 핵심과제

7대 전략	23개 핵심과제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단위의 SFM 이행 확대 ◦ 기능별 산림자원 육성·관리 ◦ 사유림 경쟁력 제고와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 탄소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
임업시장 기능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경영 지원 방식의 전환과 환경서비스지불제 도입 ◦ 자원 순환형 목재산업 진흥과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 고품질 단기 임산물 생산 확대와 수출 경쟁력 제고 ◦ 장기 안정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 확대
산림 생태계 및 산림 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이용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 산림보호구역 관리체계의 정비 ◦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지 및 산림재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생태적 산지관리체계 도입 ◦ 선제적 산불예방과 산불진화 대응역량 강화 ◦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 ◦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 및 자연친화적 방제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재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숲의 확충과 산림경관의 보전 및 관리 ◦ 생애주기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의 확대 ◦ 산림과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 활력 있는 산촌 만들기
충남의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 아름다운 명품가로숲 조성 ◦ 담장허물기 사업추진 ◦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

제3절 SWOT 분석

1. 농어업부문

1) 강점(Strength)

■ 우수한 농수산물 특화자원 및 생산기반 보유

- 쌀을 포함한 전국 상위 재배품목(수산, 축산 등 포함)을 보유하고 있고, 친환경단지 등의 현대화된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 증대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등의 지역순환식품체계의 구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농어업6차산업화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기반 마련

- 전국적인 농어업6차산업화의 이슈화와 함께 중간지원조직인 충남 농어업6차산업화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고 다양한 농어업6차산업화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함

■ 수도권, 세종시, 내포신도시 등 대규모 시장 인접

-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과 함께 최근 조성·개발되고 있는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 등의 대규모 시장과 인접해 있음

2) 약점(Weakness)

■ 낮은 농수산물 브랜드 가치 및 소비자 인지도

- 충남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는 사례 등 품질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낮고,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선호도, 신뢰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 특정품목 중심의 생산구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수급 불안정

- 시설원예, 축산물 등의 편중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격 불안정과 자연재해 등에 의한 수급 불안정 심화 예상

■ 생산 이외의 가공 및 유통, 농식품산업 기반 취약

- 생산기반 확충 등 생산 이외의 농식품 가공 및 체계적인 유통체계, 농식품산업 기반 등이 취약한 실정임

■ 지역 소비자 의식개혁 및 농정 참여 기회 부족

- 지역 소비자가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이해를 바탕으로 농정 문제 해결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특히 지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성이 부족함

■ 농어업의 양극화 현상 심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미흡

- 대농 중심의 농어업과 중·소농 중심의 농어업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으로 정책적 대응이 대부분 대농중심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농 중심의 정책적 대응이 미흡함

3) 기회(Opportunity)

■ 농식품 안전·건강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인식변화 확대

- 먹고 사는 차원을 넘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휴양·체험·치유 등의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농어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

■ 로컬푸드, 농어업6차산업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지역순환형식품체계 및 농어업·농어촌의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화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로컬푸드, 농어업6차산업화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대 중국·동남아시아 등과의 교류확대에 따른 시장 확대 전망

- 수입개방과 함께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가 예상되며, 특히 중국·동남아시아는 농수산물 수출의 핵심시장이 되고 있음

4) 위협(Threat)

■ DDA·FTA 등에 의한 농수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 WTO(FTA·DDA) 재협상에 의한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고 또한 한미 FTA 등 각국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농수산물의 피해가 우려됨

■ 지역간 과다경쟁, 농수산물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정성 심화

- 지역간에 농수산물의 경쟁 심화와 함께, 특정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이 편중되거나 기후변화 등의 외부영향에 의해 생산량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세계 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우려 심화

- 세계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정과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애그플레이션 발생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그림 3-23] 농어업 부문 SWOT 분석



2. 농어촌부문

1) 강점(Strength)

■ 내발적 발전에 대한 참여 및 공감대 확산

- 농어업인의 참여확대를 통한 3농혁신의 추진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농정 문제해결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특히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통해 주민주도 내발적 발전에 대한 동기부여와 주민의식 변화가 이루어짐

■ 풍부한 농어촌 휴양·관광자원의 보유

- 백제문화권, 서해안 생태경관자원, 금강 및 내륙 자연생태자원 등 우수한 농어촌 휴양·관광자원을 보유

■ 양호한 접근성으로 도농교류 등의 잠재력 우수

- 도로 및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도농교류 활성화의 잠재력이 우수함

2) 약점(Weakness)

■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 진행과 농어촌 낙후도 심화

- 농어촌지역의 과소·고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농어촌공동체의 파괴, 내발적 발전 및 낙후도 심화,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 발생

■ 과소·고령마을에 대한 정책적 대응 미흡

- 정책적 관심 대상이 대부분 과소·고령마을 보다는 비과소·비고령마을로 일정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에 집중되어 과소·고령마을은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현상 심화

■ 마을만들기 이외의 지역 차원의 혁신모델 발굴 미흡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이외에 마을 및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혁신적으로 추진해 나갈 모델 발굴이 미흡함

3) 기회(Opportunity)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및 농어촌 어메니티에 대한 수요 증가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및 다양한 가치에 대해 재조명 되고 있으며, 농어촌 어메니티, 생태, 로컬, 여유, 전원생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대도시로의 집중현상 완화 전망

- 이농 및 탈농을 통한 대도시로의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대도시 인근지역부터 도시화가 진행되어 미래에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사라질 전망이다

4) 위협(Th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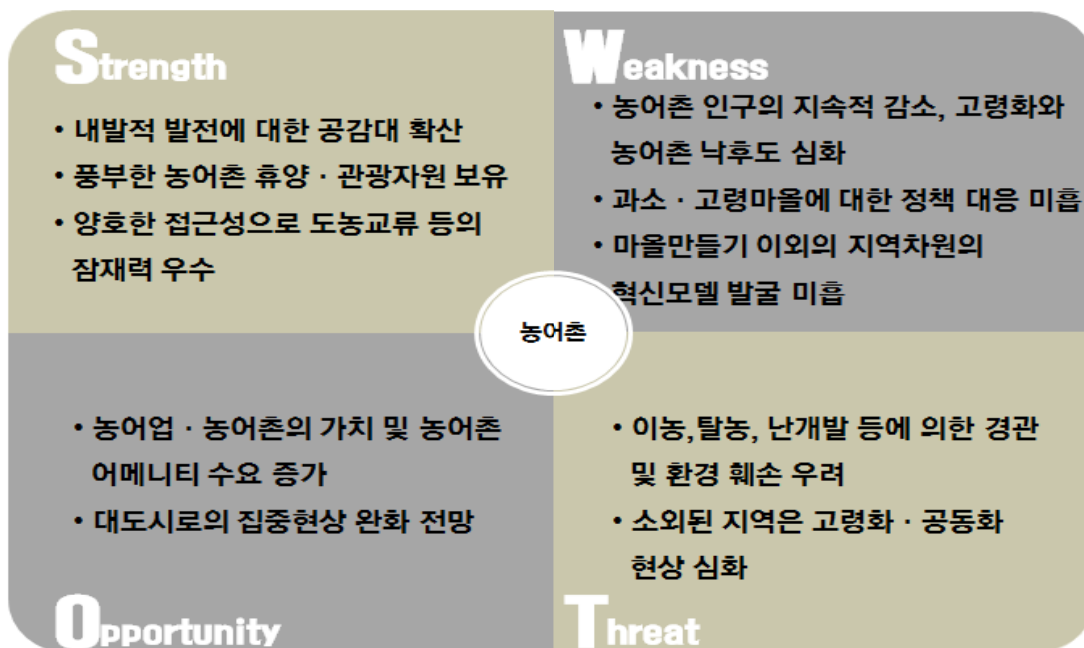
■ 이농 및 탈농, 난개발 등에 의한 농어촌경관 및 환경 훼손 우려

-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이농 및 탈농,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정주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으며 농어촌경관 및 환경의 훼손이 증가되고 있음

■ 소외된 지역은 고령화·공동화 현상 심화

- 농어촌 지역의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공동화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24] 농어촌 부문 SWOT 분석



3. 농어업인부문

1) 강점(Strength)

■ 3농혁신 추진 경험과 혁신 기반 마련

- 민선5기 3농혁신 추진을 통하여 농어업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농정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3농혁신의 기반을 마련함
- 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3농혁신대학을 운영하여 다양한 토론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마을학교 등의 운영을 통하여 내발적 발전역량을 강화시키는 틀 마련

■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인적자원 확보 가능성 증가

- 충남으로의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자체장의 3농혁신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

- 민선5기에 이어 충남 도지사의 3농혁신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 표명

2) 약점(Weakness)

■ 도민의 3농혁신 참여 미흡

- 3농혁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아직은 도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미흡한 실정임

■ 3농혁신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마련 미흡

-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 이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3농혁신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 3농혁신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부족한 예산 문제

- 민선5기 3농혁신 추진에 있어 다양한 정책발굴과 추진노력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한정된 부족한 예산은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3) 기회(Opportunity)

■ 복지 농어촌 건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의지 표명

- 박근혜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복지농어촌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행복’ 중시 가치관 확대 전망

- 도농간의 상대적인 격차해소를 위한 삶의 질 향상에서 상대적인 격차해소 보다는 절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행복’을 중시하는 개발 및 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 충청남도 3농혁신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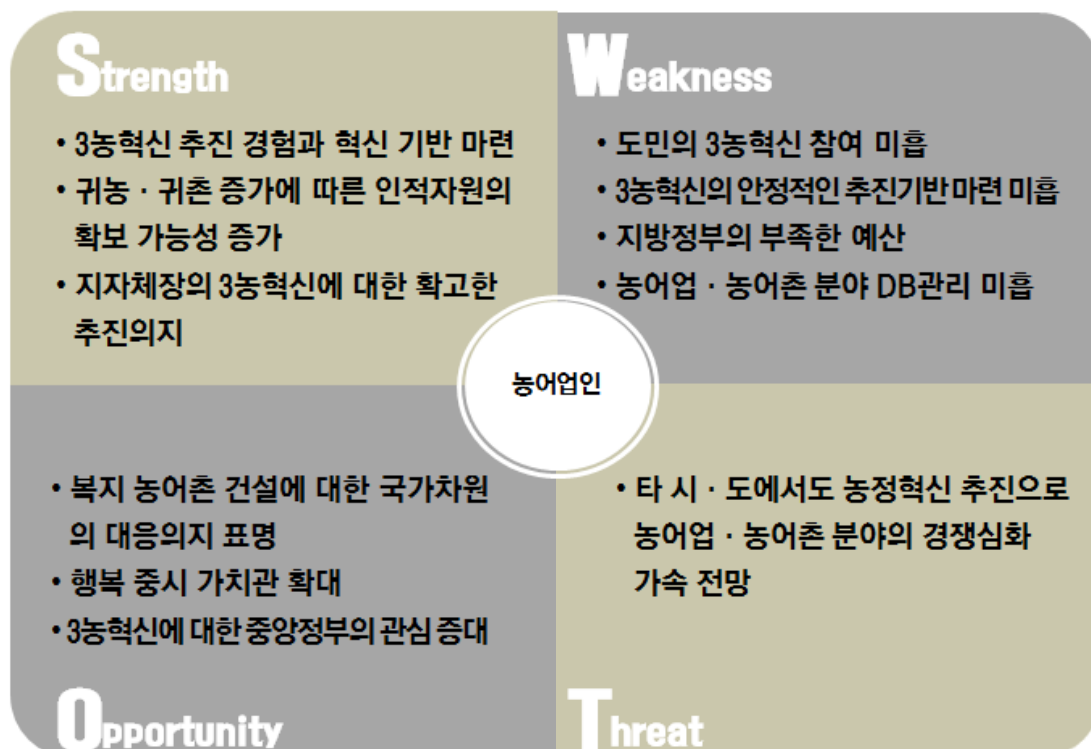
- 민선5기 동안 추진된 3농혁신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향후 국가 농정정책을 선도하고 우수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4) 위협(Threat)

■ 타 시·도에서도 농정혁신 추진으로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경쟁심화 가속 전망

- 타 시도에서도 3농혁신과 같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고 추진하고 있어 갈수록 지역 간 경쟁구도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25] 농어업인 부문 SWOT 분석



제4절 계획과제

1. 농어업 부문

■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 식량으로서의 농산물이 아닌 소비자 건강에 기초가 되는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 생산방식
으로의 전환 추진

■ 충남 농수산물 특화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소비자 인지도 강화

- 충남의 특화 농수축산물을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식품산업 및 6차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실현
- 브랜드가치와 안전성·신뢰성 제고 노력을 통한 충남 농식품의 인지도 강화

■ 지역순환농식품체계 구축 및 농어업6차산업화 활성화의 지속적인 노력

- 민선5기부터 추진해온 지역순환농식품체계(로컬푸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되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력에 의한 추진전략 마련
- 아울러 소수의 농가 중심에서 지역공동체 협력에 의한 농어업6차산업화 확대
- 중·소농(소규모 농가)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생산-로컬유통 체계를 마련하고, 농가브랜드
기반의 틈새시장 개척과 소비자 친화형 로컬푸드 주도 전략 마련

■ 유통체계 및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

-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에서 소비자 중심 및 수요·시장지향의 유통체계로의 유통시스템
변화에 대응전략 마련
- 가격 및 품질 중심에서 가치와 신뢰 중심으로의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전략 마련
- 소비자 교육 및 참여 유도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소비정책 마련

■ 기후변화 대응 및 첨단과학영농 시대를 준비하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의 선정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 개발
- 첨단 과학기술을 기초로 한 과학적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 대농(대규모 농가)을 중심으로 대량생산-대량유통을 위한 첨단기술농업과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 전문농업경영체의 육성 등을 통하여 수출시장 주도 전략 마련

2. 농어촌 부문

■ 도농복합화(Rurbanization) 현상 및 새로운 전원주거문화 수요 대응

- 러바니제이션 현상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혼재(混在)·혼주(混住)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정주기반 및 생활공간 정비
- 귀농·귀촌 등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 증가와 건강·문화·여가·어메니티 중시의 주거 문화의 수요에 대응한 복합생활공간 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등 주민주도의 내발적 발전역량과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된 체계의 구축
- 마을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단위의 다양한 내발적 발전모델을 발굴하고 육성

■ 낙후된 생산기반 및 기초생활환경 등의 지속적인 여건 개선

- 농업의 규모화·전문화 등 미래농업에 대비한 지속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정비
- 도시와의 상대적 격차해소 및 낙후된 생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제고를 통한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농어업·농어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도시민(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도농교류 등) 마련
- 가치공유와 함께 이를 통한 농어업의 문제해결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 접근방안 마련

■ 농어촌마을의 공동화·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적 관심 확대 및 대응책 마련

- 러바니제이션 현상과 함께 진행되는 소외된 농어촌마을의 공동화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유도
- 과소·고령마을에 대한 공간적·사회적 재편정책 마련

3. 농어업인 부문

■ 농정주체 확대 및 3농혁신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 다양한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를 농어업인만으로 해결하려는 한계를 벗어나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3농혁신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
- 민선5기 3농혁신 추진에 이어 민선6기 및 이후에도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체계 개선 및 거버넌스 기반 마련

■ 미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 기존 농어업인과 함께 귀농·귀촌 장려를 통한 미래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 농어촌공간의 구성원이 농어업인에서 비농어업인과 도시민으로 확대되는 현상에 대응한 미래 농어업인(또는 미래 농어촌주민)을 육성하는 인력육성정책 확대

■ 행복중시 충남형 농어촌복지 정책 마련

- 종합적 일반복지와는 차별화되고 농어촌주민의 맞춤형·체감형 복지로 전환됨에 따른 충남의 실정에 맞는 농어촌복지 모델을 마련

■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DB 구축 및 관리 체계 확대

- 농어업·농어촌 분야에서도 Big Data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의 농정 의사결정 방식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DB 구축과 관리 체계 마련

제4장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제4장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제1절 3농혁신 미래비전 및 목표

1. 미래비전 관련 키워드

1) 영역적 측면

■ 친환경·안전한 먹거리

- 농수산물에 식량으로서의 단순한 목적을 넘어서 소비자와 국민 전체의 건강한 삶에 기초가 되는 측면에서 친환경농업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 지역순환식품체계(로컬푸드) 및 소비혁신

- 기존 중간유통업자 중심의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탈피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게 하고 나머지를 외부 지역으로 유통시키는 생산자와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인 유통구조로서 지역순환식품체계(로컬푸드)가 제기되고 있음

■ 농어업6차산업화

-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1차, 2차, 3차가 융복합된 형태로 농가단위 또는 농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생산과 함께 가공,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다양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음

■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및 ‘내발적 발전’

- 기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대부분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향식 개발 방법을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개발로 공동체 활성화보다는 H/W 중심의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어 실제 공동체 활성화 효과는 미흡한 실정
- 즉, 공간중심의 정책추진보다 앞으로는 농어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여 인적자원 및 역량을 극대화 시켜 주민 주도의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음

■ 다기능 농업

- 다기능 농업은 농업의 외부효과를 활용하여 농업과 다른 서비스를 하나 이상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기능 농업이 내발적 농업농촌의 발전모델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의 육성, 농가 및 마을수준의 수제가공 활성화, 다품목·다품종 생산시스템으로 전환, 농촌 먹거리 개발, 농촌경관 창출 및 역사문화 보호, 농촌관광기능 융복합화 및 새로운 농촌관광영역 개척 등이 해당됨

■ ‘행복’ 추구

- 최근 농어촌 생활환경 및 복지를 이야기 할 경우 가장 큰 목표는 도농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삶의 질 향상 보다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열악하더라도 이에 만족하고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 추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2) 접근 대상 및 방법론적 측면

■ 농어업·농어촌 ‘가치 재발견’

- 식량생산 및 식량안보 문제를 넘어서 농어업·농어촌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재발견·재창출을 통하여 농어업·농어촌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추세임
- 즉,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 국민건강과 연계된 새로운 식문화·식생활 형성, 농어업·농어촌 다면적 기능(식량생산의 기능, 국토보전의 기능, 전통문화 계승 기능, 자연환경보전 및 수자원 함양의 기능, 보건·휴양의 기능 등)의 재발견, 다기능농업 도입 등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기능과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다양한 영역간 ‘통합 및 융복합’

- 기존의 농정추진방식이 생산이면 생산, 가공이면 가공, 유통, 판매 등이 각각의 영역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해당 영역 내에서 찾았다면, 앞으로는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영역이 연계되는 통합적 농정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즉,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및 판매, 문화, 삶, 복지 등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농어업6차산업화를 들 수 있음
- 정책 영역에 있어서도 기존에 공간정책과 산업정책이 분리되어 추진되었다면, 앞으로는 공간정책과 산업정책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정책 추진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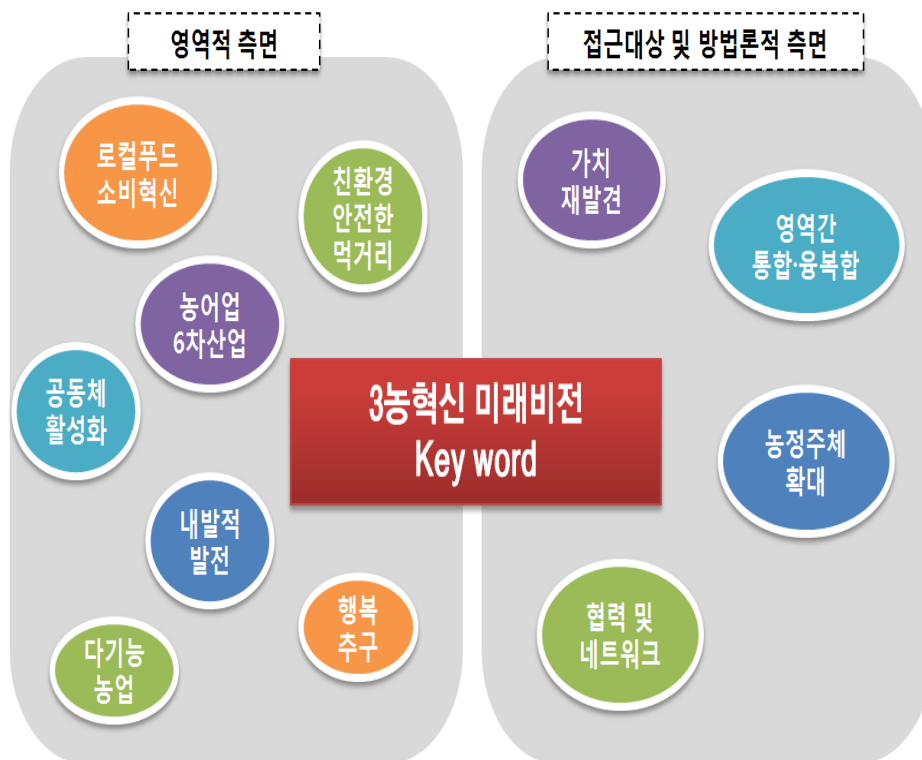
■ ‘농정주체의 확대’

-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농어업인, 농어촌주민 등)에 한정하여 고민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이를 넘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도민, 더 나아가 국민 전체가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 즉 이제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농정 문제해결 접근에 있어 생산자만의 참여에 의한 해결방법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 향후 충남도 및 국가 전체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참여와 노력으로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

■ 지역사회 ‘협력 및 네트워크’

- 다양한 농정주체의 참여확대와 함께 주체 간 연대 및 협력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형성과 함께 이러한 공동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역량 및 성과를 극대화하는 ‘협력 및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4-1] 3농혁신 미래비전 키워드



2. 비전 및 목표

1) 기본원칙

- 하드파워, 행정주도 → 소프트파워, 민간협력 파트너십
- 대외경쟁력 강화 → 협동과 연대, 지역 네트워킹 강화
- 외부의존형 발전 → 지역 내발적 발전 도모
- 생산기반 위주 → 가공·유통·마케팅 강화
- 관행적 접근 → 창조적·역발상적 접근

2) 장기 비전 및 목표(2030년)

① 장기비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충남 농어업·농어촌"

- 지속적인 3농혁신을 통하여 단순하고 관행적인 농정정책 및 추진방식을 탈피하여 창조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고, 도농 상생공동체와 행복한 미래를 완성해 가는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실현

② 장기목표

■ 농어업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익적·사회적 농어업의 실현

- 단순한 식량생산이 아닌 도민 및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접근, 지역소비자의 참여 및 재발견을 통한 농어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의 실현

■ 농어촌 : 미래 농어촌을 준비하는 도농상생 공동체 만들기

- 농어촌의 내발적 발전과 미래공동체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교류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미래 농어촌을 준비

■ 농어업인 : 도민이 주체가 되고 모두가 행복한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실현

-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체계적 인력 육성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도민이 주체가 되는 농정거버넌스를 확립

3) 중기 비전 및 목표(민선6기)

① 중기비전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
함께하는 3농혁신"

② 중기목표

■ 농어업 : 가치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산업 육성

- 생산혁신 : 미래지향적 농수축산업의 육성 및 착한 먹거리의 생산
- 유통혁신 : 농산물 유통선진화 및 농어촌 융복합 산업의 육성
- 소비혁신 : 소비자가 참여하는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 농어촌 :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 지역혁신 :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삶터·일터·쉼터 가꾸기
- 농어촌 주민의 내발적 역량강화와 함께 편리한 농업생산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농어촌 지역의 혁신과 도농상생을 도모

■ 농어업인 :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협치농정의 실현

- 역량혁신 : 미래를 책임지는 인력육성과 농정주체의 확대
-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체계적인 인력 육성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농어업인과 함께 소비자가 참여하는 협치의 농정거버넌스를 확립

※ 참 고

■ 기존 농정 비전(2020 발전 종합계획)

- “세계시장과 경쟁하는 강한 농수산업,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풍요로운 농어촌”

■ 민선5기 3농혁신 비전

-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

■ 국가 농정 비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 2013)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4) 농정(3농혁신) 기초의 변화

구분	이전 ~ 민선5기	민선6기	2030년
혁신 단계	3농혁신 준비 및 도입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확충 (과도기적 접근)	안정적인 혁신 도모
참여 주체	- 농어업인 → 농어업인 + 일부 소비자	- 농어업인 + 소비자 (소비자 참여 확대)	- 농어업인 + 도민(소비자 /도시민)
접근 방식	- 의사결정체계 부재 → 다양한 관련주체 참여 시도 - 중앙정부 사업 의존 → 혁신사업 발굴 및 사업별 혁신 도모 - 폐쇄적·한계적 접근 → 참여적·시범적 접근	- 참여주체의 확대 및 협력적 의사결정시스템 확립 - 미래농정 패러다임과 핵심가치 반영 - 농정전체에 대한 종합적 혁신 도모 - 포괄적·다양성의 측면에서 의 체감 가능한 접근	- 도민에 의한 의사결정, 도민 참여에 의한 사업추진 - 통합적·목적별 사업추진 및 혁신 도모 - 개방적·창조적 측면에서의 가치 지향적 접근
농어업 전략	- 관행적 경쟁력 강화 → 주요 테마에 대한 새로운 혁신 시도	- 주요 테마 및 분야별 혁신 도모(생산, 유통, 소비) ※ 지속가능한 농어업 지향	- 가치 재발견 및 공유, 공감대 확산을 통한 새로운 접근의 혁신도모
농어촌 전략	- 공간(H/W) 중심 → 내발적 역량(S/W) 중심 - 하향식 개발 → 마을 중심 의 상향식 개발 시도	- H/W + S/W의 조화 - 마을 및 지역중심의 혁신 시도(생활+생산기반 구축)	- S/W + H/W의 통합 (S/W 중요성 확대) - 도농상생(공간개념 소멸) + 다양한 공동체 중심
농어업인 전략	- 생산기술 중심의 역량 강화 → 농어업 + 농어촌 역량 강화 - 삶의 질 중시 → 삶의 질 + 종합적 복지	- 농어업 + 농어촌 역량 강화(소비자 참여 시도) - 거버넌스형 합치농청 - 삶의 질 중시 + 맞춤형 복지	- 농어업·농어촌 역량강화 + 도민(도시민) 참여 - 행복 중시 + 체감형 복지

※ 참 고

■ 새로운 국가 농정의 방향(농림축산식품부, 2013)

구 분		과거농정	새로운 농정 방향
농정	농업정책	생산성·편의성 향상	ICT·BT융합 창조농업 및 6차산업화
	소득정책	규모화·전업농	농가유형별 소득원 다양화
	복지정책	일률적 지원	주민체감형 지원
	농산물 소비·유통	직접적 개입	자율·합의 중심
스마트 농정구축	소통방식	계층별 획일적 정책	개인별 쌍방향 맞춤형 정책
	농정수준	중앙정부 중심	지방·공동체 중심
내부관리시스템		효율농정	행복농정

제2절 부문별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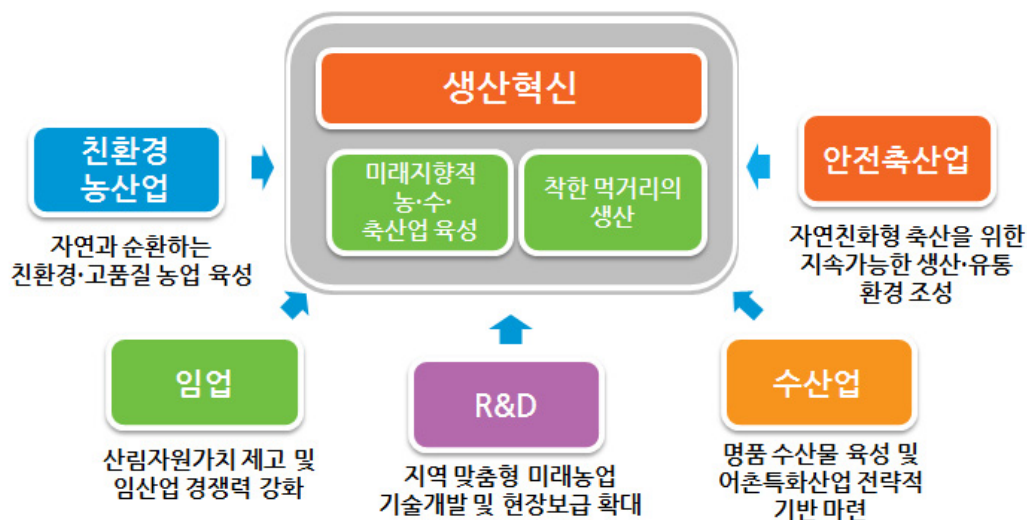
1. 부문별 추진전략

1) 생산혁신 부문

■ 미래지향적 농수축산업의 육성 및 착한 먹거리의 생산

- 친환경·농산업 : 「자연과 순환하는 친환경·고품질 농업을 육성」 -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농업 및 순환복합영농체제를 구축
- 안전축산업 : 「자연친화형 축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산·유통 환경 조성」 - 자원순환형 및 고품질 생산체계와 안전축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 임업 : 「산림자원가치 제고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특화 임산물을 발굴·보급하고, 임산물 유통구조를 확대하며, 목재산업 및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성화
- 수산업 : 「명품 수산물 육성 및 어촌특화산업 전략적 기반 마련」 - 충남 4대 명품 수산물을 육성하고,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및 수산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
- R&D : 「지역 맞춤형 미래농업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 미래농업 대응기술과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현장보급 및 실천 확산

[그림 4-2] 생산혁신 부문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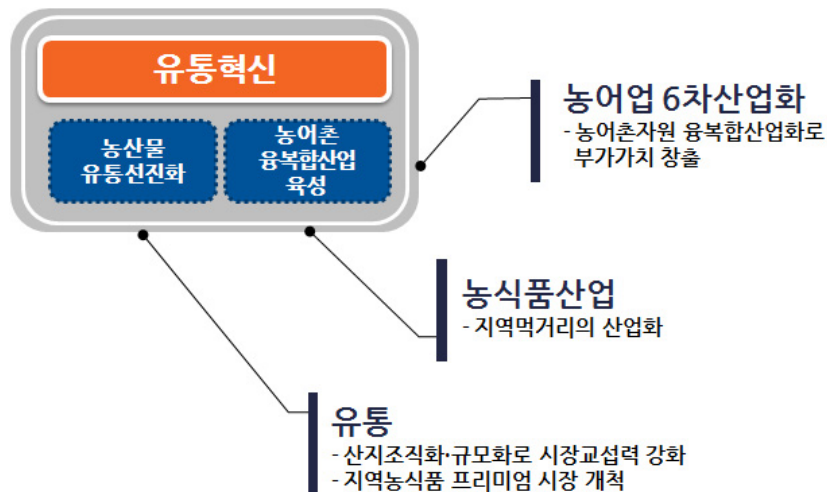


2) 유통혁신 부문

■ 농산물 유통선진화 및 농어촌 융복합 산업 육성

- 유통 : 「산지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및 「지역농식품의 프리미엄 시장 개척」 - 산지 중심의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최고급 농식품 특화기반을 조성
- 6차산업화 : 「농어촌자원 융복합 산업화로 부가가치 창출」 - 지역 맞춤형 6차산업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체계를 구축
- 농식품산업 : 「지역 먹거리의 산업화 추진」 - 지역내·외 외식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전통식품의 산업화를 추진

[그림 4-3] 유통혁신 부문 추진전략



3) 소비혁신 부문

■ 소비자가 참여하는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 로컬푸드 : 「지역순환형 로컬푸드 소비체계 강화」 및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 시스템 구축」 -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와 공공부문 공급 및 '미더유' 활성화를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체계를 확충
- 소비운동 :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운동 확산」 및 「지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농업·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고 '착한 소비·식생활 운동'을 전개 하며, 농식품 안전성 강화와 도시농업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

[그림 4-4] 소비혁신 부문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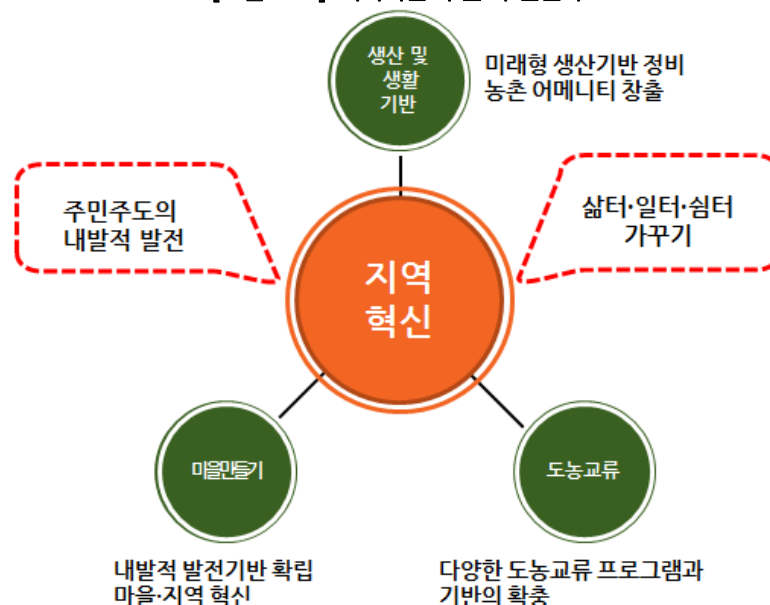


4) 지역혁신 부문

■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삶터 · 일터 · 쉼터 가꾸기

- 마을만들기 : 「내발적 발전기반 확립 및 마을과 지역혁신 도모」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을재구조화 및 지역혁신 모델을 발굴 · 육성
- 생산 · 생활기반 : 「미래형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촌어메니티 창출」 - 영농기반 및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경관만들기 추진 및 충남 농어업유산 발굴 · 육성
- 도농교류 :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기반의 확충」 - 소셜팜 운영기반을 확충하고 도농교류센터 설립 및 프로그램 개발, 제도개선 등 추진

[그림 4-5] 지역혁신 부문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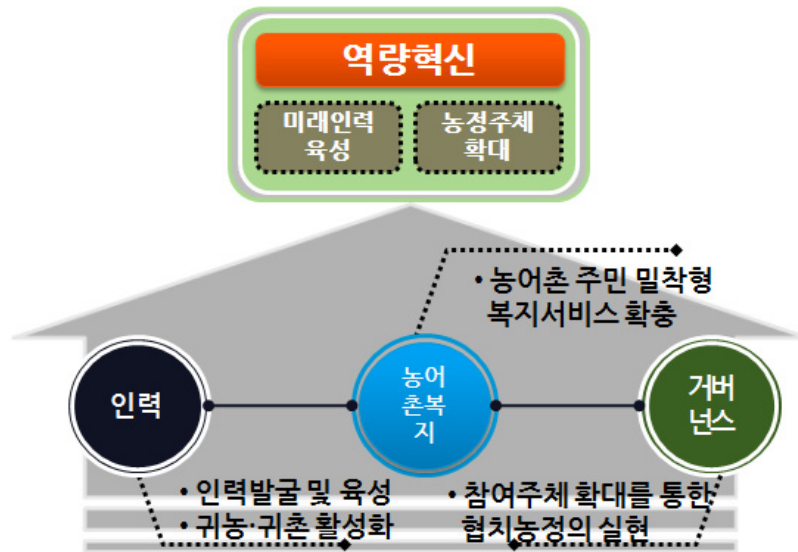


5) 역량혁신 부문

■ 미래를 책임지는 인력육성과 농정주체의 확대

- 인력 : 「체계적인 농어촌 인력 발굴 및 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확대」 - 현 장중심 농어촌 리더·농어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자원체계 및 현장지원 프로그램을 강화
- 농어촌복지 : 「충남형 농어촌 복지체계의 확립」 - 농어촌 주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충남의 실정에 맞는 농어촌 밀착형 복지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 거버넌스 : 「참여주체 확대를 통한 협치농정의 실현」 - 3농혁신의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추진기반을 확충하며,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농어업·농어촌 DB 구축·관리

[그림 4-6] 역량혁신 부문 추진전략



2. 전략별 핵심과제

목표		(장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익적·사회적 농어업의 실현 (중기) 가치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산업 육성
미래아	생산혁신	전략 미래지향적 농수축산업의 육성 및 착한 먹거리의 생산
		친환경·농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순환하는 친환경농업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토양 환경보전 시범사업 - 토종 및 지역종자 보존 - 자원순환형 농업기반 조성 - 광역 친환경농업벨트 조성 - 충남 시설원에 산업벨리 조성 - 로컬푸드와 연계한 원예특작 특화단지 조성 - 순환복합영농체제 및 연중작부시스템 조성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 직불금 제도개선 방안마련 추진
		안전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친화형 선진 축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개방 등에 대응한 친환경·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 축산물 유통·소비기반 확립 -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자원화 추진 -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통한 안전축산 기반구축
		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자원가치 제고 및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 경쟁력 있는 임산물 및 전문임업인 단체 육성 - 산림병해충 등 산림자원의 보호 강화 - 산림휴양 문화 조성 관리
		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명품 수산물 육성 및 브랜드화 - 섬마을 중심 수산물 특화단지 조성 - 안정적인 바다자원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전조업 실현 - 수산업 6차산업화의 전략적 추진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맞춤형 미래농업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및 미래농업 대응기술 확보 - 현장실용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 - 씨앗산업 육성·보존 추진 - 3농혁신 현장 참여형 농정실천 농업인 발굴 - 신기술 현장접목 연구 및 기술보급 확산
	유통혁신	전략 농산물 유통선진화 및 농어촌 융복합 산업 육성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중심의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 광역브랜드 중심 유통계열화 선도 ○ 지역농식품의 프리미엄 시장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급 농식품 특화기반 조성 - 농식품 내수 및 수출 지원시스템 구축
		6차 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자원 융복합 산업화로 부가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맞춤형 6차산업화 인프라 구축 - 6차산업화 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체계 구축
		식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먹거리의 산업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 전통식품 산업화 추진 - 지역내·외 외식산업 발굴 및 육성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계획

농업	소비혁신	전략	소비자가 참여하는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로컬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순환형 로컬푸드 소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 소비자 중심의 로컬푸드 체계 구축 ○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업체) 간 연계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및 기업체 지역 농산물 안정적 공급 체계 마련 - 로컬푸드 인증제도 「미더유」 활성화 및 외식업체 농산물 공급 확대
		소비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운동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의 가치이해 및 지역먹거리 소비자 전문 강좌 개설 - 「착한 소비·식생활」운동 전개 ○ 지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농업과 소비자협동조합 활성화 - 지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농촌	목표	(장기) 미래 농어촌을 준비하는 도농상생 공동체 만들기 (중기)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지역혁신	전략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삶터·일터·쉼터 가꾸기
		마을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발적 발전기반 확립 및 마을과 지역혁신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Upgrade 추진 - 농산어촌 마을재구조화 추진 - 읍면단위 지역혁신모델 발굴 및 육성
		생산생활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형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촌어메니티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형 영농기반시설 정비·확충 추진 - 기초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촌 경관 창출 - 충남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육성
		도농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기반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기능적 농업에 기반한 소셜팜(Social Farm) 확충 - 지역내부의 도농교류기반 확충 - 도농교류센터의 설립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 도농교류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의 발굴
농어업인	목표	(장기) 도민이 주체가 되고 모두가 행복한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실현 (중기)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협치농정의 실현	
	포용혁신	전략	미래를 책임지는 인력육성과 농정주체의 확대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인력의 체계적인 발굴과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중심 농어촌 리더·농업인 인재 육성과 관리체계 구축 - 농어촌 주민 평생교육 운영체계 구축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인생2모작(WJ턴)」 지원체계 구축 - 귀농·귀촌 현장지원 프로그램 강화
		농어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 농어촌 복지 모델 구축 및 추진체계 구축 - 농어촌 밀착형 복지프로그램 개발 -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이행 제고 - 여성 농어업인 영농향상 지원체계 - 농촌보육복지 지원체계 구축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주체 확대를 통한 협치농정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농혁신 추진체계 개편 및 추진기반 마련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 - 농어업·농어촌 DB 구축 및 관리

제5장

핵심정책과제

제5장 핵심정책과제

제1절 생산혁신

1. 자연과 순환하는 친환경농업 조성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2030년)

■ 자연과 순환하는 형태의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기반이 강화될 것임

- 이러한 친환경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의 구축이 요구됨
- 장기적인 시야에서는 자원순환을 바탕으로 하는 경축 연계기반이 일반화되어야 함

■ 친환경, 나아가 더 적극적인 형태인 유기농의 핵심은 토양살리기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기반의 핵심은 결국 토양살리기에 있음
- 현실적으로는 밭 토양의 시설내 채소연작지에서의 염류집적 및 병충해발생 등 연작장애, 퇴비과다사용으로 인한 장애가 지적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극복 노력이 필요함

■ 종자, 종묘 등 씨앗산업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중요 분야로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기본적 과제라는 종합적인 이해 필요

- 지금까지의 우량종자개발이라는 개발 차원의 인식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토양에 맞는 우리 고유의 종자를 보전하는 기본적인 인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② 중기전망(민선6기)

■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지원 벨트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확대 전망

- 아산, 예산, 홍성, 청양, 부여로 연결되는 친환경지구조성 사업을 함께 연계함으로써 지역간 정보 교류와 물류지 확보 등을 통한 협력과 연대 체계가 필요

■ 시설원에 부분에서도 산업벨리 조성이 필요

- 원예생산단지 및 특용작물 생산단지, 인삼재배 지역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공익형직불금 제도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재정 내실화 전망

-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보전 차원을 넘어 농업·농촌에 대한 다원적·공익적 보전 차원의 정책설계 필요 (충남에서 제안 중)

2)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 및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필요

- 친환경농업은 환경과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유도,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적 요소로 자리, 2017년까지 무농약 이상 재배 면적 비율을 10%(2009년 4.9%, 2012년 7.3%)까지 확대하려는 계획 하에 생산확대와 함께 유통 및 소비촉진 동시 강화정책 예정
- 충남에서는 친환경고품질생산이라는 분야를 통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끌어오는데 이바지, 최종적인 단계인 유기농을 지향한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비판, 기존의 중앙정부의 농업정책 및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
- 특히 유기농업의 메카로 불리는 홍성군 홍동마을의 선진적인 실천을 살려가면서 친환경 농업지구의 지역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이제라도 유기농 청정 충남으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으며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씨앗산업 육성의 중요성 부각 추세

- 세계적으로 종자, 종묘는 농업생산의 기본적 요소로서 농업부문의 원천산업, 현재 최첨단 융복합 사업으로 변모해 가는 가운데 소수의 거대 글로벌 기업에 의해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비할 필요성 점점 더 증가
- 국가적 차원에는 글로벌 농업시장의 핵심인 종자산업 주도권 확보와 수출 증대 차원에서 'Golden Seed Project' 투자 확대 도모, 식량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품종개량 등의 R&D 연구 투자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충남에서는 친환경농업기술팀을 중심으로 신품종보호동맹(UPOV)가입을 통해 국가 간 품종 보호권을 강화, 신품종 개발 및 우량종자, 종묘 보급으로 2013년도 신품종을 4작목 11품종 개발하는 등 R&D 중심 사업으로 구성, 그러나 종자, 종묘 산업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중요한 분야로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기본적 과제라는 종합적인 이해는 부족하다고 판단
- 지금까지의 우량종자개발이라는 개발 차원의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토양에 맞는 우리 고유의 종자를 보전하는 기본적인 인식 변화의 필요성 제기, 이러한 종자를 지켜

내는 것이 곧 우리 농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식량주권 수호의 기본적인 과제라는 인식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

■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및 판로 확대 마련 필요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시군별 맞춤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단지간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친환경농업생산기반 마련이 필요
- 이러한 생산기반 확충과 동시에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학교급식 확대 추진
- 시설 원예작물에 있어서도 고품질 안전 원예작물의 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를 위해 생산단지의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지원 필요

■ 공익형 농업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대

- 쌀·밭 직불제 확대 및 정비, 공익적 환경프로그램 강화, FTA 피해보전직불제 체계화,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 등 마련으로 직불제 확대 및 기능보완
- 세계적으로는 일본의 다면적기능 직불제(2014년부터 시행), 스위스의 직불제 전면확대 시행(농정예산 80% 이상 직불금 예산 투입)
-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수입개방으로 인해 경영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 점차 농정예산에서 재해보험, 직불제 등 소득안정망 예산 비중을 증대하고 있는 경향

3) 기본방향

[그림 5-1] 친환경농업 분야 기본 추진방향



■ 건강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

- 건강한 토양환경과 토종 및 지역종자를 보존하고 자원순환형 농업기반을 조성

■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 광역 친환경농업벨트를 구축하고, 시설원에 분야의 산업벨리와 로컬푸드 연계 원예특작 특화단지를 조성하며, 순환복합영농체제 및 연중작부시스템을 조성

■ 공익형농업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 직불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광역 친환경농업벨트 조성(아산→예산→홍성→청양→부여)
- 충남 시설원에 산업벨리 조성
- 로컬푸드와 연계한 원예특작 특화단지 조성
- 자원순환형 농업기반 조성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직불금 제도개선 방안마련 추진



[장기]

- 건강한 논토양 환경보전 시범
- 토종 및 지역종자 보존
- 자원순환형 농업기반 조성(계속)
- 순환복합영농체제 및 연중작부시스템 조성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직불금 제도개선 방안마련 추진(계속)

① 건강한 토양 환경보전 시범(장기)

■ 윤희작 보급 사업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토양의 보전 및 화학비료 대체 및 감축기술 개발 보급하며 농업 생산물을 안정적이고도 계속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농업생태계에 기반을 둔 작물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수확량을 증대시키고 품질을 향상하며 소득을 극대화하고자 함

- 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염류집적 회피를 위한 최적시비법 개발, 지하수 용탈 최소화를 위한 최적시비 연구, 외부투입자재 최소화 등을 통해 토양비옥도 유지에 기여
- 유기농업의 공익적 기능 탐색이 필요하며 농장내 양분수지 계산(시설채소재배농가, 노지 채소재배농가, 과수농가, 수도작 농가),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내 양분수지 계산 등 기술적인 검토 필요
- 각 시군별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토양환경 및 작물양분 종합관리기술 개발, 계절별 작목별 토양 조사와 지역에 맞는 작부체계의 구축 필요

② 토종 및 지역종자 보존(장기)

■ 토종종자 살리기 및 지역종자 도서관 사업

- 유기농 생산을 위해서는 종자 단계에서부터의 고려가 필요하며 지역에 맞는 토종 종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유기농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각 시군별 기술센터 및 민간단체, 농가 등을 중심으로 우리 토종 종자 및 지역 종자의 보존 상황 파악과 보존을 위해 계획 수립
- 과산과 같이 토종종자도감의 작성 등 적극적인 실천 도입
- 추가로 유기종자를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로서는 농약대체 소독 방법에 대한 연구, 종자소독하지 않은 원예종자 보급 체계 구축 등 필요

③ 자원순환형 농업기반 조성(중/장기)

■ 벼짚 환원 시범사업

- 농지의 토양개량 및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과 벼 수량증대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비료 구입비까지도 절감할 수 있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이미 부안과 전주, 김해 등에서 실시되고 있음

④ 광역 친환경농업벨트 조성(중기)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등 친환경관련 사업지원 벨트화(아산→예산→홍성→청양→ 부여)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기반구축(H/W) 사업 확대
- 시·군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단지 규모화 및 지역을 연계한 광역 벨트화
-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광역화된 생산·유통·가공 시설 및 장비 지원

- 200ha이상 사업면적,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명확한 지역 농·축협, 농업법인 등의 자원 자격에 맞는 사업대상자를 발굴, 2018년까지 최소 6개소 이상 조성

■ 광역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자매결연 확대로 소비촉진

- 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로컬푸드직매장과 연결, 안정적 판로 확보
-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 추진

⑤ 충남 시설원에 산업벨리 조성(중기)

■ 원예생산단지의 생산기반 확충

- 과실 고품질 시설현대화를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확충 및 농촌 고령화에 맞춤 시설지원
- 기술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원에 생산단지 조성
- 온실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단지 환경개선 및 신농법 도입 지원

■ 특용작물 생산단지 시설현대화 및 인삼하우스 재배

- 경쟁력 있는 특용작물의 육성을 위한 맞춤형 생산시설 지원
- 하우스 인삼재배 기술(병해충 방제, 온도 및 차광 등) 보급 및 지원 확대를 통한 인삼 하우스 재배시설 확대 보급에 따른 안전 생산기반 구축

⑥ 로컬푸드와 연계한 원예특작 특화단지 조성(중기)

■ 경쟁력 있는 특용작물 발굴 및 육성

- 경쟁력 있는 특용작물의 육성을 위한 맞춤형 생산시설 지원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시설지원을 통한 특용작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기반 지원

■ 성공적으로 정착된 소규모 원예·특용작물 재배단지 발굴 및 모델화 추진

- 다품목 소량생산을 위한 온실 및 포장재 등 지원을 통해 소규모 원예농가가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로컬푸드 참여 소규모 다품목 원예 시범단지 조성
- 농가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패키지사업 및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확산사업 추진

⑦ 순환복합영농체제 및 연중작부시스템 조성(장기)

■ 농산물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 현재 농사체계가 논농사 혹은 밭농사로 단순화되어 있어서 동절기에는 계절 실업과 연중 농가경영불안정 해소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순환복합영농체제로 전환 시 실업요인 해소와 함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연작피해 예방 등 순환농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부각, 확산 필요
- 유희지 활용한 동계 논 사료작물 재배지 비료지원, 동계 논을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확대를 통해 생산기반 구축(양질의 조사료 재배면적 및 생산량 확대)

■ 2모작 형태의 복합영농단지화 사업

- 순환복합영농체제로 전환을 위해서 2모작 형태의 복합영농단지화, 동절기 기초영농과 시설재배 실시, 농업과 임업 간 연계·농업과 축산업 간 연계 등 영농활동의 다각화
- 특히 겨울철 이모작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 체계 구축, 이모작 생산물을 축산사료로 공급하는 조사료 연중공급시스템과도 연동가능한 사업
- 사례 : 충북 음성군⁵⁾ 1모작은 수박, 오이, 채소 등의 시설재배, 2모작으로 벼농사 모내기, 이미 전라남도의 경우는 이모작 영농체계가 널리 보급되어 실시 중에 있기도 함

■ 마을읍면단위 농가조직화 및 공동영농활동사업

- 마을공동영농활동사업과 마을별 농기계 협동체계 구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업을 마을 단위 농가조직을 재점검하고 내실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사업
- 현재 마을별로 각 기관의 목적별 만들어진 작목반(농협 조직), 품목별 연구회(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 소규모·영세 영농조합법인 경영체(정부정책사업 지원) 등을 재점검, 재편
-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농가조직(경영체)은 통합하면서 내실화있게 조직다운 모습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저비용·저투입 농업을 지향, 시군내 인근마을단위 조직간 연계와 통합을 통해서 지역마케팅 조직의 가장 기초단위로 육성
- 조직의 기초사업의 핵심은 농업인력육성인데 이와 관련한 타프로그램과 연동으로 운영하여 각종 생산기술, 자재사용, 공동영농활동, 선진 생산·유통·가공 등 교육·컨설팅 결합

⑧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직불금 제도개선 방안마련 추진(중/장기)

■ 충남 희망농업 프로그램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입각한 희망농업 직불 설계, 1차 산업이 타 산업과 균형적

5) 자료 : 음성신문(<http://www.us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734>)

성장축으로서 기여하는 측면 부각

- 충남 식량자급률 향상 및 유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충남 식량자급 프로그램’
- 충남 농업·농촌 신규인력 유입, 농촌사회 유지를 위한 ‘충남 젊은농부 프로그램’
- 충남 지역 내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개별·단체·지역 수준 프로그램 제공,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체 프로그램 적용 가능, 두 프로그램 간·개인과 집단 프로그램 간 중복 수혜 가능

■ 충남 친환경 생태경관 프로그램

- 농업 자연자원 (물, 토양, 생물다양성) 보전 중심의 ‘충남 농업생태 프로그램’
- 농촌의 문화적·자연적 경관 보전 중심의 ‘충남 농촌경관 프로그램’
- 농업이 가지는 생명가치 창출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더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논 생물 조사 및 밭 생물 조사, 학생들 논밭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한 생물 다양성사업 실시

2. 자연친화형 선진 축산업 육성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2030년)

■ 소농 중심의 친환경농업과 축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 경축체계 확립 및 자연친화적 축산업 강화

- 전통적으로 친환경농업과 축산업은 밀접한 관계였듯이 미래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축산업이 안고 있는 환경, 안전, 동물복지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될 것임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확대 등 농지에 환원하는 자원순환농업 체계 확립
-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축산업으로 발돋움

■ 안심·안전·건강 친환경 축산물 먹거리 수요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

- 축산 중심의 충남도 미래 성장동력은 소비자의 신뢰 기반 구축이 관건
- 경제 여건 등 가구소득 수준이 축산물 소비도에 민감하게 작용
- 사육·가공·유통판매단계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위생·안전 관심도 증가
- 양(量) 보다는 질(質) 중심의 고품질 축산물 수요 증대 등 소비양상 변화

■ 전업농 중심으로 점진적인 동물복지 확대, 사육두수 조절 등 축산업 사회문화적·과학기술 중심의 환경으로 재편

- 가축본래 습성을 최대 고려한 적절한 사육환경(사육밀도, 생활환경개선) 제공 확대 예상
- 가축질병·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동물복지 사육기반 조성 및 적정사육두수 조절
- 충남 내 안정적 조사료 순환 및 공급기반 확립, 자연친화형 축사 조성 확대 분위기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자원 에너지화 확대, 규모화·전업화 영향

■ 소비자의 신뢰와 더불어 발전하는 충남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강조 예상

- 환경위생과 동물복지 실현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자원순환형 소규모축산업 및 전업농 중심의 과학기술적 동물복지 사육환경 동시 진행

② 중기전망(민선6기)

■ 자원순환형 축산경영으로 양질 조사료 수요 증가 및 표준화된 사양관리 중요성 강조

- 자원순환형 축산시스템 인식도 향상 및 지역 내 양질 조사료 수요 증가

- 양질의 조사료 수급은 물론 표준화된 사양관리에 대한 중요성 점차 강조 예상
- 우수한 형질의 종축 개량 및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사회전반적 친환경축산 및 가축질병 중요성 인식 확산

- 도시화, 수입개방, 동물복지 및 허가제 등을 통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유지
- 주기적인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사회전반적으로 친환경축산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개별농장은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해 상시방역체계 돌입에 따른 축사환경관리 노력 경주
- 양질의 축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장 확산

■ 안전한 먹거리 수요 증대와 전문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친환경축산물 소비와 공급 활성화

- 고품질·안전 축산물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산지의 공급시스템 확립
- 농가조직역량 강화를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중요성 점차 강조
- 브랜드계열화사업을 중심으로 브랜드경영주체의 전문유통채널 확보 경쟁 심화

■ 축산물 공동브랜드를 중심으로 고품질·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기반 공고화

-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기반으로서 충남 축산물공동브랜드 확대 및 안정화에 총력
- 브랜드 기본인 사료·혈통·사양관리 통일 등으로 안전하고 질 좋은 축산물 공급

2)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적으로 축종별 전체 사육규모 높은 편⁶⁾

- 충남의 축산농가수는 '90년 134천호, '00년 70천호, '12년 23천호로 약 83% 감소
- '13년 기준 한육우는 392천두(전국 13.4%, 3위), 젓소 80천두(전국 18.9%, 2위), 돼지 1,964천두(전국 19.8%, 1위), 닭 29,710천수(전국 19.6%, 2위)

■ 호당 사육규모는 전국적으로 중간 수준이나 점차 규모화 및 전업화 증가 추세⁷⁾

- '12년 기준 호당 사육규모는 한육우의 경우 19.8두(전국 10위), 젓소의 경우 61.0두(전국 9위), 돼지는 1,716.4두(전국 5위), 닭은 48,095.4수(전국 5위)
- 충남의 한육우 호당 사육규모는 '05년 기준 10.4두에서 '12년 19.8두로 1.9배 증가
- 충남의 돼지 호당 사육규모는 '05년 기준 912.1두에서 '11년 1,716.4두로 1.8배 증가

6) 자료 : 시도별 가축사육 점유율 및 점유순위(2013), 통계청

7) 자료 : 통계연보(2013), 충청남도

■ 가구소득 및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축산물 소비패턴의 변화⁸⁾

- 1인당 육류소비량은 '90년 19.9kg에서 '12년 42.5kg으로 2배 증가하여 큰 추세는 증가
- 최근 5년간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축산물 소비 위축, 일부 품목 구매액 감소 추세

■ 충남은 전국적으로 높은 가축사육규모에 비례하여 높은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율⁹⁾

- '00년 이후 악성 가축전염병 반복으로 축산업 성장 및 양축농가 경제 손실 영향 : 구제역 634호 / 1,553억원(전국 3조4천억원), AI 529호 / 293억원(전국 5,987억원)
- 소 결핵 · 돼지유행성 설사병 등 17여종의 가축전염병 발생
 - 질병발생 두수는 '10년 358,409두(전국 22.5%, 2위), '13년 152,574두(전국 29.8%, 1위)
 - 질병발생 건수는 '10년 288건(전국 13.8%, 2위), '13년 147건(전국 12.1%, 5위)

■ 국제곡물가격 및 유류가격에 따라 축산농가 생산환경 악화, 조사료 이용 부족

- '12년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은 비육우 41.8%, 젖소 56.1%, 비육돈 52.6%, 육계 62%
- 타작물에 비해 낮은 소득으로 높은 수입조사료 의존도, 자급조사료 이용 노력 부족
- 볏짚 제외한 순수재배 사료작물 자급율은 조금씩 향상 중, '11년 31%에서 '13년 37%

■ 축산업 중심지역인 만큼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입지 악화

- 일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과밀사육, 재래식 축사 산재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축산농가가 농촌환경을 저해하는 주원인으로 인식, 주민 갈등 악화
- 농가대상으로 축종별 가축분뇨 민원 및 항의¹⁰⁾는 돼지(37.0%), 산란계(33.0%)로 나옴

■ 사회전반적으로 동물복지 관심 및 수요는 증가하나 현실은 여전히 미흡

- 동물복지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부족과 환경개선 극복의 한계로 호응도는 미흡한 편
- 시설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경제적 이득 저조한 현실, 공감확산 노력 필요
- 친환경 축산인증은 '13년 505호(유기축산 13, 무항생제 492),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인증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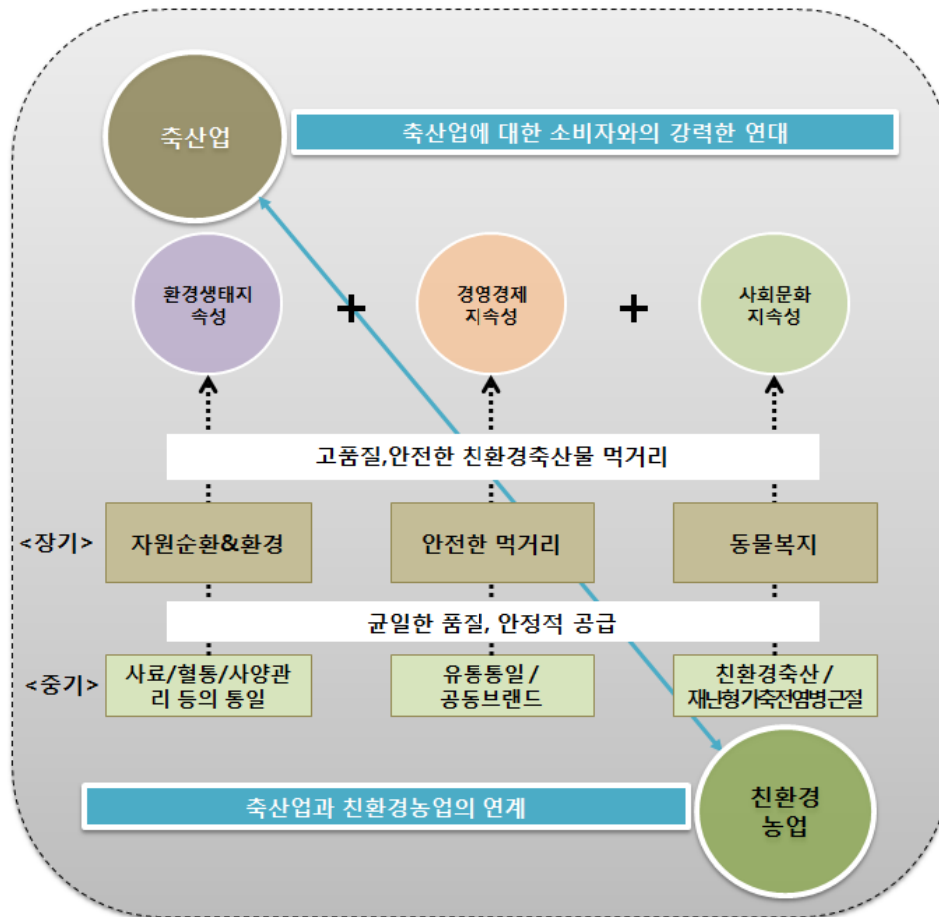
8) 자료 : 농업전망(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자료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www.kahis.go.kr)

10) 자료 : 지인배 외(2014), 친환경축산이 축산물수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p.230.

3) 기본방향

[그림 5-2] 축산업 분야 기본 추진방향



■ 전제조건(기본원칙)

- 친환경농업 분야와 축산업 간 통합 공존과 강력한 연계
-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와의 연대를 통한 신뢰 확보

■ 핵심단어

- 중기 : 사료 · 혈통 · 사양관리 통일, 유통통일(공동브랜드), 친환경축산, 재난형 가축전염병 근절 → 균일한 품질, 안정적 공급
- 장기 : 순환 및 환경, 안전먹거리, 동물복지, 가축질병 청정화 → 고품질 · 안전한 친환경 축산물 먹거리

■ 추진방향

- 중기 : 충남 대표 한육우 광역브랜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3통관리 기반 구축
- 장기 : 환경 · 생태적 지속성, 경영 · 경제적 지속성, 사회 · 문화적 지속성 조건 부합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자연친화형 선진 축산업 육성]

- 시장개방 등에 대응한 친환경·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 축산물 유통·소비기반 확립
-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자원화 추진
-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통한 안전축산 기반구축



[장기 : 자연친화형 선진 축산업 육성(계속)]

- 시장개방 등에 대응한 친환경·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 축산물 유통·소비기반 확립
-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자원화 추진
-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통한 안전축산 기반구축

① 시장개방 등에 대응한 친환경·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아름다운 농장 및 악취없는 농장 만들기

- 악취경감, 경관 등 종합적 환경개선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 조성
-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 (* 민선5기 계속 사업)
 - 축사주변으로 다년생 조경수 식재, 화단 및 꽃길 조성, 축사환경 이미지 개선작업
- 악취 없는 (클린) 농장 만들기 사업(* 민선5기 계속 사업)
 - 악취확산방지 위하여 지중살포 방식 전환가능 기계 및 장비, 축사순환시스템 구축
 - 악취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기술 등 신공법 연구, 컨설팅, 교육, 실천확산
 - 환경 중심의 밀폐탈취 및 악취저감제 시설 지원, 미생물 활성액비 축사 순환시스템 확대, 밀폐형 축분 고속발효기 등
- 자연친화적, 사람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토대

■ 축사시설의 현대화

- 효율적 축산경영과 동물사육환경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낙후시설 정비, 교체
- 노후축사시설의 정비 및 리모델링
 - 경영비 절감과 사육환경 개선 위한 노후화된 축사시설, 농장정비, 장비교체 지원

- 축종별, 농가별 여건에 맞는 현대화시설 지원, 적정사육두수 준수 지도 병행

■ 지역 내 우수 종축 혈통 관리 및 보존

- 지속적인 우수종축 혈통 관리 및 보존활동을 통해 고품질·균일 품질육 공급
- 정액선정위원회 설립 및 우수정액 기준 마련
- 축협, 도청, 지자체,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주축으로 구성
- 우수한 정액 선별 기준 마련(질병검사, 지방 등)
- 다양한 후보혈통 등록·선발·확보 사업
- 혈통의 등록 및 개량사업, 브랜드에 맞는 다양한 후보혈통 선발, 확보, 후대검증
- 수정란 이식사업
- 엄선된 모우(모돈)에서 난자를 채취 후 정액선정위원회에 의해서 선별된 정액으로 인공 수정 실시,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이식하여 우수 혈통을 이어나가는 사업
-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초 마련 및 축산업의 토종 가축 보호활동 연동

■ 지역특화 우수종축 인증제도 활성화

- 지역 내 우수종축 혈통 인증제 절차를 거쳐서 지속적인 우수혈통 개량 및 보존
- 지역특화 우수종축 인증제 시행
- 지역에서 우수종축 등록 장려, 지역특성을 감안한 우수종축에 대해 인증제 시행
- 지역특화 우수종축 발굴대회 개최
- 브랜드 경영체 혹은 개별농가의 우수종축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발굴대회 개최
- 지역 특화된 우수종축 지속적인 개량과 보존 가능, 참여농가 중요성 인식제고

■ 균일한 품질 확보를 위한 통일된 사양관리

- 지역특성에 맞는 종축의 품질균일화를 목표로 통일된 사양관리 체계 확립
- 사료급여 체계 통일
- 양질 조사료의 우선 급여, 시기별 사양관리 기준(입식기·육성기·비육전중후기 등)
- 출하월령 통일
- 브랜드 컨셉과 육량, 육질을 감안해 회원농가의 출하월령 조정 작업
- 품질균일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
- 충남 지역특성 반영한 혈통통일, 사료통일, 사양관리 통일 등 기준 정립, 매뉴얼작성
- 사료성분, 사양방법, 사육형태 및 규모와 시설, 위생상태 기준
- 사양관리 통일로 인해 공동브랜드와 연계하여 균일한 축산물 품질확보 가능

■ 동물사육여건 개선 프로젝트

- 동물복지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친환경적 생산방식 도입하여 사육여건 개선
-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확충
 - － 동물의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육여건 개선한 인증농장 순차적도입
 - － 축산업허가제를 전업농 대상으로 허가 추진('15년 준전업규모에서 '16년 소규모)
- 동물복지인증 생산 및 유통시설 개선
 - － 사육·운송·도축까지 동물복지형 축산물 먹거리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18년까지 4개소)
 - － 최적 사육환경(온도, 환기, 습도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시스템 시설 구축
- 깨끗한 친환경 및 동물복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선진형 충남축산업 실현

②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 중·대규모 사료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자급율 향상
- 고품질 조사료 생산확대, 품목 다양화, 품질 향상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 조사료 이모작 생산체계 구축(동계 논 사료작물 재배 확대)

- 유희지인 동계 논을 활용한 양질의 사료작물 재배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
- 동계 논 재배지는 비료성분 부족으로 생산량 저하되기에 비료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 사료작물 종자·사일리지 제조·조사료 장비지원 등 생산기반 구축

- 고품질 조사료 면적 확대 및 조사료자급률 향상 위한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18년 90천 ha)
- 경축농가 간 연계 강화 및 사료가치 향상 위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18년 620천 톤)
- 고품질 조사료 공급을 위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18년 100개소)

■ 발효사료 생산 및 물류시스템 구축

- 사료기호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는 발효사료 이용을 통해 경축연계기반 조성
- 발효사료 기반 구축
 - － 발효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공장 및 물류시설 지원, 사료품질 향상기술 지원
- 발효사료 원료작물 재배활성화
 - － 맥류, 보리, 고구마, 감자, 옥수수, 채종박, 대두박, 미강, 당밀, 톱밥, 왕겨 등 원료작물 재배
 - － 다양한 발 재배작물 구입 지원, 발효사료로서 활용, 적합한 기술보급 등

- 발농업 작물을 사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고품질육 출하 확대

③ 축산물 유통·소비기반 확립

■ 농장에서 식탁까지 신뢰받는 한육우 광역브랜드¹¹⁾ 육성

- 공동브랜드 기본조건은 균일한 품질,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통한 생산자-소비자간 신뢰
- 균일한 품질을 위해 사료 관리, 사양관리, 혈통 관리 실시, 브랜드 경쟁력 확보
- 공동브랜드 통합관리시스템(우수형질 입식, 컨설팅, 수의서비스, 사양관리, 인공수정, TMR사료 공급, 이력전산화, 퇴비화, 합동방역 활동) 및 축산물 브랜드마케팅 전략 수립

■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구축

- 우수혈통 확보, 차별화된 사양관리, 가공 및 유통단계까지 일괄 프로그램
- 종축별 사육단계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 생산이력정보시스템 구축
- 종축별 축산농가 조직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품질관리 컨설팅
- 다양한 부위의 포장제품화, 상품구색의 다양화 위한 가공 및 유통인프라, 유통경로 확보
-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을 위한 도축, 가공 및 유통시설 HACCP 인증 확대

■ 브랜드사업단 육성 및 역량강화

- 브랜드사업단 사업규모 결정 등 구체적 마케팅전략 설정(시장, 대상, 시장점유율 등)
- 브랜드사업단 주력사업 결정(고급육 계열화, 번식우 소유형 계열화, 번식계약 계열화 등)
- 안정적 물량공급을 위한 참여농가 조직화 구성과 기준 마련, 계열화사업으로 기반 확보

④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자원화 추진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저장조 확충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을 위한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확충
-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 축종별 특성에 맞는 상시 퇴액비처리 체계 구축, 정화처리시설 신규 및 개보수 지원
- 액비저장조 및 액비유통센터 지원
- 양질의 액비 생산과 액비이용 비수기 대비 저장가능 시설 지원
-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중심의 액비저장조 또는 액비유통센터시설 지원
- 고품질 퇴액비 생산이용을 통한 친환경농업 연계육성, 자원순환 극대화 도모

11) 주 : 브랜드의 전제조건은 첫째, 균일한 품질, 둘째, 위생과 안전, 셋째,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안정적인 물량 공급, 넷째, 소비자신뢰확보를 위한 생산이력제 및 인증제 실시 등

■ 가축분뇨 순환시설을 통한 에너지화 사업

- 가축분 고형물을 대규모로 연료 상품화 할 수 있는 시설·장비 지원 필요
-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 공동생산·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유기성 폐자원 이용, 바이오에너지 공동생산시설 구비
 - 에너지 소비로 남은 혐기소화액은 다시 액비화하여 자원순환
- 가축분 고형연료 상품화시스템 구축
 - 축분 고형물을 대규모로 연료상품화(축분탄)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지원
- 축산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축산업에서의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

⑤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통한 안전축산 기반구축

■ 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근절로 질병 청정화 달성

-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100%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 가금류 사육농장 상시예찰과 철새 등 유입요인에 대한 차단으로 AI 비발생 유지
- 재난형 가축전염병에서 자유롭고, 국가적 경쟁력이 있는 안전축산 기틀 조성

■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방역시스템 구축

- 「차단·예찰·소독·검사 등」 현장 중심의 연중 상시방역체계 가동
 - 가축전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등 중점관리체계 가동
- 실제적인 훈련과 효율적 교육 강화를 통한 방역 주체별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 형식적인 CPX, 방역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실에 부합한 실질적인 훈련전개
- 가축질병제로운동
 - 충남의 가축질병발생 제로운동의 대대적 확산, 농가인식 교육 확대

■ 가축질병 선진관리 체계구축 및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로 국민보건향상

-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으로 선진국형 가축질병 체계구축
 - 찾아가는가축질병관리제, 소 진료비지원으로 농가부담완화 및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기반 구축
- 농가방역기준 정립을 위한 세부방역실시요령 도입, 농장 소독방역시설 설치
 - 축종별, 규모별 「방역시설 표준모델, 농가 방역기준」 개발·보급
 - 농장 소독방역시설 설치, 방역매뉴얼에 따른 상시 교육과 훈련의 이수
- 브랜드사업단을 통한 상시방역시스템 매뉴얼 가동

- 브랜드사업단(혹은 계열화 농가조직) 중심으로 농장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 계열사와 소속농가 간 자체 방역프로그램 마련해서 시행 의무화, 표준계약서 마련
 - 상시방역관리지구 선정, 지도·점검, 예찰·검사활동 상시화 등 매뉴얼 가동
 - 한국형 One-Health* 모델개발,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통제체계 정립
 - 농장검사 및 양성축 살처분 등 질병별 맞춤형 근절대책 추진
 - 시설정비를 통한 경영비용 절감 달성, 사육환경 개선 통한 가축질병 최소화
- * One-Health :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의존 관계로 '하나의 건강'으로 이뤄진다는 개념

3.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및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2030년)

■ 산림자원을 이용한 교육, 복지, 힐링, 치유 등 새로운 분야의 활용성 증진 전망

- 장기적으로 산림자원은 산림자원 자체보다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서비스산업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교육, 복지, 힐링, 치유 등의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수요와 적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② 중기전망(민선6기)

■ 규제 중심의 산림정책에서 활용 중심의 산림정책으로 변화 전망

- 현재 규제 중심의 산림정책에서 탈피하여 산림자원의 경제적 활용과 가치를 제고하는 형태로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이 전환될 전망이다
- 따라서 기존의 소극적인 산림정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요구됨

■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부각 전망

- 농업과 산림의 융복합화를 통해 산촌지역의 소득증대 요인이 마련될 뿐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단적으로 3농혁신 1기에서 추진한 희망산촌만들기사업의 경우, 산촌지역 주민의 정책효능감이 높을 뿐 아니라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2)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해진 산림수요에도 불구하고 사유림 위주로 정책추진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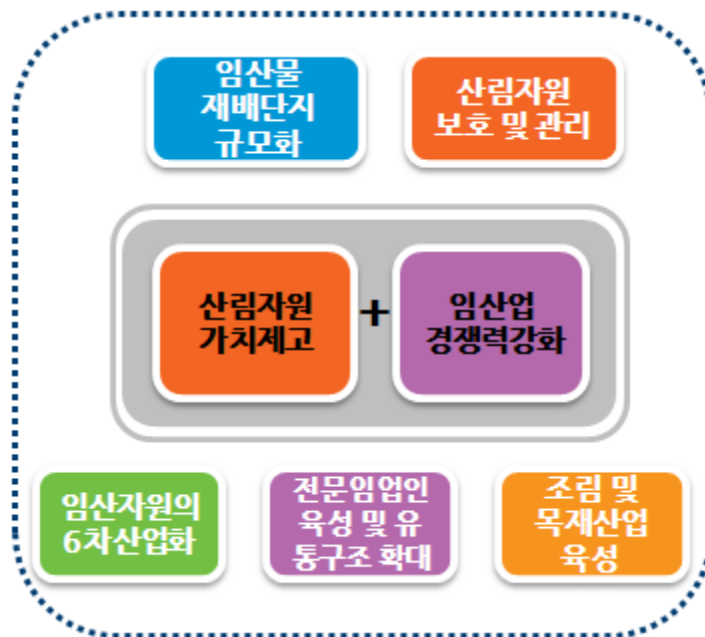
- 다양해지는 산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휴양 및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각종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사유림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부재산주, 산주의 관심 및 참여 저조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산림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임산물 생산규모의 영세화 및 유통여건 약화

- 임산물 생산규모가 영세화하고 생산지역이 분산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등 생산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 전문유통체계 등의 부재로 임산물 유통여건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한중 FTA 등으로 시장경쟁력이 치열할 것으로 우려됨

3) 기본방향

[그림 5-3] 임업 분야 기본 추진방향



■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 산림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산림자원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산림자원의 활용목적에 맞게끔 차별화된 조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울러 산불 및 산림재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방사업 및 임도 등에 대한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촌마을을 중심으로 임산물 재배단지의 규모화와 임산자원의 6차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리고 유기농 임산물로 전환과 전문임업인의 육성 및 차별화된 유통구조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 경쟁력 있는 임산물 및 전문임업인 단체 육성
- 산림병해충 등 산림자원 보호 강화
- 산림휴양 문화 조성 관리



[장기]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계속)
- 경쟁력 있는 임산물 및 전문임업인 단체 육성(계속)
- 산림병해충 등 산림자원 보호 강화(계속)
- 산림휴양 문화 조성 관리(계속)

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중/장기)

■ 충남 100년의 명품숲조성 및 숲가꾸기사업

- 경제수종, 큰나무 경관조림, 지역특화림 조성 등을 추진하는 100년 명품숲조성사업을 통해 목재산업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함
- 아울러 산림휴양시설(예: 자연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유아숲체험원 등)과 숲길(예: 내포문화숲길, 소규모 등산로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산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조경수 식재 등을 통해 목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함
- 한편 기존의 물량 위주의 사업추진에서 탈피하여 품질 향상 위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고, 산채재배 등 소득복합형 숲가꾸기를 병행해 나가도록 함

■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자재로 전환

- 조림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잔목 등의 부산물을 이용해 목재펠릿으로 공급해 각종 시설하우스의 대체에너지로 보급·확대해 나가도록 함
- 톱밥 등을 활용해 축산폐수정화 및 유기질비료를 생산함과 동시에 목탄을 생산해 친환경 비료로 공급하도록 함

② 경쟁력 있는 임산물 및 전문임업인 단체 육성(중/장기)

■ 희망산촌마을만들기의 지속적 추진 및 추진방식 개선

- 희망산촌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산채 및 약초 등의 임산물의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함
- 한편 기존의 사업을 통해 성과가 높은 마을 혹은 임업인에게는 선택적으로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예냉시설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도록 함
- 아울러 개별 시군별로 기술센터 및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해당 시군에 맞는 산채작물의 선정과 지역적으로 차별성이 있는 산채종자를 발굴해 나가도록 함

■ 임산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추진

- 임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임산업에 있어서도 6차산업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임산물의 가공을 위해 필요한 소규모 공동가공시설의 설치 등과 함께 임산업과 치유·힐링 프로그램의 연계(예 : 농가레스토랑의 산채식단 등)하도록 함
- 이와 더불어 임산물의 6차 산업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함

■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묘목 공급기능 강화

-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지역적으로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산업과 묘목 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음
- 따라서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관련자재 및 묘목 등을 지역 내에서 공급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타 지역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유기농 임산물의 전환 및 재배단지의 규모화

-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밤, 표고, 은행, 호두 등을 중심으로 유기농 임산물로 전환(유기농 작목반 구성 등)해 나가고,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임산물을 발굴·보급해 나가도록 함
- 한편 재배단지를 집단지화 및 규모화 함으로써 재배단지의 상징성을 갖도록 하고, 재배단지 자체를 체험농장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체험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함

■ 전문임업인 단체 육성 및 유통구조의 확대

-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10개의 임산물을 중심으로 전문임업인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그리고 10개의 임산물은 개별적으로 별도의 팀으로 독립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함
- 현재 지역농협 혹은 개별 농가에 의해 유통되는 구조적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전문임

업인이 독자적인 유통구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지역내 산림조합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③ 산림병해충 등 산림자원의 보호 강화(중/장기)

■ 산불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의 강화

- 산불상황실 활용을 통해 산불대응 및 감시역량을 강화함. 이를 위해 산불감시인력과 시스템을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함. 또한 감시 장비의 교체 및 현대화를 통해 입체적 감시망을 구축하도록 함
- 아울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병해충의 생태특성에 맞추어 실효성 있는 적기 예보제를 시행하도록 함. 그리고 일반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에 대해서는 지역책임제를 도입하도록 함

■ 사방사업 대상지 실태조사 및 DB구축

- 우선적으로 황폐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현지실태조사와 DB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DB 구축 이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타당성평가를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간선임도, 작업임도, 기설임도의 유지·보수

- 임산업의 지속적으로 육성을 위해서는 간선임도, 작업임도, 기설임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지역별, 연차별로 간선임도, 작업임도, 기설임도에 대한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임

④ 산림휴양 문화 조성 관리(중/장기)

■ 도시숲 확충과 산림경관의 보전 및 관리

-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색 생활공간 확충, 생활권 녹지확보를 위한 학교숲 조성, 사회적 약자층 기능에 맞도록 이동성을 고려하여 복지시설 나눔의 숲 조성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생애 주기별 맞춤형복지 서비스의 확대

-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 수준 제고, 치유환경을 고려한 치유의 숲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4. 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2030년)

■ 충남 어가 수 및 어업인구 증대 전망

- 충남 어가 수: 13천 호, 어업인구 30천 명 달성

■ 충남 4대 명품수산물의 생산량 및 매출액 증가 전망

- 바지락(현재 9,200톤 → 16,000톤), 갯벌참굴(현재 8,300톤 → 13,000톤), 김(현재 13백만 속 → 20백만 속), 해삼(1,500만 마리 → 3,500만 마리)
- 충남 4대 명품 수산물의 대형 판로망 20개소 개척
- 갯벌참굴의 수출액 현재 11억 원에서 50억 원 달성, 해삼의 중국 수출액 50억 원 달성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자율관리공동체 확대 및 불법어업 감소 전망

- 현재 자율관리공동체 103개소를 150개소까지 확대 (충남 모든 어촌계로 확대)
- 기존 자율관리공동체의 “졸업” 공동체 유도 (50개소 이상)
- 불법어업 적발 건수 현재의 50% 이상 감소

■ 어촌특화마을 30여 개소 육성

- 충남 어촌의 맛, 멋,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어촌특화마을 30여 개소 육성
- 연간 매출액 90억 원 달성

② 중기전망(민선6기)

■ 충남 어가 수 및 어업인구 증대 전망

- 충남 어가 수: 11천 호, 어업인구 25천 명 달성

■ 충남 4대 명품수산물의 생산량 및 매출액 증대 전망

- 바지락(현재 9,200톤 → 13,000톤), 갯벌참굴 (현재 8,300톤 → 10,000톤) 김(현재 13백만 속 → 16백만 속), 해삼(1,500만 마리 → 2,500만 마리)
- 충남 4대 명품 수산물의 대형 판로망 5개소 개척
- 갯벌참굴의 수출액 현재 11억원에서 향후 30억 원 달성, 해삼의 중국 수출 교두보 확보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자율관리공동체 확대 및 불법어업 감소

- 현재 자율관리공동체 103개소를 120개소까지 확대
- 기존 자율관리공동체의 “졸업” 공동체 유도
- 불법어업 적발 건수 현재의 20% 이상 감소

■ 어촌특화마을 10여개소 육성

- 충남 어촌의 맛, 멋,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어촌특화마을 10여개소 육성
- 연간 매출액 20억원 달성

2) 현황 및 문제점

■ 어촌의 과소화,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어업기반 위축

- 전국 어가 수: 약 6만호(2004년과 비교하여 13만 호 감소), 어업인구: 약 147천 명 (2004년과 비교하여 63천 명 감소), 65세 이상 비중: 29.9%(2004년과 비교하여 12.9% 증가), 충남 어가 수: 약 9천 호(2004년과 동일), 충남 어업인구: 약 21천 명 (2004년과 비교하여 약 5천 명 감소)

■ 어업자원 지속적인 감소 및 해양 오염, 연안어업에서 갈등 심화

- 지속적인 수산자원 감소 및 유류피해와 같은 해양 오염발생
- 기상이변에 따른 적조, 녹조 발생 및 수온상승에 따른 아열대성 해양환경으로 변화
- 서해안에 새로운 어종(멸치, 오징어 등) 출현에 따른 업종 간 갈등 격화
- 인근 시·군, 지역 어촌계 간의 어업권을 둘러싼 갈등 심화

■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수산물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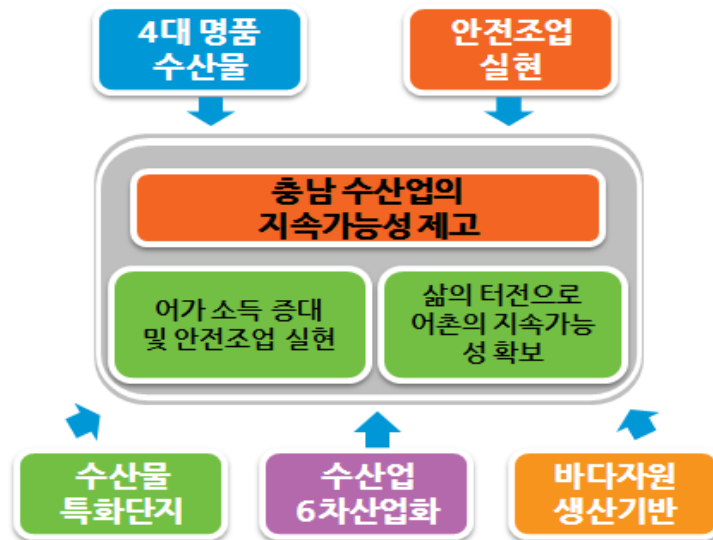
- 수산물의 유통마진은 약 55%에 해당하여 어가 수취가격이 낮은 매우 비합리적인 구조
- 소비자의 수산물에 대한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요구 심화

■ 다발성 FTA 체결과 TPP,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국내 수산물의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 수입 수산물 금액: 약 22억 달러 (2004년에 비해 약 60% 상승)
-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패류, 어류의 국내 시장경쟁력 약화 우려

3) 기본방향

[그림 5-4] 수산업 분야 기본 추진방향



■ 어가 소득 증대 및 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 충남 수산물 4대 명품화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
- 수산물 특화단지, 6차산업화 추진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해상 조업 실현

- 수산자원 회복과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안전조업을 통한 어업인이 행복한 삶의 터전 실현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4대 명품 수산물 육성 및 브랜드화
- 섬마을 중심 수산물 특화단지 조성
- 안정적인 바다자원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전조업 실현
- 수산업 6차산업화의 전략적 추진



[장기]

- 안정적인 바다자원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전조업 실현
- 수산업 6차산업화의 전략적 추진

① 4대 명품 수산물 육성 및 브랜드화(중기)

■ 충남 4대 수산물에 대한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의 계열화

- 충남 수산물 4대 품목 (바지락, 김, 해삼, 참굴)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통합 (광역) 브랜드 개발
- 대형 외식산업 및 유통업체, 수출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유통망 확보 및 소비촉진
- pop 광고, 시식회, 현장견학 등의 행사를 통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

② 섬마을 중심 수산물 특화단지 조성(중기)

■ 양식섬을 활용한 기르는 어업 확대

- 안정적인 종묘 생산을 위한 전자기지로서 양식섬 조성하고, 전문 수산양식기술학교 건립 및 수산인재 양성

■ 해삼 특화섬 조성

- 한중 FTA의 대응방안으로 해삼의 생육조건이 맞는 도서를 특화섬으로 지정하여 육성
- 1차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과 체험 ·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단지 조성

③ 안정적인 바다자원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전조업 실현(중/장기)

■ 안정적인 바다자원 생산기반 확대

- 바다목장화 사업, 지천 100리 금강목장화 사업,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충남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 운동 전개
- 경쟁력 있는 우수 품종 발굴 및 종묘생산기반 구축

■ 안전조업 실현

- 안전조업을 위한 대 어업인 교육 강화
- 노후화된 어선, 부실한 안전장비 등에 대한 단속 및 지도
- 해양사고에 대비한 道 차원의 대응 매뉴얼 개발

④ 수산업 6차산업화의 전략적 추진(중/장기)

■ 어촌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어촌의 지리적, 문화적 여건에 맞게 6차산업화 추진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
- 생산, 가공, 관광 · 유통의 융복합화되는 특화마을 조성

■ 연안 수산기업과 연대를 통한 6차산업화 실현

- 수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어촌계와 지역 내 가공업체, 유통업체의 연계를 통한 win-win 사업 추진

■ 수산물 로컬푸드 추진

-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전개
- 충남 통합온라인 쇼핑몰 「농사랑」을 지역 수산물 판로로 적극 활용
-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광역단위 수산물 직거래 체계 구축

5. 지역맞춤형 미래농업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2030년)

■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변화의 심화 및 미래농업 대응기술의 필요 전망

-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기술 및 돌발 외래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생산을 안정화해 갈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식량 자원의 탐색 및 기술 개발 필요

■ 세계 식량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 변동성 확대 및 식량안보의 중요성 증대 전망

- 장기적인 식량의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씨앗산업 육성 및 보존 노력이 필요함

■ 녹색기술에 대한 전략적 집중 및 바이오 경제의 성장 전망

-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 저탄소 녹색농업기술에 대한 관심 및 이슈 증가
- 20세기 후반부터 생명공학과 바이오 기술을 앞세운 바이오경제가 본격화 됨

② 중기전망(민선6기)

■ 현장중심의 실용 농업생산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급선무

- 친환경 농업기술에 대한 현장지원 및 교육, 친환경 농자재의 개발 필요
- 원예작물 및 인삼, 특용작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위한 기술 지원 필요

■ 현장 참여형 농업인의 발굴

- 농가경영 기초자료에 대한 DB구축을 기본으로 영농기술을 포함하는 경영 자체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3농혁신 현장 참여형 농정실천 농업인을 발굴

2) 현황 및 문제점

■ 기후변화에 따라 온도상승, 이상기상 발생, 생물종 변화 등 농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대응 연구 미흡

- 기후변화 적응과 재해대응을 위한 체계적 기술개발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중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친환경 재배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적용기술은 농가별로 차이가 많아 기술체계의 정립 및 관련 농자재의 개발이 필요함

- 친환경농산물 생산액 전망 : ('10)3.6조 → ('15)5.3조 → ('20)6.6조 원 전국대비 공선 출하조직 30%, 통합마케팅 조직 20% 참여율 향상
- 천적, 미생물 등 활용기술 개발 및 친환경 농업기술의 조기 현장 정착

■ 국제식물신품보호동맹(UPOV)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로열티 절감을 위한 국내 품종의 지속적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됨

- 충남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수입품종을 대체할 경쟁력 있는 신품종개발을 통한 종자 強道 실현

■ 현재 농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용기술 개발과 더불어 미래농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선행적 연구 필요

- 생명공학, 식물공장, 유용곤충 활용기술 개발

■ 농업현장에서 3농혁신 정책을 실천하고 주위에 파급시킬 수 있는 핵심 경영체 발굴 및 육성 필요

- 강소농 육성 및 품목별 협업실천사례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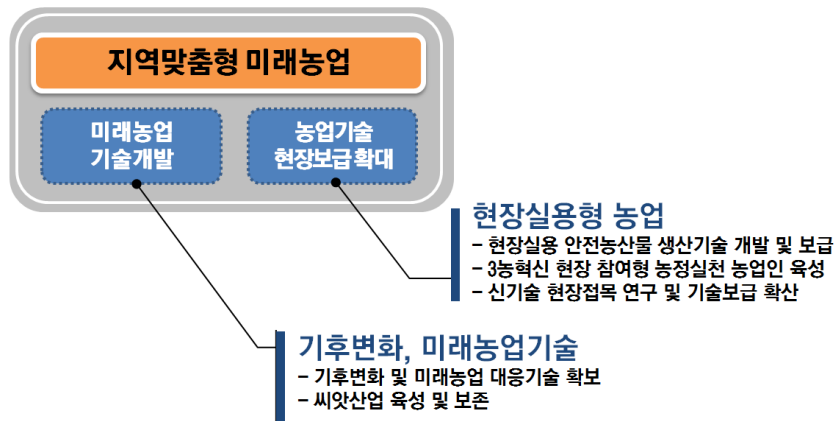
■ 그동안 영농활용기술은 꾸준히 개발되어왔으나 농업현장 실용화율이 낮아 농업 발전에 실질기여도는 낮았다는 외부의 평가

- 특화작목 중심 현장실증 강화 및 R&D에 비즈니스 포함한 R&BD¹²⁾ 개념 도입

12)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는 사업화(실용화)를 염두에 두는 4세대 R&D 방법으로 연구의 초기단계부터 사업성을 검토하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단계마다 연구방향을 조정해 나감으로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최근 기술선진국에서 적극 시도되고 있음.

3) 기본방향

[그림 5-5] R&D분야 기본 추진방향



■ 기후변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농업 기술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과학영농의 미래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씨앗산업 (신품종 개발 등)을 육성

■ 3농혁신 실천 지향적 현장실용형 농업 기술 및 농업인의 육성

- 3농혁신 현장 참여형 농정실천 농업인을 발굴·육성하고, 신기술 현장접목을 연구하고 기술보급을 추진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기후변화 및 미래농업 대응기술 확보
- 현장실용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
- 씨앗산업 육성·보존 추진
- 3농혁신 현장 참여형 농정실천 농업인 발굴
- 신기술 현장접목 연구 및 기술보급 확산



[장기]

- 기후변화 및 미래농업 대응기술 확보(계속)
- 씨앗산업 육성·보존 추진(계속)

① 기후변화 및 미래농업 대응기술 확보

■ 기후변화 대응기술 및 돌발 외래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

- 재배법 개선, 新작물 도입가능성 검토, 병해충 예찰망 구축, 방제법 개발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15개소

■ 생명공학 이용 육종효율 제고 및 식물공장 종합관리기술 개발

- 딸기, 토마토 주요특성 분자마커 개발, 분자마커를 이용한 품종 계통 육성
- 자연광 병용 식물공장 내 엽·과채류 생육특성 구명, 연중생산 매뉴얼 개발

■ 유용곤충 자원탐색 및 산업화기술 개발

- 분변토 퇴비화기술 개발, 곤충 사육기반 구축, 유기성 폐자원 분해 유용곤충 탐색

■ 충남 주산작목 가공기술 개발 및 ICT 융복합 경영기술 개발

- 인삼 전처리 및 포장방법개선, 충남특산물 상품화 지원, 전통식품 품질고급화
- ICT 융복합 성공모델 발굴, 성공사례 확산

② 현장실용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 천적, 트랩식물, 근권미생물 활용 기술 및 친환경 농자재 선발·개발
- 친환경 기술 현장지원 및 교육,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 조성 기술 및 작물 양분관리기술 개발

- 유용미생물 연구 및 지역 특성화사업 추진, 생산단계 유해요소 모니터링
- 주요작물 양분관리기준 설정, 유기농경지 관리기술, 종합검정실 기술지원

■ 식량·원예작물 FTA 대응기술 및 화훼류 수출상품화 연구

- 충남 브랜드쌀 품질관리 및 조사료 생산 연구
- 채소 경영비절감 및 품질향상, 과수 생리장해 경감, 화훼류 수출 증진

■ 인삼, 특작 생력화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 인삼 연작장해 경감, 약용작물 생산 안정화, 버섯 저가배지 개발 등

③ 씨앗산업 육성·보존 추진

■ 종자전쟁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보급 및 해외수출 추진

- 용도별 기능 강화 및 로열티 절감 품종 육성
- 우량품종 해외 품종보호출원 및 수출 추진

■ 국내 개발품종 조기 농가확산 및 인공씨감자 보급

- 국내 개발품종을 중심으로 우량 원묘 생산·보급
- 우량씨감자 농가 보급 : '16년 이후 농가 소요량 50% 공급

■ 소비 트렌드 변화 및 미래 경쟁력 강화 선대응 실용화기술 시범보급

- 원예작물 가치증진 시범, 신 소득작목 및 신품종 확산
-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 실내외 텃밭, 학교학습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④ 3농혁신 현장 참여형 농정실천 농업인 발굴

■ 농가경영 기초자료 및 진단·처방 등 DB구축 관리

■ 강소농 육성 업무추진 기준 확립을 위한 현장 활용 매뉴얼 작성 보급

- 농가선정 기준 : 전업농 미만의 중소규모 가족농 중 자율의지 높은 농가
- 농업경영정보시스템(AMIS)을 통한 일괄 관리 효율화 도모
- 현장 컨설팅을 통한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지원 추진업무 개선 등 피드백 관리

■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컨설팅 및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 연도별 강소농 신청자 기본·심화·후속교육 추진(시군농업기술센터)
- 민간전문가 30멘토 지정 개별 중점지도 : 실천노트 작성법, 경영개선 교육 등
- 경영개선 코치 양성 기본 및 심화과정 운영(농촌진흥청과 연계 추진)

■ 경영컨텐츠 개발 보급 지원 : 경영분석 프로그램, 경영컨설팅 핸드북 등

■ 강소농 자율 실천학습 모임 지원

- 후속교육 후 품목기반 자율모임체의 개별 프로젝트 및 조직화 지원

■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과학영농시설·장비 및 운영 지원

- 토양 및 병해충 종합검정장비, 조직배양실, 미생물배양실, 농업인 교육관 등

⑤ 신기술 현장접목 연구 및 기술보급 확산

■ 자체개발 신기술에 대한 현장접목 연구

- 우수 연구결과 선정(10개 내외/년) → 농가포장 현장연구 → 기술보완 및 확산

■ 식량작물 비용절감 및 생력재배 시범사업 추진

- 벼 생산비 절감 및 발작물 생력재배 시범 : '14년 국비 2종, 도비 3종

■ 원예작물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현장실용기술 시범 보급

- 고품질 : 품질 표준화 설정, 과학적 양·수분관리 → 4종 19개소
- 비용절감 : 냉·난방 에너지절감, 경영비절감형 작형(국화+프리지어) 확대 → 5종 19개소

■ 축산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 안전축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기술 조기 확산 : '14년 국비 20종, 도비 15종
- 충청남도에 맞는 사료작물 재배 확대, 자연친화·자원순환형 축산기술 보급

제2절 유통혁신

1. 산지조직화 · 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2030년)

■ 견실한 경쟁력 있는 공선출하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등장 전망

- 전국대비 공선출하조직 30%, 통합마케팅 조직 20% 참여율 향상

■ 충남 대표 원예브랜드 「충남오감」의 위상 제고 전망

- 「충남오감」 브랜드의 1,000억 원 이상 매출 확대
- 전략품목의 지속적이 발굴을 통한 전략품목의 시장 점유율 50% 이상 확대

■ 충남 통합온라인 쇼핑몰 농사량의 대외 경쟁력 확보

- 농사량 쇼핑몰 매출액 300억 원 달성, 참여농가 매출액의 70% 이상 담당
- 온라인 소매점의 역할에서 지역 콘텐츠 발신의 역할로 전환

■ 광역 로컬푸드의 허브로서 천안농산물도매시장 육성

- 지역 농산물의 순환물량을 전체 취급물량의 50%까지 확대

② 중기전망(민선6기)

■ 견고하고 내실있는 공선출하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양성

- 공동선별·출하 조직 50개, 통합마케팅 조직 12개 육성

■ 광역 원예브랜드 「충남오감」의 시장 경쟁력 확보

- 대형 소비처와의 교섭력 강화를 통한 「충남오감」의 판매액 300억 원 이상 달성

■ 충남 통합온라인 쇼핑몰 농사량의 안정적 정착

- 농사량 쇼핑몰 매출액 50억 원 이상 달성, 참여농가 매출액의 30% 이상 담당

■ 현대화된 시설로 천안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 강화

- 지역 농산물 순환물량을 전체 취급물량의 30%까지 확대

2) 현황 및 문제점

■ 충남의 공선출하조직 및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율 저조

- 전국대비 공선출하조직 18%, 통합마케팅 조직 11%

■ 계획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광역 산지유통 정책

- 현재 시·군 공동브랜드 및 산지유통센터가 난립되어 유통정책의 역량 분산 초래
- 충남 대표 브랜드 실증으로 시장경쟁력 약화 및 대형 소비처와의 교섭력 약화

■ 천안농산물도매시장의 건물 노후화, 공간 협소화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기능 약화

- '95년 개장 시 천안시 인구 30만 명 기준으로 설치되어 현재 인구 61만 명의 규모에 비하여 노후화되고 협소함
- 다양한 시장외 유통의 활성화로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 축소

3) 기본방향

[그림 5-6] 유통분야① 기본 추진방향



■ 체계적인 생산자 조직을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 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한 공선출하조직 및 통합마케팅의 생산자 조직 집중 육성
- 품질관리, 상품개발 등의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산지 인력 양성

■ 경쟁력 강한 충남 브랜드 육성 및 체계적인 유통계열화 실현

- 경쟁력 있는 광역브랜드 육성을 통한 충남 브랜드의 위상 제고
- 시장유통과 시장 외 유통의 적절한 공존을 통한 효율성 증대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산지 중심의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 광역브랜드 중심 유통계열화 선도



[장기]

- 산지 중심의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계속)
- 광역브랜드 중심 유통계열화 선도(계속)

① 산지 중심의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중/장기)

■ 산지(지역·광역)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선·공출 조직육성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의 지속적인 추진
- 농가조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 경영,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농가조직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전문 컨설턴트 파견을 통한 자문 실시
- 도내 농가경영 데이터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농가 관리

■ 산지 유통 전처리시설 및 작업단 강화

- 산지 유통시설의 전처리시설 강화를 통한 소비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
- 유통시설 작업단 구성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② 광역브랜드 중심 유통계열화 선도(중/장기)

■ 충남오감의 경쟁력 강화

- 원예 브랜드 「충남오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프로모션(pop홍보, 소비행사 등) 전개
- 대형 소비처와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품목 선정 또는 철회
- 상품 경쟁력(선도, 품질 등) 강화를 위한 산지조직 교육 및 관리 강화

■ 통합온라인쇼핑몰 운영체계 구축

-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전개(인터넷·SNS, 농촌방문행사 등)
- 판매 상품에 대한 품질기준 제정 및 안전성 검사 실시
- 농가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 온라인 쇼핑몰 운영

■ 천안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 노후되고 협소한 도매시장을 증축·리모델링하여 기능 제고
- 로컬푸드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의 대량 수급처로서의 역할 강화(천안, 아산, 당진 등 충남 북부권 중심)

2. 지역농식품의 프리미엄 시장 개척

1) 여건전망

■ 지역산 농식품 및 외식산업 규모 증대, 천연식자재 등 식재료 중요성 인식 확산

- 1인가구, 노인가구 등 증가로 외식산업 규모는 점차 증대, 지역산 농식품 관심 증가
- 지역산 농산물로 만든 천연조미료 및 천연소스 식재료 중요성 부각, 고부가가치 전망

■ 소득양극화에 따른 소비패턴 양극화 속에서 최고급 프리미엄 상품 선호 증가

-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득양극화 추세 심화, 동시에 농식품 소비패턴 양극화 가속 추세
- 지역에서의 생존전략은 기존 관행유통방식에서 벗어나 최고급 농식품 이미지로 승부

■ FTA, TPP, 쌀관세화 등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농산물의 내수 및 수출 공략 부각

- 가격경쟁력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수입개방 파고에서 품질경쟁력 승부
- 오히려 방어전략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전략으로서 지역산 최고급 상품으로 홍보

2) 현황 및 문제점

■ 충남의 경쟁력있는 주요 농산물¹³⁾을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 쌀, 수박, 멜론, 토마토, 딸기, 6쪽마늘, 쪽파, 깻잎, 양송이, 인삼, 밤 등 부가가치 미미
- 1차적인 농산물 원물공급 체계를 뛰어넘어 융복합화한 상품으로 재탄생하는 계기 필요

■ 충남의 주요 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한 내수시장 차별화전략 미흡

- 내수시장 접근 중심의 기존 관행 유통전략(대형유통업체 발굴)과 차별화 전략 구사 필요
- 내수 상류층 10% 공략할 충남지역의 최고급 농식품 개발, 외식상품 메뉴개발 및 보급

■ 수입개방에 대비한 충남의 주요 농식품 외수시장 공격전략 전무

- 수입개방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하여 상대수출국의 상류층 소비자 공략
- 충남산 최고급 농식품 개발, 최고급 프리미엄 이미지로서 수출 및 홍보전략 구사 필요

■ 전국 수출입 규모에서 충남은 임산물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타품목은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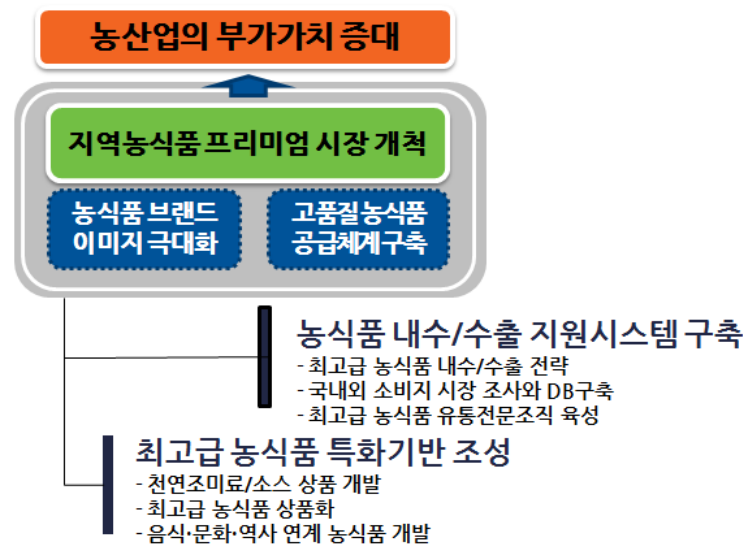
- 2013년 전국 수출액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산물 4.5%, 축산물 6.5%, 수산물 1.9%, 임산물 12.4%, 임산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¹⁴⁾

13) 자료 : 충남도청(2013), 경쟁력 있는 10대 주력 농산물 내역 / 자체제공자료

- 2013년 전국 수입액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산물 5.4%, 축산물 2.5%, 수산물 1.6%, 임산물 5.7%, 수출실적과 비슷하게 임산물 수입비중이 높음

3) 기본방향

[그림 5-7] 유통분야② 기본 추진방향



■ 추진목표

- 충남산 농산물 품질향상 및 충남산 농식품 브랜드 이미지 극대화
- 충남지역순환식품 체계의 밑거름으로서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 전제조건(기본원칙)

- 최고급 농식품 생산-유통 및 가공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 충남산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지역내에서 순환하는 구조 형성
- 현행 Q마크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충남 최고급 농식품 퀄리티 보장 제도로 성격 전환)

■ 추진방향

- 품격높은 충남산 최고급 농식품 개발과 외식산업으로 구현
- 국내외 프리미엄 시장진출을 고려한 차별화마케팅 전개

14) 주 : 자료의 한계로 인해 충남의 최상위·최고급 농식품의 수출·수입 실적은 파악할 수 없음

4) 중점추진과제

[장기]

- 최고급 농식품 특화기반 조성
- 농식품 내수 및 수출 지원시스템 구축

① 최고급 농식품 특화기반 조성(장기)

■ 지역산 농산물 원료 사용한 천연조미료 및 천연소스 상품 개발

- 지역산 농산물의 1,2차 가공과정을 통하여 천연조미료 및 천연소스의 개발
- 천연조미료 및 천연소스 상품 개발
 - 조미채소류, 양념채소류, 김장류 식재료 중심으로 발작물 재배 확대, 상품 개발
- 마을공동체 단위 1,2차 가공기반 구축
 -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건조, 탈피, 세척, 분쇄 등의 가공시설 인프라 장비 지원
- 농가 및 경영체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마을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향상

■ 지역별 최고급 농식품 상품화

- 국내외 프리미엄 시장공략을 위한 충남산 최고급 농식품 특화사업 기반 구축
- 다양한 정신과 철학, 이야기를 담은 최고급 농식품 상품개발
 - 1차 원물, 2차 제조·가공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의 열과 혼, 문화와 역사를 담기
 - 이야기를 담은 하나의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최고급 농식품 상품화
- 지역별 발효식품 명품화 및 공식인증 추진
 - 김치, 된장, 민속주인 인삼주, 백일주 등 적극 발굴
 - 충남 지역산을 강조한 명품화 추진(2020발전계획 중 world best 전통식품육성 승계)
- 시군과 광역 단위 공동 대응
 - 1차적으로 농산물 생산기반과 유통전담팀에서 고품질먹거리 생산·유통 고민
 - 새로운 틈새시장 발굴 등의 업무, 시군단위와 광역단위 공동으로 대응
- 프리미엄 시장공략을 통해 유통의 업그레이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여

■ 음식·문화·역사연계 농식품 개발

- 1차원 원물공급에서 벗어나 2,3차원 음식을 고급스럽게 향유하는 문화, 소비확대
- 지역별 고유의 음식문화 발굴 작업

- 충남산 최고급 농식품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농산물을 지역산 이미지에 맞게
- 음식과 식품으로 개발하여 이 식품에 문화와 역사라는 이야기를 입힌 상품으로 승화
- 지역별 전통음식·문화·역사 발굴대회 개최
 - 지역별 음식의 요리방법, 문화·역사 발굴 대회를 통한 아이디어 공모
- 추진체계 및 방법
 - 지역 내 식품과 관계된 역사·문화전수자를 발굴하는 사업이기에 타영역과의 연계작업
 - 부서간 업무경계를 뛰어넘은 융복합 사업으로 이해하여 추진
- 지역별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한 유산으로서 후대에 지속적인 보전 및 계승

② 농식품 내수 및 수출 지원시스템 구축(장기)

■ 최고급 농식품 내수·수출전략

- 기존의 농식품 내수 및 수출전략과는 차별적인 최고급 이미지로서 접근전략 구사
- 최고급 내수 및 수출 전략품목 육성 및 상품 개발
 - 충남 주요 농산물을 전략품목으로 발굴 및 육성, 고품질 기준으로 전과정 생산-유통
 - 내수는 일반수준의 상품공급을 뛰어넘어 충남산 최고급 농식품 특화 전략품목 육성
 - 단순한 원물 제공수준이 아닌 음식과 문화·역사가 결합한 스토리가 있는 상품 개발
- 프리미엄상품 브랜드 개발 및 홍보
 - 고품질 유지, 일정한 물량공급 출하, 프리미엄 브랜드 개발, 이미지 홍보 마케팅
 - 품격높은 상품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품격있는 디자인 관리 개선 등 필요
- 충남산 최고급 농식품 판매·수출전략을 통하여 프리미엄 이미지로서 각인

■ 국내외 소비지 시장 조사와 DB구축

-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에 대한 철저한 소비지 시장 조사는 마케팅의 기초 선행작업
- 내수 소비지시장 조사와 DB구축
 - 주기적 시장 조사, 조사팀 구축, 조사내용을 DB화하여 포털사이트로 통합하는 작업
 - 소득, 인구규모, 상류층 밀집정도, 직업 등 소비지 시장조사와 DB 구축
 - 시기별 성수기(설날, 추석 등) 선물을 공략한 산지상품개발과 연동, 가동체계 구축
- 수출국 소비지시장 조사와 DB구축
 - 같은 국가라고 해도 권역별 농식품 소비양상은 다르기 때문에 수출전략과 조사 필요
 - 소득, 인구규모, 상류층 밀집정도, 지리적 위치, 종교요인 등 소비지 시장조사, DB화

- 예. 중국수출 : 한국(특히 충남)과 가깝고 한인과 교포가 많아 한국식품 인지도가 높은 청도와 같은 동북권역은 진한 맛을 좋아하여 설탕과 간장을 많이 사용하는 식품 선호
상하이와 같은 화동권역은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자 연해에 위치하여 개방적 식문화 자랑, 풍부한 해산물을 많이 사용하여 대체로 달고 기름기가 많은 식품을 선호
베이징과 같은 화북권역은 궁중·약선요리와 같은 고급요리 발달한 지역¹⁵⁾

- 도청 내 수출전담팀, 경제진흥원, 산지유통팀, 시군별 수출·유통팀, 유통전문조직과의 연계
- 시장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정확한 시장 및 마케팅 예측

■ 최고급 농식품 유통전문조직 육성

- 최고급 내수 및 수출시장 공략을 위한 관련 유통전문조직 육성
- 내수 및 수출형 프리미엄시장개척단 혹은 공동브랜드공동사업단 구성 등
 - 기존 산지유통전문조직, 수출전문조직과는 다른 강력한 전문성을 띤 유통전문조직
 - 내수 및 수출시장 프리미엄급 유통경로, 외식업체, 백화점 등 다양한 판로확보 활동
- 유통전문 농가조직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지원포함)
 - 최고급 상품을 위하여 산지의 재배단계부터 전문농가조직의 관리, 기술관리 교육
 - 농가조직은 고품질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은 기본, 안정적 물량공급 조달기반 역할
- 최고급 농식품 브랜드마케팅 사업
 - 충남이 목표로 하는 소비자층(연령,소득,지역,직업 등)의 선호도 및 특성 파악
 - 소비자층에 맞는 품질기준 설정, 재배·유통·소비단계를 고려한 상품 및 브랜드 개발
 - 최고급 상류층을 공략하는 내수전략 구사, 지역브랜드 이미지마케팅과의 결합 중요
- 단계별 전담부서 역할분담
 - 생산단계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경제사업지도팀, 시군 및 도 관계팀이 품종 특성과 재배기술, 저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과 컨설팅 지도 등
 - 유통단계 : 지역농협 경제사업 전담팀, 농협중앙회의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대규모수출전문 영농조합법인 등의 공동 수출유통 전략 구사, 매뉴얼 개발과 이행, 품목별 수출업체 컨설팅 지원, 해외에이전트 육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
- 충남산 농식품의 프리미엄 시장개척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신성장산업 동력화

15) 자료 : 1. 식품저널(2014), 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 <http://m.foodnews.co.kr/articleView.html?idxno=49746>
2. KOTRA

3. 농어촌자원 융복합 산업화로 부가가치 창출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2030년)

■ 소비시장의 고급화·다양화로 건강과 환경, 식품안전이 담보된 로컬 푸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기능성 식품과 로컬 푸드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식품시장 규모는 '12년 150조 원에서 '22년 230조 원으로 급성장 예상
- 농축산 생명자원 기반 산업용 소재개발 및 관련 시장 급증으로 기존 시장 제품과 차별화된 6차산업화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체계 구축 및 연구 자원 요구 증대
- 소비자의 고품질·안전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 및 관심 증가, 주 5일제 여가활동 다양화 등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농식품 산업 변화 필요

■ 농가의 농업소득 지속 감소 대비 농외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 향상 필요성 증가

- 전년 대비 15.6% 증가한 농외소득 증가로 과거 10년간 연평균 2.53%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던 농가소득이 지난해 전년보다 11.3% 증가(2013 농가경제조사)
- 1차의 생산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소득 증대 및 노인, 여성 농업인, 귀농귀촌자 대상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
-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력 부족과 저효율 생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 경영 방식 등 농촌 활력 증진 방안 필요
- 창조적 농어업 6차산업화를 위해 기존의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를 뛰어넘는 지역 특성에 맞춘 새로운 농정 자원 전략 요구

② 중기전망(민선6기)

■ 새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가속화 전망

- 새정부의 농정 비전인 '행복한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아래 농업·농촌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다양한 노력 지속
- 농림축산식품부(2013)는 농촌의 활력 증진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방안' 제시 및 농식품의 6차산업화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농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농업·농촌은 농산물 생산기반 중심에서 치유, 교육콘텐츠, 귀농인력과의 연합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 자원으로 인식 전환
- 반면, 충청남도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2011년 8월 3농 혁신 선언을 계기로 6차산업화를 통한 농업 활성화를 위한 두레기업 육성, 공동가공센터 구축지원, 농식품안전성검사센터 구축 등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음.

■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활성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간의 연계 등 체계적인 육성 전략 필요성 대두

- 농어업 6차산업화의 활성화 기본 원칙인 농업·농촌 중심, 협동화, 내생적 발전, 지속 성장에 목적을 둔 다양한 형태의 6차산업화 사업체 발굴 및 지원 필요
- 6차산업과 관련 정책사업간 연계, 리모델링 등을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증진 및 규제 완화, 정책지원, 세제감면 등 다양한 정책간의 체계적·유기적 결합으로 지속 성장 및 동반 성장 추진
- 6차산업화 지원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기본 실태 파악 및 성과 분석으로 보다 효과적인 6차산업화 정책 개발 등 활성화 전략 추진
- 6차산업화 사업단의 지속 성장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적극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운영의 필수 정보 공유 등 전문적인 소통 채널 확보로 내생적 발전 전략 수립

2)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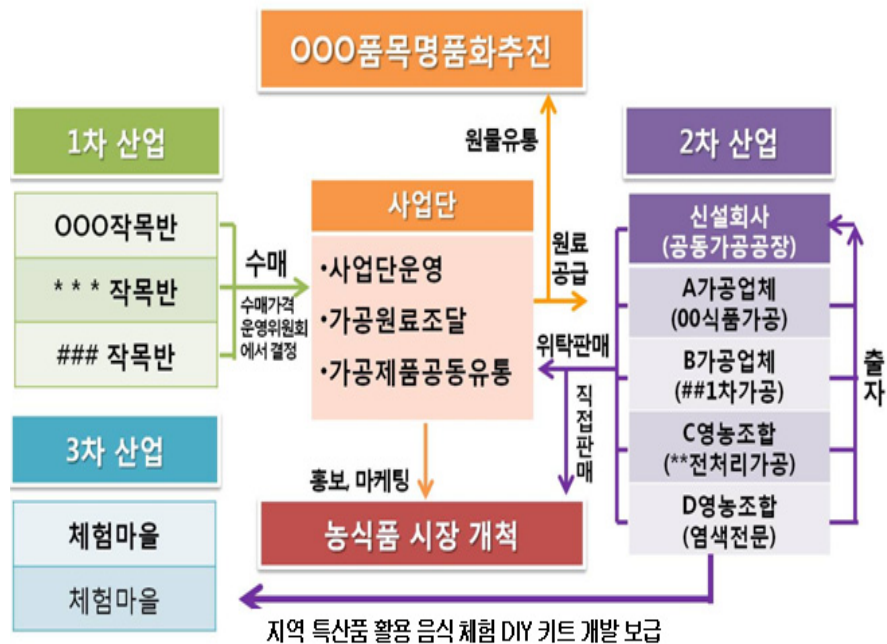
■ 농촌 두레기업 육성 등 6차산업화 지원 추진 현황

- ‘두레기업 육성사업’은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계획적인 육성관리를 통한 6차산업화 촉진과 농어촌 산업기반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 마을기업 창업 및 육성, 6차산업화 전략자문단 및 포럼운영, 농식품·향토자원문화디자인사업, 전통주 및 발효식품 육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도비와 시·군비로만 추진하던 2012년 농어업 6차산업화 마을기업 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2012년 초부터 ‘충청남도 농어업 6차산업화 확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가 주도하는 농어촌복합산업화사업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승인받아 광특 501억 원을 포함 총 1,001억 원의 사업비 확보하여 2015년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12개소 구축에 300억 원, 농어업 6차산업화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에 701억 원 투자 예정

■ 농촌 두레기업 육성 등 6차산업화 지원 추진 성과

- 마을의 일부 주민과 리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사업 경영 방식을 공동체 경영 방식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등이 결합된 6차산업화 경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발전가능성 확보
- 두레기업 및 지역단위식품기업 육성 기반 마련, 지역의 농산물 소비촉진과 노인층과 부녀자들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6차산업화 전략자문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6차산업화 촉진 기반 조성 및 사업 완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6차산업화 포럼을 통해 농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산업화 현장 리더 양성
- (사)충남농어업6차산업협회 출범으로 회원기업의 역량 강화, 공동사업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원료구입 등 6차산업화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충청남도, KBS월드와 MOU 체결을 통해 전문적이고 글로벌한 홍보·마케팅 기반 구축

[그림 5-8] 충남 농어업6차산업화 경영 모델



[표 5-1] 2013년도 6차산업화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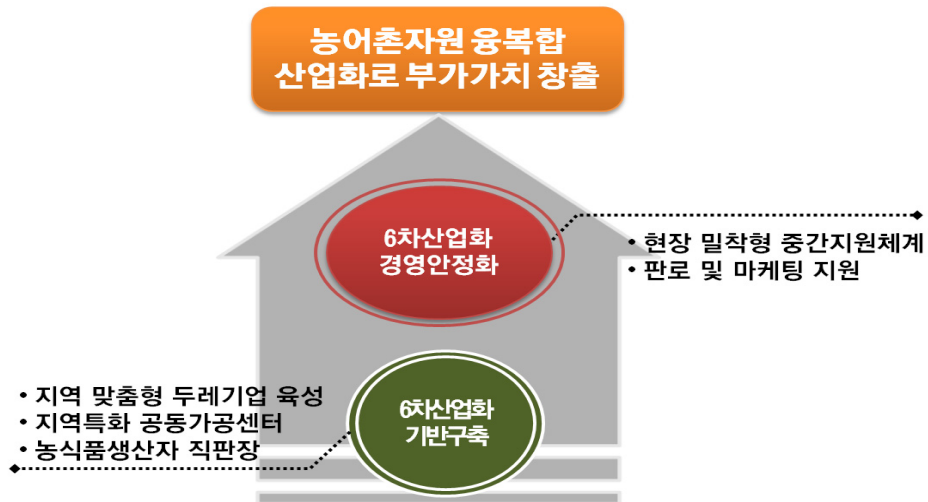
사업명	주요 내용 및 경과
농어업 6차산업화 두레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3 : 농어촌복합산업화지원(광특) 예산확보 추진 ○ '12.08 : 농어업6차산업화 추진계획수립 및 공모(6개 마을 선정) ○ '12.09 : 농어업 6차산업화 확대(두레기업육성)을 위한 사업비 광특 501억원 등 1,001억 원 확보 ○ '12.09 : 농어업 6차산업화 확대발전계획 방침 결정 - 충남형 6차산업화 지원 사업 모델 마련·제시(2개 분야 4개 유형) ○ '13년 농어업 6차산업화 마을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 공모(17개소 선정)
농식품 향토산업 문화디자인 사업	○ 5개소 선정 진행
전통주 및 발효식품 육성	○ 4개소 선정 진행
6차산업화 전략자문단 및 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에서 운영 ○ 6차산업화 전략자문단 : 15명 자문위원 위촉, 현장 모니터링·컨설팅 ○ 6차산업화 포럼 : 회원 45명, 6회 진행
충남농어업6차산업 협회 창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2 : 충남복합산업화협회 창립 및 사단법인 허가 ○ '13.11 : 협회 명칭 변경 '충남농어업6차산업협회' ○ 6차산업 회원 기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 사업 추진

■ 농촌 두레기업 육성 등 6차산업화 문제점

- 농어업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생산·가공·체험·유통 등이 연계된 6차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지역 내 6차산업화 자원의 조사를 통한 체계적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한 노하우의 부재 등 기업 경영 역량 부족
- 마을공동체 붕괴에 따른 주민 참여도 저하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판로 확보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리더의 역량 부족
- 6차산업화 경영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 의 단일화와 원스톱 지원을 위한 6차산업화지원센터의 인력 및 자원 부족
- 6차산업화 사업간·정책간 연계와 융·복합을 통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시장조사에 근거한 수요파악은 물론 새로운 소비자를 창출할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반 부재에 따른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고민증대

3) 기본방향

[그림 5-9] 6차산업분야 기본 추진방향



■ 농어업6차산업화 기반구축

- 맞춤형 두레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화 공동가공센터 및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

■ 농어업6차산업화 기업 경영안정화

- 6차산업화 현장 밀착형 중간지원체계 구축과 판로 및 마케팅 지원으로 6차산업화 기업의 경영안정화 도모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지역 맞춤형 6차산업화 인프라 구축
- 6차산업화 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체계 구축



[장기]

- 지역 맞춤형 6차산업화 인프라 구축(계속)
- 6차산업화 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체계 구축(계속)

① 지역 맞춤형 6차산업화 인프라 구축(중기)

■ 지역 맞춤형 두레기업 육성

- 3농혁신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두레기업 육성’ 정책의 태동과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지역의 농업생산구조 및 규모, 자원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두레정신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킴
- 공동가공센터, 우량기업, 두레기업의 추진방향의 3차산업분야 체험관련 시설을 가공시설 탐방로 설치와 교육이 가능한 시설 추진 권장
- 생산·가공·유통의 융복합 형태인 6차산업화 모델을 지역 자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가공 중심, 체험 중심, 유통 중심, 문화 자원 중심 등 다양한 6차산업형 운영 모델로 확대
- 두레기업 육성 추진 사업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자 직판장이나 로컬푸드 직매장내에 향토음식점, 가공식품 판매점, 공예·식품 공방 사업 등을 포함하여 지역 내 외식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 여성 대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 거양

■ 지역특화 공동가공센터 구축

- 지역의 전략품목을 식품소재 가공 등 대량생산 체계와 시제품 가공 등 창업보육을 위한 시설로 구축
- 공동 제조·가공시설, 교육장, 실험실, 소규모 판매장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자가 직접 가공하고 판매하는 시스템 운영을 통한 농어민의 창업·보육 기회 증진 및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 농식품생산자직판장 구축

-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조·가공품을 중심으로 판매하여 6차산업화 두레기업 등의 판로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구매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선농산물을 함께 판매함으로써 지역의 농가와 상생도모
- 직판장과 농가식당, 체험장 등으로 구성된 농식품생산자직판장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자가 직접 포장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농업인이 운영 주체가 되는 소비자 맞춤형 직거래 시스템 운영

② 6차산업화 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체계 구축(중/장기)

■ 현장 밀착형 중간지원체계 구축

-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사)충남농어업6차산업협회, 충남농업기술원 등과 연계하여 6차산

업화 추진을 위한 현장맞춤형 중간지원체계 구축

-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한 현장밀착형 전문가 육성을 통해 사업 단계별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가 진행되는 체계적 지원 체계구축

■ 판로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운영

- 충청남도 농업 6차산업화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 마케팅 멘토링 사업운영, 공동마케팅 활성화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지원
- 기존 지역브랜드가 있는 가공식품사업(예, 서산 어리굴젓, 광천 김 등)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수출지원 등 농식품부사업과 연계한 정책적 지원

4. 지역 먹거리의 산업화 추진

1) 여건전망

■ 농식품산업 및 농식품시장의 대규모 성장 전망

- 농어업분야의 소득창출이 고부가가치화 다양화로 변화되면서 가공식품 등의 농식품 개발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와 함께 농식품 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임

■ 지역별 역사, 문화 등 스토리가 있는 지역농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 지역별 농산물의 고유한 재배 역사, 탄생배경, 음식 및 요리문화 등에 대한 가치 확산
- 지역별 음식과 관련된 유무형 유산에 대해서 발굴·보존·계승 작업은 점차 중요성 부각

■ 소비시장의 고급화·다양화로 건강과 환경, 식품안전이 담보된 로컬 푸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기능성 식품과 로컬 푸드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식품시장 규모는 '12년 150조 원에서 '22년 230조 원으로 급성장 예상
- 농축산 생명자원 기반 산업용 소재개발 및 관련 시장 급증으로 기존 시장 제품과 차별화된 6차산업화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체계 구축 및 연구 지원 요구 증대
- 소비자의 고품질·안전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 및 관심 증가, 주 5일제 여가활동 다양화 등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농식품 산업 변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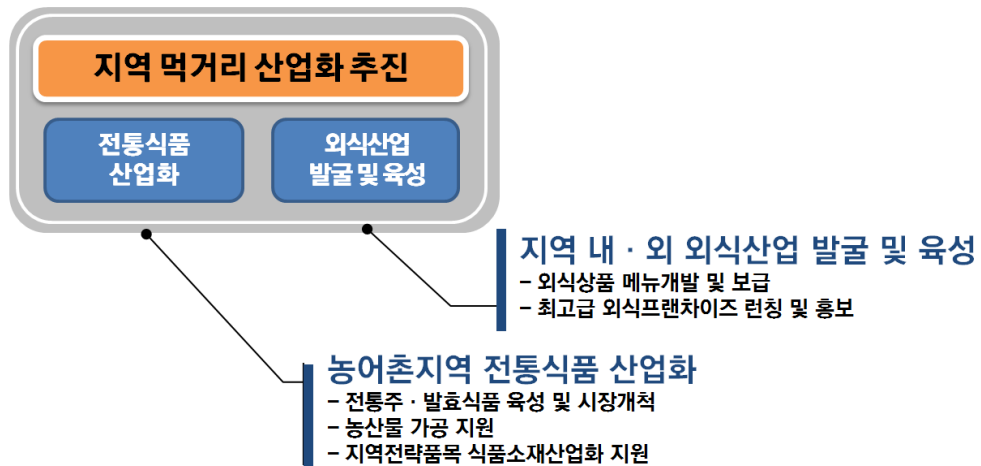
2)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농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정책 미흡

- 지역농식품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이를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체계적인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전통식품의 품질고급화 및 판로 확대, 체험·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소비 창출이 필요함

3) 기본방향

[그림 5-10] 농식품산업분야 기본 추진방향



■ 지역 전통식품 산업화 추진

- 전통주 및 발효식품을 육성하고 농산물 가공지원 및 지역전략품목 식품소재 산업화 등을 통하여 농어촌지역 전통식품의 산업화를 추진함

■ 외식산업 발굴 및 육성

- 외식상품 메뉴를 개발·보급하고 최고급 외식프랜차이즈를 보급·홍보하여 지역 내·외 외식산업을 육성함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농어촌 지역 전통식품산업화 추진



[장기]

- 농어촌 지역 전통식품산업화 추진(계속)
- 지역내·외 외식산업 발굴 및 육성

① 농어촌지역 전통식품 산업화 추진(중기)

■ 전통주 · 전통발효식품 육성 및 시장개척

-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제조 · 가공시설 및 설비기반을 확충하여 농식품의 부가가치 창출 도모
- 농식품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농식품 및 6차산업 참여자의 역량있는 제품개발 등을 유도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 마케팅 추진

■ 농산물 가공 지원

-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체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영세성 탈피를 통한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도모
- 공동 제조 · 가공시설, 교육장, 실험실, 소규모판매장 등 설치 지원을 통하여 생산자가 직접가공, 신선도를 높이고 전처리 반가공의 소포장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생산자직판장 학교급식센터 등과 유기적 협력으로 6차산업 활성화 도모

■ 지역전략품목 소재산업화 지원

- 기 구축된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품목의 대량생산체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에 관련 식품기업 유치 등 전략품목 소비확대 및 고부가가치화
- 지역전략품목 식품소재화 상품개발 지원
 - 지역전략품목을 활용한 식품소재에 대한 시장조사, 제품개발 동향 등 연구를 통해 타겟팅이 가능한 식품기업 발굴 및 제품개발
- 지역전략품목 생산 고도화 구축 지원
 - 전략품목 소재의 생산고도화 시설 지원과 유치된 관련 기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지원
- 지역전략 농산물 소비확대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② 지역 내 · 외 외식산업 발굴 및 육성(장기)

■ 외식상품 메뉴개발 및 보급

- 충남산 최고급 농식품 특화사업, 음식 · 문화 · 역사 연계한 메뉴개발 보급 및 확대
- 충남산 최고급 농식품의 외식상품 메뉴개발
 - 지역산 농산물 원료를 사용한 천연조미료 및 천연소스 개발사업 연계
 - 지역별 최고급 농식품 상품화 및 음식 · 문화 · 역사 연계 농식품 개발사업 연계
- 충남산 최고급 농식품의 외식상품 메뉴보급
 - 공공기관, 유관기관, 지역내 대기업, 연구소
- 지역산 농산물 활용방법 및 유통경로의 다양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 지역 내·외 최고급 외식프랜차이즈 런칭 및 홍보

- 지역 내·외 외식업계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충남산 최고급 외식상품 홍보
- 차별화된 런칭 및 홍보 마케팅 전략
 - 광역단위에서 한국외식협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기존 관련업체 단체 중심으로 접근
 - 단순한 외식상품 홍보가 아닌 열과 혼이 있는 충남 농식품 특화상품 가치중심 홍보
- 지역 내 농가맛집 및 레스토랑 메뉴보급 사업
 - 시군별 농가맛집 및 레스토랑, 미더유 중심으로 외식메뉴 개발 및 보급
 - 지역농산물 구매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방문객들에게 적극 홍보
- 지역 외 유명프랜차이즈 중심의 메뉴보급 및 마케팅
 - 수도권, 광역시 중심으로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유명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발굴
 - 충남형 최고급 외식메뉴 혹은 최고급 프리미엄 이미지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 기업에겐 지역산 농산물 사용 등 사회공헌 긍정적 이미지로서 활용
- 지역산 농산물 및 농식품의 간접적인 홍보를 통해 충남산 농산물 구매 확대

제3절 소비혁신

1. 지역순환형 로컬푸드 소비체계 강화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2030년)

■ 건실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친환경 및 우수 농산물 공급이 원활하고,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시·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센터 흑자 비율 100%)
- 시·군 학교급식 지원센터별 친환경 농산물 공급 비율 평균 100% 달성
- 불량 학교급식 공급 비율 0%

■ 충남 농산물의 역외 유통량 감소 및 로컬푸드 직거래 비율 확대 전망

- 충남 로컬푸드 직거래 비율 50% 달성
-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객 수 연간 100만 명 달성
- 스타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10개소 운영

② 중기전망(민선6기)

■ 15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 지역여건에 맞는 시·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15개소)
- 시·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흑자 비율 50% 달성
- 시·군 학교급식 지원센터별 친환경 농산물 공급 비율 평균 50% 달성

■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전망

- 「학교급식 자율조정위원회», 「광역 학교급식 친환경 공급센터」 등 지역분쟁 해결과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에 역할 강화

■ 충남 로컬푸드 직거래 비율 확대 및 스타 로컬푸드 직매장 출현 전망

- 충남 로컬푸드 거래 비율 10% 달성
-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객 수 연간 50만 명 달성
- 지역의 주체가 참여하는 3섹터형 로컬푸드 직매장 출현
-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스타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출현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발생

-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조합이 추진하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역 반발이 심화되어 현재 집행정지 중이며,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됨
- 시·군별로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된 유형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에 따른 분쟁 소지 여전
-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 가속

■ 국가차원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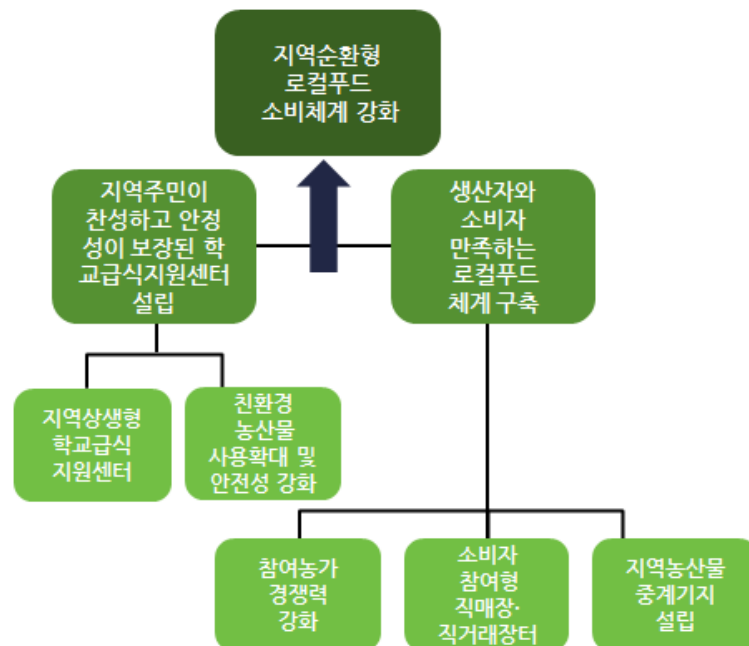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소비자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직거래 정책 추진 중
- 「(가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 움직임 가속화

■ 도내 농산물의 외부 유출 및 역유입 심화

- 현재 도내 농산물의 외부 유출 비율이 95% 이상이며, 역유입 비율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 지역내 로컬푸드 거래 비율이 약 3% 이내로 예상
- 충남에는 아직까지 완주나 김포와 같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음

3) 기본방향

[그림 5-11] 로컬푸드① 분야 기본 추진방향



■ 지역주민이 모두 찬성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 지역간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학교, 학생, 학부모, 농업인, 지역조합, 급식업체 등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급식지원체계 구축

■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로컬푸드 체계 구축

- 생산 농가의 소득이 보장되고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직매장·직거래 체계 구축
-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소비자 참여형 로컬푸드 체계 구축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 소비자 중심의 로컬푸드 체계 구축



[장기]

-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계속)
- 소비자 중심의 로컬푸드 체계 구축(계속)

①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중/장기)

■ 지역상생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 지역의 학교, 학부모, 지역조합, 농업인, 학교급식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형태의 「학교급식 회의소」 설치 운영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이전단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지역 학교급식 모델 개발 및 운영방침 정립
- 학교급식과 관련된 민원 및 분쟁해결을 위한 「학교급식 자율조정위원회」 설치
- 지역 내 우수 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학교급식 농업인 조직」 육성 및 교육
- 학교급식 시식회 및 품평회, 농촌 현장견학, 농장 체험 등의 학생·학부모 중심의 도농 교류 강화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확대 및 안전성 강화

- 각 학교급식지원센터별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 지정 의무화

-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또는 우수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광역 학교급식 친환경 공급센터」 운영
- 생산지 및 지원센터 현장점검, 시설점검의 정례화 및 학교급식 감찰제도 도입
- ※ 학교급식 감찰제도란? 불시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점검 및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감찰하는 제도
- 학교급식 전용 농산물 품질관리기준 마련 및 식재료 공급 매뉴얼 제작

② 소비자 중심의 로컬푸드 체계 구축(중/장기)

■ 로컬푸드 참여 농가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 상품 경쟁력(선도, 품질 등) 강화를 위한 산지조직 교육 및 관리 강화
- 로컬푸드 직매장을 도·소매 복합형 직매장으로 육성(B2C와 B2B 복합체계) - 대형 소비지의 경우 천안 농산물 도매시장과의 연계 방안 모색 필요
- 지역 대형마트와 식당, 로컬푸드 직매장간의 협력관계를 통한 지역 농산물 우수구매 구매제도 도입
- 산지 로컬푸드 직매장의 영역을 확대하여 단순한 농수산물 소매점이 아닌 볼거리, 먹을거리, 느낄거리가 있는 농업·농촌 체험·문화 시설로 육성 (스타 로컬푸드 직매장 육성) - 향토 음식점, 향토 가공식품 판매점, 공예·식품 공방, 취미·레크레이션 체험장 등 시설 구비

■ 감성을 충족시키는 소비자 참여형 로컬푸드 직매장·직거래장터 운영

-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광역 로컬푸드 소비자위원회 운영
- 현재 산재되어 행해지고 있는 소규모 직거래장터를 통합하여 지역 문화와 결합된 「테마 직거래 장터」 조성 - 지역의 향토역사, 문화, 스토리, 경관, 사람 등의 스토리가 있는 지역 브랜드 직매장 육성
- 기존 농업인 단체, 지역조합에 의존하던 경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농업인, 지역농협, 소비자 단체 등이 공동출자하고 제3자에게 운영을 맡겨 지역주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로컬푸드 직매장 육성
- 지역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식 직거래 장터」 운영 - 현재 탑차를 이용하여 운행 중에 있으나, 단순한 판매방식이 아닌 테마 먹거리 중심의 판매 지향 필요 (예, 친환경 농산물 판매 등)

■ 지역 농수산물 중계기지 설립

- 소비자 직매장의 역할을 단순한 소매점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농특산물, 농촌체험·관광, 지역축제, 마을투어 등 각 지역을 홍보하는 전진기지로 육성

- 문화재, 역사, 지리를 홍보하여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중계기지로 재편
- 전통시장 내 일정한 공간을 지정하여 지역의 고령 농업인이 안전하고 제약 없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

2.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업체) 간 연계시스템 구축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2030년)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역 농산물 공급기지 역할 확대 전망

- 학교급식, 공공급식, 학교, 직매장, 사업체 농산물 공급 및 흑자규모 100% 달성
- Two-Track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 소농가의 조직화 80% 달성을 현실화하고 학교 급식센터의 소농가 거래율 70%까지 확대

■ 충남 지역 식품산업의 전통성 회복과 더불어 경쟁력 향상 전망

- 미더유 인증업체 300업체 달성 및 6차산업화 상품의 지역농산물 인증기준 마련으로 지역 농식품산업 경쟁력 확대
- 지역 농식품산업에서의 업체당 전체 농산물 소비량 중 지역 농산물 비중 90% 이상 규모 달성

② 중기전망(민선6기)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경쟁력 향상

- 지역의 소농가의 조직화로 학교급식 소농가 직거래 비율 50%로 확대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역 농산물 사용비율 80% 및 친환경 농산물 60%까지 증대
-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기관 80%, 사업체 20% 농산물 공급 달성

■ 외식업 인증제도 미더유 200개 인증 및 6차산업화 가공식품 인증 제도 마련

- 외식업 인증제도 미더유 식당 200곳 인증 달성
- 미더유 인증 업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직매장간 상호 소통 및 교류
- 미더유 인증업체와 지역 관광자원, 체험마을과의 연계 활동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2) 현황 및 문제점

■ 농업과 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지역 농산물의 공공부문으로 소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충남의 농업중심지역이면서도 제조업 비중이 54.7%(GRDP)으로 매우 높음. 2012년 기준

충남의 제조업체 수는 12,637개, 월평균 종사주 수는 218,617명으로 집계됨

- 이들이 소비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은 식물성 농산물 기준 284톤 소비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려는 노력은 전무한 실정임, 공공기업부터 지역 농산물 사용을 위한 정책 방향이 필요

■ 외식산업 분야에서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 부족

- 외식업체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지역 음식의 전통성을 이어갈 수 있고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로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나 지역 농산물 구매의 경로가 현재까지 어려운 실정임
- 외식업체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품질과 신선도, 가격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가와 직거래가 어렵고 수급이 어려워 배달업체와 마트를 이용하는 경향이 큼

■ 6차산업화농가 및 농식품 제조업체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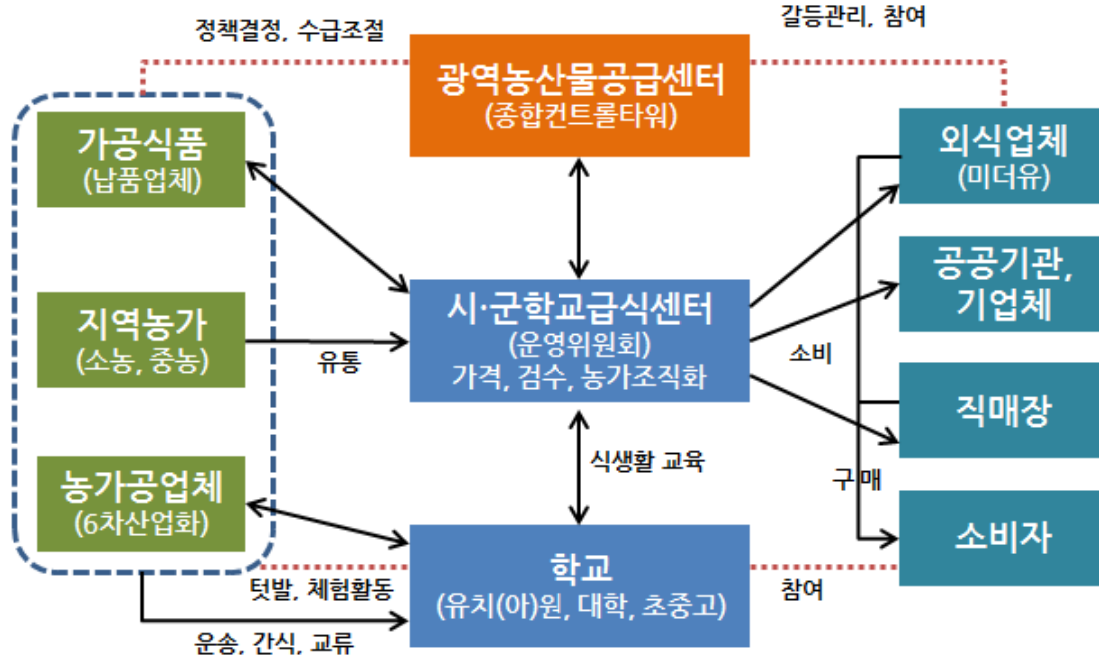
- 지역 농산물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지역 농산물 사용보다는 농산물 구매의 편리성과 품질 가격에 대한 요인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함
- 6차산업화는 지역소농을 위한 모델로 지역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한 제품이거나,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가공한 제품이라는 기준이 없음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공성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부족

- 미국에서는 단순 학교급식과 기관과의 단순한 연결이 아닌 사회전반에 걸쳐 폭넓은 로컬푸드 소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민장터(Farmer's Market)와 CAS 등 로컬푸드 수단들과 연계하여 FTC(Farm to College)사업과 병원급식, 공공급식(Farm to Cafeteria)등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충남 당진학교급식센터의 경우 기업체, 어린이집 40개소, 공공기관에 농산물을 공급하여 센터운영에 보탬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지역내 소비에 앞장서고 있는 좋은 사례임
- 간식사업, 마을 공동급식사업, 학교 유치원 간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존 학교급식 납품업체 및 외식업체 농산물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기본방향

[그림 5-12] 로컬푸드② 분야 기본 추진방향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공공부문 및 기업에 대한 지역 농산물 안정적 공급 체계 마련
- 로컬푸드 인증제도 미더유 활성화를 통한 외식업체 농산물 공급체계 확충



[장기]

- 공공부문 및 기업에 대한 지역 농산물 안정적 공급 체계 마련(계속)
- 로컬푸드 인증제도 미더유 활성화를 통한 외식업체 농산물 공급체계 확충(계속)

① 공공부문 및 기업체 지역 농산물 안정적 공급 체계 마련(중/장기)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전략적 농산물 공급지로서의 역할 모색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강화 방안 모색 필요
- 학교급식 농민장터(CAS) 등 로컬푸드 수단들과 연계한 FTC(Farm to College)사업 및 병원급식, 공공급식(Farm to Cafeteria)등으로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

■ 6차산업화 가공품 및 지역 농가공 업체의 가공식품 인증제도 마련

-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지역농산물 사용 장려 정책 기준 마련
- 기존 농가공 업체에서도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지역 대표 가공식품 제조 개발을 위한 인증제도 및 지원제도 확충(미더유, Q마크, 기업과 농가간 연계 정책)

② 로컬푸드 인증제도 미더유 활성화 및 외식업체 농산물 공급 확대(중/장기)

■ 충청남도 로컬푸드 미더유 300개 업체 지정

- 충남의 대표 로컬푸드 음식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함으로 미더유 외식업체 인증을 시·군 당 20~30개로만 지정하고 이후부터는 상호경쟁을 통해서 신규 업체를 인증하여 상호 경쟁하는 체제를 마련
- 미더유 업체에 대한 지원은 홍보활동이 우선시되어야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위생안전성, 식재료 품질, 맛, 서비스 품질에 있어 미더유 가이드 라인이 필요

■ 미더유 식도락 관광연계 코스 개발

- 미더유 충남의 대표 음식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충남향토음식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음식점과 지역관광지, 지역축제, 지역체험마을, 직거래장터와 연계한 '미더유 식도락 연계관광' 코스를 개발
- 미더유 관광연계뿐만 아니라 음식과 전통문화를 결합하여 외식인 관광객 유치
- 제주도의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같은 충남의 음식문화, 농촌체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미더유 탐방로드 마련

■ 미더유 협의체(governance)

- 지속성 담보를 위해 미더유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서는 미더유 발전을 위한 지역 농산물 공동구매, 음식 나누기와 같은 사회공헌활동, 쾌적한 위생환경을 위한 노력, 농가와 직거래 확대 방안 등과 같은 자발적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 운영

3.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운동 확산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2030년의 미래전망)

■ 지역먹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소비자 단체의 통합 네트워크 형성

- 지역먹거리 평생교육 수강자 연 30,000여명
- 지역먹거리 운동관련 소비자 단체의 통합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 관계 형성 - 로컬푸드, 학교급식, 친환경 농업, 도시농업 등

■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및 「착한 소비」로 인한 농가 소득 보장 전망

- 출향민, 지역주민 등을 통한 지역농산물 판매액 증대 (농사랑 매출액 300억 원)
- 지역 농산물에 대한 「착한 소비」의 일반화에 따른 농가소득 보장

■ 바른 식생활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비만을 감소 전망

- 성인 비만을 20%, 소아·청소년 비만을 5%대로 감소

■ 음식물 쓰레기 250톤 이하로 감소 전망

- 현재 348톤에서 29% 감소

② 중기전망(2018년(민선6기)의 미래전망)

■ 지역먹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자생적 소비자 단체 설립

- 지역먹거리 평생교육 수강자 연 10,000명
- 지역먹거리 운동관련 자생적 소비자 단체 출현

■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및 「착한 소비」 인식 제고 전망

- 출향민, 지역주민 등을 통한 지역농산물 판매액 증대 (농사랑 매출액 50억원)
- 지역 농산물에 대한 「착한 소비」 붐 조성

■ 충남 소비자의 식생활 개선에 따른 비만을 감소 전망

- 성인 비만을 25%, 소아·청소년 비만을 8%대로 감소

■ 음식물 쓰레기 300톤 이하로 감소 전망

- 현재 348톤에서 14% 감소

2) 현황 및 문제점

■ 민선 5기 3농혁신 정책에서의 소비자관련 정책 전무

- 소비자는 지역먹거리 운동의 수요자로서 지역순환식품체계의 핵심 주체이나 정책적 배려 부족
- 지역먹거리 운동에서 소비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컨슈머 파워의 강화가 예상되므로 선제적 대응 필요

■ 식품 안전성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가속

-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집중
- 수입농산물 및 GMO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가중

■ 패스트푸드 및 육류소비 증가로 인한 비만율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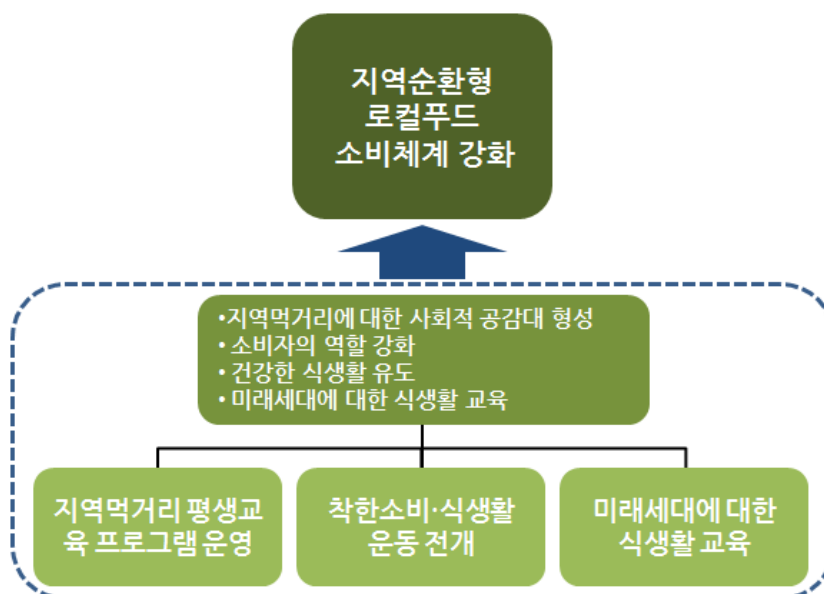
- 국내 성인 비만율 30%, 소아·청소년 비만율 11%

■ 대규모 음식물 쓰레기로 환경오염문제 초래

- 국내 음식물 쓰레기 연간 발생량 4,821천톤(일일 발생량 13천톤), 전체 쓰레기의 28% 차지
- 충남 음식물 쓰레기 연간 발생량 348톤, 전체 쓰레기의 18.3% 차지

3) 기본방향

[그림 5-13] 소비운동① 분야 기본 추진방향



■ 지역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소비자의 역할 강화

- 소비자의 농업·농촌 가치인식을 제고시키고, 지역 먹거리 운동에서의 소비자 역할 강화
- 시장경제 원리에 구애받지 않는 지역 농산물 구매운동 전개
- 식품 쓰레기 감소에 대한 소비자의 역할 강조

■ 건강한 식생활 유도 및 미래세대에 대한 식생활 교육 강화

-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유도
- 미래 농산물 구매자인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지역먹거리 및 식생활 교육 강화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농업·농촌의 가치이해 및 지역먹거리 소비자 전문 강좌 개설
- 「착한소비·식생활」 운동 전개



[장기]

- 농업·농촌의 가치이해 및 지역먹거리 소비자 전문 강좌 개설(계속)
- 「착한소비·식생활」 운동 전개(계속)

① 농업·농촌의 가치이해 및 지역먹거리 소비자 전문 강좌 개설(중/장기)

■ 지역먹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식량안보, 지역 먹거리의 중요성 등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의 농업유산과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답사하는 「충남 농업·농촌탐방단」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먹거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직거래장터를 홍보하는 「우리 먹거리 홍보단」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먹거리 정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지역 먹거리 소비자 포럼」의 주기적인 개최
- 농업·농촌 및 먹거리 전문 강사 육성

② 「착한소비·식생활」 운동 전개(중/장기)

■ 「착한소비·식생활」 운동

- 충남도 출향인 또는 지역주민이 충남의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취지의 「착한 소비」 운동 전개
-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도 농업인의 수고를 이해하고, 농촌을 지키기 위하여 적정가격으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자는 운동 전개
- 농촌의 자연을 회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친환경 농법으로 경작된 농산물은 그 수고를 인정하여 일반 농산물보다 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자는 운동
- 식품 쓰레기 감소를 위한 운동 전개 및 자원화 방안 모색
-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 바른 식생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농산물 구매 및 영양소 섭취의 지침 개발

■ 미래세대에 대한 식생활 교육 강화

- 현재 어린이 및 청소년이 성년이후에도 바른 식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장기에 식생활 교육 강화
 - 어린이 및 청소년 식생활 전문 강사 육성
 - 지역 먹거리를 통한 「성장 밸런스 맞추기」 운동 전개
- ※ 「성장 밸런스 맞추기」 운동 : 학교급식, 가정 식생활과 연계하여 성장기별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준수 운동

4. 지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2030년의 미래전망)

■ 인구밀집 도시에 시민텃밭 조성 및 인근 시·도로 파급 전망

- 시민텃밭지구 20개소 조성 및 참여 도시민 30,000 여명
- 인근 대전, 청주 등의 대도시와 연계를 통한 충청권 도시농업 네트워크 출범

■ 지역 소규모 소비자협동조합의 활성화 전망

- 지역 소규모 소비자협동조합 50개소 설립
- 조합원 3,000명, 매출액 30억 원

■ 도내 농식품 위해·안전 요소의 완전한 통제·관리

- 농수산물 안전센터가 도내 농수산물의 100%이상 검사
-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100%이상 인증
-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개율 100%

② 중기전망(2018년(민선6기)의 미래전망)

■ 인구밀집 도시에 시민텃밭 조성

- 시범적 시민텃밭지구 3개소 조성 및 참여 도시민 1,000명

■ 지역 소규모 소비자협동조합 설립

- 지역 소규모 소비자협동조합 10개소 설립
- 조합원 200명, 매출액 10억원

■ 도내 농식품 위해·안전 요소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 농수산물 안전센터가 도내 농수산물의 30%이상 검사
- 도내 친환경 농산물의 30%이상 인증
- 광역 식품 품질위원회 및 민·관 식품안전감시단 활동
-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개율 100%

2) 현황 및 문제점

■ 국제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붐이 형성되었으나, 충남에서는 아직 미흡

- 도시농업의 장점은 농업 및 농촌의 재발견과 소비자의 올바른 농산물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나 아직까지 충남에서 학교텃밭 외 도시농업에 대한 저변 미흡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규모화 · 기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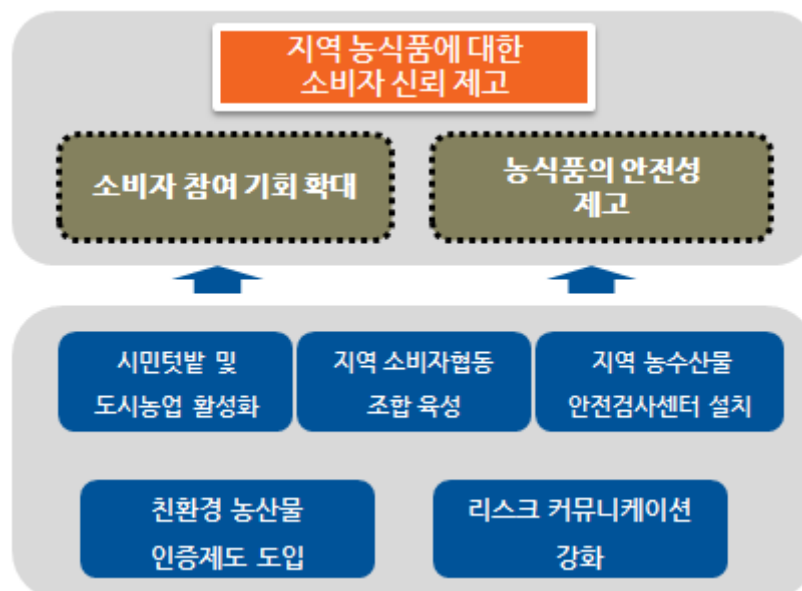
- 기존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거대화 · 기업화되면서 대형 유통체인의 모습으로 변모
- 지역보다는 전국단위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미흡하여 지역 농산물의 소비처로서의 역할 한계

■ 농식품 위험 · 안전에 대한 통합적 대응 미흡

- 현재 충남지역에는 농식품 안전성검사 기관은 산발적으로 존재하나, 안전검사센터가 없어 효율적인 통합관리 · 대응 시스템 부재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와 인증 남발에 따른 소비자 신뢰도 하락
- 식품 위생 · 안전에 대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3) 기본방향

[그림 5-14] 소비운동② 분야 기본 추진방향



■ 소비자 참여를 통한 지역 농식품의 신뢰성 제고

- 도시농업을 통한 소비자의 농업 및 농산물에 대한 이해력 제고
- 지역 소비자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 농산물 선택 폭 확대

■ 농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 지역 농수산물 안전검사센터 설치를 통한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 확대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도시농업과 소비자협동조합 활성화
- 지역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장기]

- 도시농업과 소비자협동조합 활성화(계속)
- 지역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계속)

① 도시농업과 소비자협동조합 활성화(중/장기)

■ 시민텃밭 및 도시농업 활성화

- 천안, 아산, 당진 등 인구밀집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텃밭 조성
- 향후, 근린공원 조성에 시민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의 기능 발휘
-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농민을 멘토로 지정하여 운영

■ 지역 소비자협동조합 육성

- 지역 소규모 소비자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먹거리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
- 지역먹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착한 소비」 운동과 연계하여 지역 소규모 소비자협동조합 창립 지원

② 지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중/장기)

■ 지역 농수산물 안전검사센터 설치 및 운영

-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산물 유해요소(유해생물 포함)에 대한 모니터링
- 유통단계에서는 지역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위하여 원산지, 성분·함량 표시, 생산이력 등의 정보제공의 역할 담당
-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공동가공시설에 대한 식품 안전검사 담당
- 1차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품질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

■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관련 인증제 도입

- 도 자체 친환경 농산물관련 인증 제도를 도입하되, 성분·품질 보다는 생산이력, 경작과정을 중심으로 인증
- 소비자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감시망 구축
- 지역 소규모 소비자협동조합,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 지역 중심의 유통망 구축

■ 농식품 안전성 검사 바우처 제도 운영

- 농식품 안전성 검사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내 농가공식품의 소비자 신뢰도 확보는 물론 6차산업화 농가공기업의 인력 및 재정적 부담 감소로 지속가능성 확보
- 지역 내 안전성 검사기관 및 HACCP 컨설팅 전문회사와의 MOU 체결을 통한 농식품가공기업의 안전성 검사는 물론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에 이용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영세한 소규모 농가공식품의 업체의 검사 기회 확대
 -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

- 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건강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광역 식품 품질위원회」 운영
- 소비자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유해식품의 제조·판매를 감시하기 위한 「민·관 식품안전 감시단」 운영
- 로컬푸드 직매장 및 소비자협동조합의 생산이력시스템 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매농산물 생산이력정보 제공 등 지역 농산물의 생산정보 공개 등

제4절 지역혁신

1. 내발적 발전기반 확립 및 마을과 지역 혁신 도모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

■ 농촌과 도시의 구분 상실에 따른 신주거문화 형성 전망

- 농어촌의 지속적인 도시화, 혼재·혼주화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이며, 기존 농어업인 중심의 농어촌 주거문화가 비농어업인, 도시민 등으로 확대되어 생태·로컬·여유·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주거문화가 형성될 것임

■ 소외된 농어촌의 공동화 및 마을소멸에 대한 농어촌 재생·재편의 필요성 증대

- 농어촌의 도시화와 함께 중산간지역, 벽오지 등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것이며, 이러한 공동화 현상을 대응하여 농어촌 지역 및 공간을 어떻게 재생·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 될 것임
- 일본의 경우, 과소화·고령화 마을과 관련된 연구와 조사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일명 ‘한계(限界)마을정책’의 개념으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② 중기전망

■ 주민주도의 내발적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대 전망

- 관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을 탈피하여 마을만들기 등 주민이 주도하는 내발적 모델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지역 발전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임

■ 도시화·공동화에 대비한 맞춤형 농어촌 공간정책 마련 필요

- 농어촌이 도시화되는 한편 공동화되어 가는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여, 농어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창출과 함께 공동화에 대응한 마을정비 및 리모델링 등의 맞춤형 공간정책 마련이 요구될 것임

■ 지역사회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다양한 발전모델 등장 전망

- 최근까지의 단일 주체와 조직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이 중요시 될 것이며, 이러한 협력적 모델의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적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문제점 개선 및 지속적 추진 필요

- 충청남도는 민선5기부터 자체 모델을 개발하여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6기 시작을 계기로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추진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농어촌 정주여건의 변화와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정책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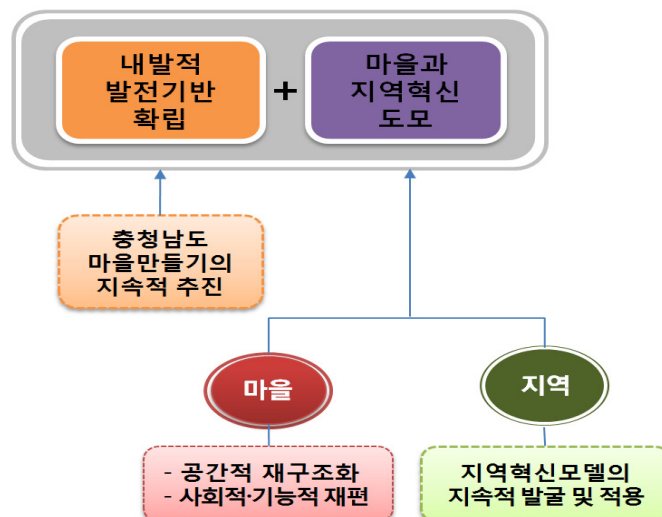
- 최근 농어촌 정주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산어촌 마을재구조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공간적 측면에서의 재구조화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소외된 과소·고령 마을을 중심으로 기능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재편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마을만들기 이외의 지역발전(혁신)모델 발굴 미흡

- 현재, 3농혁신 추진에 있어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이외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모델 발굴이 미흡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지역발전 혁신모델의 다양한 발굴과 적용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3) 기본방향

[그림 5-15] 마을만들기 분야 기본 추진방향



■ 마을만들기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내발적 발전기반 확립

-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속적 업그레이드 및 안정적 추진으로 주민주도 및 주민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통한 내발적 발전기반을 확립함

■ 마을 재구조화 · 재편과 지역발전 모델 육성을 통한 마을과 지역혁신 도모

- 농어촌 마을의 공간적 재구조화를 통해 변화되어 가는 신주거문화 형성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소외된 과소 · 고령마을에 대한 재생 · 재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 사례와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 육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역혁신을 도모함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Upgrade 추진
- 농산어촌 마을재구조화 추진 – 공간적 재구조화 추진
- 읍면단위 지역혁신 모델 발굴 및 육성



[장기]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Upgrade 추진(계속)
- 농산어촌 마을재구조화 추진(계속) – 과소 · 고령마을 사회적 · 기능적 재편 추진
- 읍면단위 지역혁신 모델 발굴 및 육성(계속)

①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Upgrade 추진(중/장기)

■ 제2기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의 추진

① 민선5기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의 문제점 개선

- 우선 민선5기 마을만들기 추진을 통해 제기된 대상마을 선정 및 홍보의 문제, 마을학교 운영의 문제(교육시기 및 수준, 마을발전계획서의 구체성 등), 지속성의 문제(인센티브 및 사업비 마련의 문제 등)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함
- 색깔있는 마을, 시군역량강화사업, 희망마을만들기 등 주민교육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예: 희망마을만들기 – 일반마을 및 열매마을 교육, 색깔있는마을 – 새싹마을 교육, 시군역량강화사업 – 꽃마을 교육)

② 희망마을(새싹 · 꽃 · 열매마을)에 대한 마을만들기 추진

- 그동안 일반마을을 중심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리더를 육성하는 데에 중심을 두었다면, 제2기 마을만들기에서는 일반마을뿐만 아니라 기존에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에 대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함

- 일반마을의 대상마을을 희망하는 마을로 한정하여 수를 줄이고, 대신 희망(새싹, 꽃, 열매) 마을에 집중하도록 함
- 새싹 & 꽃마을 : 마을만들기 참여 마을 또는 이미 새싹 및 꽃마을의 역량을 갖고 있는 마을 발굴 → 교육(사업계획 수립) →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연계(새싹마을 - 마을단위사업, 꽃마을 : 중심지 및 권역단위사업 등)
- 열매마을 : 중·대규모 사업투자에도 활성화되지 못한 마을 선정 →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③ 마을만들기 TF팀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

- 다수의 TF팀원으로 구성·운영하기보다는 팀원의 역할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실제 의사 결정에 참여할 「핵심팀원」과 이러한 과정을 자문하고 지원할 「자문팀원」으로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 추진
- TF팀의 구성원도 실제 책임을 지고 참여할 만한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자문 팀원은 사안에 따라 변화를 두도록 하고, TF팀의 회의도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자리가 아닌 TF팀장 및 팀원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갖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도록 개편

④ 희망마을 DB 구축 및 마을지정 관리

- 기존 마을만들기(마을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한 마을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후속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상황 및 역량강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함
- 새싹 & 꽃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의 신청(마을만들기 신청과 구분)을 받아 DB로 구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열매마을에 대해서는 시·군의 협조를 통하여 마을 또는 권역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함
- 특히 마을유형에 해당되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해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된다면 마을DB 구축 및 관리의 역할 담당하도록 함

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성

-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은 어디에 조직을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어떠한 인적자원을 영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다면 어디에 조직을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어렵지 않을 것임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에서 담당하기 난해한 ① 마을의 DB구축 및 모니터링·관리, ② 주민교육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 ③ 전문가 POOL의 구성 및 연결, ④ 마을만들기 관련

다양한 주민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의 자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② 농산어촌 마을재구조화 추진(중/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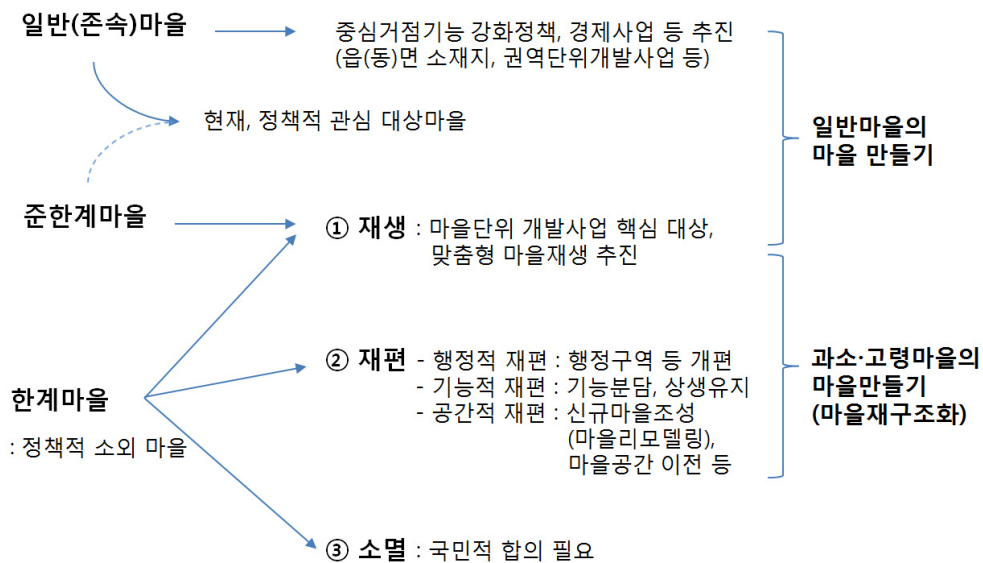
■ 중기전략으로 농어촌마을의 공간적 재구조화 추진

- 일부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전략을 전환하여 마을리모델링사업 및 신규마을조성사업은 공간적 재편의 측면에서 우선 접근

■ 중장기적으로 모든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마을만들기로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

- 역량수준 大 : 중심거점기능 강화정책(읍(동)면소재지, 권역단위사업 등)
- 역량수준 中 : 마을단위 개발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
- 역량수준 小 : 마을발전계획 수립(희망마을만들기)
- 역량수준 無(한계마을) : 과소·고령마을 정책(재구조화)

[그림 5-16] 농산어촌 마을재구조화 개념도



■ 과소·고령마을의 실태조사 및 DB구축

-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인구 및 마을유지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과소·고령화의 진행도와 소멸가능성이 높은 마을 등을 파악하여 DB로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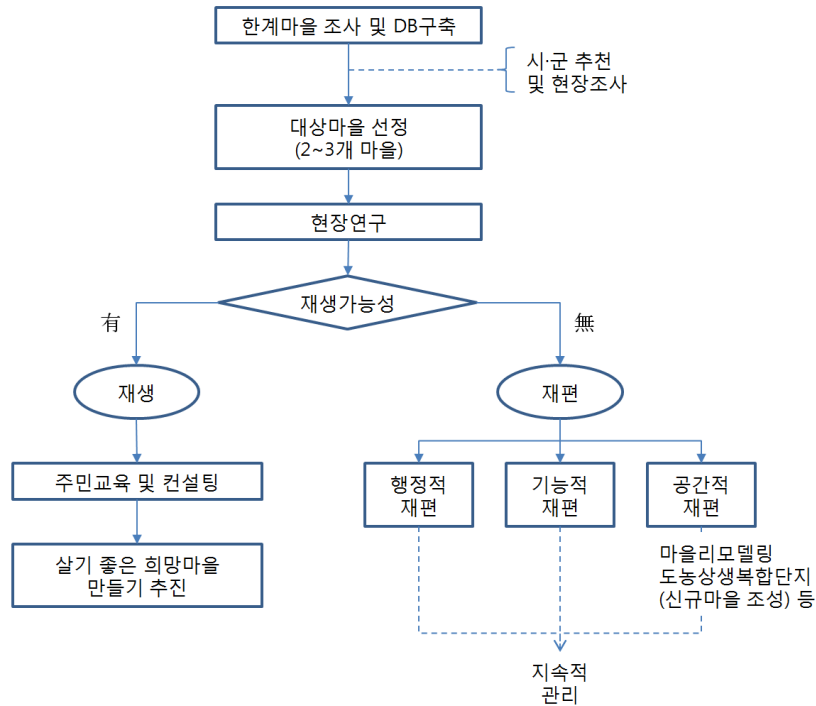
■ 과소·고령마을에 대한 재생 또는 재편 등의 대응정책 추진

- 마을발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역량과 재생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을은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를 적용하여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마을(자체 역량으로 재생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마을)은 '과소·고령마을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

- '과소·고령마을의 마을만들기'추진의 핵심은 과소·고령마을을 방치하지 않고 정책적 관심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음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TF팀과는 별도의 TF팀이나 전문가 자문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논의되고 있는 '농촌마을 재구조화'를 '과소·고령마을의 마을만들기' 개념으로 추진 하도록 함
- 구체적인 추진방법(안)은 다음과 같음
 - ① DB구축된 한계마을을 중 한계화가 가장 심하게 진행된 마을을 시군의 추천을 받거나 현장 조사를 통하여 판단 후 시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매년 2~3개 마을 선정, 마을에 따라 1년 이상의 마을만들기 추진)
 - ② 전문가 그룹의 현장연구를 통하여 재생 가능성 여부 및 재편의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분석
 - ③ 재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주민교육(역량강화) 및 전문가 컨설팅을 중심으로 창조마을 만들기 추진 → 이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 ④ 재생이 불가능하고 판단되는 마을은 행정적 재편,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 등을 중심으로 창조마을 만들기를 추진 (* 특히, 공간적 재편방안으로 마을리모델링, 도농상생복합단지(신규마을 조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
 - ⑤ 이후 창조마을에 대한 지속적 관리
- 마을재생 : 마을이 갖고 있는 잠재자원 및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과소화·고령화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재생정책을 추진
- 행정적 재편 : 인근 마을과의 통합·합병을 추진하거나, 중심마을이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마을로 한계마을을 흡수시키고, 행정구역의 변경 등을 통하여 행정적 측면에서 재편성을 도모
- 기능적 재편 : 인근 중심마을의 기능 강화하여 거점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거나, 초등학교 등 지역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복수의 마을을 묶어 각각의 마을에 차별화된 기능을 분담하도록 하고 상호 협력과 상호 보완의 관계 속에서 기능적 측면에서의 재편을 도모
- 공간적 재편 : 행정적 재편과 기능적 재편이 불가능할 경우, 마을의 공간적 이전 및 외부 인구의 유입을 통한 신규마을 조성 등의 재편성을 도모

[그림 5-17] 과소·고령마을의 마을만들기 추진방안



③ 읍면단위 지역혁신모델 발굴 및 육성

■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

- 지역농협을 농정의 동반자로 내발적 농촌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 구축하고 농정역량을 집중하는 지역혁신모델을 구축
- 단기적 역량강화 도출과 중기적 모델구축 등 Two-Track 추진
 - 단기적 : 추진주체 구성, 주민역량강화, 학습모델 개발 운영
 - 중기적 : 지역혁신모델구축 시범사업 추진 → 사례전파 · 참여확산
- 사업위주의 단편적 행정지원에서, 지역과 농협 자발적 참여 유도
 - 객관적 평가 ·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 의견 반영, 공모 · 심사계획 수립
- 지역특성을 감안, 농협혁신 모델구축의 유형별 공모 육성
 - 두레기능 강화된 「공동체형」, 농산물 유통물량 풍부한 「유통선도형」, 지역생협 · 영농법인과 연계 발전할 「협동조합형」으로 구분 발굴
- 지역농협과 함께 자율적 지역개발을 이끌 핵심리더 및 활동가 발굴
 - 3농혁신정책 일환, 농촌과 농업 · 농업인에 중점을 둔 입체형 농협구상

2. 미래형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촌어메니티 창출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

■ 첨단기술농업과 다기능 복합영농을 위한 생산기반으로의 변화 전망

- 농업의 전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생산기반의 규모화와 함께 첨단기술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생산기반 형태(스마트농업, 식물공장 등)로의 변화가 될 것임
- 또한 단순한 1차적인 식량생산기능을 벗어나 농어업6차산업화, 다기능농업, 도농교류 및 체험농장 등의 복합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기반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재발견을 통한 농어촌 활성화 기대

- 농어업·농어촌의 다면적 기능과 함께 농어업·농어촌이 지닌 가치의 재발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며, 이러한 가치를 활용하여 농어촌을 활성화하는 사례가 늘어 날 것임 (예: 로컬푸드, 농어촌관광, 농어업유산 등)

② 중기전망

■ 시설노후화, 영농규모화 등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정비·관리가 요구됨

- 1970년대~1990년대에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생산기반시설이 내구연한에 도달함으로 인해 리모델링 또는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 또한 논 및 밭기반 정비뿐만 아니라 영농규모화의 추세에 맞춰 생산기반의 대규모화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

■ 낙후된 농어촌 생활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수요 증가 전망

- 국가의 불균형발전과 농어촌지역의 고령화·과소화 현상이 가속됨으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 미래형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확충 필요

- 낙후된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미래농업 수요에 대응한 생산기반 정비 및 확충 필요

■ 낙후된 농어촌 생활환경의 체계적 정비 및 개선 필요

-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삶터, 일터, 쉼터의 정비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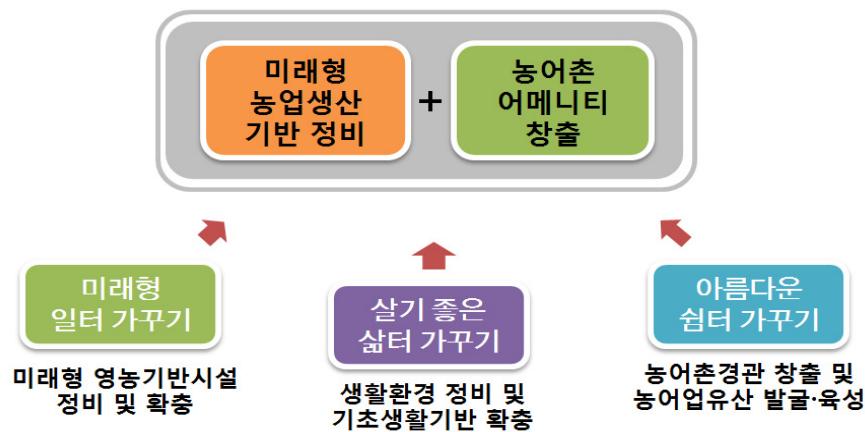
■ 농어촌 경관 및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노력 필요

- 최근까지 농어촌지역은 식량생산을 위한 공간으로만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농어촌 경관 및 어메니티의 유지·계승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경관 및 어메니티의 창출 노력이 요구됨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농어업유산을 보전·계승·활용하기 위해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나, 충남도에서는 농어업유산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과 활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충남의 농어업유산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 : 2013년 -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돌밭담 / 2014년 -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 등 총 4개소

3) 기본방향

[그림 5-18] 생산·생활기반 분야 기본 추진방향



■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한 미래형 ‘일터’ 가꾸기

- 낙후된 농업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미래영농을 준비하는 체계적인 영농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추진

■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삶터’ 가꾸기

- 농어촌의 낙후된 주거환경 및 기초생활기반을 정비하여 살기 좋은 삶을 조성

■ 농어촌 경관 및 어메니티 창출을 통한 아름다운 ‘쉼터’ 가꾸기

- 훼손되어가는 농어촌 경관을 보전·관리하여 농어촌 어메니티를 창출하고, 사라져 가는 농어업유산을 발굴 및 가치를 재조명하고 활용하여 지역활성화 도모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미래형 영농기반시설 정비·확충 추진
- 기초생활환경 개선 및 신규조성 추진
- 충남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육성



[장기]

- 충남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육성(계속)

① 미래형 영농기반시설 정비·확충 추진(중기)

■ 배수개선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추진

- 상습 침수지역 농경지 침수방지로 안전영농 도모하기 위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의 배수시설 정비
- 경지정리 지구 내 주요농로 확포장

■ 발기반정비사업 및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의 추진

-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구축
-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고, 배수개선사업 병행 추진으로 사업효과 증대 도모

■ 국가관리방조제 및 지방관리장조제 개보수사업의 추진

- 설계기준 미달로 해일 등에 취약한 방조제 단면 보강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및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의 추진

-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기존수원공(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의 시설을 확장·보강

- 수혜면적 30~50ha이내 물부족 지역에 수리시설에 설치 용수원 개발

■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추진

- 지하수 조사·개발(지질조사, 시추조사 등), 수원공시설(수중모타펌프, 전기시설 등) 및 이용시설(송·배수관, 정수시설 등) 조성 지원
- 가뭄발생지역 관정개발 및 관리,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용수대책비 지원

② 기초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촌 경관 창출(중기)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추진

- 마을기반정비, 농촌 경관개선(빈집철거정비포함),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 환경보전시설 등의 기반을 구축
- 시·군별 기초인프라 구축실태를 토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집중 추진

■ 농촌중심지활성화(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추진

- 읍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특색있는 유·무형 자원을 발굴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면소재지의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정비·확충하고, 농촌주민들의 정주 서비스 기능 충족과 중심 거점공간으로 육성

■ 창조적마을만들기의 추진

- 마을단위 및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 마을단위 및 인근 마을(행정리)를 포함한 종합개발 사업을 통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 도모
-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 :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 마을단위 경제(체험·소득)사업 :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가공 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교육 등 추진
-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 조성사업 : 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추진
-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 : 창의적인 S/W 중심 사업추진을 통하여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등 사업효과가 시·군 전체에 파급될 수 있는 사업 추진 지원

③ 충남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육성(중/장기)

■ 충남지역의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기초 조사

- 충남의 시군별 유·무형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농어업유산으로서 지정 가능성이 있는 자원들을 도출(2014년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로 수행 중)
- 상기에서 발굴된 자원 가운데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가능성이 높은 자원에 대한 심층적 연구(3농혁신 독자적 사업 또는 시군 특성화 사업으로 수행)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지정 추진

- 충남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3농혁신위원, 국가중요농업유산 심의위원,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회원,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및 지정 후 기본계획 수립: 지정지역 3년간 15억 원 지원

3.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기반의 확충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

■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 및 다원화 전망

-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기존의 체험을 탈피해 전통·역사, 생태·자연, 모험, 음식투어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다원화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관광의 특성인 농촌, 소규모, 전통의 속성은 원칙적으로 간직함으로써 기존 관광의 대안관광으로 등장하고 있음

■ 기존의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이 도농교류정책으로 통합화 가능

-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정책, 농촌정책, 그리고 먹거리정책 등이 장기적으로 도농교류정책으로 통합화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는 도농교류 관련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도농교류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조직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② 중기전망

■ 농촌관광 중심에서 도농교류로 프로그램 내용적 확대

- 도농교류의 개념이 단순한 농촌관광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호간의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특히 농촌이 도시를 방문하는 단일방향의 교류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상호 교류하는 양방향적 교류로 확대되고 있음

■ 도농교류의 양적 증대가 아닌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지난 10여년간 도농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도농교류의 횟수와 방문자 수 등의 양적 증대를 추구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도농교류의 내실화와 도농교류를 지속화할 수 있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도농교류가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

- 현재 충남도에는 118개소(전국의 15%)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되어 있고, 연간 체험 인원은 125만 명, 매출액은 120억 원 수준임(2013년 기준)
- 농어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험마을 신규조성과 사후관리사업, 그리고 마을사 무장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융복합 민관협력체제를 형성하고 있음

- 도농교류사업단 운영 및 교육청, 체험마을협의회, 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농협, 코레일 등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범도민 농어촌사랑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농어촌 주체의 역량 미흡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에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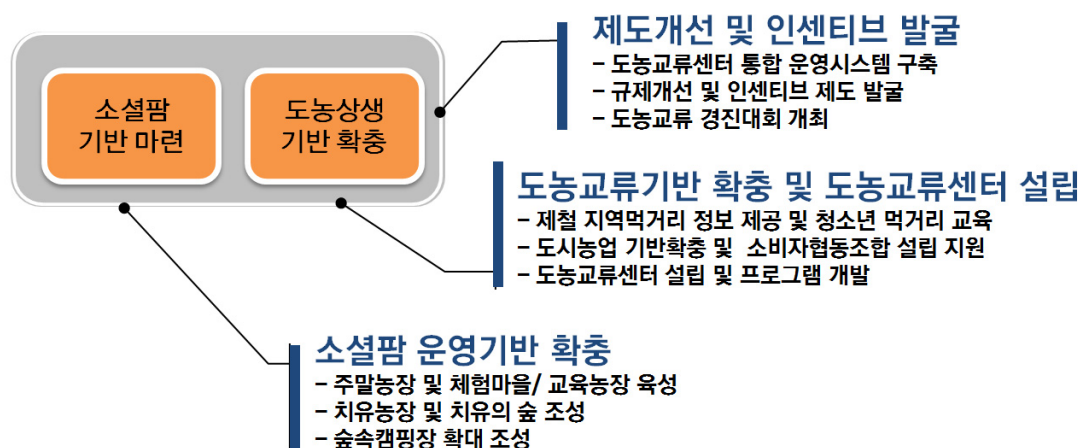
- 마을리더 및 자치역량 등의 미성숙으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그 결과 도농교류를 잘 추진하는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간의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음

■ 농어촌체험프로그램의 유사중복으로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함

- 농어촌체험마을이 양적으로 매우 증대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은 차별화되어 있지 못함
- 그 결과 농어촌체험프로그램의 콘텐츠가 매우 단순하고, 프로그램간의 중복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3) 기본방향

[그림 5-19] 도농교류 분야 기본 추진방향



■ 미래수요에 대응한 도농교류 기반의 확충

- 향후 지속적으로 증대될 새로운 형태의 도농교류 수요, 예컨대 주말 및 교육농장, 치유농장, 숲속캠핑장 등에 대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함
- 도시민을 농촌지역으로 불러들여 추진하는 현재의 도농교류 관점에서 탈피하여 도시지역에 도농교류기반을 확충해 도시민의 도농교류 수요를 촉진하도록 함

■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관련 제도의 개선

- 도농교류센터를 설립하여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지속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도농교류 프로그램 또한 보다 다양화되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현재 3개의 실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농교류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임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다기능적 농업에 기반한 소셜팜 확충
- 지역내부의 도농교류기반 확충
- 도농교류센터의 설립지원 및 프로그램개발
- 도농교류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의 발굴



[장기]

- 다기능적 농업에 기반한 소셜팜 확충(계속)
- 지역내부의 도농교류기반 확충(계속)
- 도농교류센터의 설립지원 및 프로그램개발(계속)
- 도농교류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의 발굴(계속)

① 다기능적 농업에 기반한 소셜팜 확충(중/장기)

■ 주말농장 및 체험마을

- 농촌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휴경농지 및 한계농지를 활용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말농장을 조성·분양하도록 함. 아울러 현재의 체험마을 내에 주말농장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함
- 주말농장 인근에는 도시민들이 캠핑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야영시설을 조성하고, 일상적인 주말농장의 관리는 농촌주민들이 지원하도록 함

■ 교육농장

- 초·중·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교육농장을 2~3개 시군을 통합하여 조성하도록 함. 이를 위해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양봉산업을 중심으로 교육농장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함
- 학기 중의 단기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방학 중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치유농장 및 치유의 숲

- 농촌의 휴양기능을 활용해 중증환자의 치유기능, 알코올중독 등의 약물 치유기능, 사회 부적응 등의 심리치유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치유농장을 전략적으로 조성하도록 함
- 전문적인 치유농장의 운영을 위해서 지역의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함. 현재 금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토피체험마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성공요인을 분석하도록 함

■ 숲속캠핑장

- 가족단위의 캠핑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림생태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가족단위로 야영을 할 수 있는 숲속캠핑장을 확대 조성하고, 숲속캠핑장 내부에 숲속자연 학교 및 체험관 등을 조성해 운영하도록 함

② 지역내부의 도농교류기반 확충(중/장기)

■ 제철 지역먹거리 정보 제공

- 월별로 태양을 받고 자라는 지역먹거리를 선별하고, 이들 지역먹거리의 우수성을 충남 및 대전지역의 소비자에게 전략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함
- 제철 지역먹거리 정보를 작성해 달력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구득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먹거리교육

-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먹거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구입하고 소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시적인 먹거리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함
- 먹거리교육의 교육매뉴얼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가 보조사업의 형태로 먹거리교육을 수행하도록 함

■ 도시농업의 기반확충

- 천안, 아산, 당진 등을 비롯한 시급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민 텃밭을 조성하도록 함. 향후 공원조성(예: 행복한 삶의 공원 등) 시 의무적으로 도시농업의 기능을 반영하도록 함
-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도농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농업의 운영주체는 인근 지역농민 혹은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가 담당하도록 함

■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지원

- 자발적인 소비자교육과 의식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협동조합이 지역내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먹거리교육을 이수자를 중심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을 창립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교육 이수자들이 소비자협동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동함

③ 도농교류센터의 설립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중/장기)

■ 도농교류센터의 설립

-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농교류 인력(농촌현장활동가, 주민교육 등) 및 기관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도농교류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 도농교류센터는 충남도 차원에서 1개를 설치하고, 2~3개의 시군을 통합해 분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평가 및 컨설팅 수행

- 도농교류센터에서는 매년 개별 주체가 시행하고 있는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이와 별도로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함
- 도농교류센터에서는 매년 수행된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평가와 참가자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함

■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해외사례와 같이 농업문화, 농가체험, 생태관광, 특별이벤트, 모험, 음식투어 등의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일부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프로그램화하고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함

■ 도농주체간 자매결연 확대 및 상호방문

- 우선 충남지역 내 기업체와 농촌마을간의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농촌아외음악회 개최, 도시주말장터 개설 등의 행사를 통해 도농간의 상호방문을 유도하도록 함
- 공공기관 및 자매결연기관을 중심으로 농촌이 도시를 방문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주말장터,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청소년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④ 도농교류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의 발굴(중/장기)

■ 도농교류 관련업무의 통합적 운영시스템 구축

- 현재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원, 수산과 등으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 도농교류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제도개편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도농교류 TF팀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농교류과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규제개선(안)의 발굴

- 현재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체들을 대상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목록화하도록 함
- 규제개선대상으로 발굴된 목록에 대한 법률 검토를 1차적으로 수행한 이후 관계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함

■ 인센티브 제도의 발굴

- 국내외 도농교류 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통해서 도농교류를 통한 세금감면 및 정부 정책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예: 사무장 우선 배치, 도농교류 우수단체 세금감면 등)를 발굴하도록 함
- 발굴된 인센티브 제도 중에서 광역차원과 기초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는 지역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도농교류 경진대회 개최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성과를 발표하고 성과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 경진대회에서는 사례발표, 사진경진대회, 그림그리기대회, 1사1촌교류협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해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제5절 역량혁신

1. 농어촌인력의 체계적인 발굴과 육성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2030년의 미래전망)

■ 농어촌인력의 초고령화와 급감

- 현재 농어촌지역 여건으로 볼 때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새로운 젊은 층의 인구가 농어촌지역으로 유입되지 않을 경우, 농어업인은 물론 농어촌지역주민의 초고령화 속도 가속화
- 충남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율이 33.3%에 달하고 영농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3%에 불과¹⁶⁾
- 충남의 총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86.8%에서는 인구감소 진행. 2030년에는 면지역의 93.4%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예측¹⁷⁾

② 중기전망(2018년(민선6기)의 미래전망)

■ 핵심 농업인력의 감소

- 충남의 20~49세 핵심 농업인력은 2010년 87,442명에서 2020년 77,949명으로 약 10.9%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됨. 또한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는 2010년 139,317명에서 2020년 142,433명으로 2.2% 증가로 예측¹⁸⁾

2)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지역을 이끌어 갈 리더와 농어업 후계인력 부족

- 2012년부터 시행된 충남 지역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약 1,800명의 리더가 육성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지역을 경영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
- 민선 6기 3농혁신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맞게 새롭게 진화된 형태의 NEW 3농혁신대학 커리큘럼 개발이 시급함

16) 충청남도(2010), 충남의 농어가인구 및 농어업인력 전망과 정책과제

17) 임준홍·홍성호(2014), 2014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충남리포트 제10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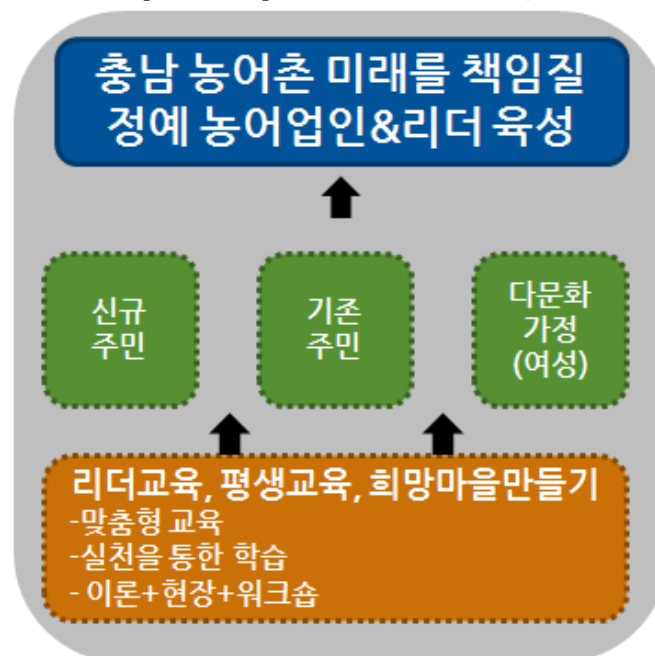
18) 충청남도(2010), 충남의 농어가인구 및 농어업인력 전망과 정책과제

■ 신규주민(귀농·귀촌)·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농어촌주민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 발생

- 대부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취미, 교양프로그램 위주로 단순하며,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부족
- 또한 마을만들기, 다문화여성, 고령자 건강 등 농어촌의 실정과 수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

3) 기본방향

[그림 5-20] 인력 분야 기본 추진방향



■ 현장중심의 지역리더와 지속가능한 농어업 후계자 양성

- 기 양성된 지역리더들을 현장에서 보다 실천적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지역리더 양성
- 충남 농어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농어업 후계 인력을 지속적이며 선순환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길 모색

■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단순한 취미·교양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6차산업화, 농산물 포장 디자인, 농작업 힐링 등 시대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여성농업인, 다문화여성인, 귀농·귀촌인의 수요에 맞는 실용성 있는 평생교육 시행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현장 중심 농어촌 리더·농업인 인재 육성과 관리체계 구축
- 농어촌주민 평생교육 운영체계 구축



[장기]

- 현장 중심 농어촌 리더·농업인 인재 육성과 관리체계 구축(계속)
- 농어촌주민 평생교육 운영체계 구축(계속)

① 현장 중심 농어촌 리더·농업인 인재 육성과 관리체계 구축(중/장기)

■ 3농혁신대학 심화과정(NEW 3농혁신대학) 커리큘럼 개발

- 농정 현안사항 실천과제 위주 편성, 문제해결 형식의 현장 토론식으로 운영
- 시·군 순회 개최를 통해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3농혁신 공감대 확산
-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국내외 우수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분야별 핵심리더 육성
- 2014년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 2015년부터 시행

■ 지역정예 리더반 운영

- 지역개발과정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예리더 양성교육
- 충남 농어촌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프로그램 운영
-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와 연계 마을만들기 계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 2015년부터 매년 100명 육성(기초과정/중견과정)

■ 소수정예 맞춤형 4-H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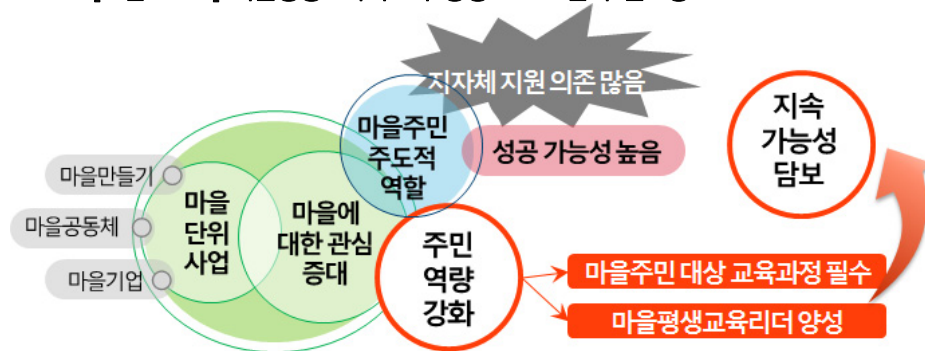
- 4-H회원의 기본소양교육과 더불어 인문사회, 경제학, 경영학 등 폭 넓은 분야의 전문 지식 함양
- 충남의 미래 핵심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성
- 대상: 충남 4-H 연합회원(14개회, 544명)

② 농어촌주민 평생교육 운영체계 구축(중/장기)

■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마을 단위 사업들을 주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단위 사업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기능을 담당할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경북 일부 시군에서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충남지역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
- 마을공동체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에 대한 이론 및 마을평생교육 활성화지역 현장방문 실시

[그림 5-2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



2.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확대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2030년의 미래전망)

■ 다양한 계층의 도시민이 농어촌지역에 유입

- 충남지역으로 유입되는 귀농·귀촌인구는 2015년 시점에 연간 5,275명~6,564명이 될 것으로 예측¹⁹⁾되며, 영농을 목적으로 한 귀농인 보다는 영농외 다른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하는 귀촌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²⁰⁾
- 귀농·귀촌인구는 현재의 추세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농어촌지역에 우수한 인력과 인재들이 유입됨으로써 유능한 농어업노동력의 확보와 지역을 운영해 나갈 리더 후보군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② 중기전망(2018년(민선6기)의 미래전망)

■ 새로운 인력 유입

- 도시지역에서 충남농어촌지역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귀농·귀촌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젊은 층 인구의 증가가 기대됨
- 귀농·귀촌하는 연령층이 현재보다 젊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귀농·귀촌인들이 농어촌 지역 경제의 다각화(6차산업화,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주역이 될 것임

참고: 일본의 최신 귀농·귀촌 경향(2014년 8월 15일자 일본농업신문 기사 요약)

- 20~30대 젊은 세대 층의 귀농·귀촌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 이전에는 단신 남성이 귀농·귀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부부, 단신여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는 겸업농 형태로 소규모 영농을 하면서 다른 직업도 갖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로 농촌지역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귀농인에게 편중된 지원, 귀촌인까지 확대된 지원책 마련 필요

- 최근 농촌에 고향을 둔 도시민들의 귀향(U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부모세대의 영농(어업)을 대물림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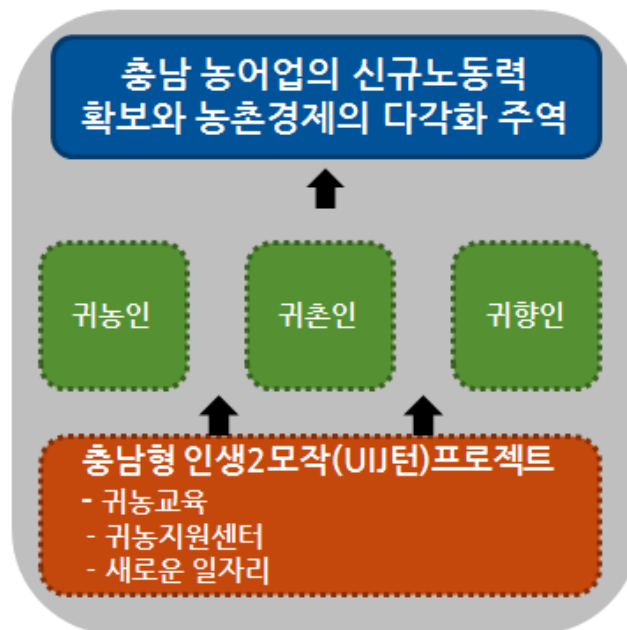
19) 충청남도(2010), 충남의 농어가인구 및 농어업인력 전망과 정책과제

20) 유학열(2013), 충남지역 귀농·귀촌 실태 비교연구, 충남리포트 제79호

- 지금까지의 귀농·귀촌지원은 대부분 귀농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귀촌인을 위한 지원 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발굴

3) 기본방향

[그림 5-22] 귀농·귀촌 분야 기본 추진방향



■ 충남 인생2모작(UIJ턴) 유도를 위한 현장지원책 강화

- 단순한 농어촌지역 인구 늘리기 정책이 아닌 귀농·귀촌인이 충남 농어촌지역에 제2의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귀농·귀촌 지원책 마련
- 귀농지원센터, 귀농대학의 보다 알찬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
- 귀촌인을 위한 농촌지역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충남 인생2모작(UIJ턴) 지원체계 구축
- 귀농·귀촌 현장지원 프로그램 강화



[장기]

- 충남 인생2모작(UIJ턴) 지원체계 구축(계속)
- 귀농·귀촌 현장지원 프로그램 강화(계속)

① 충남 인생2모작(UIJ턴) 지원체계 구축(중/장기)

■ 귀농선배와 함께하는 귀농지원센터 운영

- 귀농희망자와 초기 귀농자를 도와주는 종합상담 역할
- 다양한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귀농 희망 작목별 멘토를 확보 현장실습 지원
- 귀농창업보육센터 설치 시군에서는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하여 통합 운영

■ 귀농대학의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 귀농인 교육프로그램 개편: 현행 4개학과(일반, 과수, 농기계, 가공) ⇒ 개편 3개학과(준비 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
- 귀농인의 눈높이에 맞는 선택적 맞춤형 귀농교육 실시
- 영농기술은 물론 농어촌 정착에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커리큘럼 구성

② 귀농·귀촌 현장지원 프로그램 강화(중/장기)

■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형 일자리 창출

-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관광, 향토요리 등에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6차산업화 현장자문단 민간서포트 모집
- 연간 30명 정도 모집, 재원은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예산으로 충당

참고: 일본 6차산업화 Planner 제도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업경영컨설턴트, 디자이너, 지역계획가 등 6차산업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공모하여 1년 단위 계약으로 6차산업화 Planner 라는 명칭 부여
- 6차산업화 Planner는 6차산업화 사업계획 상담·지도는 물론 사업추진 과정의 모니터링과 컨설팅 역할을 하며 Planner에게는 일정액의 활동보수와 교통비가 실제로 지급됨

3. 농어촌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확충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

■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고용·복지 제공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중요성 대두

- 급격한 도시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현재 출산을 저하가 심각하며,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국가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도시로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심각하고 농어촌 인구 자체 감소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 심각
- 농어촌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향후 미래 산업을 책임질 주체이자 주요 자원임을 고려할 때 농어촌 정책은 매우 중요
- 박근혜 정부의 농어촌 정책 과제는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을 키우고,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한 세부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7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추진방안 발표

-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내의 삶의 질 향상은 보건·복지 증진, 교육 여건 개선(초중등 교육 및 평생교육 포함), 문화·여가개선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음
-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실행계획 포함 (농식품부 외 타부처 지원정책 포함)
- 보건·복지분야의 주요 목표
 - 농촌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의 보장
- 교육여건 분야의 주요 목표
 - 농촌의 특성을 살린 교육기반을 확충하여 교육력 강화
- 문화여가 분야의 주요 목표
 -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여가활동을 포함한 계획 수립

② 중기전망

■ 2014년 5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 확정

- 정부는 2014년 5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을 확정
- 종합대책에 따르면 복지대상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 보장 사업 재정비 및 대상자 선정 기준 개편

- 복지대상자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읍면동 단위 안정망 구축
- 주민 센터를 복지허브 기관으로 개편
- 복지공무원 확충

■ 도농격차 해소 및 농어촌 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개정 및 지속적 이행실태 점검 추진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 내용에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과 '시·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2011년부터 현재 3차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가 추진되었으며,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과 달성 가능성 등이 현저히 낮은 기준 항목의 축소 또는 달성목표 수정에 대한 요구 증대
- 2013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1696호, 2013. 0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이 개정되었음

2)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제고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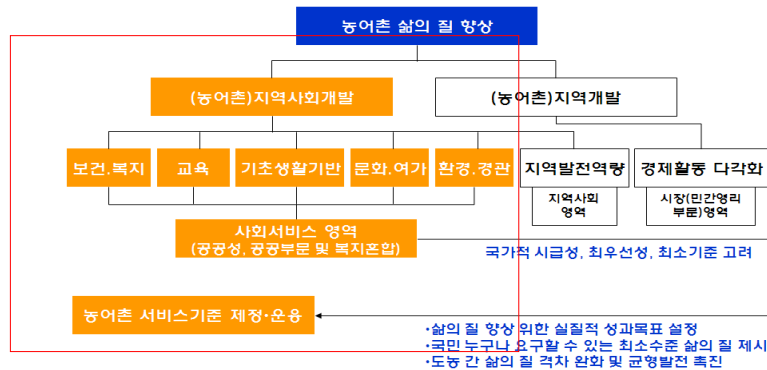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및 불이익에 대한 실천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에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움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무국에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준제도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정책적 피드백 방안을 제시하도록 전문지원기관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강제 집행적 성격 부재
- 이에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도 차원의 협의체와 전문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
- 국가적 차원 및 도차원에서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불이익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모든 부서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여야 하기에 실효성 부족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공공성이 강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세부항목임

- 이에 보건복지, 교육, 기초생활기반,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에 관한 모든 지표를 담고 있으며,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지자체, 국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광부, 안행부, 소방방재청 등 담당 부처가 매우 광범위함

[그림 5-23] 삶의 질 향상계획의 구성과 농어촌서비스기준 간 관계



자료: 김광선 외, 2012,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농촌경제연구원, p. 21

- 지자체차원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제고를 위해서는 농정국 차원의 정책추진으로는 어렵고 범부서의 개방적 차원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필요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해당되는 지표는 농정국 뿐만 아니라 복지보건국, 소방본부, 교육청, 건설교통국, 안전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범부서차원의 추진 필요
- 참여 주체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필요

[표 5-2]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담당부서

구분	농어촌서비스기준	담당부서
보건·복지	진료서비스	복지보건국
	응급서비스	소방본부
	노인	복지보건국
	아동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정책관
	영유아	안전자치행정국, 복지보건국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복지보건국
	마을 순회방문	-
	읍면별 의약품 구입	복지보건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복지보건국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수련원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보건국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실	복지보건국
	읍·면별보육시설	농정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정책관실, 기획관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여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교육법무담당관

[표 5-2]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담당부서(계속)

구분	농어촌서비스기준	담당부서
교육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기획관리실 교육법무담당관
	고등학교	교육청
	평생교육	기획관리실
	적정규모 학교육성	교육청
	우수고교 육성	교육청
	폐교 시 주민의견 수렴	교육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육청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교육청, 기획관리실
	읍 · 면별 평생교육시설	기획관리실
기초생활 인프라	주택	건설교통국, 안전자치행정국, 복지보건국
	상수도	환경녹지국
	대중교통	건설교통국
	방법설비	안전자치행정국
	최저주거기준	안전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	경제통상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경제통상실, 안전자치행정국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
	공동시설 상설프로그램	-
	면부 상수도보급률	환경녹지국
	하수도보급률	환경녹지국, 안전자치행정국
	인도구분	-
문화 · 여가	동호회 활동	-
	아동 및 청소년 문화 · 여가	문화체육관광국
	읍 · 면도서열람/대출	-
	문화원 · 문예회관운영	문화체육관광국
	문화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국
	전문공연 관람	문화체육관광국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국
환경 · 경관	석면 슬레이트	환경녹지국
지역발전 · 역량강화	서비스 인력양성	경제통상실
안전	5분 내 화재현장 도착	각 시군별 소방서
	행정리 방법용 CCTV 설치	안전자치행정국
	10분 이내 사건현장 도착	각 시군별 소방서

주 : 본 자료는 2011년 설정된 농식품부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와 '2014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을 참고하여 재목록화한 것임

■ 농어촌영향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행계획 부족

- 2012년부터 농식품부 주관으로 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도농격차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농어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농어촌영향평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농식품부 및 각 시군에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행성 전무함

■ 그동안 농어촌복지를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추진 어려움

- 2012년 3농혁신 계획 수립 시 농어촌복지분야가 아닌 농어촌서비스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였고 지속적으로 농어촌서비스에 관한 계획을 추진하였기에 농어촌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 도출 및 추진계획 수립 어려움
- 그러나 농어촌복지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상을 포괄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면 타 부처 및 타 부서와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

■ 현재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복지사업의 확대 필요

- 현재 농정국에서 추진 중인 농촌복지사업은 농어촌의 복지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축제지원, 농가도우미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복지는 다양한 부문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확대 대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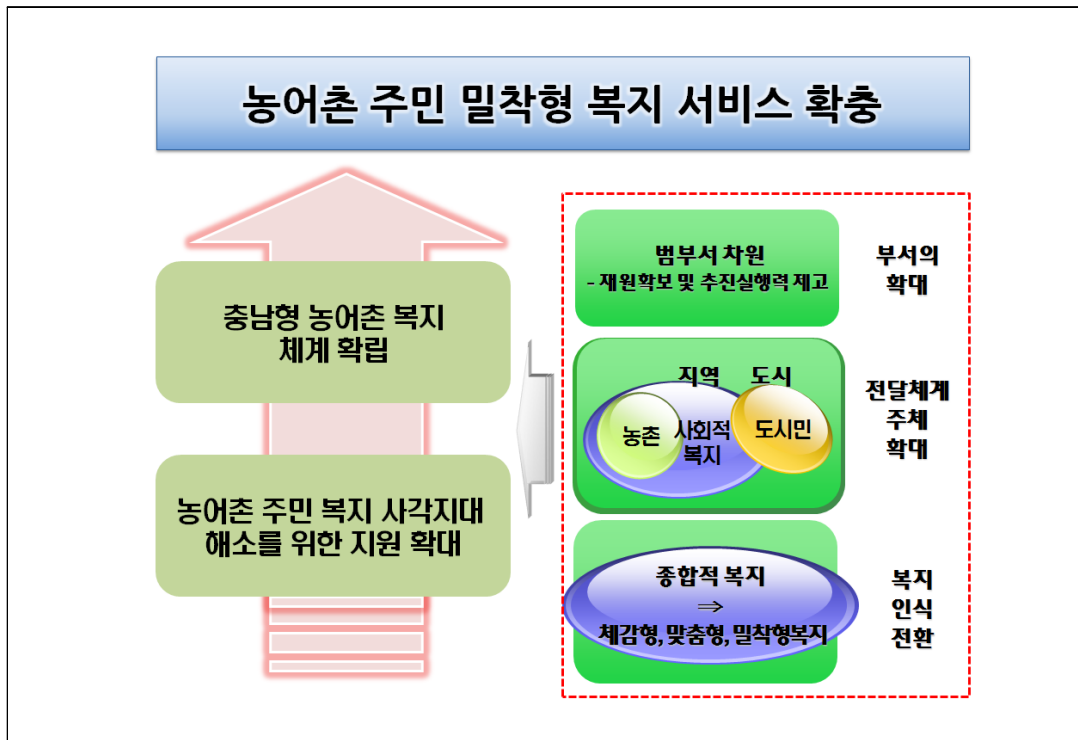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계획

[표 5-3] 충청남도 농정국 농촌복지인력사업

구분	업무내용	추진 연도	지원 수 (2013)	지원금 (백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 발굴로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한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1981-2013	136명	23,943
농업인 단체 육성	시장 대응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을 조직화하고 규모화 하는 농업인 단체의 자조활동 지원	2006-2013	4개 단체	200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여성이 농촌에 정착·생활하면서 겪는 보육, 방과후 학습, 고충상담 등 개인 문제를 지역사회 문제로 공동인식 협의·해결	2002-2013	4개 센터	520
농어촌축제 지원	농촌마을의 축제지원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제고 및 도농교류 활성화 유도	2008-2013	5개 마을	162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	민간인 전문가의 농업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혁신으로 농가의 소득 향상	1999-2013	89개 경영체	910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의 자질함양과 농정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 경영마인드를 갖춘 지역리더로 육성	2007-2013	97명	70
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	브랜드 경영체 역량강화를 위해 통합(광역)을 유도하고 시군 브랜드 경영체의 안정적이고 조직화된 생산기반 구축으로 전략적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경영체로 육성	2009-2013	47개(광역2, 시군2)	22
후계농업경영인 정보지 보급지원	전문 농어인 육성정책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업전문지 구독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품질, 유통 등 최신 농업정보를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과 시장대응력 강화로 글로벌 인재로 육성	1991-2013	12,457부	1,104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의 출산시기 영농활동의 지속적인 수행과 모성 보호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006-2013	270명	425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으로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2009-2013	22,800명	6,176
공주생명과학고 실습시설 장비지원	자영 농수산고에 실습 및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후계 농어업인 육성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2012-2013	1개소	400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보육여건 개선	2013	4,912명	6,095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 기여 및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2013	150개소	158
공동아이돌봄센터	-	-	1개소	164.8

자료: 충청남도 농정과, 농촌복지인력팀 내부자료, 2013년

3) 기본방향



■ 단계별 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한 농어촌 주민 밀착형 복지 서비스 확충

- 1단계는 농어촌 주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2단계는 중남형 농어촌 복지체계 확립의 단계별 사업 추진

■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패러다임인 종합적 복지 차원에서 체감형, 맞춤형 복지로의 복지 인식에 대한 전환

- 농어촌서비스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종합적 차원의 복지 개념에서 탈피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에 맞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맞춤형 복지 제공

■ 또한 농어촌 복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서 확대

- 농어촌 복지 모델을 수립하여 농어촌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한 부서만의 복지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재원 확보 및 추진 실행력 제고를 위한 범부서 차원의 주민 맞춤형 복지 추진

■ 농어촌 복지 전달주체의 확대

-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에서 벗어나 농촌, 사회적 복지, 도시민의 영역을 포함하여 농어촌 복지 전달체계의 주체가 되도록 함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이행제고
- 여성 농어업인 영농향상 지원체계
- 농촌보육복지 지원체계 구축



[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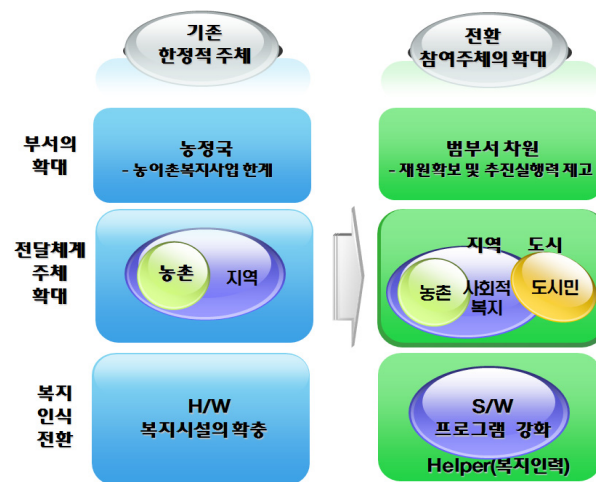
- 충남형 농어촌 복지 모델 구축 및 추진체계 구축
- 농어촌 밀착형 복지프로그램 개발

① 충남형 농어촌 복지 모델 구축 및 추진체계 구축(중/장기)

■ 충남 농어촌 복지 모델 연구 수행

- 충청남도 농어촌 복지 모델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 농어촌 복지 모델은 체계적·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 농정국 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추진할 모든 사업을 분석하여 충남형 농어촌 핵심 복지모델을 설정함
 - 모든 사업이 아닌 정책추진의 시급성을 분석하여 핵심적 농어촌 복지 추진 모델 설정
- 범부서적 차원의 융·복합 사업을 목표로 설정
 - 복지 모델 중 농어촌서비스 지표의 항목도 복지모델 지표 연계 가능
- 복지모델은 지역 간, 계층 간 그리고 사업의 부문간으로 구분하여 구축
- 충남형 농어촌 복지 모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전제로 하여 설정함
 - 주민 밀착형 복지체계 확립을 위해 추진 주체의 확대 필요
 - 전달주체를 농촌 및 지역 차원에서 도시민까지의 확대 필요
 - H/W 시설 확충에서 S/W 프로그램 강화 및 복지인력 확충으로 밀착형 복지체계 확립

[그림 5-24] 농어촌복지 모델 설정을 위한 기본전제



※ 참고. 핵심 복지 추진분야 설정 시 참고

- 충청남도 15개 시·군 농어촌서비스 기반 8개 부문의 만족도·정책시급성 분석결과
- 충청남도 차원에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 추진 분야는 교통, 보건의료/응급서비스/문화여가, 교육, 사회복지 등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5-4] 시군별 만족도와 정책시급성 정도

구분	정책추진 시급성 높음	정책추진 시급성 낮음
단일핵심 분야	천안 -	주거, 사회복지, 정보통신
	공주 주거, 보건의료	교통, 정보통신
	보령 문화여가	주거, 정보통신
	아산 사회복지, 응급서비스	주거, 교육, 정보통신
	서산 교육, 사회복지, 응급	주거, 교통
	논산 문화여가	주거, 사회복지, 정보통신
	계룡 -	주거, 사회복지, 정보통신
	당진 문화여가	주거, 사회복지, 정보통신
	금산 교육, 응급, 정보통신	주거, 교통
	부여 -	주거, 교통, 사회복지, 정보통신
	서천 문화여가	주거, 사회복지, 정보통신
	청양 -	주거, 사회복지, 정보통신
	예산 -	주거, 교통, 보건의료, 사회복지, 정보통신
	홍성 교육, 응급	주거, 사회복지, 정보통신
	태안 문화여가	주거, 사회복지, 교육, 정보통신
다중핵심 분야	천안 교통, 교육, 보건의료, 응급, 문화여가	-
	공주 사회복지, 문화여가	교육, 응급
	보령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
	아산 교통, 보건의료	문화여가
	서산 보건의료, 문화여가	정보통신
	논산 교통, 교육, 응급	보건의료
	계룡 교통, 교육, 응급, 문화여가	보건의료
	당진 교통, 교육, 보건의료	응급
	금산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여가	-
	부여 교육, 응급, 문화여가	보건의료
	서천 교통, 보건의료, 응급	교육
	청양 교통, 교육, 응급, 문화여가	보건의료
	예산 교육, 응급, 문화여가	-
	홍성 교통, 보건의료, 문화여가	-
	태안 교통, 보건의료, 응급서비스	-

■ 농어촌 복지 모델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복지의 전달체계 효율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추진
- 영암군과 같이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넘버원’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상담, 욕구조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또한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인센티브 부여

※ 사례: 영암군 농어촌 복지 시책(농어촌지역의 보편적 복지 분야 우수 지자체)

— 안전행정부 2013년 고령화 농어촌복지시책 8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 8년간 영암군은 보육,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 등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분야에서 우수복지시책 우수 군으로 선정
- 타 지자체의 모델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음

■ 왕인대학 시책

■ 노인 일자리 확대와 안전 시스템

■ 저소득층 보금자리 ‘달 뜨는 집’ 운영

■ 지역특성 접목한 8개 시책 개발·추진

- 생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연결
-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 추진
- 사회복지통합망을 활용하여 행복e음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복지서비스 신청 조사 시 행복e음을 통해 적정급여 실현의 기틀 마련
- 여성의 지위능력 향상, 공공보육 역할을 강화해 매년 여성주간 행사를 열고, 성폭력 등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소 운영, 아동·청소년 복지 수준을 만족 시키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복지 확충과 지원체계
- 다문화 가정 조기정착 지원
- 참전유공자 복지향상 등 애국애족에 대한 보훈 정책 시행

■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넘버원’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희망복지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직렬 3명을 추가 배치하여 심층적인 상담과 욕구조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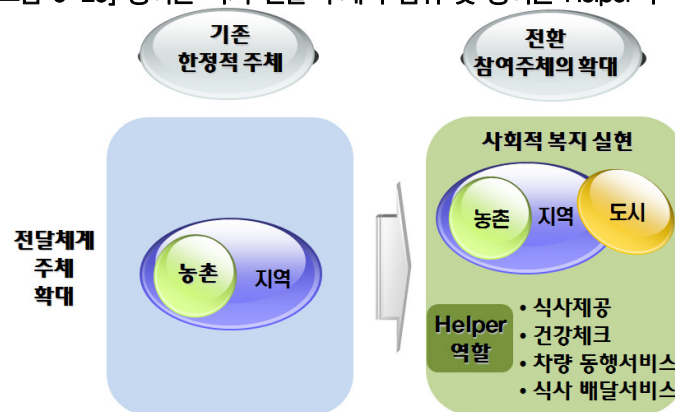
자료 : <http://blog.daum.net/namuo/15707403>

② 농어촌 밀착형 복지프로그램 개발(중/장기)

■ 충남 농어촌 마을 Helper(복지활동가) 양성 사업 추진

- ‘농어촌 마을단위 복지활동가 사업’ 확대 사업인 충남 농어촌 마을 helper(복지활동가) 양성사업 추진
- 호텔 및 일본 상점가에서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춤형·밀착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시어지(concierge)의 개념 도입으로 농어촌 지역의 복지 향상
- 이 사업은 지역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자격증이나 간호사 자격증 등 공인자격증 소지자를 선정하여 식사제공, 건강 체크, 차량 동행서비스, 반찬 배달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차량지원 서비스의 경우, 문화, 복지, 보건, 의료, 교통 등 농어촌 복지의 많은 부분의 문제 해결 가능
- 농어촌 복지활동가는 농촌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과 도시민을 포함하여 양성하도록 함
- 특히 지역차원의 복지활동가는 지역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지원 형태도 권장
- 매년 시군 행정리 수의 약 2%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여 양성·활동

[그림 5-25] 농어촌 복지 전달 주체의 범위 및 농어촌 Helper의 역할



※ 사례. 농어촌 복지활동가 지원 사업

■ 농어촌희망재단의 2013년 시범사업인 ‘농어촌 마을단위 복지활동가 지원 사업’

- 농어촌희망재단이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농어촌 마을단위 복지활동가 지원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오지마을의 노인 및 영유아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농어촌 마을의 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 사회복지자격증이나 간호사 자격증 등 공인자격증 소지자가 활동하며, 상반기 심사를 거쳐 전국 36개 마을에서 복지활동가 및 팀이 구성
- 2013년 6월부터 독거노인 및 취약아동 가정 반찬제공, 노인 건강체크 등 다양한 활동 실시
- 실제 경남 함양군 휴천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귀농인 복지활동가의 경우 지역 특성상 교통편이 없어 이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의 발이 돼주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어르신을 위한 차량 동행서비스와 밑반찬 배달서비스, 공동식사 제공 등의 복지활동을 수행 중

자료 : <http://blog.daum.net/lyg29/13523907>

■ 지역민 참여형 농어촌 서비스 사회적 기업의 육성

- 농어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다문화가정 증가 등의 문제 등으로 일자리는 감소되는 반면, 복지수요는 증가하여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 반복
- 농어촌 사회적 기업은 지역주민의 고용과 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이 있음
- 현재 농촌의 열악한 의료조건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이며 보건활동, 간병가사지원활동을 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독거노인을 위한 가사간병사업 등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음
- 그러나 기존에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 이외에 농어촌현실을 극복할 새로운 기준과 방식으로 농촌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나갈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창조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모델을 창출하여야 함
- 충남의 농어촌 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업은 지역민이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함

- 지역민으로 육성된 사회적 기업은 농어촌 공동체 복원 및 농어촌 복지에 기여
- 농어촌 서비스 사회적 기업의 역할
 - 시군별 농어촌 Helper를 교육·관리·운영할 수 있는 업무 수행
 - 마을에서 어떤 욕구가 필요한지 찾은 후 연결해 주는 업무 추진
 - 지역민 참여형 농어촌 사회적 기업 육성은 주거, 청소, 가사 간병, 돌봄, 보육, 교육, 문화, 급식, 도시락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적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
 - Helper(복지활동가)의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의 집행 주체를 사회적 기업에서 위탁 운영
- ※ 충남 농어촌 마을 Helper(복지활동가)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도와 시군에서 예산 편성
- 5년간 운영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군 및 도에서 성과를 판단하여 장기지원

※ 참고. 충청남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현황

- 사회적 기업은 고용부 인증 42개, 지역형 예비 88개로 전체 130개(전국 2,225개)
- 마을기업은 2010년 11개 지정, 2011년 19개, 2012년 21개, 2013년 16개소로 전체 67개 마을기업이 있음
- 고용부 인증 사회적 기업 중 농어촌복지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재가노인서비스, 보육, 간병, 가사, 방과후 교실, 결식 아동 도시락, 문화예술공연, 주거환경개선, 장애인 주거환경

※ 참고. 농어촌공동체회사 현황

-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2015년까지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인 농어촌공동체회사 1,000개 육성 계획
-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지역주민 및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뜻함
-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으로 분류되며, 이 중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은 불리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주거복지센터 운영, 통합·거동 불편자 교통서비스 제공이 있음
- 농식품산업형 309개소(43.5%), 도농교류형 220개소(3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회복지서비스형은 39개소(5.4%)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5-5] 농어촌공동체회사 유형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11년비증가율(%)
합계	219	443	720(100)	62.5
농식품산업형	54	179	309(42.9)	72.6
도농교류형	78	176	220(30.1)	25.0
사회복지서비스형	31	20	39(5.4)	95.0
지역개발형	24	40	78(10.8)	95.0
복합형	32	28	74(10.2)	164.3

③ 충남형 농어촌서비스 이행제고(중기)

■ 혁신사업 발굴 및 확산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확대(이행촉진방안) 마련
- 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양한 혁신방안 발굴 및 확산(농어촌서비스 이행 제고)
-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우선적으로 농어촌서비스 이행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발굴하여 시군에 확산시키도록 함
- 매년 1개의 혁신방안을 발굴하여 시군에 확산(ex. 서천의 희망택시 등)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	항목	세부 내용
주거	가.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90% 이상
	나. 난방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 50%이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다. 마을 공동시설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공동시설 상설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라. 상수도	면부 상수도보급률 75% 이상
교통	마. 하수도	하수도보급률 71% 이상
	가.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버스3회 이상 운행 마을 비율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나. 여객선	도서지역 1일 1회 여객선 운항
	다. 보행안전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인도 구분

부문	항목	세부 내용
교육	가. 유치원/초·중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
	나. 고등학교	우수고교 1개 이상 육성
	다. 폐교	폐교 시 주민의견 수렴
	라.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마. 의견수렴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바. 평생교육	읍·면별 평생교육시설 1개 이상
보건 의료	가. 진료서비스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나. 순회방문	마을별 월 1회 이상 순회방문
	다. 의약품구입	읍면별 의약품 구입 가능
복지	가. 노인	취약계층 노인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나. 청소년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수련원 1개 이상
	다. 아동	읍·면별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라. 영유아	읍·면별(소규모)보육시설운영
	마.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제공
응급	가. 응급 서비스	30분 내 응급현장 도착
	나. 도서·벽지 응급서비스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 구축
	다. 소방 서비스	5분 내 화재현장 도착 비율 55% 이상
안전	가. 경찰 순찰	범죄 취약지역 마을의 1회 이상 순찰
	나. 방범설비	방범용 CCTV 설치
	다. 경찰 출동	출동시간 10분 이내
문화	가.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
	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
		월 1회 이상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향유
정보 통신	초고속망	초고속망 접속 가능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80% 이상

※ 참고. 농식품부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의 문제점

■ 지표 항목상의 문제점

- 항목의 적절도가 낮은 항목이 많이 도출
- 특히 교육부문과 응급부문은 거의 모든 지표가 적절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

■ 자료 구득의 문제

- 세부기준별 자료 구득은 지자체 행정조사에 의한 항목은 전체 14개로 28%의 비중이며,

관계부처·기관 통계 및 공식통계가 66%에 해당함

- 공식 통계 및 관계부처·기관 통계는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투입하는 부분은 누락될 가능성이 높음

■ 항목별 자료 구축방법의 문제

- 자료구축시 최신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지표는 타당하나, 농어촌실정에 맞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구축하지 못하여 농어촌의 실상 누락되어지는 지표가 나타남

■ 변별력의 문제

- 정책모니터링이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변별력에 문제가 있음
- 충남의 기 달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농어촌서비스 수준의 제고 한계있음

구분	적절도가 낮은 항목	변별력의 문제(충남 기달성)	정책모니터링 필요 항목
항목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인도 구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우수고교 육성 폐교 시 주민의견 수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마을 순회방문 읍면별 의약품 구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서비스 30분 내 응급현장도착 5분 내 화재현장도착 10분 이내 사건현장 도착 전문공연 관람	폐교 시 주민의견 수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읍면별 의약품 구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서비스 30분 내 응급현장도착 5분 내 화재현장도착 10분 이내 사건현장 도착 문화원·문예회관운영 전문공연 관람	우수고교 1개 이상 육성 적정규모 학교 육성 마을별 월 1회 이상 순회방문

※ 항목의 적절도는 2012년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로 수행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 이행실태의 주기적 점검

- 충남형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지표 설정 후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
-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핵심기준 항목을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 추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지방비만으로는 전체 서비스 기준의 이행실태를 제고하기 어렵기에 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이행촉구방안 마련 시 활용
-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시군별 인센티브 부여

■ 컨설팅 체계 및 추진조직 구축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무국에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정책적 피드백 방안을 제시하도록 전문지원기관 설치
- 이에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도 차원의 협의체와 전문지원기관 운영
- 이러한 조직과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되어야 하며, 도 차원에서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불이익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 수립

④ 여성 농어업인 영농향상 지원체계(중기)

■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 운영

- 도내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문화 활동 서비스 기회제공의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만 20세~70세 미만인 자로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바우처 카드(기존의 바우처카드와 사용 범위 동일)
 - 병원, 안경점, 목욕탕, 영화·공연·전시 관람, 미용원 이용, 도서 구입비 등 지원
-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비
 - 5,055백만 원[(84,437농가 × 200천 원 × 30%), 자담 포함 : 200천 원 내외]

■ 여성농업인지원센터 확대 운영

- 여성이 농촌에 정착·생활하면서 겪는 보육, 방과 후 학습, 고충상담 등 개인 문제를 지역사회 문제로 공동인식 협의·해결하기 위한 센터 운영 확대
-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사무실·상담실, 영유아 보육시설, 이동학습지도 시설을 확보한 사람에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 여성의 고충상담 및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교육·문화활동사업 등 여성농업인지원센터의 확대 운영

[표 5-6]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백만 원)

구 분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센터수	36	2	2	2	3	4	4	3	3	3	3	3	4
지원액	4,166	240	190	216	339	409	464	348	360	360	360	360	520

■ 농가도우미 사업 추진

- 여성농업인의 출산시기 영농활동의 지속적인 수행과 모성 보호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내용 : 영농과 가사 대체인력 지원/일 35천 원(자부담 20% 28,000원), 45일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자

■ 공동급식 사업의 확대 추진

-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 기여 및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농작업 수요가 필요한 시기에 마을 공동 급식을 추진하여 여성 농업인의 영농 중단 예방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 마을 주민들간의 관계 향상 도모와 공동체 문화 형성 기여
- 지원대상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을 구비하고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등 여성 농업인 조직이 활성화되어 공동급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을
 - ※ 1개 마을 기준 :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5명 이상인 마을
- 지원기준
 - 1일 35천 원씩 최대 30일(1,050천 원)
- 지원내용
 - 마을당 급식 도우미 수당(인건비) 지급

⑤ 농촌보육복지 지원체계 구축(중기)

■ 보육교사 수당

- 보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보육여건 개선
- 지원대상
 - 농어촌 등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 대체교사도 지원가능,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및 대표자는 제외
 - ※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어촌 등 보육시설에 한 달에 2주 이상 근무 할 경우 지원 가능
 - ※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2012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이관 사업임

■ 공동아이돌봄센터

- 도시와 동일한 보육시설·교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 보육시설이 설치·운영되기 어려운 농어촌 보육여건을 감안해 보육시설·교사자격 기준 등이 완화된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가 설치·운영 중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고질적 보육문제 해결
 - 2011년 기준 전국 1429개의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곳은 440개로 전체의 30%에 달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수요가 적은 지역(10명 내외)에 보육 시설·교사자격 기준 등이 완화된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사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까지 200개소 설치 계획(국비 70%, 지방비 30%, 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규제가 완화된 안전·위생 조건을 갖춘 보육시설 설치
- 충남은 2013년 현재 공주시에서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아이돌봄 센터의 확대 추진 필요
- 지원사항
 - 보육시설 리모델링비와 설치비 지원
 - 기자재 및 장비, 차량구입비 지원
 - 보육교사의 숙박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도 자금 지원
 -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교직원 자기 개발비 등 센터 운영자금 지원

■ 자녀학자금 사업 확대 추진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으로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기준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5ha미만 농지 소유자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 원 미만(1자녀), 4,400만 원(2자녀), 4,800만 원(3자녀), 5,200만 원(4자녀 이상)이하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자
- 지원금액
 - 22,700명/ 6,078백만 원(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도비 1,216백만 원(20%), 시군비 4,862백만 원(80%)

4. 참여주체 확대를 통한 협치농정의 실현

1) 여건전망

① 장기전망

■ 농어업인 이외에 비농어업인과 도시민이 새로운 농정주체로 확대 전망

- 도시와 농어촌의 구분이 상실되고, 농어촌공간이 농어업인만의 공간이 아닌 비농어업인, 도시민의 혼주(混住)공간으로 변화되고, 또한 농어업의 문제를 농어업인만이 아닌 비농어업인과 소비자를 포함한 도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농정추진방식으로 변화 될 것임
- 이에 따라 농정의 주체가 농어업인을 포함하여 비농어업인과 도시민(소비자)까지 확대될 것임

■ 농어업·농어촌 DB구축 및 관리의 필요성 확대 전망

- 농어업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한 체계적인 생산시스템 도입, 농어촌 지역 및 마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관리 등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Big Data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임
-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을 판단하고 기획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세부 Data의 구축 및 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② 중기전망

■ 농정혁신 및 농정거버넌스의 중요성 확대 전망

- 국가차원에서 수 많은 농정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농정혁신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임
- 특히 지방의 자체 농정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과 추진체계의 구축 노력이 진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농업회의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될 것임

■ 농어업 문제 해결에 소비자의 참여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

- 이제까지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를 농어업인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만 해결하려 했던 추진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력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임
- 즉 생산자 중심의 지역농정 추진방식에서 소비자 참여 또는 소비자 중심의 지역농정 추진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의 참여가 농정혁신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

2) 현황 및 문제점

■ 충청남도 3농혁신의 추진체계 개편 및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마련 필요

- 민선5기 충남도의 3농혁신은 3농혁신위원회, 5개 추진단 및 18개 TF팀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농정을 시도해왔고 농어업인이 실제 농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분야간 협력적 의사결정 및 정책 추진, 의사결정체계의 개선, 소비자를 포함한 민간영역 및 도민의 참여 확대 등의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음
- 향후 이러한 3농혁신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3농혁신위원회 및 추진단·TF팀 등의 추진체계의 개편과 중간지원조직 등의 추진기반 마련이 요구됨

■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모델개발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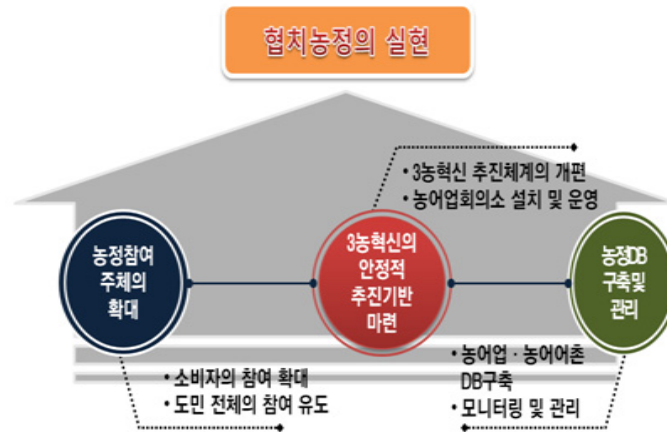
- 충청남도 3농혁신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버넌스의 혁신방안으로 ‘농어업회의소’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모델과 적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기존의 3농혁신위원회의 운영을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염두에 두어 개편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 3국의 농업회의소는 모두 공법에 의해 설립되어, 모두 농림업 종사자의 자치조직이자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와 직업교육 같은 대농민 서비스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으나, 조직구성체계와 지자체와의 거버넌스 유형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충남에 맞는 구성과 거버넌스에 의한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구상이 필요함

■ 농정혁신을 뒷받침하는 농어업·농어촌의 기초 Data 미흡

- 3농혁신을 통해 농정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고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정책을 기획하는데 기초가 되는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기초Data는 부족한 실정임
- 농촌마을의 변화상 예측과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커뮤니티(자연마을)단위의 면밀한 통계 조사가 필요함. 현재의 농업센서스만으로는 농촌마을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 분석하기 어려움
- 인구, 토지이용 등 기본적 통계외에 농촌마을의 주민조직, 대외적 교류, 지역자원 등의 정기적, 지속적 통계 구축 및 관리가 필요(예: 일본의 농촌집락조사, 농업집락카드 등)

3) 기본방향

[그림 5-26] 거버넌스 분야 기본 추진방향



■ 충청남도 3농협신의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 조성

- 3농협신위원회와 추진단 및 TF팀의 구성·운영을 새로운 3농협신 추진방향에 맞춰 구성원과 추진방식을 새롭게 개편하고, 3농협신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환류하는 체계구축

■ 농정 참여주체의 확대

- 3농협신 추진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특히, 도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 충청남도 농정 의사결정을 위한 DB 구축 및 관리

- 충청남도 차원의 농어업·농어촌 센서스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DB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농어업·농어촌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4) 중점추진과제

[중기]

- 3농협신 추진체계 개편 및 추진 기반 마련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



[장기]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계속)
- 농어업·농어촌 DB 구축 및 관리

① 3농혁신 추진체계 개편 및 추진 기반 마련(중기)

■ 3농혁신위원회 구성원 개편 및 기능강화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을 염두에 두어 민선5기 3농혁신위원회 구성원을 개선하되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시킴
- 또한 3농혁신위원회에 추진단 및 TF팀에 소속된 대표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TF팀의 협의결과를 추진단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3농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함
- 특히 3농혁신위원회의 기능을 단순한 의견수렴의 기능에서 벗어나 실제 농정정책을 기획하고 의결·심의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고, 이후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제2기 추진단 및 TF팀 구성 및 운영 개선

- 3농혁신 2030발전계획 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2기 3농혁신 추진단 및 TF팀을 재구성 하며, 기존에 유명무실한 TF팀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고 또한 TF팀간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통합시키도록 함
 - 친환경고품질 농업, 선진축산, 청정수산, 산림자원 등을 친환경고품질사업단에서 분리
 - 농어촌체험관광팀 + 농어촌사랑운동팀 ⇒ 도농교류사업팀
 - 농어업인역량강화팀 + 지역리더양성팀 ⇒ 지역리더양성팀
- 특히 기존 TF팀별로 다수의 팀원 구성으로 효율적 의사결정을 기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TF팀의 구성원을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핵심팀원과 이를 자문하고 지원해 주는 자문진으로 구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또한 유사한 영역과 통합적 운영이 필요한 TF팀을 동일 추진단으로 구성하여 융복합적인 정책추진의 논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3농혁신 분야별 충남대회 개최 및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2013년에 개최된 마을만들기 충남대회와 같이 각 분야 또는 TF팀의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하고 도민의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도민대회를 1년에 1회 개최하도록 함
- 3농혁신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제안하는 도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3농혁신 정책추진에 반영하도록 함

②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중/장기)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모델 개발 및 설치

- 충남의 실정에 맞는 광역단위 농어업회의소의 모델을 개발하도록 함
- 농어업회의소는 민주성, 대표성, 전문성을 갖춘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로서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농어업정책 수립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결정 및 책임을 지는 반민반관 또는 민간주도 형태의 농어업인 자율조직임
- 기본방향 :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회 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정책자문기구에서 농어업인의 권익대변기구로서 확장된 농어업회의소로 발전시키되, 단기적으로는 민·관 협력형으로 추진하다가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시켜 민간주도형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고, 가능한 민간영역의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역량이 갖추어질 때까지 서두르기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농어업회의소의 대농민 서비스 업무로는 ① 농업경영, 생산기술 및 유통 문제의 상담 및 지도, ② 농업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③ 시장정보 제공 및 직불금 신청지원 등이 되고, 대외적 업무로서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자격으로 농정의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이후 농어업회의소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된다면 농어업회의소 대외적 업무로 농정심의회 업무를 대체하도록 함
- 농정사업의 집행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

■ 시군단위 농어업회의소 설치 지원

- 충청남도 광역단위 농어업회의소 설치와 함께 또는 사전에 시·군단위 농어업회의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군단위 농어업회의소 대표자로 도단위 농어업회의소를 구성하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함
- 시군단위 농어업회의소도 역시 도단위 농어업회의소와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되, 보다 현장밀착형의 대농민 서비스 업무에 치중하고 참여하도록 함
- 시군단위의 농어업회의소 설치 방법으로는 첫째, 농업기술센터를 농어업회의소 실무조직으로 개편하는 방법, 둘째, 농협의 지원사업(비사업 분야) 조직을 실무조직으로 개편하는 방법, 셋째, 농어업회의소 독자의 실무조직을 구성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시군의 상황에 맞게 구성하도록 함
- 또한 도 단위 농어업회의소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민간영역의 공감대 형성, 충분한 역량 및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 서두르기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표 5-7] 유럽의 농업회의소 비교

구 분	독 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조직의 성격	농업인 자치조직	농업인 자치조직 농업인 대의기구	농업인 자치조직 농업인 대의기구
조직의 형태	주(州)단위 중심조직으로 군지부 운영 (하향식)	주(州)단위 중심이나 지방회의소 별도 운영 (하향식)	도 단위 조직을 기초로 전국조직 구성 (상향식)
설치근거	주 차원의 설치법 제정 (주정부 선택사항)	주별 설치법 제정	1924년 중앙정부 차원의 설치법 제정
고유업무영역	지도상담 등 대농민 서비스 전반	지도상담 및 직업교육	지도상담, 직업교육, 농촌관광
관리업무/수탁업무	농정집행업무 전반	정책자금 집행	없음
지방정부와의 관계	농정집행업무 수위탁	농정집행업무 수위탁	농정심의 및 자문기구
농정거버넌스 형태	농정집행의 민영화	농정집행 부분 대행	파트너십 참여
재정 조달	정부지원 및 회비	정부지원 및 회비	토지세 및 정부 보조

자료 : 김수석 등, 2010, 지방농정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③ 농어업 · 농어촌 DB 구축 및 관리(장기)

■ 충남 농어업 · 농어촌 센서스 도입

- 농어업 · 농어촌 인구, 경제, 사회적 현황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태를 반영하는 항목으로 구성된 농어업 · 농어촌 DB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조사 및 관리하도록 하는 충남 농어업 · 농어촌 센서스를 도입하도록 함
- 행정리 이장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최초 연도에는 이장과 조사원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이후에는 이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토록 함
- 특히 5년마다 전체 모든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외의 연도에는 인구를 중심으로 간이조사를 실시하여 DB로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함

■ 농어업 · 농어촌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다양한 실태 및 상황을 변화를 농어업 · 농어촌 센서스 DB 구축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에게 제공하고, 시시각각 농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함
- 농어업에 관해서는 작황현황, 가공 및 유통실태, 농어가 및 작목반(어촌계 등) 현황, 기타 농어업 관련 공동체 및 조직 현황, 농어가 소득변화 등을 모니터링함
- 농어촌에 관해서는 마을만들기 및 다양한 사업의 추진현황, 농어촌 공동체 조직 및 변화, 농어촌 인구 및 구성원의 변화 등을 모니터링함

제6장

3농혁신 2030년 미래상

제6장 3농혁신 2030년 미래상

1. 부문별 미래지표

1) 농어업

① 생산

■ 첨단기술농업 등으로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고령화 사회 대비

■ 친환경·유기농업의 확대로 순환형 자연생태환경 조성

■ 미래지표

- 전문농업경영체의 농업생산 점유율 : 70% 수준으로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현재 4.9% → 2030년 15%

② 유통

■ 전업농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유통체계 및 광역브랜드 구축, 수출시장 주도

■ 농어업6차산업화로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육성

■ 농식품산업, 외식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미래지표

- 충남도 광역브랜드 농산물 유통 비중 : 현재 10% → 2030년 80%
(현재 7개 품목, '13년 매출 125억 원, 향후 1,000억 원 목표)
- 농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규모
 - 현재 5조 2천억 원 규모 → 2030년 7조 원 규모
 - 지역 농식품 및 농가공식품 사용 비율 : 현재 1% 미만(추정) → 2030년 10%까지 확대

③ 소비

■ 농어업·농어촌 가치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확산

■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등의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소비자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 미래지표

• 친환경 비율

– 친환경농산물 출하비중(전국대비) : 9.6% → 15%

– GAP 인증 : 현재 2.6% → 2030년 30%

– HACCP 인증 : 현재 1% 미만(추정) → 2030년 10%

• 로컬푸드 농산물 유통 비율 : 현재 3%(추정) → 2030년 20%

2) 농어촌

■ 마을만들기 등 내발적 발전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기반 마련

■ 귀농귀촌 및 전원주거문화의 확산을 통한 도농상생공간의 창출

■ 미래지표

• 도농교류 및 도농상생 마을 비율 : 현재 10%(추정) → 2030년 50%

• 마을만들기 추진 마을 비율 : 현재 20%(추정) → 2030년 50%

3) 농어업인

■ 농어업인과 함께 비농어업인(소비자, 도시민)의 농정참여 확대

■ 다양한 미래인력의 육성 및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조성

■ 미래지표

• 비농어업인의 농정참여 비율 : 50% 수준으로 확대

• 농가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비율 : 현재 56.7% → 2030년 70.0%

• 맞춤형·체감형 복지 증대

– 복지 수혜자 및 참여자 비율 : 10% 증대

– 농어촌주민 만족도(행복도) : 10% 증대

[표 6-1] 3농혁신 2030년 미래상

부문	미래상	2030년 계획지표
농어업	○ 생산 -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고령화 사회 대비 - 친환경·유기농업의 확대로 순환경 자연환경 조성	○ 전문농업경영체의 농업생산 점유율 : 70% 수준으로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4.9% → 15%
	○ 유통 - 전업농 중심의 수직계열화 유통체계 - 광역브랜드 구축 및 수출시장 주도 - 농어업6차산업화로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육성 - 농식품산업, 외식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충남도 광역브랜드 농산물 유통비중 : 10% → 80% ○ 농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규모 : 5조 2천억 원 → 7조 원 ○ 외식산업에서 지역농식품 및 가공식품 사용 비율 : 1% 미만(추정) → 10%
	○ 소비 - 농어업·농어촌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소비자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 출하 비중(전국대비) : 9.6% → 15% ○ GAP 인증 : 2.6% → 30% ○ HACCP 인증 : 1% 미만(추정) → 10% ○ 로컬푸드 농산물 유통 비율 : 3%(추정) → 20%
농어촌	- 내발적 발전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 기반 마련 - 귀농귀촌 및 전원주거문화의 확산을 통한 도농상생공간 창출	○ 도농교류 및 도농상생 마을 비율 : 10%(추정) → 20% ○ 마을만들기 추진 마을 비율 : 20%(추정) → 50%
농어업인	- 농어업인과 함께 비농어업인(소비자, 도시민)의 농정참여 확대 - 다양한 미래인력의 육성 및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조성	○ 비농어업인 농정참여 비율 : 50% 수준으로 확대 ○ 생산가능 농가인구 비율 : 56.7% → 70% ○ 농어촌복지 수혜자 및 참여자 비율 : 10% 증대 ○ 농어촌주민 만족도(행복도) : 10% 증대

3농혁신 2030년 미래상

● 농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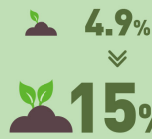
I 생산

-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고령화 사회대비
- 친환경·유기농업의 확대로 순환경 자연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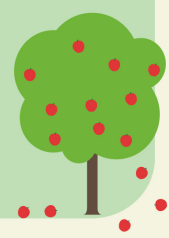


70%
수준으로
확대

전문농업경영체의 농업생산 점유율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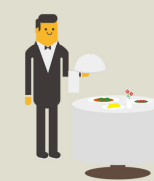


I 유통

- 전업농 중심의 수직계열화 유통체계
- 광역브랜드 구축 및 수출시장 주도
- 농어업6차산업화로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육성
- 농식품산업, 외식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농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규모 확대



외식산업에서
지역농식품 사용 비율 확대

I 소비

- 소비자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 농어업·농어촌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제고



3%(추정)
≧
20%

로컬푸드 농산물 유통비율 확대



유기농 친환경농산물 출하 비중(전국대비)



GAP 인증 확대



HACCP 인증 확대



2. 미래모습



- ① 친환경농업(축산, 임업 등) 육성 등을 통한 순환농업의 실현
- ② 4대 명품 수산물 육성과 함께 어촌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③ 미래기술 개발 등을 통한 과학영농의 실현
- ④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의 실현
- ⑤ 농어업인이 주도하는 농어업6차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실현
- ⑥ 주민이 주도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내발적 지역발전의 도모
- ⑦ 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통해 어린이가 뛰어노는 농어촌 조성
- ⑧ 소비자협동조합 등 소비자의 참여에 의한 소비혁신 도모
- ⑨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공익적 농어업의 실현
- ⑩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도민의 참여확대에 의한 협치농정의 실현

참여연구진

■ 주관기관 충청남도

■ 연구기관 충남발전연구원

■ 연구책임 조영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내부연구진

유학열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윤정미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관률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강마야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화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기흥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권오성 충남발전연구원 전임연구원

정현희 충남발전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정하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여민수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엄성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 행정지원

김돈곤 충청남도 농정국장

손권배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

추 욱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농정혁신팀장

장인동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주무관

박돈해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주무관

권영상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주무관